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오 제 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지도교수 김 인 걸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오 제 연

`

오제연의 문학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오제연

본고는 1960년 4월혁명 이후 약 30여 년 동안 민주화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주요 논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킨 대학 학생운동의 초기 국면(주로 1960년대)을, 그 주체인 대학생들의 존재조건, 경험, 문화, 이념, 조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50년대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도적 엘리트로 규정되어 사회를 선도할 잠재력을 갖췄고, 대학의 급속한 팽창 과정에서 그 수가 급증하여 집단으로서 물리력도 함께 갖게 되었다. 또한 당시 대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통제와 동원에 시달리면서도 정치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1950년대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했던 외부의 규정으로 인해, 또 그들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축제와 같은 대학문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집단정체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물리력이 결집하여 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모의국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 행사를 통해 지도적 엘리트에 걸맞는 정치적 훈련과 각성의 기회, 그리고 대학생 상호의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는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1950년대 대학과 대학생의 존재조건은 모순된 면이 있었고, 그들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도 학생운동의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1950년대 대학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인적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실제 대학은 국가의 통제에 시달리며 동시에 '병역기피자와 모리배의 소굴'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었다. 대학생들 역시 질적으로 하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학도호국단의

통제와 동원이 대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그들을 체제 순응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힘도 강했다. 대학생의 양적 급증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집단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모의국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 행사는 학생들을 관심과 활동의 폭을 '학술'이라는 틀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을 '탈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195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된 학생운동의 필요조건들이 실제 학생운동으로 분출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을 학생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즉 선진적인 이념과 조직이 필요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그 매개로서 '이념서클'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미소의 평화공존과 제3세계 비동맹운동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냉전체제 변화 속에서, 일부 진보적인 대학생들이 1945년 영국 노동당 집권과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민주사회주의를 대안적 이념으로 적극 수용하면서 드디어 대학 내에 이념서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 서울대 법대의 '신조회', 고려대의 '협진회'와 같은 민주사회주의 이념서클들은 서클 멤버들이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진보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구하기 힘든 진보적 서적들을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이념서클의 영향력은 미약한 상황이었다.

1960년 4월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학생들은 뒤늦게 전면에 나섰지만 결국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다. 대학생들은 '순수'와 '질서'를 앞세워 도시빈민들을 배제하고 혁명의 주체를 자임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적 엘리트로서 근대적 국민국가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시도했다. 현실참여가 대학생의 당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한국이 신생국, 후진국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는 '후진성 탈피'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고양과 민족주체성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현실참여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집단적 힘을 가지고 본격적인 학생운동을 전

개하기 시작했다.

4월혁명 직후 학생들은 학원민주화운동과 계몽운동에 나섰다. 계몽운동은 대학생들이 혁명주체로서 4월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개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경제 수립으로 후진성을 극복하여 국민국가를 완성하는 데 있었다. 당시 계몽운동은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지만을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성과와는 별개로 계몽운동은 학원민주화운동과 함께 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방법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치적 경험이 되었다.

후진성의 근본원인으로 분단이 지목되었을 때 그 해결책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계몽운동 과정에서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자립경제 수립은, 통일논의에서도 핵심적인 주장으로 제시되었다. 때문에 통일 문제는 곧 대학생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50년대부터 활성화된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학생들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이 만들어졌다. 민통련은 빠른 속도로 조직을 확장시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확보했으나, 동시에 조직적 균열도 심화되었다. 이 균열은 그들이 함께 추구한 '민족주의' 이면에 자리 잡은 '민족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차이, 역시 그들이 함께 주장한 '남북협상론' 이면에 자리 잡은 '非美非蘇 평화공존'과 '제3세계 민족해방' 사이의 강조점 차이, 그리고 '혁신계'와의 연계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곧바로 일어난 5.16쿠데타로 민통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대학의 존재조건도 크게 바뀌었다. 학생운동은 새로운 존재조건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사정권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갖고 협력도 하였으나,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사이에는 균열과 분화가 뚜렷해졌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의를 근대화, 정확히 말하면 경제성장, 생산력증진을 위한 국민 동원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는 한국인들 사이의 점증하는 민족주의를 경제건설의 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한 196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즉 통일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배제하고 오직 산업화만 강조하는 '근대화론'이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의 실내용이었던 것이다. 반면 학생들은 4월혁명 이후 통일운동 과정에서 확산된 三反(반봉건, 반외세, 반매판)테제에 입각한 민족혁명론적 지향을 가지고, 비민주적이고 불평등적인, 외세의존적이고 반통일적인, 예속적이고 매판적인 현실에 저항하며 박정희 정권과 대립하였다.

쿠데타로 인해 능동적인 현실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우선 학내 행사에 주력했다. 특히 이 시기 각 대학에 축제가 확산되었는데, 이 축제에서 거행된 몇몇 정치풍자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의식도 커졌다. 또한 군사정권은 대학생들을 농촌운동에 동원하여 그들의 현실참여 의지를 순치하려 했으나 이 운동은 농촌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민족주의 이념에 따라 한일협정반대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는 측면도 있었다. 미군범죄에 항의하며 쿠데타 이후 최초로 전개한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역시, 학생들 스스로 이 시위가 반미나 반정부가 아님을 분명했지만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주체적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62년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 민족주의를 앞세운 이념서클들이 속속 만들어지면서 학생운동의 역량은 크게 신장되었다. 그리고 이들 이념서클의 주도 하에 1964년부터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거대한 항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똑같은 반외세, 반매판의 민족주의를 앞세웠지만, 이념서클 혹은 회원들 사이에는 과거 민통련의 균열과 마찬가지로 그 바탕에 깔린 이념적 기반의 차이가 존재했다. 결국 한일회담반대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들 이념서클은 해체되거나 큰 타격을 입어 학생운동이 일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고 양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한국사회의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가 대학에 요구하는 목적이 기존의 '전인적 지도자' 양성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으로 바뀌면서, 대학생들의 위상도 '지도적 엘리트'에서 '기능적 엘리트'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대학의 존재조건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의식도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4월혁명 이후 확립된 대학생들의 '엘리트로서의 자신감과 사명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고민도 함께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대학생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96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이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화를 지향했던 근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민족주체성'과 '민족문화 진흥'과 같은 박정희 정권의 지배논리를 일정정도 공유하면서도 정권에 의해 배제된 민속에 주목했고, 자신이 직접 탈춤을 배워 이를 연행하면서 민속의 주체인 민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와 민중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을 복고주의가 아닌 현실참여로 나아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정치의 우회로'로서 학생운동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일상적인 행사에까지 개입하여 학원을 통제하려 했다. 특히 안보위기를 거치면서 대학에 교련수업을 도입하고 이를 강화하면서 학원 병영화까지 시도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교련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교련반대운동은 결국 학원 민주화를 거쳐 민

중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사회 민주화로 나아가는 시작점이었다.

사회 민주화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의 모순으로 고통당하는 민중에 대한 학생운동의 관심은 조금씩 커졌다. 특히 전태일 분신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은 이를 촉진시켰다. 이제 학생운동의 이념으로 기존의 민주, 민족과 더불어 민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4월혁명으로 정립된 1960년대의 '三反(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권력 강화와 양적 경제성장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1970년대에 들어와 '三民(민중, 민주, 민족)'으로 그 중심이 옮겨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960년대 후반 각 대학에서 재편성 된 이념서클이 있었다.

1964년 계엄령, 1965년 위수령으로 침체되었던 민족주의 이념서클은 1960년대 후반 다시 활성화되었고,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 연대와 조직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1971년 10월 15일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발동으로 학생운동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약 10년간의 학생운동 초기 단계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이제 학생운동은 그동안의 공개적인 이념서클을 위주로 한 활동을 접고, 보다 은밀하게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의 이념서클 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사회과학 학습으로 무장한 새로운 '언더서클'들이 등장하여 유신체제의 사찰과 탄압을 피해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학생운동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주제어: 학생운동, 대학, 대학생, 대학문화, 민족주의, 이념서클, 후진성, 민중

학번: 2004-30036

목 차

서론 1

一. 4월혁명 이전 학생운동의 기반형성

1. 1950년대 대학의 위상과 대학생의 경험 18

1) 지도자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과 대학생의 양적 팽창 18

2) 학도호국단의 관제데모 참가와 학생 동원 29

3) 대학문화를 통한 대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정치적 역량 강화 41

2. 이념서클의 등장과 시련 54

1) 현실 비판의식 태동과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관심 54

2) 주요 대학 이념서클의 조직 상황과 정부의 탄압 62

二. 4월혁명 이후 대학생의 현실참여와 통일운동

1. 대학생의 현실참여 의지 고양 75

1) 대학생의 '혁명주체' 자임 75

2) 학원의 자유 요구와 학원민주화운동 94

3) 계몽운동의 자립경제 지향과 후진성 극복 과제 99

2.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추진 조직의 경향성 112

1) 통일논의의 활성화 112

2)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의 결성 117

3) 남북학생회담 제안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128

三. 5.16쿠데타와 한일회담반대운동
1. 군사정권 하 대학생들의 현실인식과 현실참여 147
1) 군사정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147
2) 축제를 통한 현실 풍자와 비판의 확산 166
3) 농촌운동과 한미행정협정 체결 촉구시위 174
2. 이념서클의 한일회담반대운동 주도 193
1) '민족혁명론' 對 '민족적 민주주의' 193
2) 민족주의 이념서클의 확산 202
3) 이념서클 간 접촉과 동시 시위 220

四. 박정희 정권의 독재 권력 강화와 대학생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1. 대학사회의 변화와 학원 통제 강화 229
1)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과 대학생의 현실인식 .. 229
2) 민속과 민중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247
3) 일상적 학원 탄압과 병영화 259
2. 이념서클의 재편과 반독재 민주화운동 267
1) 소위 '지하신문'의 발행과 민중의식의 대두 267
2) 각 대학 이념서클의 재편 276
3) 교련반대운동과 이념서클 간 연대 294

결론 307

참고문헌 315

Abstract 328

표 목 차

<표1> 1945~1960년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의 수 23

<표2>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150

<표3> 각 대학 농촌운동 현황 178

<표4> 1961~1973년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의 수..... 234

<표5> ≪자유의 종≫ 기사의 내용별 분류 273

서론

1. 문제제기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새로운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변화를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였고, 그 결과 오늘의 한국사회가 만들어졌다. 대학을 기반으로 한 '대학인'들은 그 주체 중 하나였다. 한국 현대사가 냉전체제의 산물인 동시에 냉전체제를 무력화시켜온 동력, 즉 한국 민중의 성장사라고 한다면, 한국 대학의 역사는 한국 정부의 대학 통제사인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억압을 무력화시켜온 대학인의 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분단이 가져온 각종 제약을 극복하고 대학은 사회모순을 고발하고 그 해결의 역군을 키워내는 데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1] 그 역군 중에는 교수와 지식인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대학생들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단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역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학생 시절부터 힘을 결집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발전, 특히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한마디로 '대학 학생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이란 학생들이 學究생활의 범위 속에서 집단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현실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을 말한다.[2] 1960년 4월혁명에서 대학생들이 혁명주체로 나선 이후 1990년대

---

1) 김인걸, 1997 <1960, 70년대 교수 민주화운동> ≪민교협 10년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13쪽.

2) 김호일, 2005 ≪한국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13쪽.

까지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48년 남북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민주주의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1980년대까지는 조직화된 시민들이나 노동자 계급이 취약했고, 그것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 의해 관리된 '관변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권력에 맞서 이 빈 공간을 메운 것이 바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사회운동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은 압도적으로 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학생운동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3)]

1960년 이후의 학생운동은 그 이전의 학생운동과 명확히 구별된다. 일제 강점기 학생들은 계몽운동, 사회운동, 사회주의운동 등에서 활동을 많이 하였고, 항일학생운동도 계속 벌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계몽운동, 사회운동, 사회주의운동은 학생운동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고, 항일학생운동의 경우 광주학생운동, 즉 1929~30년의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제외하면 지속성, 연계성 등에서 1960년 이후의 학생운동과 차이가 많다. 해방 직후부터 1948, 49년경까지 학생조직은 상당한 활동을 하였으나 대개는 좌익과 우익갈등의 첨병 역할을 하였고, 독자성이 약했으며,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그만큼 1960년 4월혁명 이후의 학생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4)] 이에 본고는 '학생운동의 시대'에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정확히는 1960~1971년 한국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에 의해 수행된 학생운동을 연구의 대상 및 범위로 삼고자 한다.

---

3) 정근식, 2013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1~22쪽. 1960년 4월혁명을 '학생운동의 시대'의 시점으로 보는 것은 큰 이견이 없겠으나, 그 종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본고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민주 對 반민주'의 학생운동 구도가 흔들리고, 1996년 소위 '연대사태'를 계기로 한총련 중심의 학생운동이 퇴조하며, 결정적으로 1997년 'IMF 금융위기'로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크게 전환된 1990년대 중후반을 '학생운동의 시대'의 대략적인 종점으로 보고자 한다.

4) 서중석,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 17쪽.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 학생운동의 위상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결코 적지 않다. 학생운동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1980년대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본고의 연구 대상 및 범위인 1960~1971년에 대한 연구도 일정하게 축적되었다. 이 시기 대학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운동과 관련한 개별 사건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960~1971년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1960년 4월혁명,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5] 1967년 부정선거규탄운동,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1971년 교련반대운동 등 굵직한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

1960년 4월혁명에 대해서는 4월혁명 20, 30, 40, 50주년인 1980, 1990, 2000, 2010년을 전후로 다수의 연구성과들이 배출되었다.[6] 4월혁명이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학생운동을 다룬 것은 그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뿐더러 거의 다 학생운동의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운동 전반의 흐름 속에서 4월혁명을 조망하기가 쉽지 않다. 단, 기존의 서울 중심의

5) 한일협정반대운동은 흔히 '6.3'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6.3'이라는 용어는 1964년 6월 3일에 시위가 가장 크고 격렬하게 일어났고, 결국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한일협정 체결과 관련한 시위는 1964년 하반기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1965년에도 다시 재개되어 이후 그해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과연 '6.3'이라는 용어가 중간에 휴지기가 존재하는 2년에 걸친 장기적인 항쟁을 포괄하는 용어로 적합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1964~1965년에 전개된 학생운동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한일협정반대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일협정반대운동'을 다시 1964년의 '한일회담반대운동'과 1965년의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6) 권일영 외, 1983 ≪4월혁명-대학생 논문집≫ 靑史; 姜萬吉 外, 1983 ≪4월혁명론≫ 한길사; 韓完相·李佑宰·沈載澤 外, 1983 ≪4.19革命論 Ⅰ≫ 일월서각; 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2 한길사; 이종오 외, 1991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2000 ≪4.19와 남북관계≫ 민연; 정근식·이호룡 편, 2010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선인.

연구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방에서 전개된 4월혁명에 대한 연구가 최근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7] 개별논문으로는 김동춘과 정계정의 논문이 있다.[8] 김동춘의 논문은 사회과학자의 연구답게 4월혁명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분석적 설명에 강점을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정계정의 논문은 1950년대의 대학사회와 4월혁명기의 학원민주화운동, 국민계몽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하여 본고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어 1950년대 대학사회나 4월혁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964~1965년의 한일협정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가 훨씬 적다. 이 운동만을 다룬 단행본 형식의 연구성과는 없으며, 단지 이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구성된 6.3동지회에서 2001년 당시의 사실들을 정리하고 자료를 모은 ≪6.3 학생운동사≫를 발간한 바가 있다.[9] 이 책은 관련자들의 기억과 그들이 소장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당시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전문 연구자가 아닌 관련자 몇몇 사람들의 엇갈리는 기억에 의존하여 당시 상황을 정리한 만큼 사실 관계의 오류나 평가의 편향성을 다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동호의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의 경우 학술적 연구성과가 아니라, 기자인 저자가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잡지에 발표한 글을 모은 책이다.[10] 때문에 체계적,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때로는 과장된 서술이 곳곳에 눈에 띠지만, 저자가 워낙 많은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구술사 성과로서 참고할 가치가

---

7) 정근식·권형택 편, 2010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8)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鄭桂庭 1995 <'4月革命期' 學生運動의 背景과 展開>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9) 6.3동지회, 2001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10) 신동호, 1996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있다. 그 외에 한일협정 전반을 다룬 연구서에서 반대운동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11] 이 경우 대부분 한일협정반대운동 당시 학생들이 내세운 논리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운동 전반의 상황이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을 다룬 개별 논문으로는 이종오, 유영렬 등의 연구가 있는데,[12] 이들 연구는 한일협정반대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그 성격과 의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당시 운동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초창기 연구였던 만큼 내용의 구체성은 떨어지고 의미부여 역시 소략한 면이 있다. 최근에는 허종에 의해 대전과 대구 지역에서의 한일협정반대운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3] 구술자료에 입각한 지방 연구라는 의의가 있고 중앙과 지방 간 일정한 운동양상의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연구 내용은 기존 중앙 중심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60년대 후반의 대학 학생운동 관련 사건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1988년에 나온 서중석의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이후 계속 공백 상태를 유지하다가,[14] 뒤에서 설명할 2008년 간행 ≪한국민주화운동사≫ 1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1971년 위수령 당시 처벌당한 인사들이 결성한 71동지회가 2001년 ≪나의 청춘 나의 조국≫이라는 기념문집을 간행했는데, 그 속에 당시 학생운동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글들이 포함된 바가 있다.[15] 그 후 개별논문으로 2009년 허은의

11) 민족문제연구소, 1995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오오타 오사무,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2008 ≪한일교섭-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12) 이종오, 1988 <반제반일민족주의와 6.3운동>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柳永烈, 1995 <六·三學生運動의 展開와 역사적 意義> ≪韓國史硏究≫ 88.

13) 허종, 2011 <1964~1965년 대전지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0; 2012 <1964~1965년 대구지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大丘史學≫ 106.

14) 서중석, 1988 <삼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1969~1971년 국내외 정세변화와 학생운동세력의 현실인식>이 나왔는데,[16] 이 논문은 저자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당시 문건들을 분석한 의미있는 연구성과이다. 그러나 문건 분석에 치중했기 때문에 정작 당시 학생운동 세력의 실체나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최근에는 역시 지역 사례 연구 차원에서 허종이 대구 지역의 삼선개헌반대운동을 분석한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17]

이상 특정 사건 중심의 기존 1960년대 대학 학생운동 연구는 사건 자체의 전개과정과 당시 제기된 주장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연구의 분포가 몇몇 사건(특히 4월혁명)에 불균형하게 쏠려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 중에서도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가하든지, 아니면 개괄적인 일지식 정리와 도식적인 의미부여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개별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1960년대 학생운동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 자체를 학생운동 전반의 흐름과 맥락 안에서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 대상을 특정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시야를 넓힌 연구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 역시 기존 사건사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일지식 정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 학생운동사를 가장 폭넓게 정리한 이재오의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는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사를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정리한 결과물이다.[18] 이 책은 여러 시기의 다양한 학생운동을 나름대로 사건별로, 또 시기별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학생운동의 배경과 원인, 전개과정, 결과,

---

15) 71동지회, 2001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16) 허은, 2009 <1969~1971년 국내외 정세변화와 학생운동세력의 현실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9.

17) 허종, 2013 <1969년 대구지역 삼선개헌반대운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66.

18) 李在五, 1984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形成社.

그 성격과 의의 등을 밝혀 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운동사 입문서로서는 손색이 없다. 하지만 필자 자신이 전문 연구자가 아닌 관계로 신문자료의 활용 이외에는 다른 학자들의 개별 연구들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상적인 시위 및 활동에 대한 일지식 정리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건 중심의 일지식 정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2008~2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민주화운동사≫ 1~3권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3년 문민정부 수립 이전까지 한국의 민주화운동사를 총정리한 결과물이다. 특히 1권은 본고의 연구 대상 및 범위인 1971년까지의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다.[19] 이 책의 집필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2000년대 전반기까지의 연구성과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학생운동에 대한 서술 비중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역시 편찬의 목적 자체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사를 '총정리'하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개설서 성격이 강하여 사건 중심의 일지식 서술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태순·김동춘의 ≪1960년대의 사회운동≫과 서중석의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는 일지식 서술을 뛰어넘어 1960년대 학생운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의미 있는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20] 그러나 박태순·김동춘의 책은 기본적으로 당시 학생운동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서술하여 잡지에 게재한 글을 묶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성이 떨어지고 인터뷰를 문헌자료와 꼼꼼하게 대조하지 않아 사실 관계에서도 종종 오류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학생운동을 서울대 문리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한계가 있다. 서중석의 논문은 일지식 서술에서는 잘 파악하기 어려운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장기적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지만, 짧은 논문 안에서 1960년대는 물론 1970년대, 1980년대 학생운동을 모두 다루다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 박태순·김동춘, 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서중석, 1997 앞 논문.

보니 1960년대에 대한 내용은 소략한 편이다.

사건 중심의 일지식 정리가 기존 1960년대 대학 학생운동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학생운동에 대한 과도한 정치사 혹은 구조사적 접근이다. 즉 학생운동사 서술에서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부각시키거나, 사회경제적인 모순 구조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의 모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운동의 기저에는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사와 구조사에 학생운동사를 종속시키는 방식의 연구는 문제가 있다.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이 곧바로 학생운동을 추동하고 지속,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 학생운동이 어떻게 추동되었는지, 그리고 그 운동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지속, 변화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흐름과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학생운동의 '주체', 즉 대학생과 그들이 기반한 대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학생운동 연구들은 정치사의 흐름과 구조적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를 사건 중심의 일지식 학생운동 정리와 '무매개'적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일례로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4월혁명에 대한 분석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3.15부정선거'와 '1950년대 후반 원조의 감소에 따른 경제위기', 그리고 '경제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도시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 등을 분석한 뒤 곧바로 '4월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로 넘어간다. 반면 그 속에서 4월혁명의 중요한 주체인 1950년대 대학생, 대학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와 운동을 매개하는 주체에 대한 경시 및 공백은 비단 4월혁명뿐만 아니라 1960년대는 물론 거의 모든 학생운동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한마디로 196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사건 중심의 일

지식 서술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현상적인 시위 및 활동에 대한 개설적인 정리에 머물렀다. 여러 사건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경우에도 각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시대적 맥락과 학생운동사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과도한 정치사 혹은 구조사적 접근으로 학생운동 주체에 대한 분석을 결여함으로써,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 속에서 어떻게 학생운동이 추동, 지속, 변화될 수 있었는지 거의 설명하지 못했다. 주체를 경시하는 이러한 무매개적 접근은 학생운동사를 정치사와 구조사에 종속시키고, 학생운동 연구가 사건 중심의 일지식 정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대학생 '주체'의 조건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1960년대 학생운동을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보다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 일제 강점기 또는 해방 직후 학생운동과 1960년대 학생운동의 관계의 경우 연속 보다는 단절의 성격이 강하고, 연속된 부분의 경우도 앞으로 보다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21] 또한 학생운동의 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21) 일제 강점기 또는 해방 직후의 학생운동과 1960년대 학생운동의 관계를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은 1960년대 학생운동 주도자들의 부모와 당시 대학 강단에서 활동했던 교수들의 과거 경력과 정치 성향에 대한 규명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스튜던트 파워'라는 이름 아래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그 배경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부모와 교수의 과거 경력과 정치적 성향이었다. 즉, 학생들의 부모나 교수들은 1930~40년대 대공황, 그리고 파시즘과의 투쟁을 거치면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유주의적이고 심지어 좌익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 중 일부는 급진적인 학생정치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과 경험이 그들의 자식과 제자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네스 케니스턴과 같은 학자는 1960년대 학생들을 "빨간 기저귀를 찬 젖먹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시모어 M 립셋트, 編輯部 역 <學生運動의 國際政治에 대한 影響> ≪思想界≫ 1969년 8월, 23~24쪽). 한국의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1960년대 학생운동 주도자들 중에는 그의 부모가 월북을 하거나 좌익 전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1965년 중앙정보부

1960년대 '지성사' 또는 '정치사상사' 일반에 대해서도 이를 학생운동사 논문에서 폭넓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본고에서는 학생운동과 직접 연관된 부분만 선별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연구 방향과 자료

학생운동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의 시대'는 대략 10년 주기의 시간적 단위로 나눌 수 있다.[22] 4월혁명과 함께 시작된 1960년대는 그 중 첫 시기이다. 정확히는 4월혁명이 일어난 1960년부터 위수령으로 학생운동 세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1971년까지이다. 이 첫

사찰 기록에 나오듯이 당시 일부 교수는 해방 직후 남로당 전력이 있었다(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학원·간첩편(Ⅵ)≫ 국가정보원, 85~88쪽. 이 보고서에 나오는 5건의 사찰기록 중 2건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실명은 나오지 않는다). 1960년대 학생운동 주도 학생 중 한국전쟁 당시 좌익세력의 괴멸을 피한 경상도 지역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나 교수의 과거 경력과 정치 성향을 규명하는 것은 개별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례조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수의 과거 경력과 전력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또다른 쉽지 않은 연구주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22) 본고는 일단 '학생운동의 시대'를 학생운동의 조직적 양상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대략 1960년대의 태동기, 1970년대의 전환기, 1980년대의 고양기, 1990년대의 쇠퇴기로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다. 참고로 정근식은 약 30여 년의 '학생운동의 시대'라는 장기국면을 국가권력과 학생운동의 상호작용 양식들의 변화라는 점에서 1960~70년대와 1980~90년대의 2개의 중기국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1960~70년대의 중기국면을 1972년 유신을 전후로 2개의 소국면으로 나누고, 1980~90년대의 중기국면을 1987년 6월항쟁을 기준으로 2개의 소국면으로 구분하였다(정근식, 2013 앞 책, 22~23쪽).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현 단계에서 '학생운동의 시대'에 대한 엄밀한 시기구분은 아직 불가능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운동 연구가 축적된다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학생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 발전하면서 이후 '학생운동의 시대'를 일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960년대의 학생운동은 4월혁명과 5.16쿠데타,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커다란 변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1960년대 대학 학생운동은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시 3개의 시간적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4월혁명과 함께 학생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 둘째, 5.16쿠데타로 새로운 제약을 받다가 한일협정반대운동을 통해 이에 맞섰던 시기. 셋째, 196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정권의 독재 권력 강화가 본격화 되자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점을 제기하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시기 등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간적 단위들을 본문에서 각각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단, 4월혁명 이전의 1950년대 상황에 대해서도 학생운동의 기반형성의 차원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가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앞서 연구사 정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학 학생운동의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학생'들과 그들의 운동 기반인 '대학'은 대학 학생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다. 그동안 독재 정권들이 학생운동을 막기 위해 처벌이나 강제입영을 통해 주도 학생들을 대학에서 격리시키고, 때로는 아예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던 것도 결국 학생운동의 이 두 가지 핵심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학생운동 연구에서 대학과 대학생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본고가 주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주체의 경험과 문화를 중시하는 톰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톰슨은 구조에 의해 역사가 결정된다는 구조주의적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역사인식은 주체가 자신의 경험과 문화에 따라 구조를 해석하고 의식화한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톰슨에 따르면 경험은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사이의 필수적인 중간항이다. 문화와 가치와 사상에 특색을 입히는 것

은 바로 경험이다. 구조가 인간 활동에 결정적인 압력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경험을 수단으로 해서이다.[23] 결국 '경험'을 통해서 구조가 과정으로 변형되고, 주체는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서게 된다.

물론 톰슨이 '구조'의 힘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경험'은 최종심급에서 '물질적 생활'로부터 비롯되며, 계급의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따라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게 된다.[24] 톰슨에게 주체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결정적인 생산적 상황과 관계를 필요와 이해관계로서, 그리고 적대관계로서 경험하고서, 이 경험을 자신들의 의식과 문화에 근거해 가장 복잡한('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취급하고서 자신들의 결정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인격적 개인들이다.[25] 여기서 '결정하다'라는 말은 '결정론'의 의미가 아니라 '한계 설정'이나 '압력 행사'와 같은 의미이다.[26] 이렇게 구조가 경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경험의 시점에서 구조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약해진다.

톰슨은 '경험'과 함께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느낌으로도 경험하며, 이 느낌을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규범과 가치들로, 또는 예술이나 종교적 신념들에서 보게 되는 좀 더 정교한 형태들로 다루기 때문이다. 문화의 이러한 부분은 정서적, 도덕적 의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27] 한마디로 톰슨의 주장은 구조가 주체를 규정하는 면이 크지만 이는 반드시 경험과 문화를 매개로 하고 있으며, 그 경험과 문화가 주체의 의식형성이나 행위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18~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의 경험과 문화를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을 연구했다.[28]

---

23) 에드워드 파머 톰슨, 변상출 역, 2013 ≪이론의 빈곤≫ 책세상, 201쪽.
24) 에드워드 파머 톰슨, 2013 위 책, 336~337쪽.
25) 에드워드 파머 톰슨, 2013 위 책, 324~325쪽.
26) 에드워드 파머 톰슨, 2013 위 책, 314쪽.
27) 에드워드 파머 톰슨, 2013 위 책, 337쪽.
28) E. 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이미 동양사학계에서는 백영서가 이러한 톰슨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받아 1920년대 중국의 대학생 문화와 학생운동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9] 백영서는 역사적 구조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변혁시킨 중국인의 행위를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살아 있는 경험'을 구조와 행위를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주목했다. 이는 본고의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것이지만 이 연구의 타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1920년대 중국의 상황과 1960년대 한국의 상황은 결코 같을 수 없기에, 본고가 이 연구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이는 톰슨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19세기 영국 노동계급과 1960년대 한국 대학생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1960년대 한국 대학 학생운동의 '주체'는 크게 학생운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일반(혹은 학생대중)'과, 강한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운동 주도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30] 이들은 학생운동 과정에서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밀접하게 연

London: Victor Gollancz Ltd, 1963(E. P. 톰슨, 유재건 외 역 2000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9) 白永瑞, 1994 ≪中國現代大學文化硏究≫ 一潮閣.

30)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을 흔히 '운동권'이라고 부르지만, 이 용어가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영미는 1970년대 후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소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위험한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극한적 억압의 상황에 순응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분리는 이른바 '운동권'과 '비운동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영미, 1997 <노래로 본 학생운동의 역사> ≪역사비평≫ 39, 119쪽). 그러나 이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정근식 역시 특별한 근거 없이 197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가권력이 학생운동의 주체들을 점차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구분하여 '운동권'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정근식, 2013 앞 책, 45쪽). 어쨌든 1960년대에 '운동권'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당시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은 '의기파', '정의파', '행동파' 혹은 소위 '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학생문제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98쪽). 이에 본고는 1960년대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을 특정 용어로 규정하지 않겠다.

결되어 있었지만, 또 일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고는 각 시기에 따라 학생운동의 두 주체, 즉 '대학생 일반'과 '운동 주도 학생'들이 각각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각 장별로 독립된 절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단, 집회나 시위의 전개과정과 여기에서 나온 구호/슬로건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간략하게만 다룰 것이다.

1960년대 학생운동과 관련한 '대학생 일반'의 모습에 대해서는 당시 대학의 상황과 그 속에서 살아가던 학생들의 생각들을 먼저 살펴본 후, 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를 고양시킨 몇 가지 정치적 경험과 문화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1960년대 대학생들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가 학생운동에 있어 구심력(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운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원심력(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운동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운동 주도 학생'과 관련해서는 당시 각 대학에 존재했던 이념서클에 주목하고자 한다.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 이념서클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당대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 각 대학의 서클 중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서클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도 사회문제, 정치, 사상 등에 관한 연구단체의 회원 및 간부들이 주로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대학마다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이다.[31]

당대부터 쓰인 '이념서클'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학생운동사에서도 이 용어를 명시적 정의 없이 "(진보)이념적 성격을 지진 학생독서회"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본고도 '이념서클'을 "국가/민족/민주주의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 토론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고민한 대학생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대학생 서클, 즉 이념서클들은 대학 별로

31)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앞 책, 297~298쪽.

여러 개 있었다. 이런 서클들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대 학생운동을 선도했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의 이념서클 중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가담한 중요 서클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다.[32] 또한 이들 이념서클들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만들려 한 학생운동 연대체에 대해 비중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념서클을 중심으로 전개된 196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 과정에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우선 196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남긴 '구술자료' 혹은 '회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고대 민주동문회 등이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보안상의 이유 혹은 유실로 인해 학생운동 관련 문헌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구술자료는 당시 대학생의 모습과 학생운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 기존 학생운동 연구도 일부 구술자료를 활용한 바 있으나, 대부분 소수(5건 내외)의 구술자료 활용에 그쳤다.[33] 반면 본고는 그동안 연구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던 최근 채록된 약 50여 건의 구술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폭넓게 이용하고자 한다.

---

32)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보여준 선도성을 당시의 실증연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학교 간을 묶는 이렇다 할 조직망도 없고 외부정치단체가 조정하는 특수조직도 없으나 거의 예외 없이 학생운동의 전통을 가진 2~3개 대학이 먼저 행동을 개시하면 이에 즉각적으로 호응하는 몇 개 대학이 있어서 그 파급력은 매우 크고 빠르다."(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위 책, 302~303쪽). 정근식 역시 "학생운동이 1980년대 중반 대중화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경북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정근식, 2013 앞 책, 44쪽).

33) 구술자료에 입각한 연구들이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박태순·김동춘, 1991 앞 책은 자신들이 직접 인터뷰해서 확보한 23건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이 책은 이들 구술자료들을 다른 문헌자료들과 꼼꼼하게 대조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역시 최근 속속 간행되고 있는 당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회고자료도 구술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구술자료와 회고자료는 사건 발생 후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생산되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시시각각 바뀌는 개인의 경험이나 입장에 따라 기억이 점차 왜곡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술자료와 회고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고는 각 대학의 학교신문들도 주요 자료로 함께 이용하고자 한다. 서울대의 ≪대학신문≫, 고려대의 ≪고대신문≫[34], 연세대의 ≪연세춘추≫ 등은 일반 일간지에는 실리지 않는 대학, 대학생, 학생운동에 대한 기사나 칼럼을 자주 실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울대의 ≪대학신문≫ 정도가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는데,[35] 본고는 이를 확대하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물론 다른 대학의 학교신문들을 최대한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60년대 대학, 대학생, 학생운동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구술자료와 회고자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을 보완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의외로 잘 활용되지 않은 자료 중에 '잡지'가 있다. 1960년대에는 비교적 많은 시사 잡지들이 간행되었고, 이들 시사 잡지에는 대학, 대학생, 학생운동에 대한 기사가 꾸준히 실렸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사상계≫만을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고는 이외에도 ≪청맥≫, ≪세대≫, ≪다리≫, ≪신동아≫, ≪월간중앙≫ 등 다양한 잡지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학생운동 연구에서 주로 활용했던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민족일보

34) 고려대의 ≪고대신문≫의 경우 그동안 몇 차례 題號의 변동이 있었다. 1947년 처음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는 ≪高大新聞≫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1952년 필화사건을 겪은 뒤 1953년부터는 그 이름이 ≪高大新報≫로 바뀌었다. 그러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그 해 7월부터 다시 이름을 ≪高大新聞≫으로 환원하였다(<社告> ≪高大新報≫ 1960년 6월 25일, 1면). 당시 각 대학의 학교신문들 중에는 ≪고대신문≫처럼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5) 鄭桂庭, 1995 앞 논문만이 예외적으로 다양한 대학의 학교신문을 활용하였다.

≫와 같은 일간지도 본고에서 계속 활용할 것이다.

그밖에 본고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몇몇 문헌자료들도 새롭게 발굴하였다. 우선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무회의 관련 자료 중에서 대학생 또는 학생운동 문제를 다룬 몇몇 '첨부문서'들을 찾아냈다. 대표적이 것이 <1964년도 학생봉사활동상황 종합보고서>와 <'데모' 발생원인 및 '데모' 연발시 정부로서 취할 방책 수립안>이다. <(전국대학생) 농어촌계몽활동상황> 같은 또 다른 정부 기록도 활용할 것이다. 이들 문서는 당시 대학생과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반대로 새로운 자료 중에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주도 학생들이 작성한 각종 문건들이 있다. 물론 이들 자료 중 일부는 이미 자료집 등의 형태로 간행되었고, 또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된 바 있으나 본고는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민통련 규약>,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대의원/중앙위원 명단>과 1970년경부터 대학생들이 제작한 ≪자유의 종≫, ≪의단≫, ≪전야≫ 등 소위 '지하신문'들이다.[36] 끝으로 당대에 대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다양한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찾아서 그 의미를 다시 분석할 것이다.

36) 본고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한 소위 '지하신문'은 모두 서울대에서 발행된 것들이다. 당시 서울대 이외에도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신문들이 발간되었는데, 본고는 이 중 극히 일부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참고로 고려대에서 발간된 ≪한맥≫, ≪산지성≫은 허은에 의해 다수 확보되어 그의 논문에서 활용된 바 있다.

一. 4월혁명 이전 학생운동의 기반형성

1. 1950년대 대학의 위상과 대학생의 경험

1) 지도자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과 대학생의 양적 팽창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설립 붐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들의 밑바탕에는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 한 대학교수는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와 대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나는 朝鮮의 現段階에서 보다 屈指의 程度인 所謂 學者는 學問을 通하여 建國에 貢獻하는 것이 最能率的이라고 본다. 그리고 學生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들에게 要望하는바 前述한바와 같으므로, 學問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보담도 能率的으로 建國에 貢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確信한다.[1]

여기서 말하는 학자와 학생은 곧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을 의미했다. 즉, 대학은 교수와 대학생이 "학문을 통하여 건국에 공헌"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처럼 해방 직후 대학은 '건국을 위한 인재 양성'기관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2]

---

1) 崔虎鎭, <現下 學生에게 告함> ≪新天地≫ 1948년 2월, 26쪽.

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의 대학 사정은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정부가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달라졌다. 또 미군정기에는 흔히 '국대안'이라고 부르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이 당시 대학을 규정한 주요 법률이었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학의 위상은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교육법> 제10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大學은 國家와 人類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敎授硏究하며 指導的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3)]

<교육법> 제108조가 규정한 대학의 목적은 분명했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즉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국가' 발전과 더불어 '인류사회'의 발전도 함께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큰 의미가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교육법> 제108조의 중요성은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대학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교육법> 제정 이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조항을 스스로를 규정하는 준거로 삼았다는데

1960년대 학생운동을 다루는 본고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대학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는 1장 2절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학도호국단이 창설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법률 제86호) 敎育法> ≪官報≫ 1949년 12월 31일. 1949년 12월 공포된 <교육법> 제108조는, 과거 일본이 1918년 12월 5일 칙령 제388호로 공포한 <대학령>의 제1조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일본의 <대학령> 제1조는 "대학은 국가에 須要한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하고 아울러 그 蘊奧를 攻究함을 목적하고 겸하여 인격의 도야 및 국가사상의 함양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曺圭甲, <韓國大學敎育論> ≪政經硏究≫ 1967년 1월, 99쪽). 이는 해방 후 한국의 <교육법> 제108조에 나오는 대학의 목적에 대한 규정과 몇몇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같다. 단지 한국의 <교육법>에는 일본의 <대학령> 중에서 천황제와 직결된 '국가사상의 함양'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대신 미사여구에 불과한 '인류사회 발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대학의 목적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을 교수 연구'하는 것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같았다. 해방 전 일본이 규정한 대학의 목적을 해방 후 한국의 <교육법>이 답습했던 것이다.

있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한국의 각 대학들은 <교육법> 제108조를 원용하여 '학칙'의 첫 조항에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명시했다.[4] 국가의 요구를 대학이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강압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었다. 대학의 구성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학경영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거룩한 사업"이라든지,[5] 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든지,[6] "후진국가에 있어서 학자의 사명과 태도가 정상적인 발달을 한 선진국가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든지[7] 하는 언급들은 1950년대 대학 관련 기록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교육법> 제108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국가 발전의 기여에서 찾았지만, 동시에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경계하고 '대학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했다. 아래의 글은 이러한 한국 대학의 양면적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韓國의 大學이 그 出發의 時點에서 오는 制約으로 보아, 그 出發點에서부터 社會性을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일 듯 싶다. 그러나 後進社會에서 볼 수 있는 特殊性의 하나로 社會性을 指向하는 同時에, 다른 社會에서 이미 經過해온 自由性의 確立을 同時에 確立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곳에 韓國의 大學의 使命論의 二重性과 複雜性이 가로노여 있

4) 서울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의 제1조는 다음과 같다. "本校는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이론과 그 廣範精緻한 應用方法을 敎授硏究하는 同時에 協同精神이 豊富한 指導者的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서울大學校, 1955 ≪서울大學校 一覽≫ 서울大學校, 44쪽). 다른 대학들의 학칙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5) 兪鎭午, <잃어진 權威를 도루 세우자-大學의 理想과 現實> ≪高大新報≫ 1956년 4월 16일, 1면.

6) 金泰午, <大學 敎育의 使命> ≪新天地≫ 1954년 4월, 49쪽.

7) 孫明鉉, <學問과 政治-危機에 處한 學者의 使命> ≪高大新報≫ 1956년 4월 23일, 2면.

다고 하겠다. 內部的으로는 大學의 自由를 確立한 뒤에 外部的으로 制度로서의 社會的 機能을 擔當하여야 될 것이다.[8]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학'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이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지향을 동시에 추구한 한국의 대학은 이후 오랫동안 양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의 <교육법>은 대학에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해방 후 한국의 대학에서 새 국가 건설에 필요한 지도자 양성이 보다 강조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1950년대에도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요 교육의 최고기관이며, 여기에 배우는 학생은 장차 국가 要樞의 지위에 서서 민족을 지도하여 나갈 인물들이다"라는 식의 언급은 계속 이어졌다.[9]

그렇다면 당시 한국 대학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양성하고자 했던 '지도적 인격' 혹은 '지도자적 인격'의 실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인격 도야'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過去 封建時代의 敎育에서는 科學 없이 人文만으로도 한 完全한 人格을 陶冶할 수 있었지마는 現代의 民主主義 敎育에서는 人文만이 아니고 人文과 科學을 合해서 비로소 全人的 人格을 陶冶할 수 있는 것이다.[10]

<교육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나온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인문과 과학을 겸비한 '全人的 인격'의 도야였다. 아마도 <교육법> 제108조에서 언급한 '인격 도야'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한국 대학에서 양성하고자 했던 '지도적 인격'은 인문과 과학을 겸비한 '全人的 지도자'였다. 한마디로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대학은 국

8) 張庚鶴, <大學의 使命> ≪思想界≫ 1955년 6월, 156쪽.
9) 趙潤濟, <大學과 大學校> ≪自由世界≫ 1953년 6·7월, 247쪽.
10) 趙潤濟, <敎育政策 私見> ≪新天地≫ 1949년 9월, 57쪽.

가의 발전에 필요한 전인적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학생은 '장차 지도자로 성장할 엘리트', 즉 '지도적 엘리트'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은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으로 학생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집단성'은 다른 엘리트들과 학생을 구별해주는 독특한 모습이다. 엘리트로서 학생이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움직였다는 사실은 학생운동이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대학생을 '지도자'와 연결시키는 제도적 규정은 그들이 엘리트로서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집단으로서 힘을 결집하여 학생운동을 통해 그 영향력을 실제로 발휘했다. '학생운동의 시대'는 대체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로서의 위상과 집단의 힘이 함께 공존하던 시대와 일치한다.

대학생 집단의 힘이 처음으로 폭발한 사건은 1960년 4월혁명이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1950년대 내내 여러 계기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전반기까지 계속된 대학과 대학생의 급속한 팽창은 대학생들이 집단으로서 양적인 물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대학의 팽창은 195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1945년 해방 당시 8천여 명에 불과했던 전문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약 10년 뒤 1950년대 후반에 1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제 대학생 집단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양적 물리력을 확보했다. 또한 역시 <표1>를 보면 각 학교당 학생 수 역시 해당 당시 약 4백명 수준에서 1950년대 후반 1천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몇몇 대학만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도 그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커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1> 1945~1960년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의 수

연도	고등교육기관수 (A)	학생수 (B)	기관당 학생수 (B/A)
1945	19	7,819	412
1948	31	-	-
1950	55	-	-
1951	53	-	-
1952	52	34,089	656
1953	62	48,554	783
1954	71	66,415	935
1955	74	84,996	1,149
1956	76	96,754	1,273
1957	79	91,153	1,154
1958	79	79,449	1,006
1959	80	81,519	1,018
1960	85	101,041	1,189

출전: 文敎部, 1962 ≪文敎統計要覽≫[11]

1950년대 대학의 팽창은 우선 1952~1955년에 이루어진 지방 국립·도립 대학교 설립과 관련이 있었다. 이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당시부터 1道 1校 원칙으로 지방에도 국립·도립 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었지만, 소위 '국대안 파동' 때문에 실행이 여의치 않았다.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지방 국립·도립 대학교 설립 계획은 계속 유보되다가 전선이 고착된 1952년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953년까지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설립되었다.[12] 각 지방에 국립·도립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대학과 대학생의 서울 편중 현상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지방대학 신설이 1950년대 대학 팽창의 본질적인 요인은 아

11) 1960년대 초까지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통계는 자료마다 숫자가 모두 다를 정도로 부정확하다. 그러나 대체적인 추세는 같기 때문에 이 글에서 특정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12) 이광호, 1992 <한국고등교육의 제도적 구조재편의 특징-1945~1955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8, 34~35쪽.

니었다. 그것은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삶과 터전을 파괴했지만, 유독 대학만은 전쟁을 거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전시에 실시된 재학생들에 대한 징집보류 조치에 있었다.

학생 징집보류 조치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었다. 1949년 8월 대한민국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되어 징병제가 실시되었으나 1950년 2월 '재학자 징집연기 잠정령'을 통해 중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나이에 따라 징집을 보류 받았다.[13] 한국전쟁 이후 군 징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대학생들은 1951년 5월 이후 전시연합대학에서 매주 6~8시간 학생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징집을 회피할 수 있었다.[14] 전시연합대학이 해체되고 각 대학별 수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15] 1951년 12월 학생 군사훈련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고,[16] 1952년 5월 문교부와 국방부가 학생 군사훈련의 구체적인 방법과 징집 보류 원칙에 합의하였다.[17] 이에 따라 1952년 2학기부터 문교부는 학생들의 징집 보류와 학업 보장을 위한 '전시학생증'을 발급하였다. 전시학생증은 당시 학생들에게 특혜의 상징이었다. 학생 징집 보류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재학자 징집연기 잠정령'에 근거하여 계속 유지되었다.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학생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자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역 혜택은 기득권층이 병역의 의무를 빠져나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

---

13) <(대통령령 제283호) 在學者 徵集延期 暫定令> ≪官報≫ 1949년 2월 28일.

14) <(문교부령 제19호) 大學敎育에 關한 戰時特別措置令> ≪官報≫ 1951년 5월 4일.

15) 연정은에 따르면 전시연합대학은 1950년 11월 11일 개강하여 1951년 9월 이후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여 1952년 5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고 한다(연정은, 2005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史林≫ 24 참조).

16) <(대통령령 제577호) 學生軍事訓鍊實施令> ≪官報≫ 1951년 12월 1일.

17) <大學은 每週 二時間-協議된 軍事訓練實施要綱 內容> ≪大學新聞≫ 1952년 6월 2일, 1면.

고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피자가 많고 군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가 1950년대 내내 지속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18] 즉 병역 특혜는 대학생들을 장차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인적 지도자로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 교육의 목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19]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배려된 이 조치는 대학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모든 대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군대를 피하고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때부터 대학은 '병역기피자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다.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부모들은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자 했고,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일부 대학 경영자들은 대학의 시설이나 교수진 등의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였다.[20] 정원을 대폭 늘렸을 뿐만 아

---

18)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학생 징집 보류 조치는 이미 72만으로 팽창한 한국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 징집 기피자만 5만 명이 넘고 학생들마저 징집을 보류 받자 군 충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군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개병주의에 어긋나는 학생 징집 보류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학생들도 징집하여 병역법에 따라 최소한 2년을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교부는 학업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1956년 9월 학생의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기로 타협하고, 11월 학생 징집 보류의 법적 근거였던 '재학자 징집연기 잠정령'을 폐지시켰다. 이때부터 학생으로서 군에 입대한 사람을 흔히 '학보병'이라고 불렀다. 1957년 8월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재학생 복무 기간이 1년으로 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 1년 6개월 복무가 계속 유지되었다. 징집 보류는 폐지되었지만 대학생에 대한 복무 기간 단축 역시 특혜나 다름없었다.

19) 1950년대 내내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일례로 1957년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상계≫의 한 독자는 "돈 없는 죄로 자식을 대학에 못 보냈다. 공부도 못하고 천대를 받고 그 위에 차별대우까지 받으란 말이냐? 걸핏하면 인재양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백성과 같은 平面에서 의무를 다하고 고초를 똑같이 하지 않는 인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한마디 한다> ≪思想界≫ 1957년 10월, 247쪽).

니라 '청강생'이라는 명목으로 정원 외 입학생을 최대한 뽑았다. 그 결과 1952년 약 3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의 대학생 수는 불과 4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그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1950년대 초중반 대학의 급격한 팽창은 대학생 집단의 힘이 커지는 근본 요인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우선 학생 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의 열악한 시설과 빈약한 교수진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졸업 후 실업 문제를 심화시켰다. 대학의 지나친 팽창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자 드디어 정부는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을 제정하여 일정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대학의 정원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동 기준령은 각 대학이 대학의 등급과 정원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학교 시설의 규모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학 설립을 불허하고, 기존 대학은 5~6년의 유예기간 동안 단계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학과 통합, 정원 축소 심지어는 학교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설치기준령>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어 1950년대 후반 대학생 수의 증가가 억제되었고 각 대학의 시설도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정부의 대학 정비책에 끊임없이 저항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규정한 정원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계속 초과 모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령의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재정적으로 사립대학들을 지원할 형편에 있지 않았던 정부는 결국 사립대학의 지속적인 저항에 굴복하여 1958년 8월 <대학설치기준령>의 유예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음해부터 대학생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21]

---

20) 潘永煥, <大學街半世紀(八)-六·二五戰亂 속에서의 大學> ≪靑脈≫ 1966년 10월, 159쪽.

21) 1950년대 중후반 대학 정원과 대학설치기준령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대학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김정인, 2012 <한국 사학 형성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실천문학사, 39~44쪽 참조.

전인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병역기피자의 소굴, 모리배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1950년대 대학에서 학생들 역시 '지도적 엘리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950년대 대학생들은 나약하고 무기력하며 풍기가 문란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 大學과 大學生의 過剩은 전시체제가 빚어낸 病든 꼴이요 비뚤어진 타락상이요 是正을 요하는 混亂에 불과하다... (중략)... 요즘 大學生은 도무지 實力이 없다는 둥, 옛날 中學生만도 못하다는 둥, 속에 든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건방지고 不信하고 책임관념이 없다는 둥, 영화나 다방 出入으로 세월을 보내고 공부는 꿈도 안꾼다는 둥, 미국 逃避行만 꾀한다는 둥, 군대 기피하기 위해서 大學에 온 것인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둥, 情熱과 良心과 기백이 다 죽어버렸다는 둥, 일언이폐지하면 大學生의 知性의 빈곤과 德性의 不足과 生活의 타락을 찌르는 말들이다.[22]

1950년대 대학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평가는 타당한 것이었다. 전인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적을 기준으로 1950년대 대학생을 봤을 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 괴리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양적 팽창만이 대학생 질적 하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미군정기에 '국대안 파동'을 겪으면서 비판의식이 강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고,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의 학원 통제가 심해졌다. 또한 1950년대 그들이 공유한 '전쟁'과 '사회혼란'의 경험은 대학생의 비판적 지성을 마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57년 한 대학생은 지도적 엘리트임에도 실제로는 현실 앞에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22) 安秉煜, <大學生活의 反省> ≪思想界≫ 1955년 6월, 158~159쪽.

> 우리의 대부분은 그러나 현실을 비판하기에 앞서 유행에의 모방과 뇌동에 기운다... (중략)... 戰爭과 禍亂의 世紀에서 죽엄 앞에 戰慄하고 不安 속에 生을 凝視하고 砲煙과 더불어 사라지는 文明의 灰塵을 바라보고 커 온 우리는 自由와 獨裁, 戰禍와 繁榮, 實存과 機械가 팽팽한 緊張 속에 對決하고 橫暴와 不義와 悖倫이 亂舞하는 社會現實 앞에 모든 感覺이 痲痺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一切의 醜惡에 對한 不感症으로 마땅히 正義와 眞理에의 情熱에 온 몸을 불사르고 完成과 創造에의 意慾으로 가슴벅차야 할 젊은 覇氣가 이미 주어진 歷史的 現實 속에서 어쩔 수 없는 宿命 앞에 抗拒도 悲鳴도 없이 그 모든 것에 諦念한 姿勢인 것 같다... (중략)... 大義와 理念 속에 民族의 未來를 指導하는 先驅者여야 할 우리다.[23]

국가의 학원 통제, 한국전쟁의 극한 상황, 정치의 무능과 부패, 가난과 실업,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독한 알코올 기운과 전위적이고 자극적인 '데카당'은 학생들의 도피처였다.[24] 비판의식을 결여한 무기력한 학생의 모습은 다방, 당구장, 기원(棋院) 등이 넘쳐나고 사치스러운 복장이 유행하는 사회 풍조에서도 잘 드러났다. 비판적 지성이 마비된 1950년대 대학생들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은, 그들이 '지도적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내내 지속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

23) 李尙馥(서울대 학생), <學生이 본 現下 大學生의 知性> ≪大學新聞≫ 1957년 5월 20일, 3면.

24) 1950년대 모든 대학생을 '데카당'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데카당'은 1950년대 대학생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표현 중 하나였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었다. 일례로 한국에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을 소개하는 데 앞장선 한 교수는 "정치인이 공공연하게 현대정치 이념을 무시하고 또는 정치도의를 짓밟는 언동을 할 때, 혹은 민중이 뻔히 아는 궤변을 주먹다짐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데카당 정치'라고 규정하고, 데카당 정치 밑에서 철저한 功利主義가 생리가 되어 버린 젊은 세대에게 '도의관념'을 주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코믹하게 들리겠는가?"라며 현실을 비판했다(金鵬九, 1958 ≪佛文學散考-現代의 證人들≫ 新太陽社, 1958, 252~255쪽).

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였다. 1960년 4월혁명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보다 훨씬 늦게 항쟁에 참여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는 대학생들이 양적 팽창을 통해 집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력을 획득했지만, 그 힘을 결집하여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제약 요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학원 통제는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2) 학도호국단의 관제데모 참가와 학생 동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정권은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다. 학도호국단을 결성한 목적은 학교 내 좌익 학생들을 제거하고 학내에 생길지 모를 좌익 사상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군대식 집단 훈련과 반공 사상 교육을 통해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좌익 척결만이 학도호국단 조직의 목적은 아니었다. 대학의 경우 학도호국단 창설 과정에서 그동안 우익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맹(약칭 전국학련)'이 해산되고 그 조직과 간부들이 학도호국단으로 흡수되었다. 이는 지도적 엘리트로서 또 대규모 집단으로서 대학생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25]

해방 직후 대학은 '건국을 위한 인재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좌우대립의 첨병, 즉 좌우익의 세력기반이자 정치적 행동대를 양성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국학련은 우익 정치세력의 선봉으로 대학 내 일정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은 학도호국단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전국학련을 흡수함으로써, 전국학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학 내 헤게모니를 함께 흡수해 버렸다. 당연히 전국학련 간부들은 전국학

25) 李敬南, <(다큐멘타리) 全學聯> ≪新東亞≫ 1982년 10월, 157쪽.

련이 학도호국단으로 흡수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정부 수립 이후 대학과 대학생은 국가의 직접 통제 하에 들어갔다.

이승만 정권의 학도호국단 조직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48년 11월 문교부는 중학생 이상의 '학도호국대'를 조직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12월에 '학도호국단 준비 및 지도 요강'을 작성하였다. 1949년 1월에는 '학도호국단조직요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월 말까지 중등학교(현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고, 2월에 시·군 학도호국단, 3월에 각 도 및 서울특별시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다. 학도호국단은 중앙학도호국단 직속으로 4월 20일까지 조직을 완료하였다. 4월 22일에는 서울운동장에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총재 이승만 대통령과 단장 안호상 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학도호국단 결성식을 가졌다.[26] 그리고 1949년 8월 6일 공포된 병역법 제78조에 의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이상 대학생은 전원 의무적으로 학도호국단에 편입되어 학생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1949년 9월 27일, 학도호국단 이외의 학생 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는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을 만들어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1949년 말 학도호국단은 전국의 중학교 이상 1,146개교, 총 단원 35만 명을 통괄하는 거대한 학생조직이 되었다.[27]

창단 당시 조직 체계를 보면 중등학생 이상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도호국단 단원이 되었다. 총재는 대통령이, 중앙학도호국단 단장과 부단장은 문교부 장관과 차관이, 각 도 및 서울특별시 학도호국단 단장은 도지사, 시장, 교육감이, 각 학교 학도호국단 단장은 교장, 학장, 총장이 맡았다. 학생 간부는 학도부장 또는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렇듯 학

---

26) 중앙학도호국단, 1959 ≪학도호국단10년지≫ 중앙학도호국단, 89쪽.

27) 연정은, 2004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1950년대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213쪽.

도호국단은 그 조직 체제가 대통령-문교부-총장·학장·교장으로 된 수직적인 준군사조직이었다.[28]

1949년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지만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학생들이 흩어지자 학도호국단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대신 각지로 흩어진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국방부 정훈국의 지원 하에 '대한학도의용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 대한학도의용대를 통해 국방부가 학생 조직에 영향을 끼치자, 이에 반발한 문교부는 1951년 8월 '대한민국학도호국단개정안'을 공포하여 학도호국단을 정부 주도의 준군사조직에서 개별 학교 중심의 학생 자치 조직으로 개편하였다.[29]

학도호국단의 성격 변화는 학도호국단의 주도권을 둘러싼 문교부와 국방부, 더 정확하게는 문교부와 전국학련 출신 학도호국단 간부 사이의 갈등의 산물이었다. 즉 문교부가 주도하는 학도호국단에 흡수된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을 이용해 국방부 정훈국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문교부가 이들의 분리를 막고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학도호국단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이다. 또한 학도호국단 성격 변화에는 학도호국단을 만든 전임 안호상 문교부 장관의 국가주의적 성향에 대한, 후임 백낙준 문교부장관의 불만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30]

1951년 이후 학도호국단의 성격이 개별 학교 중심의 학생자치 기구로 변모하였지만, 학도호국단 체제는 여전히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면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제약했다. 학도호국단 하부는 학생자치 기구로 조직하였지만 상부는 행정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문교부 장관이 중앙의 단장을 맡았다. 비록 학도호국단 운영에서 학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학도호국단이 정부의 하부

---

28)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794~795쪽.

29) <(대통령령 제523호) 大韓民國學徒護國團 規程 中 改正의 件> ≪官報≫ 1951년 8월 24일.

30) 연정은, 2004 앞 논문, 220쪽.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빈번했다. 1950년대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출정 계몽 선전 운동 및 전시 학도 궐기 대회(1953년 2월)
2. 북진 통일 학도 총궐기 대회(부산: 1953년 4월 22일)
3. 휴전 회담 반대 데모(1953년 6월 12일)
4. 미군 철수 반대 국민 총궐기 대회(1954년 9월 26일)
5. 적성 휴전 감위 축출 국민 대회(1955년 8월 6일, 학생 동원 4개월)
6. 이박사 대통령 재출마 요청 데모(1956년 3월 10일)
7. 대한 학도 반공 궐기 대회(1956년 10월 20일)
8.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 기념 대회(1956년 11월 23일)
9. 감군 반대 데모(1957년 9월 24일)
10. 인도네시아 반공혁명군 지원 궐기 대회(1958년 5월 24일)
11. 재일교포 북송 반대 데모(1959년 2월 13일, 학생 동원 10개월)
12. 아시아 반공 민족 대표 환영 및 반공 총궐기 대회 학도 참가 시가행진(1959년 6월)[31]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학생 동원 사례는 북진통일, 휴전반대와 관련한 각종 반공 궐기대회였다. 1953년 3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반대 성명을 낸 이틀 후 4월 1일부터 휴전회담반대 궐기대회와 시위가 격렬히 계속되었다. 4월 20일에서 5월 12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휴전반대 궐기대회와 민중대회는 7,500회, 지방의회대회는 540회, 동원 인원은 800여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6월에도 시위와 궐기대회가 계속되었다. 거대한 궐기대회에서 살벌한 구호를 외치며 북진, 멸공통일을

31)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앞 책, 797쪽.

외칠 때, 그것은 군중심리와 결합되어 반공의 절대적 지도자인 이승만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승만의 권력과 극우반공체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단정론자로서 통일운동을 억압해온 이승만은 북진통일운동으로 통일의 화신이 되었다. 이승만은 자신이 계속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항상 통일을 내세웠다.[32]

이승만 정권이 각종 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1955년 대한매일신문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휴전협정 조인 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휴전감시단인 '중립국감시위원단'에는 체코와 폴란드 등 공산국가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연일 "체코, 폴란드 물러가라"는 관제데모를 벌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그런데 1955년 9월 10일 당시 유엔대표부 상임대사 임병직이 대구를 방문하자, 이번에도 이승만 정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동원, 폭염 속에 서너 시간이나 세워놓는 일이 벌어졌다.[33] 이에 <대구매일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 최석채는 9월 13일자 신문에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그러자 이 사설이 나간 다음날인 14일 오후, 약 20명의 청년들이 곤봉과 해머로 무장하고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신문사의 각종 시설을 부수고 직원들을 구타하는 한편, 신문을 탈취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백주의 폭행은 테러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테러범이 아니라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물론 최석채는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34]

1950년대 학생들은 반공운동 뿐만 아니라 반일운동에도 대거 동원되

---

32) 서중석, 2007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132~135쪽.

33) 한국사사전편찬회 편, 1990 ≪한국 근현대사 사전≫ 가람기획, 328쪽.

3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78쪽.

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반공과 반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건물이나 담벼락에 '反共防日'의 구호가 쓰여 있었고, 당시 국민학교 학생들도 제식훈련을 받으면서 "北進統一, 反共防日"을 외칠 정도였다. 단정운동의 최고 지도자인 이승만이 북진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통일의 화신으로 부각된 것처럼, 친일파를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한 이승만은 반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반일민족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부각되었다.[35]

먼저 1954년 12월에 등장한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이 소련과 외교 교섭을 벌이고 중국과도 접근하면서 북한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자, 1955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대대적인 반일운동이 일어났고, 수십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 가장 큰 반일운동은 1959년에 벌어진 북송반대운동이었다. 1959년 1월 30일 일본이 재일한국인 북송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승만 정권은 1959년 1년 내내 전국 각지에서 반공과 결합한 반일운동을 일으켰다. 1959년의 반일운동은 이전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이었다. 1959년 2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에서 1,000여만 명의 국민들이 7,400회가 넘는 북송반대집회에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1,400여 회에 걸쳐 500만 명 이상, 또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00여 회에 걸쳐 1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북송반대집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결국 북송 저지에 실패했다. 이렇듯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외교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반일운동을 통해 그의 전횡을 감추고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강한 불신과 경계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시에 이러한 1950년대의 대규모 반일운동 경험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은 1960년대에도 강고하게 이어졌다.[36] 바로 이러한 반공, 반일운동에 학생들은 대거 동원되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35) 서중석, 2007 앞 책, 137쪽.

3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397~398쪽.

반공, 반일운동이 학생들에게 끼친 이데올로기적 영향은 상호 모순적인 면이 있었다. 하나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대로 학생들이 반공과 반일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내면화하고 규율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강력한 영향력이었다. 1950년대 '반공'의 틀을 뛰어넘는 사고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일' 역시 모든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정서였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효과는 충분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승만 정권이 의도와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즉 1950년대는 비록 '북진'이라는 것이 전제되기는 했지만 '통일'이 끊임없이 언급되었다. 특히 '통일이 되어야 잘 산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졌다. 이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키기 충분했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통일운동은 갑자기 분출된 것이 아니라 1950년대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수단을 달리한 형태로 계승된 측면이 있다. '반일'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신이 1950년대 내내 증폭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1960년대에도 이어져 결국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영향 중 1950년대는 아직 전자가 두드러진 상황이었고, 학생들은 그만큼 이승만 정권의 통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학생들의 불만과 반발도 커졌다.

학생회가 없는 상황에서 학도호국단은 유일한 학생자치 기구였다. 대학의 경우 일상적인 학생 통제, 동원과 학도호국단의 횡포에 시달리던 일부 대학생들이 학도호국단의 해체를 강하게 요구했다.[37] 이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대신 1953년부터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학이 많아졌다.[38] 민주적 절차를

37)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도호국단 해체 요구에 대해서는 연정은, 2004 앞 논문과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앞 책 참조.

38) 고려대학교는 1953년부터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유입후보',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 학생들이 직접 뽑기 시작했다(高麗大學校 六十年史編纂委員會, 1965 ≪六十年誌≫ 高麗大學校, 368쪽). 서울대학교는 1954년부터 법과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운영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였고 나머지 단과대학은

통해 학생들의 대표성을 획득하면서 학도호국단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특히 축제와 같이 전교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교내 행사는 대부분 학도호국단이 주관하였다. 그밖에도 학도호국단은 각 학교 별로 각종 체육대회, 웅변대회, 연극공연, 음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다.[39] 이는 학도호국단의 학생 동원 능력과 자치 능력이 함께 커진 것을 의미했다.

학도호국단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1959년 말부터 일부 민주당 성향의 학도호국단 간부들과 학생들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호소하면서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추진학생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또 1960년 4월혁명 당시에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도호국단 간부들을 중심으로 항쟁에 결집하였다.[40] 물론 이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학도호국단은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 직전 '전국대학생구국학생총연맹'이라는 어용 단체를 구성하여 이승만과 이기붕 지지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정권에 충성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 학생운동의 기반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대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극우반공주의에 기반한 국가의 학원 통제 속에서도 많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였다가, 1956년 문리과대학과 공과대학, 1957년 미술대학과 농과대학도 직선제를 도입했다(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위 책, 796쪽).

39) 중앙학도호국단, 1959 앞 책, 298~307쪽.

40) 고려대학교는 1950년대 내내 단과대학별로 신입생환영회를 진행하였는데, 5개 단과대학 운영위원장의 합의로 1959년 처음 단과대학 통합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하였다. 다음 해인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장들은 이 신입생환영회를 이용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4·19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김양현, 2005 <내 사랑 고대> ≪회고 50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우 수상집≫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64쪽;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a)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41~142쪽).

중고등학교에서 학원비리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1950년대 학원비리와 관련한 학생들의 저항 양상은 25건의 사례를 분석한 연정은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50년대 학생들의 저항은 대부분 교장의 비리 혹은 교장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각 학교단위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혹은 학도호국단 중심 멤버인 상급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학도호국단 주도의 학생 저항이 일어날 때 대부분 전학생이 일률적으로 동맹휴학(맹휴)과 같은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특징을 보였다. 맹휴가 시작되면 반대하는 학생이 거의 없이 전학생이 맹휴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문제가 절실했고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학도호국단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다른 행사들처럼 맹휴도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41]

연정은은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학생들을 선동할 때 아침조회나 시험을 이용했던 것을 근거로, 학도호국단을 통해 일상적으로 익혀진 집단성과 규율성이 학생들의 저항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재현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아침조회에서 맹휴를 모의하거나 시험을 거부하는 것을, 학생들이 학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았다.[42] 그러나 제한된 사례만을 가지고는 학도호국단이 당시 중고학생들의 집단성과 규율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또 당시 학생들의 집단성과 규율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고등학교의 학도호국단과 대학의 학도호국단은 그 자치적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대학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950년대 중고등학교 동맹휴학과 같은 학생들의 저항 사례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집단적인 힘의 결집과 분출이 당시 학생들에게 익숙한 '경험'이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에는 정치적인

41) 연정은, 앞 논문, 247~249쪽.

42) 연정은, 위 논문, 250쪽.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의한 학생 동원, 즉 관제데모가 자주 일어났다. 이중 가장 길고 격렬하게 진행된 관제데모는 1960년 4월혁명 바로 직전인 1959년에 1년 내내 지속된 '재일교포 북송 반대시위'였다. 당시 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각 지방에서는 각급 학도호국단이 앞장서 야간봉화시위까지 감행하였다.[43]

관제데모를 할 경우 학교 측은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고 만약 불참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시위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만큼 당시 학생들에게 시위의 경험은 익숙한 것이었다. 집단성과 규율성의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익숙한 시위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맹휴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4월혁명 당시 대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관제데모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월혁명 직후 한 학자는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十二年間에 걸친 李博士의 執權에 있어서 우리 社會의 學生들은 언제나 執權者의 利益을 위한 行列에 언제나 동원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어떠한 獨裁主義者에 있어서도 共通하게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手法, 즉 國內에 있어서의 그 독재에 대한 反對와 不滿을 방지하기 위하여 國民의 주의를 國外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手法에 의하여 우리 社會의 學生들은 가지가지의 '官製데모'에 動員된 경력이 많았다. 그러나 四月革命은 바로 獨裁政權에 의하여 그들의 利益을 위하여 이용된 바를 그 데모에 의하여 成就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李博士 政權의 歷史的 '아이로니'가 있다.[44]

---

43) 중앙학도호국단, 1959 앞 책, 276~277쪽.

44) 韓泰淵, <專制君主의 沒落-四月革命의 歷史的 意義> ≪世界≫ 1960년 6월, 40쪽.

당시 한국에서 성공회 신부로 활동하고 있던 한 외국인도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인상기를 남겼다.

> 이번 데모가 비상하게 잘 훈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李政權 下에서 많은 官製데모에 동원되고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질서 있는 데모 방법을 그대로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학교에서 隊列을 지어 나가서 同一한 口號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는 다시 列을 지어 각기 母校로 돌아가서 해산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45]

4월혁명의 시작을 알린 1960년 2월 28일의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초반, 교통순경이 학생들의 시위 대열을 보고 이를 막기는커녕 시위에 방해될 모든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켜주는 친절을 베풀었던 것도,[46] 갑작스러운 학생들의 시위를 얼마 전까지 연일 계속된 북송 반대 시위와 같은 관제데모로 착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4월혁명 당시 대부분 고등학생 시위는 학도호국단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였다.[47]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관제데모에 덜 동원되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했다. 학도호국단이라는 틀에서 대학생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59년 북송반대 관제데모에는 대학생들도 많이 동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국대 학생들은 1959년 11월 북송에 대한 규탄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함께 강행하려다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학교당국의 저지와 경찰의 개입으로 좌절된 바 있었다.[48]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관제데

---

45) <(좌담회) 外人 敎授·神父가 본 四月革命> ≪世界≫ 1960년 6월, 129쪽.

46) 경북고등학교, 1960 <2.28 경과 상보> ≪慶脈≫ 7 경북고등학교(2.28 40주년 기념사업회 편찬분과위원회, 2000 ≪2.28 民主運動史 Ⅱ 資料篇≫ 2.28 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235쪽 재인용).

47) 金聖泰, <四月 十九日의 心理學> ≪思想界≫ 1961년 4월, 82쪽.

48) 東國大學校 學生自治委員會, 1960 <東國健兒의 民主記錄> ≪民主革命의 발자취

모 경험은 이처럼 언제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다. 4월혁명 당시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도호국단 간부들을 중심으로 항쟁에 결집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학도호국단의 군사훈련이 4월혁명 당시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중앙대 학생들이 남긴 다음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 민주주의 만세를 명수대 골짜기가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삼창하고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교훈을 쓴 프래카드를 선두로 스크람을 짜면서 교문을 나섰다... (중략)... 구호를 외치면서 질서있게 흑석동을 출발하였다. 단체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감탄할이만큼 지도자들의 명령에 잘 순종했고 대열은 정연했다.[49]

위 글에서 언급된 '단체훈련'은 학도호국단의 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즉 4월혁명 당시 중앙대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훈련을 바탕으로 일사분란하게 시위에 나섰던 것이다. 학도호국단은 그만큼 익숙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의도치 않게 4월혁명에 학생들이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관제데모와 동원의 경험을 가지고 4월혁명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1960년대 초중반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이다. 1960년 4월혁명 직후 간행된 수기집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시 학생들은 4월 항쟁 때 "데모라는 집단의 의사표시를 처음으로 가져 본 것은 아니었다. 과거 어느 세대 학생에 비해서도 데모의 행렬을 많이 체험한 소년들이었다."[50] 이들은 1960년 4월혁명에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생보다 먼저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1960년대 중반 학생

≫ 正音社, 143쪽.

49) 中央大學校 學生自治委員會, 1960 <젊음과 사랑과 祖國과> ≪民主革命의 발자취≫ 正音社, 178쪽.

50) 安東壹·洪基範, 1960 ≪奇蹟과 幻想≫ 永信文化社, 64쪽.

운동의 인적 기반이 되었다.[51]

3) 대학문화를 통한 대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정치적 역량 강화

1950년대 대학의 급격한 팽창은 대학의 위상 저하와 대학생의 질적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반면 수많은 대학생들을 학교에 결집시킴으로써 언제든 그 집단의 힘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방향으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한마디로 대학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통해 집단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획득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이 실제로 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의 집단적 정체성이 강화되어야 했다.

대학생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자라난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집단정체성을 형성하기 쉽다.[52] 그러나 세대 구성원 중 10%도 안 되는 소수만이 대학에 진학했던 1950년대 상황에서, 세대적 요인이 대학생의 집단정체성 강화에 미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일본의 식민통치 당시부터 이어진 대학생의 특권적 지위나, 대학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 대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

51)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 관련 구술자료들을 보면,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당시 대학생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시절 4월혁명에 참여했다가 1961~1963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었다.

52) 박재홍은 만하임의 논의를 토대로 세대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세대란 ①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해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② 공유된 경험에 기초해 다른 코호트(동년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며, ③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해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다(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출판, 85~86쪽). 세대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대를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보는 만하임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집단정체성이 강화되는 계기는 보다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집단정체성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집단 밖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서 형성되는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동일시하고 인정하여 형성되는 정체성이다. 이 두 종류의 집단정체성은 상호 대립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한다.[53] 이미 1950년대 대학생들은 그들 밖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학생들의 병역 혜택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1950년대 중반 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 논란이 발생했을 때, 대학생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호명되고 다루어졌고, 결국 '학보병'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징집된 바 있었다. 1955년 대학에 입학한 한 여학생의 회고는 1950년대 후반 학생 징집 문제가 대학생들의 집단정체성 강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잘 보여준다.

> 사실 나는 재학 4년 동안 동급생이나 동창생에 대해 동료의식이나 공감 같은 걸 느껴보지 못했다. 아마도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단 한번 내게 그들과 더불어 진한 공동의식 같은 걸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3학년 때 이른바 '학보병 제도'가 처음 실시된 때였다. 6·25의 쓰라린 체험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우리 세대에 갑자기 단행된 재학생 징병은 캠퍼스 내에 굉장한 동요를 불러일으켰던 걸 기억한다. 아마 동급생 중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일시에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증한 교수님의 인솔 하에 여학생 거의 전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동급생이 서울역까지 그들을 전송 나갔다. 우리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른 입대생들을 마중하고 저녁노을이 붉게 비낀 서울역 하늘 밑에서 서울대 교가랑 이별가를 소리 높이 합창했다. 평소 땐 서로 인사도 없이 지내던

53) Rechard Jenkins, *SOCIAL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p 82~89.

동급생들끼리 그 순간만은 진한 공동의식을 느끼고 제법 장엄하게 시대의 아픔을 공감했던 것이다.[54]

이 학생은 대학 내 몇 안 되는 여학생으로 평소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학생 징집 문제가 발생하자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진한 공동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외부적 요인만으로 집단정체성이 강화된 것은 아니었다. 대학 내적으로도 학생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는 기회가 많아졌다.

무엇보다 1950년대부터 학생들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한 공통의 '문화'가 집단정체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 대학문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부 대학에서 대규모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1950년대 이전에도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의 교내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었던 만큼 그 규모도 작았고 정기적으로 반복되지 못했다. 그나마 스포츠와 연극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고, 이화여자대학교의 메이퀸 대관식이 꾸준히 이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몇몇 대학에서는 개교기념식을 계기로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교내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목적을 지닌 여러 학교들을 통합한 서울대는 1950년대에 들어와서도 캠퍼스의 분산으로 전교적 차원의 정체성을 쉽게 강화하지 못했다. 이에 1952년부터 매년 가을 학도호국단 체육부 주관으로 전교생이 참가하는 종합체육대회를 열어 학생간, 단과대학간 단결과 유대를 강화했다. 실제로 단과대학 대항으로 벌어진 구기 종목 시합은 경쟁이 치열해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55] 다른 대학에서도 교내 체육대회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사였다.

---

54) 이덕희, 1994 <법대와 나와 인생>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서울법대 동창 수상록 2≫ 經世院, 518~519쪽.

55) 1950년대 중반 서울대학교 종합체육대회에 법과대학 축구대표로 뛰었던 한 학생은 훗날 당시 시합 이야기를 '학창생활의 보람찬 회고'라고 자부했다(나석호, 1994 <보람과 긍지> ≪진리는 나의 빛-서울법대 동창 수상록 1≫ 經世院, 246쪽).

체육대회와 함께 전교생이 모이는 정기적인 행사로 개교기념식이 있었다. 서울대는 1953년 이래 전교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교기념식을 매년 거행했다. 그러다가 1956년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한 기념식뿐만 아니라 각종 웅변대회, 전시회, 학술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56] 이를 계기로 1957년 6월 서울대의 첫 번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서울대학교 문화제'가 학도호국단 주최로 열렸다. 여기서는 학술 강연회, 음대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연, 연극제 등의 행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연극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57] 같은 해 가을에는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장기놀이대회'를 열었는데, 전교생과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독주, 독창, 만담, 코미디, 고전무용, 즉석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즐겼다.[58] 서울대학교 문화제와 장기놀이대회는 이후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진행되었고 흩어진 서울대 학생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연세대에서 벌어진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개교기념식과 연극 공연이었다. 1957년 5월 연세대는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여학생 가운데 '캠퍼스의 여왕'을 뽑고, 개교기념식에서 '여왕 대관식'을 갖기 시작했다. '연세여왕'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천된 10여 명의 여학생 가운데 한 명을 남학생들이 투표하여 결정했다. 1957년 창립 당시 개교기념식에서는 여왕 대관식을 화려하게 치렀고 "연세의 정신을 한데 묶어 바친다."는 의미에서 서양 축제의 '메이폴'을 모방한 '丹心柱'을 운동장 중앙에 설치하였다.[59] 1958년과 1959년의 여왕 대관식은 처음보다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나 대신 6개 단과대학이 참여한 촌극경연대회가 함께 열렸다.[60] 이러한 이벤트는 신생 연세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56) <서울大學校 開校 十周-莊嚴한 紀念式典·盛大한 祝賀行事> ≪大學新聞≫ 1956년 10월 15일, 1면.

57) <서울大 文化祭 閉幕> ≪大學新聞≫ 1957년 7월 8일, 1면.

58) <第一回 '장기놀이' 盛了> ≪大學新聞≫ 1957년 11월 25일, 1면.

59) <本校創立 42週年 多彩로운 記念行事 準備> ≪延世春秋≫ 1957년 4월 25일, 1면; <古典美 燦然한 女王戴冠式> ≪延世春秋≫ 1957년 5월 18일, 3면.

위한 수단이었다.

연극의 경우 1955년 연희대학교[61]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노천강당에서 공연을 시작한 후 개교기념 정기공연 때마다 1만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62]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대 문화제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가 연극 공연이었고, 고려대 연극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렇듯 당시 연극은 대학문화의 중심에 서서 많은 학생들을 끌어 모았다. 또한 대학 연극은 1950년대 대학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줬다. 우선 극적 완성도가 높은 창작극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서구의 번역극을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번역한 국내 초연 작품이 많았고 노천강당에서의 대규모 연극 또는 원형무대 등을 이용한 실험적 연극을 시도하여 기성 연극계에 자극을 줬다.[63] 이러한 서구 지향성과 선도성은 연극뿐만 아니라 대학문화 전반에 나타난 특징이었다.

고려대는 개교기념식을 통해 학교의 상징을 계속 부각시켰다. 1955년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는 새로 만든 교가를 발표했다. 1958년 개교기념식에서는 새로 만든 교기와 校章을 발표했고, 1959년 개교기념식에서는 김성수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64] 고려대는 교내 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행사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 대신 뒤에 자세히 살펴

---

60) <아름답게 피어오른 젊음의 상징> ≪연세춘추≫ 1958년 5월 12일, 2면; <남을 높일 수 있는 미덕의 상징> ≪연세춘추≫ 1959년 5월 18일, 2면.

61) 연세대학교는 1957년 연희대학교과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한 뒤 새롭게 만들어진 교명이다.

62) <燦然한 劇藝術의 盛典> ≪延禧春秋≫ 1956년 6월 6일, 1면; <燦爛한 新劇藝術의 盛典> ≪延世春秋≫ 1957년 6월 1일, 1면; <경험으로 싼 새로운 극예술의 모범> ≪연세춘추≫ 1958년 5월 19일, 1면.

63)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b) ≪고려대학교 문화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44쪽.

64) <五十周 期해 新校歌 制定> ≪高大新報≫ 1955년 5월 16일, 5면; <53週年을 期해 制定된 校旗> ≪高大新報≫ 1958년 5월 10일, 3면; <仁村先生 銅像除幕式 嚴修> ≪高大新報≫ 1959년 5월 9일, 3면.

볼 모의국회와 토론회, 연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축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고연전'이다. 일제 강점기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구기 시합은 '보연전'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당시 '보연전'은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대회에서 두 학교 팀이 대전하게 되는 경우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두 학교만의 정기대항전이 없었다. 해방 직후 두 학교의 친선을 위한 대항전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에 거행되었으나 활성화하지는 못했다. 대규모의 정기대항전은 195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은 "고등학교 시절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 모여든 학생들이 제각기 다른 기질을 연희 정신에 투철하도록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스포츠를 장려하여야겠고 특히 그 효과적인 방법이 고대와의 대항전 개최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기 고연전을 추진하였다.[65] 정기 고연전은 처음부터 대규모 대학 축제의 중요 기능, 즉 대학별 집단정체성의 강화를 의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곧바로 관철되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응원전은 경기보다 뜨거웠다. 학생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시내 곳곳을 노래를 부르며 뛰어 다녔다. 1957년 고연전 상황을 한 고려대 학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이윽고 우리는 동대문에서 천여 명이 넘는 숫자가 '농자천하지대본'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교호와 교가를 부르며 전열을 가다듬고 종로를 향해서 걷거나 뛰면서 '고대 이겼다!'를 외쳐댔다. 교복 윗도리를 풀어헤치고 손에 막걸리 병을 든 모양이 벌써 꽤나 취했고 빈 병을 패대기치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 소주병으로 나팔을 불어댄다. 지나던 전차도 서행을 마다 않고, 행인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고대가 뭘 이겼나 보다 하면서 어떤 이는 박수도 보냈다. 그 때만 해도 이런 행렬이 흔치 않은 세월이

65) 연세대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1985 ≪연세대학교 백년사 4≫ 연세대학교, 276~277쪽.

라 고연전은 그냥 그렇게 낭만이 있었고 구경하는 시민들도 흥겨워했다. 종착 지점인 시청 뒤 무교동에는 선술집이랑 식당마다 두 대학 학생들로 초만원인데 어느 패가 고대이고 연대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하여간 '고대 이겼다!'고 소리 나는 쪽이 훨씬 많았다. 정말이지 무교동 거리가 그 날 밤만은 온통 축제분위기였다.[66]

고연전은 이후 몇 차례 열리지 못한 해도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두 학교의 집단정체성을 확실하게 강화시켰다. 특히 두 학교의 응원전은 각 대학에서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밖에 이화여대는 1956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를 개교 70주년 기념주간으로 설정하고 대강당 봉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5월 31일 기념식 후 메이퀸 대관식과 민속무용이 화려하게 펼쳐졌다.[67] 메이퀸 대관식은 이화여대 축제를 대표하는 행사로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59년에는 중앙대가 개교기념식에서 제1회 중앙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는 1959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성대문화제'를 부활시켰다. 성대문화제는 이미 1948년과 1949년 개최된 바 있었지만, 1959년 제3회 행사의 규모는 훨씬 컸다. 학도호국단 주최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문화제 기간 동안 전국남녀고등학생 웅변대회, 전국남녀고등학생 백일장대회, 모의국회, 연구발표회, 각 학회 학술발표회, 사진전시회, 貞靜의 밤, 체육대회, 문학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68]

1950년대 전교생이 모이는 대규모 축제는 대부분 개교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졌다. 이는 축제의 기획 자체가 대학별 집단정체성 강화

---

66) 한호선, 2005 <고희에 더듬어 보는 마음의 고향> ≪회고 50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우 수상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55쪽.

67) 이화 100년사 편찬위원회, 1994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40~342쪽.

68) <第三回 成大文化祭 閉幕> ≪週間成大≫ 1959년 11월 9일, 1면.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축제를 한다고 해서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의 의도 그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수준으로 학교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축제 이외에도 대학별 집단정체성을 형성해 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69] 그러나 1950년대 대학 내 학생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상황에서 축제는 전교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다. 특히 1950년대 대학 축제는 이후 시기 축제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았다. 개인별로 편차가 있었겠지만 1950년대 대학생들은 축제를 통해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키울 수 있었다.

강화된 대학별 집단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은 집단으로서 물리적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960년 4월혁명 당시 대학생들이 학교별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수 있었던 기저에는 앞서 <표1>에서 보았듯이 학교별 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대학별 집단정체성의 강화가 깔려 있었다. 학생운동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합시위나 연대투쟁이 꾸준히 모색되었으나 기본적으로 각 대학별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오랫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대학별 집단정체성이 강고했기 때문이다.[70]

---

69) 축제 이외에 대학별 집단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캠퍼스 공간'이다. 공간 이론에 의하면 공동체가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은 (특정)'장소'가 되는데, 장소들 그 자체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심리적 차원에서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52~53쪽).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1975년 이전까지 단과대학별로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전체의 집단정체성 보다 단과대학별 집단정체성이 훨씬 강했다. 또한 1960년 4월혁명 이후 축제가 거의 모든 대학으로 확산되었을 때, 대부분 대학에서 축제명으로 '캠퍼스 공간'과 관련한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어 1962년부터 시작한 고려대 축제의 이름은 캠퍼스 석조 건물의 특징을 부각시켜 '석탑축전'이라 하였고, 역시 같은 해 시작한 서울대 문리대 축제의 이름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던 캠퍼스 앞 다방 이름을 빌려 '학림제'라고 하였다. 그밖에 연세대의 '무악축전'이나 서울대 법대의 '낙산제'와 같이 캠퍼스가 위치한 지명을 축제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각 대학 축제가 학생들의 집단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아직 그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 1950년대의 경우 축제와는 별개로 각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 다양한 '모의' 행사들, 즉 '모의국회', '모의재판', '모의유엔총회' 등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크게 발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1949년부터 고려대에서 개최한 '모의국회'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동일하게 상정된 '亞南民國' 국회에서, 여당인 고려대 대의원들과 야당인 타 대학 대의원들이 정해진 안건을 놓고 열띤 회의를 벌이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학생 자신의 학구적 연마와 나아가 국민의 정치훈련과 민중정치의 보급을 위해",[71] 또 "학생들이 학원에서 연구한 學理를 실사회에서 실제 적용 응용 방법을 연마하고 정치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현실정치 면에 생생한 새로운 자를 발표하기 위하여"[72] 개최되었다.

모의국회에서는 실제로 국회에서 논점이 되었던 안건들을 주로 다루었다. 일례로 1954년 모의국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풀기 위한 개헌 시도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뤘고, 1955년에는 정부의 언론 통제와 관련하여 '신문지 임시단속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 1958년에는 24파동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1959년에는 경향신문 폐간과 관련된 '군정법령 폐기 대안' 등을 각각 안건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안건들은 이 행사가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당시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과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모의국회에서는 이들 안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학생들 사이에 실제 국회 못지않은 뜨거운 논쟁이 오갔으며,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풍자했다.

---

70)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에서 특정 운동 목표와 관계없이 "구속학생 석방하라"라는 구호가 많은 학생들의 공감대 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1950년대부터 형성된 대학생들의 강한 집단정체성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71) <學生의 模擬國會-오늘 培材中學 講堂서> ≪東亞日報≫ 1949년 12월 4일, 2면.

72) <學生模擬國會-오늘 市公館서 開催> ≪東亞日報≫ 1954년 10월 30일, 2면.

당시 고려대 모의국회의 인기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행사 자체가 학교 밖에서 열려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행사장에 쇄도하여 그 중 일부만 입장이 가능했다고 한다.[73]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 행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하고 간섭하였다. 1956년의 경우 서울 '시립극장'에서 모의국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예술적 행사에만 극장 사용을 허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이를 철회한 바 있었다.[74]

고려대 모의국회가 큰 인기를 끌자 다른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모의' 행사들을 진행했다. 이화여대는 1953년부터 매년 인권옹호주간을 맞아 학교 강당에서 '모의재판'을 열었고, 동국대도 1954년과 1955년 서울체육관에서 모의재판을 열었다. 두 행사 모두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사건을 설정하여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모의재판을 진행하였고, 방청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고려대에서는 1955년부터 고려대학교를 모델로 한 고려산업주식회사의 '모의주주총회'를 가졌고, 외국어대는 1958년부터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를 사용하여 어학실력을 과시하는 '외국어 모의유엔총회'를 가졌다. 그밖에도 국제연합한국학생회에서 1955년부터 실시한 '모의유엔총회'도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나 국제 분쟁 등의 의제를 가지고 천 명 이상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꾸준히 지속되었다. 각종 '모의' 행사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데 유용한 행사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풍자적으로 비판의식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는 '모의' 행사와 더불어 각종 학술 토론대회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전까지 대학생 행사 중에 '토론대회'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웅변대회'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55년부터 개최된 고려대의 '전국대학경제학연구

73) 高麗大學校 六十年史 編纂委員會, 1965 앞 책, 453쪽.

74) <議會萬像> ≪東亞日報≫ 1956년 10월 20일, 3면; <高大서 '模擬'국회-市立劇場서 大盛況> ≪京鄉新聞≫ 11월 1일, 3면.

토론대회' 이후 각종 학술 토론대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국대학경제학연구토론대회'의 목적은 경제학의 이론과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내지 세계경제의 동향 등에 관한 연구를 발표, 토론하는 광장을 전국의 경제학도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전국 각 대학의 경제학과, 상학과 또는 경영학과의 대표자가 거개 참가하여 많은 때는 25개교의 80여 명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 토론대회에서는 아담스미스, 케인즈 등의 이론이 논의되는가 하면, 또 한국과 같은 후진국의 경제 현상, 또 한국경제의 문제점, 경제개발과 원조의 문제 등이 논제가 되기도 했다.[75]

1957년부터는 서울대에서 '전국정치학도토론회'가 열려 '민주주의 이념과 의회정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와 자립경제책' 등이 다루어졌으며,[76] 1958년부터는 연세대에서 '전국대학생법학학술토론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77] 그밖에 1958년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학생학술토론대회'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78] 이들 '토론대회'는 기본적으로 학술 행사였지만 '모의'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들을 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지도적 엘리트로 성장하는 정치적 훈련과 각성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들 '모의행사'나 '토론대회'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각 대학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특히 이들 행사를 통해 각 대학의 학생 간부나 이념 지향적 학생들 사이에 인적인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김낙중의 구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 그 당시 고대에서는 정치학과에서는 모의국회를 했어. 모의국회를 하려면 각 대학 정치학과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75) 高麗大學校 六十年史 編纂委員會, 1965 앞 책, 455쪽.
76) <文化界 소식> ≪京鄉新聞≫ 1957년 11월 24일, 4면.
77) <第一回 全國大學生 法學學術討論大會> ≪京鄉新聞≫ 1958년 11월 26일, 4면.
78) <전국대학생학술토론대회> ≪京鄉新聞≫ 1958년 7월 10일, 4면.

하도록 해야 되고,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토론대회”를 했어. 이와 같은 학생들의 모의국회와 학술토론대회 때문에 그것이 각 대학이 서로 연락해서 학생 간부들이 와서 참여하는 형식이 됐지. 그 모의국회와 경제학토론대회 때문에 서로 알게 된 그것이 4.19의 밑천이야. 그것이 4.19에 각 대학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4.19가 성공했거든. 모의국회하고 경제학토론대회가 학생들 사이에 연대관계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참여를 했고, 4.19가 학생들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정치학과에 모의국회하고 경제학과의 경제학토론대회였다. 우리가 경제학토론대회를 하니까 서울상대에서는 경제정책토론대회를 하기도 했었다. 그게 각 대학 학생 간부들이 서로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79]

모의행사나 토론회 등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대학생 학술 행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인 접촉과 연계는 1960년대 이후에도 한국의 학생운동이 학교 단위를 넘는 연대 투쟁으로 권력에 맞서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대학생들만의 독특한 문화, 즉 ‘대학문화’가 학생운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요컨대 1950년대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도적 엘리트로 규정되어 사회를 선도할 영향력을 갖췄고, 대학의 급속한 팽창 과정에서 그 수가 급증하여 집단으로서 물리력도 함께 갖게 되었다. 이러한

79) <김낙중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204~205쪽). ≪고대학생운동 Ⅰ≫은 1960~70년대 고려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구술인터뷰를 녹취하여 출간한 책이다. 많은 중요 인물들의 증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구술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는 각각의 구술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인터뷰를 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녹취록 정리 과정에서 많은 첨삭이 가해진 흔적이 보이며, 수정의 정도나 방식에 일관성도 없다. 이는 역사 연구자나 구술 전문가의 참여 없이 동문회 차원에서 구술 면담과 녹취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이 책에 실린 구술자료를 활용할 때, 각주에 구술자료의 구체적인 정보 대신 책의 쪽수만 기재하도록 하겠다.

학생운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1950년대 대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통제에 시달리면서도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 집단으로서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또한 1950년대 대학생들은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했던 외부의 규정과 그들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축제와 같은 대학문화를 통해 집단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집단의 물리력이 결집하여 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모의국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 행사를 통해 지도적 엘리트에 걸맞는 정치적 훈련과 각성의 기회, 그리고 대학생 상호의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학생들의 경험과 문화는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는 학생운동의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대학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인적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실제 대학은 국가의 통제에 시달리며 동시에 '병역기피자와 모리배의 소굴'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었다. 대학생들 역시 질적으로 하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학도호국단을 통한 국가의 통제는 대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그들을 체제 순응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대학생의 양적 급증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집단정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었고, 모의국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 행사가 학생들을 관심과 활동의 폭을 '학술'이라는 틀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을 '탈정치화'시킬 수도 있었다.

따라서 195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된 학생운동의 필요조건들이 실제 학생운동으로 분출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을 학생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즉 선진적인 이념과 조직이 필요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그 매개로서 '이념서클'이 1950년대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2. 이념서클의 등장과 시련

1) 현실 비판의식 태동과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관심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1950년대 대한민국은 극우반공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승만이 조봉암을 제거한 '진보당 사건'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당시 한국사회에서 극우반공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은, 아니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악마와 같은 '빨갱이'로 낙인찍혔다. 1950년대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8년 여순사건과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된 극우반공체제가 정치적 사상적으로 학생들을 위축시켰다. 일제 강점기 및 해방 직후의 학생운동 전통이 단절된 가운데서 1950년대 대학생들이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중반 이후 몇몇 대학에서 소위 '이념서클'이 만들어졌다. 반공체제 하에서 대학생 이념서클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다.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 서울대 법대의 '신조회', 고려대의 '협진회'가 당시 대표적인 이념서클이었다.

1950년대 이념서클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로 서구의 민주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다.[80] 이들은 "우리 민족이 왜 싸워야 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길래 이렇게 적대시하는가?" 등의 의문을 갖고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당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념 관련 서적을 함께 읽고 토론하였다.[81] 그들은 대안으로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와 같은 서유럽의 비공산주의적인 민주사회주

---

80) '민주사회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있다.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엄격하게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큰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에서는 이 개념들에 대한 소박하고 낮은 이해 때문에 개념이 더욱 불분명해지고 또 주장과 실제 사이의 괴리도 자주 발생했다. 당시의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 (상)≫ 역사비평사, 314~332쪽 참조.

81) 박태순·김동춘, 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56쪽.

의 이념에 막연한 호기심을 느꼈다.

1950년대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시 대학생들은 민주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이념서클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195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 차원의 냉전체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문리대 신진회에 참여했던 이영일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그 당시에 그 입학을 막 했더니 이제 평화공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데요. 56년에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존을 발표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몰랐는데, 선배들이 와서 '아니 미소간에 전쟁하지 말고 평화공존하자는 소리가 지금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나왔는데, 에,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 우리는 우리 동족상잔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제 북진통일론도 지금 평화공존론이 나올 때 북진통일론이라는 것이 시대착오,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는 우리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은 50년대 벌써 우주과학분야에서 소련이 미국을 앞질렀거든요. 소위 스푸트니크가 어, 유리 가가린이 인제 뭐 어 그 뭐 날아가지만, 스푸트니크가 먼저 미국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주과학분야에서 소련이 앞서고. 그리고 인제 전부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부 다 인제 식민지 독립운동 합창되고, 인제 반식민, 반신식민, 반제반봉건 그런 것이 전 아시아 아프리가에 비동맹 중립 운동에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매일 보는 게 그런 것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거 미국한테 강점 당한 상태에서 속에서 우리 주장도 못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계속 북진통일의 노래만 부르는 게 옳으냐, 응,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재복구가 다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 인제 배는 고프지 또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산다는 소문은 났지. 보니까 이제 크게 잘 살지는 않았더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87불일 때 북한은 그 때 104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중국

보다는 낫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을 합쳐놓으면, 아니 중국, 한국, 북한을 합치면 그 당시 북한이 제일 잘 살았어요. 60년대에,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그 잘사는데, 그러면 그런 잘사는 체제에 대해서 말야, 우리가 어 평화공존이랄지 교류라도 해야지. 덮어놓고 그 북진통일만 외치면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상당히 진지하게 그 문제를 토론을 많이 했어요.[82]

미소 양국이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또 제3세계 국가들이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195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변화에 대학생들을 비롯한 한국의 지식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1956년 소련공산당은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스탈린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후르시초프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공존론'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1956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 내의 신문들은 소련공산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소련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였다.[83] 특히 1957년 소련의 대륙간탄도탄 개발과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은, 미소 양 진영 간의 전면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 세계 인류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하였고, 미국도 소련과의 공존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미소 양 진영의 냉전 대립은 군사적 대결보다는 경제적 경쟁, 체제 우월성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비록 냉전체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서 과거의 극단적인 대립은 다소 이완되기 시작했다. 1959년 흐루시초프의 미국 방문은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된 모습을 상징하

82)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9일, 면담자: 오제연).

83) 박태균, 2004 <1950년대와 조봉암, 그리고 미국>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503쪽.

는 것이었다. 냉전 속에 열전을 치른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국제적 변동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84]

195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은 비동맹국가들의 선언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일간지는 물론 ≪사상계≫와 같은 잡지에는 제3세계의 출현과 그 특징을 분석한 글들이 자주 게재되었다. 일례로 ≪사상계≫ 1956년 1월호에는 낫세르의 <에집트 혁명론>이 전문 번역되어 실렸다. ≪사상계≫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당시 지식인들의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85]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두되었던 제3세계 민족주의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립국가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들 신생국가들은 1955년 '반둥회의'를 거치면서 식민주의 배격, 내정간섭 반대, 강대국 중심의 방위조약 배격 등을 결의하며 독자적인 '제3의 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들 신생 독립국가들이 유엔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자 유엔의 판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밖에 알제리 민족해방운동, 1958년 쿠바혁명 등 제3세계 국가의 민족혁명적인 분위기도 한국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86]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소위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진보당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진보당 창당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배경은 1950년대 세계 냉전체제의 변화에 대한 지식인들 및 혁신정당 운동 관계자들의 인식이었다. 조봉암과 진보당 관계자들의 1950년대 중반 냉전체제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봉암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물결과 제2의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사회민주주의

8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286쪽.
85) 박태균, 2004 앞 논문, 503~504쪽.
8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286~287쪽.

적인 체제라고 보았다. ‘자본주의의 수정과 변혁’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제3세계의 등장이다. 진보당 강령 전문에서는 ‘후진국가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항목을 통해 한국과 같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이 비동맹을 형성하고 경제건설의 목표로 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도에서의 ‘산업건설 5개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제국이 중국의 볼셰비즘적 노선과 상반되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상과 같이 조봉암과 진보당 관계자들이 혁신정당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을 통해 진행된 국제적 차원의 냉전체제 변화였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내에서 새로운 활동의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으며,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조직이나 기반이 취약했던 진보당이 짧은 기간 내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냉전체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선망의 눈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87]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진보당과 대학생 이념서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영일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들에게 조봉암과 진보당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88] 또 이영일과 같은 신진회 회원이었던 배춘실에 따르면 신진회 선배 중에 진보당 당원으로 알려진 선배가 있었다고도 한다.[89]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의 창당으로 상징되는 당시 지식인들의 민주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이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정치, 사회운동의 분출은, 대학가에 이념서클이 등장하는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1950년대 국제적 차원의 냉전체제 변화가 대학생을 비롯한 한국 지식인 사회 전반에 영

87) 박태균, 2004 앞 논문, 512~516쪽.

88)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9일, 면담자: 오제연).

89) <배춘실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10일, 면담자: 신동호).

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정치,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진보당의 창당으로, 그리고 학생운동의 측면에서는 이념서클의 등장으로 각각 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의 냉전체제 변화와 더불어, 학생들이 학내외에서 민주사회주의를 학술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도 이념서클 형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사회주의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일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영국 노동당의 약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영국 노동당의 이론가였던 라스키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90] 여기에 더하여 1951년 7월 사회주의자인터내셔널이 채택한 프랑크푸르트선언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형태"이고,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고 표명한 이후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91]

국내 학자 중 일찍부터 민주사회주의를 소개하고 주장했던 인물은 이동화였다. 성균관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초빙된 이동화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자 모두를 지양해야 하고 그 양자를 지양하는 정치적 입장을 민주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민병태도 학생들이 민주사회주의를 습득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민병태는 라스키의 민주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하여, 정치적 자유는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 평등성을 전제로 하며, 이 사회세력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회세력들의 평등이 보장되는 단계의 사회를 원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보았다. 그리고 이 평등을 달성하는 과정이 정치적 자유에 기반 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마디로 민병태는 '목적'으로서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고, 그것의

90) 윤상현, 2013 <1950년대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78쪽.

91) 서중석, 1999 앞 책, 316쪽.

달성 '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던 것이다.[92] 1954년까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신도성도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 학생들은 그의 책도 많이 읽었다. 특히 신도성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사회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이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맹목적인 자유방임은 부패한 매판자본의 무질서한 난무 속에서 반드시 외래 자본주의의 식민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93]

신범식의 경우 부친이 조봉암과 관련이 있고, 본인 역시 이동화 같은 혁신계 인사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50년대 중반 '사회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신이 출강하던 국학대학교 학생 외에 성균관대와 서울대생 등 약 1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끌어들였다.[94] 1950년대 기록은 아니지만 1961년 5.16쿠데타 직전 신범식이 ≪고대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그가 추구했던 민주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 오늘날 우리 社會에는 社會主義에 對한 要望이 澎湃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大小 간에 民主社會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것은 우리들의 自由의 進展을 爲하여 가장 切實한 것임도 더 말할 必要는 없는 일이다... (중략)... 오늘날 社會主義에의 要望은 大槪가 植民地로부터 解放된 나라가 아

92) 윤상현, 2013 앞 논문, 183~184쪽.

93) 愼道晟, <民主主義와 解放十年-韓國의 政治的 現實> ≪高大新報≫ 1955년 7월 11일, 3면. 이 글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도성이 1955년 7월 2일 고려대 정치학회 주최 정치강연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高大新報≫는 이날 강연회에 대해 "특히 (정치강연회의) 마지막 날인 7월 2일(토요일)에는 신도성 의원의 강연이 있었는데 이날따라 강연회장은 초만원을 이루어 수천 학생들로써 장내는 물론 입구까지도 콩나물 박이 듯 들끓었다."고 전하면서 "그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신의원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큼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신도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당시 그가 야당 통합과 관련한 신당 창당 문제로 언론의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커진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94) 남재희, 2006 ≪아주 사적인 정치 비망록≫ 민음사, 31~32쪽.

니면 低開發國家일수록 强烈하며 意慾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理論이야 어쨌든 간에 實際問題로서 資本主義보다는 社會主義가 浪費나 騷亂이 적을 뿐 아니라 더욱 能率的이고 그리고 가장 根本的인 問題이지만 더욱 强力 敏捷하게 國家의 發展과 大衆生活의 安定을 圖謀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것임은 이미 擧皆의 論者들이 指摘하고 있는 事實이다. 社會主義야 말로 饒舌과 騷亂 속에 左顧右眄하며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資本主義보다 훨씬 더 强力하고 計劃的이며 敏捷한 것으로 映像되며 이 때문에 低開發地域일수록 그 開發에 焦燥한 나머지 社會主義를 指向한다는 것인데, 그 普遍性이야 어쨌든 간에 이 論據가 充分히 一理 있는 것임은 否認할 수 없는 일이다. 事實 後進國家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勝利는 社會主義가 理論이나 信條에 있어서 어떻다느니 보다는 敏捷하고 計劃的이며 强力한 指導力 있는 政治를 要望하는 데서 오는 心理的 風土的 狀況의 所産임은 너무나 確實하다. 말하자면 오늘날 社會主義에 대한 大衆의 渴望은 社會主義가 좋아서라기보다는 資本主義의 諸矛盾, 그리고 그와 表裏一體가 되는 것으로 看做되는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否定으로서 提起되고 있다는 것이 숨김없는 事實이다... (중략)... 그런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를 否定하고 그와 對立者로서 登場하는 것에는 비단 社會主義만이 아니라 共産主義와 '파시즘'이 있다는 것을 注意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大衆이 渴求하는 强力性이란 點에 있어서 共産主義나 '파시즘'은 社會主義보다 越等하며 따라서 魅力的임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중략)... (사회주의는) 한편으로는 共産主義, 한편으로는 '파시즘'이라는 左右挾攻 속에서 實로 多事多難한 길을 準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95]

한마디로 신범식의 민주사회주의는 극우와 극좌를 모두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보다는 후진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계획경제, 협동경제를 지향했다.[96] 이는 이념서클 학생들의 민주사

95) 申範植, <韓國民主主義의 歷史的 課題> ≪高大新聞≫ 1961년 5월 13일, 1면.

회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이었다. 요컨대 1950년대 중반 이후 미소의 평화공존과 제3세계 비동맹운동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냉전체제 변화 속에서, 일부 진보적인 대학생들이 1945년 영국 노동당 집권과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민주사회주의를 대안적 이념으로 적극 수용하면서 대학 내에 이념서클을 만들었던 것이다.

2) 주요 대학 이념서클의 조직 상황과 정부의 탄압

앞서 언급한대로 195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대학생 이념서클 중 대표적인 것은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 서울대 법대의 '신조회', 고려대의 '협진회'였다. 신진회는 1956년 말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들이 민병태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조직하였다. 초대회장(대표간사) 김지주를 비롯하여 하대돈, 유한열, 김형열, 서정균, 류근일 등이 초기의 중심 학생이었고, 회원 가운데 특히 대구 경북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97] 신진회는 비밀조직이 아니었지만 회원 5명의 추천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클멤버들을 '알음알음'으로 선별하여 뽑았다. 김정강은 신진회 가입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96) 1950년대 후반 신범식이 이끌던 '사회문제연구소'는 자유당 온건파와 손을 잡고 '청년문제연구소'로 전환되었다가 조직 자체가 '반공청년단'에 흡수되어 버렸고, 핵심 멤버들은 나중에 5.16쿠데타 후 공화당의 사전조직에 참여했다. 앞서 언급한 신도성 역시 1959년 자유당에 합류하여 경남도지사로 임명된 후 3.15부정선거에 관련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런데 4월혁명 이후 7.29총선 당시 자유당 잔류파들은 "계획성 있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자유방임경제체제를 지양한다"고 해 혁신세력보다 더욱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다(이혜영, 2000 <1960년 7.29총선거의 전개과정과 성격> ≪4.19와 남북관계≫ 민연, 78쪽). 또한 5.16쿠데타 이후 공화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당명이 '사회노동당'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 322쪽).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 한국에서 여당과 민주사회주의와의 관계도 향후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97)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앞 책, 838쪽.

1학년 2학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으냐하면 <신진회>에서 가입하라는 권유가 왔어요. 저한테 가입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이가 저한테 "신진회 들어와라. 들어오는데, 같은 1학년에 똑똑한 몇 사람을 같이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그때 신진회가 정치학과에서는 제일 이론파가 집결한 곳으로 자부도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신진회가 일을 할 때, 한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한테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거든요.[98]

서클멤버를 알음알음 선별했던 이유는 보다 능력있고 똑똑한 후배들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이념이 극우반공체제와는 좀 다른 이질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념서클답게 신진회는 주로 독서와 토론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특히 신진회의 경우 지도교수 민병태가 영국 페이비언협회의 핵심인물이자 노동당 이론가인 라스키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으로 민주사회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영일의 구술은 이러한 신진회와 민주사회주의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래갖고 들어간 대학교 모임이 신진회라는 서클입니다. 그 신진회라는 서클은 그 서울대학 내에 민주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서클이었어요. 그래갖고 민주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서클이었는데... (중략)... 그 당시 말이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그 자본주의적인 방식 갖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민주사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는 안된다는 거고. 공산주의는 우리가 타부로 확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사회주의적인 개혁, 또는 사회민주적인 개혁이 어떠냐,

98) <김정강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김지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35쪽).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신진회에서 페이비언 소시얼리즘을 연구하고 영국노동당 연구하고 독일 사회주의당 당사 연구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었요.[99]

신진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적 개혁을 고민했다. 민주사회주의는 극우반공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민주사회주의 이념서클로서 신진회의 일상적인 활동은 주로 독서와 토론이었다. 그들은 라스키, G. H. D. 콜, 시드니 웹, 베른슈타인, 네루 등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저서를 함께 읽고, 빈 강의실이나 학생식당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벌였다.[100] 당시 그들이 무엇을 함께 읽고 토론했는지는 몇몇 신진회 회원들의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 선배들 해석도 달라요. 브루스 커밍스 나오기 전에도, 《동아일보》 편집국장하다 일본에 망명한 사람(김삼규-필자 주)이 《금일의 조선》인지 뭐 이런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그런 것도 그 분들이 읽고, 에드가 스노우 같은 《레드 스타》(《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필자 주) 그거 그 일본말로도 있고, 서울대학 도서관에 영문판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가 무슨 책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책도 좀 이래 갖고 있었고. 신진회가서 맨 첨에 느낀 기 이 도서목록 일이백 권 되는가, 200권 되는 거 같애, 뭐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 해방 직후에 나온 《자본론》, 뭐도 뭐도 있었고 뭐 영문판으로 된 그런 책도 있었고, 뭐 김기림 《시론》, 이태준의 《문장강화》, 이것까지도 있었어요, 구할 수 있는 거는. 해방 직후에 나온 누런 책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일본어판 영어판은, 또 영어 못한단 소리 못하잖아요, 문리대 다니면서. 영어판은 들고 다녔고

99)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9일, 면담자: 오제연).

100) 權榮基, <4.19의 뿌리를 찾아서-新進會에서 民統聯까지> ≪月刊朝鮮≫ 1984년 4월, 256쪽.

일본말도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어려울 때 일어 번역도 해 살았는데, 어거지로…[101]

리슨(listen), 들어라 양키들아. 어. 소위 쿠바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트 밀스, 라이트 밀스 교수의 리슨 양키.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우리 대학생들한테 인기있던 영어 원서가 라이트 밀스의 리슨 양키하고 폴 스위지의 쿠반 레볼루션(Cuban Revolution). 그건 아주 인기가 있었어.[102]

동대문 헌책방에 갔는데, 그때는 헌책방이 대단히 번창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일본말로 된 마르크스 책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중략)... 일본 책으로 보면 ≪자본론≫이라든가, ≪공산당선언≫, 심지어 중국 모택동의 ≪모순론≫, ≪실천론≫, ≪유소기논문집≫,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비롯한 제 저작, 스탈린, 전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103]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진회 회원들이 동대문 헌책방나 학교 도서관을 통해 해방 전후에 만들어진 책들은 물론 영어나 일본어로 쓰여 있는 이념서적을 구해 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민주사회주의 관련 저서 이외에도, 해방 전후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저서부터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관련 서적,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 등의 공산주의 이론서까지 다양했다. 읽는 책이 다양하다보니 신진회 회원들의 이념적 편차도 클 수밖에 없었다.[104] 이는 다른 이념서클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다양성과 편차에도 불구하고 신진회와 같은 이념

101) <배춘실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10일, 면담자: 신동호).
102)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9일, 면담자: 오제연).
103) <김정강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김지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앞 책, 33~34쪽).
104) <배춘실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10일, 면담자: 신동호).

서클들은 여러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진보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구하기 힘든 진보적 서적들을 두루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신진회는 1957년 말에 일어난 류근일 필화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신진회 회원이었던 류근일은 서울대 문리대 신문인 <우리의 구상> 9호(12월 9일자)에 '모색'이라는 글을 썼다가, 글의 내용 중 "무산대중을 위한 체계로 지향하자", "우리는 신형 조국을 갈구한다", "전체 무산대중은 단결하라"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105] 이 과정에서 류근일이 소속된 이념서클 신진회가 주목을 받았다. 동시에 이 서클이 '적색비밀서클'이다, 이들이 교내에서 적기가를 불렀다, 대학 내 좌익계 교수가 영향을 끼쳤다 등 온갖 루머가 확산되었다.[106] 곧바로 류근일은 구속되었고, 유한열, 김지주 등 다른 신진회 회원들도 일시적이나마 구속되었다. 사실 류근일의 글은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했지만, 몇 가지 표현상 문제와 류근일 개인의 가족사 문제, 여기에 신진회라는 이념서클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커다란 필화사건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1958년 1월 말 신진회는 공식적으로 해산 당했다.

동대문서 사찰과 형사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문리대 제7강의실에서 행해진 신진회 해산식에는 신진회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제 신진회는 제한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107]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958년에 대학에 들어온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들은 1959년 정도에 자신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신진회를 계승하는 새로운 이념서클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신진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탄생한 이념서클이 '후진국문제연구회'였다.[108] 이에 대한 윤식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105) <無産大衆體系 云云 論文 問題化> ≪東亞日報≫ 1957년 12월 15일, 3면.

106) <(사설) 文理大學生의 筆禍事件> ≪京鄕新聞≫ 1957년 12월 17일, 석간1면.

107) 權榮基, 1984 앞 글, 257쪽.

108) 신진회를 계승한 '후진국문제연구회'와는 별개로 1960년 4월혁명 직후인 6월

입학 당시 전 사회 분위기나 학원 내의 분위기도 자유당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함부로 정치문제나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진회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후진국문제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영어로는 카드소사이어티라고 했습니다... (중략)... 후진국문제연구회는 4.19 이후에 와서 (다시) '신진회'로 개칭했던 것인데 이는 종전에 있었던 선배들의 서클과 동화한 것이 됩니다. 저 외에도 이수정, 서정복, 황선필, 유세희, 박종세, 이영일 등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공산주의서적도 봤고요. 영국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에 관한 글이나 여러 해외의 사회주의적 서적도 봤으며 가끔 야외에 나가서 밤을 새우며 토론하기도 했습니다.[109]

신진회를 계승해서 후진국문제연구회를 만든 후배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선배들의 민주사회주의 지향을 공유했다. 그리고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캠퍼스에 어느 정도 자유가 찾아오자 서클 명칭을 다시 신진회로 바꾸고 공개적이고 활발한 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서울대 문리대에 신진회가 있었다면 서울대 법대에는 '신조회'라는 이념서클이 있었다. 신조회는 1955년에 만들어졌고, 신진회와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주의, 특히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이념서클이었다.

15일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후진사회연구회'(지도교수 최문환)라는 서클이 만들어졌다. 후진사회연구회는 1958년 가을 비공개로 발족한 '농촌사회연구회'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서 그동안에도 회원들의 많은 연구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서클은 창립 직후 서울대 학생들이 주도한 국민계몽운동에 적극 가담한다(<後進社會硏究會-15日 發足코 活動展開> ≪大學新聞≫ 1960년 6월 20일, 1면).

109) <윤식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한모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앞 책, 166~167쪽).

법대에서 신정회[110] 운운하며 약간의 활동을 보이니 한 학년 위의 학생들이 그들이 만든 '신조회'에 가입하라는 권유다. 최상징과 함께 합류하였다. 거기에는 김동익, 민제영, 배병우, 이채주, 김규현 등이 있었고 가끔 모여 토론회를 가졌는데 영국의 페이비언협회를 모델로 한다고 했다. 1955년 조직한 그들은 영국의 페이비언협회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는 수속도 했다는 것이다.[111]

신조회는 때로는 진보적인 인사도 초청하여 이야기도 들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하였으며 자유협동주의사회를 내세웠던 전진한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진보적 시각을 보이던 고정훈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12]

신조회가 서울대 법대에서 활동하던 1957년 4월 서울대 법대에서는 '이강석 편입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1957년 초 이기붕 국회의장의 장남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을 서울대 법대에 편입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4월 9일 오전 남재희, 이강혁 등 법대 학생 200여 명이 학생 총회를 개최하고, 이강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학교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대생들은 10일부터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타협을 모색했다. 그 결과 이강석의 편입학을 학생들이 양해하고, 학교 당국은 앞으로 특별 입학을 인정하지 않고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이 타협안에 대해 학생총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타협안은 통과되었다. 학생들은 15일부터 동맹 휴학을 풀고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으나, 이강석의 편입학을 반대하는 학생은 여전히 많았다. 결국 이강석은 자진해서 학교를 떠났다. 결과적으로 법대생들의 이강석 편입 반대운동은 성공했다.[113]

---

110) 신정회는 앞서 언급한 신범식의 '사회문제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학생단체였다.
111) 남재희, 2006 앞 책, 33쪽.
112) 남재희, 2006 위 책, 33쪽.

이강석 편입 반대운동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을 배척한 사건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당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던 권력과 지위의 남용을 비판하고 학내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1950년대에 거의 유일하게 대학생 집단의 힘으로 권력과 맞선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남재희 등 신조회 일부 회원들이 적극 가담하기는 했지만, 신조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서울대 법대 전체 차원의 사건이었다.

신조회는 1957년 말에 터진 류근일 필화사건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 사건으로 신진회가 해체되자 문리대 바로 옆에 있었고 신진회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법대의 신조회 역시 사실상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진회가 그랬듯이, 신조회 회원들도 서클 해체 후 곧바로 신조회를 대신 할 수 있는 새로운 서클을 만들었다. 바로 1958년 4월 21일 노동법, 경제법, 사회정책학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발족한 '사회법학회'였다.[114] 신조회의 사회법학회로의 전환과 그 의미에 대해 남재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시기를 좀 소급해서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사회법학회'다. 아니, 신조회보다 사회법학회가 더 비중이 크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법대의 신조회에 가입한 나의 동기생 최상징은 대단한 열혈남아로 새로운 조직체 구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좋은 후배들을 결집하여 사회법학회라는 학회 이름을 빌린 서클을 만들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할 때 진보 학생으로서는 으레 노동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법과 노동 문제를 연구한다는 학내에서의 명분을 세워 사회법학회라 한 것이다. 노동법을 강의하는 김치선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신조회원은 모두 사회법학회의 회원이 되었다. 1958년에 조직된 이 학회는

113)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앞 책, 840~841쪽.

114) <오늘 創立總會-法大에 社會法學會 發足> ≪大學新聞≫ 1958년 4월 21일, 1면.

1970년대에 박 정권이 모든 학내 서클을 강제 해산할 때까지 존속하였고, 그 후로는 약 20회에 걸친 졸업생들의 친목 모임으로 명맥을 이어갔다.[115]

사회법학회는 '학회'의 모습을 표방했기 때문에 신조회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116] 사회법학회는 창립 이후 연구발표회를 활발하게 개최하였다. 발표 내용은 "경제적 기본권에 관한 제문제", "농지개혁 문제", "수정자본주의",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과 그 외 한국 노동운동 문제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법학회는 이러한 연구 발표회 외에 노동자 실태 조사 등 외부 활동도 진행하였다. 1958년 9월 이틀간 인천부두자유노련의 '십장제도' 실태에 관해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10월에는 역시 이틀간 회원 4명이 11차 노총대회 초청으로 대회를 참관하고 부산 부두노동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1959년 영월 탄광을 답사했으며, 1960년 대구 제일모직과 미8군 노무자들을 방문하였다. 이 중 노동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자체가 불온시 되어 학교당국과 사법당국의 주목을 받고 결국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117]

사회법학회 회원들은 이러한 '학회'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일상적인 모임 속에서 시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남재희에 의하면 1950년대 말 사회법학회 회원들이 "시국을 논의하는 열기는 참으로 뜨거워

---

115) 남재희, 2006 앞 책, 36쪽.

116) 대학에서 학생들이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제외하면, 크게 '학회'와 '서클'로 나눌 수 있다. '학회'와 '서클'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일반적으로 '학회'는 분과학문의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서클'은 그러한 분과학문과 관계없이 학술, 교양, 취미,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과 관련한 조직은 대게 '서클'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의 사회법학회의 경우는 법학 내에서도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회'를 표방했기 때문에 다른 이념서클에 비해 학문적인 성격이 강했고, 덕분에 외부의 감시와 의심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117)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앞 책, 838쪽.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였다. 즉각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급진파도 있었고, 연구에 머물러야 한다는 신중파도 있었"다고 한다.[118] 이러한 뜨거운 분위기를 바탕으로 사회법학회는 1971년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 까지 10여 년 동안 서울대 법대에서 수많은 학생운동 주역들을 배출하였다.

끝으로 1950년대 이념서클 중 고려대 '협진회'가 있었다. 협진회는 고려대 중에서도 주로 경제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대에서 신진회와 신조회가 만들어지던 1955년경에 창립되었다. 협진회의 조직 과정은 김낙중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955, 56, 57년 상황에서는 학생운동의 존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냐. 학생운동은 없어. 없는 상황에서 55년 56년 가면서 약간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좌익은 아니지만, 좌익은 다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냉전 하는 중이니까 좌익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고대에선 주로 경제학과에서 많이 나왔는데 경제학과에는 조동필 교수가 계셨다. 조동필 교수가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후진국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선진국하고는 조건이 다른 후진국의 처지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조교수의 영향을 받아 55년경에 학생들 속에서 민주사회주의나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단체 비슷한 그런 게 생겼어.[119]

협진회도 신진회나 신조회와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주의,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렇게 1950년대의 3개 이념서클이 모두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다보니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졌다. 특히 각 서클의 고교동창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1957년 정도가 되면 이들 세 이념서클이 연합해

118) 남재희, 2006 앞 책, 37쪽.

119) <김낙중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앞 책, 203쪽).

서 같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합동으로 혁신계 민주사회주의자,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갖고, 외자도입 문제, 국제관계 변화, 중국과 모택동사상 등을 주제로 대규모 합동세미나를 열기도 했다.[120] 다음 김낙중의 구술 속에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 그리고 그들이 같이 연합해서 연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57, 58년에 연합서클이 생겨서, 그 연합서클이 두 달에 한 번 각 대학으로 돌아가며 이런 식으로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연구 발표 했어. 그래서 모택동사상에 대한 연구, 20세기 국제정치사에 대한 연구, 모리스 돕에 대한 연구 등을 했어. 그래서 몇 번 잘 갔어. 우리 고대 식당에 와서 30, 40명 모여서 연구 발표도 했고, 서울대 법대와 문리대에서도 학생들이 왔으니까.[121]

남재희 역시 "3파의 서클은 이동화 씨와 조동필 고려대 교수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다가 고려대 구내식당에서 합동세미나를 성대하게 가진 기억이 있다. 정구호(신진회)가 중공의 현황에 관해 발표를 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122] 단, 남재희는 대규모 모임은 고려대 식당에서의 모임 단 한 차례였던 것으로 기억했다. 아마도 각 서클 내에서도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모임이 이어지다가, 고려대 식당에서 각 서클의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발표회가 한 번 열린 것으로 보인다.[123]

---

120) 남재희, 2006 앞 책, 33~35쪽; 權榮基, 1984 앞 글, 256~258쪽.

121) <김낙중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앞 책, 204쪽).

122) 남재희, 2006 앞 책, 34~35쪽.

123) 남재희에 따르면 신진회, 신조회, 협진회 핵심 멤버들은 졸업 이후에도 개별적인 만남을 지속하다가 4월혁명 이후 주석균이 근무하던 농촌문제연구소를 거점으로 '신조회'라는 이름의 공식적인 모임을 만든 후, 내부 토론과 장건상과 같은 외부인사 초청 강연을 갖고 3~4차례 간행물을 발간하기도 했다고 한다(남재희, 2006 위 책, 35쪽).

민주사회주의를 매개로 한 신진회, 신조회, 협진회의 결합은 1960년대 이후 이념서클들이 민족주의 일색의 이념성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들 3개 서클의 멤버들이 얼마나 민주사회주의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남재희도 당시 이념서클들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같은 민주사회주의의 유행을 따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서클 내에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과격하게 마르크스주의로 흐른 사람도 있고, 다만 서클을 토론의 장 정도로 생각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가입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졸업 후 멤버들의 다양한 인생행로를 보면 알 수 있다고도 했다.[124]

민주사회주의를 매개로 한 이념서클 간의 접촉과 결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역시 1957년 말에 발생한 류근일 필화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협진회도 더 이상 모임을 유지할 수 없었다. 민주사회주의를 고민하는 이념서클은 모두 '적색비밀서클'일 뿐이었다. 이로써 이념서클 차원의 접촉과 결합은 단절되었다.[125] 이렇듯 1950년대에 대학 내에서

---

124) 남재희, 2006 위 책, 40쪽.

125) 이념서클과는 별개로 1950년대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각 대학 밖에서 접촉하고 교류한 모습도 확인된다. 특히 대학 밖에 만들어진 몇몇 조직들이 각 대학 학생들을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건국대 한태연 교수가 운영하던 '국제학술연구원'과 이미 언급한 신범식의 '사회문제연구소'였다. '국제학술연구원'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단체에는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이정규(성균관대 총장 역임), 유석창(건국대 설립자), 김범부(국학연구자) 등의 강연을 들으며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여기에는 신진회의 조광해, 김태원, 정구호 등도 참여했다. 그러나 신진회와는 달리 특별히 지향하는 정치이념은 없었으며, 막연하게나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적 협동사회 실현을 추구했다. 이 단체는 1961년 말에 탄생한 '학사주점'의 모체가 된다. '학사주점'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라질 때까지 1960년대 젊은 지식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유근호, 2011 ≪60년대 학사주점 이야기-4.19세대의 시대증언≫ 나남, 18~34쪽).

이들 이념서클의 비중과 역할은 아직 미약했다. 1960년 4월혁명에서도 이념서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4월혁명 이후 대학과 대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이념서클의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도 하에 1960년대 학생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二. 4월혁명 이후 대학생의 현실참여와 통일운동

1.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 고양

1) 대학생의 '혁명주체' 자임

1950년대 내내 학생운동의 주체적 기반이 강화되었지만, 극우반공체제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학생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없었다. 이는 비단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이 함께 처한 상황이었다. 195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침체 일로를 걸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로당계를 비롯한 좌익세력들은 대체로 월북하거나 빨치산 투쟁과정에서 도태되었다. 근로인민당계 역시 당 자체가 불법화된 후 잔류세력들은 1950년대 내내 잠복하다가 4월혁명 이후 혁신계의 일부로 등장할 수 있었다. 단정에 반대했던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나 중도세력 역시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 195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진보당만이 극우반공체제의 지형 속에서도 '변혁'적 성격을 일정하게 표방하며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으나, 이 역시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인 탄압으로 단명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운동은 물론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사회운동 전반은 극우반공체제 속에 유폐될 수밖에 없었다.[1]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조봉암 사형 및 진보당 해산, 국가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폐간 등 이승만 독재가 강화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불만은 심화되었다. 여기에 1950년대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미국의 원조가 195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경제성장률은 1957년

1) 조희연 편,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63~66쪽.

8% 성장에서 1959년 4%, 1960년 2% 성장으로 곤두박질쳤다. 중소기업의 공장가동률은 50%밖에 되지 않았다. 경제 불황 속에 250만의 완전 실업자와 200만의 농어촌 잠재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농촌사회는 피폐해 갔고, 도시는 빈민들과 실업자로 들끓었다.[2] 이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켰다. 사회운동 전반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가 계속 연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사상최대의 부정선거'라는 평가에 걸맞게 3인조/9인조 투표, 40% 사전투표 등 온갖 부정이 난무하였다. 선거 전에 이미 정부의 부정선거 음모가 야당과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이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자유당의 대통령후보 이승만과 부통령후보 이기붕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마저도 개표과정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의 표가 너무 많이 나오자, 당황한 자유당이 적당한 수준으로 득표율을 조정한 결과였다. 한국현대사의 희극이자 비극이었다.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거리에 먼저 나선 이들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었다. 부정선거 이전에 이미 '학원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한 대구 2.28시위를 시작으로, 대전의 3.8시위 등이 이어졌고, 서울에서도 산발적이나마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진행되었다. 부정선거 이후에도 마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특히 부정선거 직후 벌어진 1차 마산항쟁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8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3.15부정선거 직후 이루어진 ≪사상계≫ 좌담에서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학생들을 비판했다.

中高等學生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大學生 이후는

2) 김인걸 외 편저, 1998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202쪽.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先輩는 썩었다고 지적했으니까... 이번 事件(3.15 1차 마산항쟁-필자 주)에 大學生이 개재했다면 문제는 더 크게 정치화했겠는데 中高等學生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되었다고 봐요. 또 대학생은 방학시기이고 또 리더로 나서는 놈도 없거든요. 전부 猛將이 中高等學生 뿐입니다. 그래서 中高等學生들이 대학생은 썩었다고 할 밖에 없어요. 또 대학생 정도면 너무 사회 이면을 알아서 약아 빠져서 자기가 희생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期待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二十 前 世代까지 이지 二十 이후는 썩었다고 볼 수 있어요.[3]

한마디로 "대학생들은 썩었"기 때문에 3.15부정선거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질타였다.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음에도 대학생들이 침묵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당시까지 대학생들은 1950년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모습, 즉 비판의식을 결여한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대 문리대의 경우 신진회(후진국문제연구회)의 2~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4.19 시위를 준비할 때, "잘못되면 신진회가 배후로 지목되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선배들이 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 결과 4월혁명 당시 신진회는 내부적인 결의를 끌어내지 못했다.[4] 선배들의 만류는 1957년 말 유근일 필화사건의 경험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저항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학생들을 주저하게 만든 측면이 크다.

둘째, 이승만 정권의 학도호국단을 통한 대학 통제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도호국단은 학생운동의 구심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 원심력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3.15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정권은 학도호국단 간부들을 대거 동원하여 '전국대학생구국총연맹'을

3) <(좌담) 民主政治 最後의 橋頭堡-三·一五選擧 後의 政局觀望> ≪思想界≫ 1960년 5월호, 37쪽.

4) <배춘실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10일, 면담자: 신동호).

결성하고, 그밖에도 100여 명의 학생들을 끌어 모아 '전국대학생학술연구회' 등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이승만, 이기붕을 지지하게 했다.[5] 이렇게 상당수 대학에서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했고, 반면 아직 이념서클과 같은 대안세력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4월혁명 참여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당시에는 4월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치러진 3월은 아직 방학 중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의 방학은 고등학교의 방학보다 길다. 무엇보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상경하여 공부하던 많은 농촌 출신 대학생들은 방학 때면 대부분 고향으로 내려갔다. 때문에 학생 다수가 고향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4월 개강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1960년대 대학 학생운동은 주로 개별 학교를 단위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면 크게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학생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마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기방학을 실시하거나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을 학교에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런 의미에서 3.15부정선거가 방학 때 진행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저항을 억제한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4월이 되어 각 대학이 개강을 맞이했을 때 대학의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과 달랐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60년 4월 2일 ≪고대신보≫의 사설이다. <우리는 행동성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이 사설은 1학년 신입생들에게 당부하는 형식으로, '지식'은 '행동'의 수단으로서 지침적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諸君은 앞으로 四年間 學問의 硏鑽과 人格修養에 最善을 傾注하되 결코 學問 그것만의 奴隷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

5) 홍영유, 2010 ≪4월혁명통사 10≫ 천지창조, 269~279쪽. 홍영유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을 공개 지지했던 학도호국단 간부나 학생들 중 일부는 4월혁명 후 4월혁명 관련 서훈을 받았다고 한다.

여 學問과 行動이란 絶對로 二律背反의 것은 아니며, 언제나 同一線上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學問 自體는 결코 그의 使用法까지는 敎示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흔히 昨今의 靑年들은 苛酷한 歷史的 現實을 運命으로 돌리고 學問한다는 遁辭만을 일삼는 逃避的 傾向이 있다. 그러나 運命이 굳이 拒否하지는 않는다손 치더라도 運命에 偶然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人間은 運命에 마주치기 前에 自己들 各者가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참된 因果性을 沒覺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苛酷한 事實이 우리에게 挑戰해 왔을 때, 우리가 이를 傍觀하거나 이에서 逃避한다는 것은 가까운 將來에 더 커다란 不幸을 自招하는 것 以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6]

가혹한 역사적 현실을 운명으로 돌리고 학문 속으로 도피하는 것은 곧,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을 의미했다. 이 사설이 대학생들에게 행동의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방관과 도피를 '거부'해야 한다는 어조만은 분명했다. 이미 팽배해진 학생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한 이 사설은 고대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7]

---

6) <(사설) 우리는 行動性이 缺如된 畸形的 知識人을 拒否한다-新入生에게 주는 글> ≪高大新報≫ 1960년 4월 2일, 1면.

7) 1960년 4월 2일자 ≪高大新報≫ 사설을 쓴 당시 고대신보 편집국장 박찬세의 회고에 따르면, 1960년부터 종래 지도위원(교수)들만 집필하던 사설을 학생인 편집국장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설의 경우 학교당국의 검열에 걸렸다고 한다. 원래 검열이라고 해봐야 이미 인쇄된 신문을 학생처장에게 보고한 후 배포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때는 3.15부정선거 후 정국이 극도로 긴장되고 고등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지던 때여서 학교당국이 이 사설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처장과 총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사설의 내용 중 일부 과격한 용어와 문구를 수정, 삭제한 후 인쇄하여 배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목은 바뀌지 않았다. 신문 발행 후 이 사설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켜 학생 일반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편집국장 본인도 각 대학 학생위원장들과 관계를 맺고 4월 18일의 시위를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朴贊世, 1984 <나의 高大新聞時節> ≪高大新聞 축쇄판 2≫ 高大新聞社, 4~5쪽). 반면 당시 고대신보 논설부장이었던 홍영유에 따르면 이 사설이 고려대 학생들에 영향을 주었다기 보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4월 4일 대학생으로서는 최초로 전북대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열렸다. 전북대 정치학과 3학년 학생들의 주도로 약 5백명 정도의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시위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후 4월 11일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후 2차 마산항쟁이 전개되자, 4월 13일 해인대(현 경남대) 학생 1백여 명이 시청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미 2차 마산항쟁으로 경찰력이 무력화된 후여서 학생들은 경찰의 제지 없이 가두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 당시 이 시위를 주도했던 해인대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훗날 1960년 4월 11일과 12일에 걸쳐 계속 이어진 마산 시내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상아탑에 안주하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시위를 벌였다고 회고했다.[8)]

1960년 4월 18일에는 서울서 고려대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은 신입생환영회를 이용해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가 끝난 뒤 일제히 가두로 진출했다. 이 중 1천 명 정도가 시내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여 농성을 벌이다 저녁 무렵 해산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는 고려대 학생들을 약 1백여 명의 깡패들이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당과 결탁한 정치깡패들이 일으킨 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고, 나중에 오보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사망한 학생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러한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소식과 정치깡패들의 테러 소식은 즉시 서울의 다른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졌고, 다음날인 4월 19일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김주열의 죽음과 고대생 습격사건에 분노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 19일 일제히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날 역시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먼저 시위에 나섰다. 일례로 서

다는 이미 팽배해진 학생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이 사설이 반영했던 것이라고 한다(<홍영유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12일, 면담자: 오제연)).

8) 홍영유, 2010 ≪4월혁명통사 3≫ 천지창조, 87쪽.

울대 문리대의 경우 이미 사전에 시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와는 상관없이 4월 19일 아침 일찍 대광고 학생들이 몰려 와서 서울대 학생들에게 시위 동참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시내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뒤늦은 참여였으나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할 대학생이 시위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졌다. 그동안 잠재력으로만 존재했던 지도적 엘리트 집단의 물리력이 드디어 현실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 특히 사회적으로 하층에 있었던 도시빈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하면서 4월 19일의 시위는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경찰의 발포로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 넘은 학생과 시민들이 사망했다. 같은날 부산과 광주에서도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력만으로는 시위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이날 오후 서울 등 주요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저녁 무렵부터 군이 시내로 들어와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격렬했던 4월 19일의 시위도 점차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후 지방에서 몇 차례 시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는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4월 19일 그렇게 엄청난 기세로 시위를 벌이고 또 수많은 목숨까지 잃은 대학생들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침묵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었다. 계엄령 하에서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군의 무력을 뚫고 시위를 벌이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4월 21일 국무위원들과 자유당 당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4월 24일 이승만의 자유당 총재 사퇴와 함께, 이기붕이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등 정권 차원의 수습책이 잇달아 발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일단 행동을 자제하고 이를 지켜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더 큰 이유는 4월 19일의 시위 자체가 비조직적이고 돌발적인 면이 강했고, 반면 이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1950년대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

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과회장이자 신진회 회원이었던 윤식의 회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월 15일 신학기 시작 후, 김성희 교수의 정당론 강의가 오후 첫 교시였을 겁니다. 정당론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휴강되었습니다. 정당론 수강생들은 주로 3학년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휴강이 되자 양성철이라는 친구가 먼저 "우리 모여서 의논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중략)... 그때 주로 모인 사람들은 정치학과 학생들이었는데 15~20여 명 정도였습니다... (중략)... 그렇게 해서 21일에 가능하면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동원해서 시위하자고 결정했습니다. 21일까지 문리대 정치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미대, 법대, 의과대, 음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연세대 친구들까지도 행동을 같이 하자고는 했지만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과 내에 있는 친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보다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쉬울 리가 없었죠. 그러나 우린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
> 그런데 18일 오전 우리와 접촉이 된 고려대 학생 한 명이 뛰어와서는 18일 오후 1시에 고려대에서 시위를 감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은 그 이튿날, 즉 앞당겨 하기로 했고 따라서 준비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죠.[9]

흔히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학생들이 4월 21일 연합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고려대가 약속을 깨고 먼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연합시위가 4월 19일로 당겨졌다고 알려져 있다.[10] 윤식의 구술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고려대 학생들은 이를 강하

9) <윤식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한모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168~169쪽).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125쪽.

게 부인한다. 4월혁명 직후 고려대 법대 운영위원장이었던 강우정은 ≪고대신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 現代茶房은 四·一九의 産室이다. 四·一四(?)(물음표는 원문 그대로 임-필자 주>) 사실상 '行動'에 對한 最終的 決定이 여기서 내려졌다. 이 茶房엔 各大學의 政治學徒가 많이 드나들었다. 요즘 市井에서 高大에서 他大學과 같이 擧事하기로 한 約束을 어겼다는 誤解를 받는 것도 내 생각으로는 이 場所를 擇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11]

이 기사를 통해 미루어 보면 당시 각 대학 학생들 사이에 일정한 접촉은 있었으나 그 접촉의 수준이 구체적인 '모의'나 '합의'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고대신보≫ 기자였던 홍영유는 서울대 문리대와 접촉했던 학생들이 과연 고려대 학생운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12] 현재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의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나름대로 타 대학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윤식의 구술

---

11) 康宇淨, <나의 發言-當然한 일로 稱頌을 받다니> ≪高大新報≫ 1960년 5월 21일, 4면. 강우정의 글에서 또하나 주목되는 내용은 행동이 모의되던 현대다방에 정치학도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이다. 4월혁명은 물론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대학 학생운동에서 '정치학과' 학생들의 역할과 비중은 비교적 큰 편이었다. 주요 이념서클들의 회원들 중에도 정치학과 학생들이 많았다. 정치학과 학생들은 대학 입학 때부터 정치적 관심이 많았고 정치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도 컸다. 무엇보다 4월혁명 직후에는 다른 학과 학생보다 그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1950~1960년대 각 대학 정치학과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홍영유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12일, 면담자: 오제연). 홍영유는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학생운영위원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문을 표시했다. 즉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시위는 여러 학생들의 자연발생적인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운영위원장들이 마치 자신들이 4.18 고대 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다.

에도 나오듯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13] 이는 4월 19일의 시위가 돌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시위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분명한 계획이나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월 19일 이후 대학생들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윤식의 증언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지점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과 내에 있는 친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언급이다. 이는 그만큼 당시 정권의 대학 통제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4월 19일 서울대 문리대 시위 당시 문리대의 학도호국단 대표는 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하려 했다가, 나중에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었다. 4월혁명 당시 학도호국단 간부가 시위를 저지하고자 했던 모습은 동국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즉 당시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사람에 따라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고, 또 시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시위를 방해하다가 엄청난 기세의 학생들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시위에 참여했던 학도호국단 간부도 있었다. 이렇듯 당시 대학생, 특히 학생 간부들의 체제 순응적 성격은 계엄령을 뚫고 학생 시위가 재개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계엄령 선포 후 시위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며 4월 25일 대학교수들이 감행한 시위로 꺼져가던 항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교수들의 뒤로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시위의 목표는 "이승만 하야"로 모아졌다. 반면 계엄군은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다음날인 4월 26일 아침 일찍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들었다. 마지막 보루였던 군이 더 이상 권력을 지켜주지 않고, 미국마저 등을 돌리면서 마침내 이날 이승만의 12년 독재가 무너졌다.

---

13) 이영일 역시 4월 19일 이전 자신들이 고려대 등 다른 학교 학생들과 접촉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서울대가 4월 19일의 대규모의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9일, 면담자: 오제연)).

많은 희생을 치르며 독재 정권을 무너트린 대학생들은 이 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주체임을 자임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대학생들이 곧바로 '질서회복운동'에 들어간 것도 스스로를 혁명의 주체로 인식한 결과였다. "수습의 길은 대학생에게 있다"라는 자각하에, 서울시내 각 대학생 2천여 명은 서울의 치안을 정돈하고 시민에게 질서를 호소했으며 도로를 청소하고 민간차량에 대한 불법적 횡포를 금지시켰다. "남은 것은 건설이다. 질서를 잡자",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성으로 돌아가자", "고귀한 피의 대가 곱게 거둬들이자" 등의 구호가 당시 대학생들의 외침이었다. 이들은 성난 데모 군중들을 진정시켜 해산시키고, '학생 소방대'를 결성하여, 경찰이 버리고 간 동대문 경찰서의 소화작업을 오후 2시까지 완료했다. 또한 경찰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야기된 치안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엄사령부와 협조하여 학교별로 '질서유지반'을 편성, 각 경찰서에 배치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서대문 경찰서에서 90명씩 2개조로 나누어 질서유지 청소 및 이기붕 집 주위 치안확보를 담당했으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은 시경찰에 본부를 두고 외무반, 내무반, 선무반으로 나누어 각각 교통정리, 타대학 상황 청취, 호소문 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그밖에 서울대는 남대문서, 고대는 중부서, 건국대는 성북서, 중앙대는 영등포서, 한양대는 성동서, 경희대는 마포서에 본부를 두고 27일 오후 7시까지 비슷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곳곳에서 학생들은 쌓인 오물을 치웠고, "구급환자에게 피를 제공하실 분은 대학병원으로 오시오" 하는 벽보를 보고 아낌없이 헌혈에 나섰다. 권력 공백 기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전개한 질서회복운동은 항쟁 그 자체에 못지않게 학생의 '순수성'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에 큰 인상을 남겼다.[14]

대학생이 혁명의 유일한 주체는 아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으며 뒤늦게 시위에 나섰다. 처음 항쟁에 나선 이들은 고등학생이었다.

---

14)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학생문제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58~159쪽.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정권과 맞섰다. 특히 구두닦이, 신문팔이, 거지 등 도시빈민이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종종 '밤시위'로 일컬어지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4월 19일 '피의 화요일' 밤에도 서울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게서 무기를 탈취하여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휩쓸다가 종로3가와 서울운동장 앞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40여 대의 차량을 탈취하여 밤거리를 달리며 시위하던 시위대는 동대문, 청량리 주변의 파출소를 습격하여 모조리 불태우고 30여 정의 카빈총을 빼앗았다. 이들은 서울 동북부를 누비며 미아리를 거쳐 의정부 무기고를 찾아 창동까지 밀려갔다. 이곳에서 시위대는 창동 지서 경찰들과 한참동안 총격전을 벌이다가 자정 무렵 계엄군과 경기도경이 협공할 기세를 보이자 안암동 고려대 뒷산으로 퇴각했다. 계엄군은 이들을 포위하여 고려대 안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고려대로 밀려들어간 시위대는 약 1,500명 정도였다. 계엄군은 무장한 시위대를 무리하게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대신 투항을 유도하였다. 결국 서울시 계엄군 사령관 조재미 장군이 고려대 안으로 직접 들어가 시위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시위대는 무기를 벌이고 자신 해산하게 되었다. 반면 고려대에 들어갔던 시위대 중 약 200명의 어린 소년들은 철조망을 뚫고 안암동 쪽으로 도망쳐 4월 20일 아침 6시 45분경부터 신설동 로터리와 성북구청 사이에서 계엄군 지프의 유리창을 모조리 부수는 등 과격시위를 약 30분 동안 벌였다. 이들은 3대의 버스와 12대의 택시를 탈취해서 거리를 폭주하면서 구호를 외치다가 아침 7시 20분 경 출동한 성북서 기동대에 의해 해산되었다. 밤새 벌어진 과격 시위는 이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4월 21일까지도 고려대 뒷산과 우이동 뒷산에 시위대가 산적처럼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15] 이러한 과격한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 중에는 소수의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야간중고등학교나 공민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고학생들을 비롯한 도시빈민이었다.

---

15) 姜仁燮, <四月革命 後記> ≪新東亞≫ 1965년 4월, 87~89쪽.

도시빈민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였던 것은 이승만의 독재는 물론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도시빈민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을 '파괴'와 '혼란'으로 인식했다. 결국 학생들은 이승만 하야 이후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학생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들과 도시빈민들을 구별했다.[16] 지식인과 언론도 도시빈민들의 과격한 시위를 비난하고 학생들의 질서 정연한 시위 모습을 칭송하면서 이에 가세했다.[17]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내세우기 어려웠던 도시빈민은 혁명의 주체에서 사라졌다.[18] 여기에 고등학생들마저 학교로 복귀하면서, 대학생들만 혁명의 주체로 남게 되었다. 4월혁명 이후에도 대학생들은 도시빈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 유지하며 자신들만이 혁명의 주체임을 강조했다.[19]

---

16) 1960년 4월 11일부터 시작된 제2차 마산항쟁에서도 지식층 시민들은 데모 주동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사직당국이 낮에 이루어진 학생데모와 밤에 있었던 일반데모를 구별하기 원했다. 그들은 학생들이 주동이 된 낮 데모는 목적이 순수한 것이었으나 일부 청년층이 선도한 야간 데모는 폭행과 파괴를 수반하였으므로 주간과 야간에 이루어졌던 데모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安東壹·洪基範, 1960 ≪奇蹟과 幻想≫ 永信文化社, 188~189쪽).

17) 4월혁명 과정에서 언론들은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데모가 질서정연"했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했고, 학생들 스스로도 시위의 와중에 질서를 의식했다는 진술을 과도할 정도로 자주하였다. 언론과 지식인들은 유독 강조된 학생들의 질서의식을 상찬할만한 청년세대의 민주주의적인 태도라고 평가해주었다. 특히 이승만 하야 성명 이후 학생들이 치안 유지와 거리 청소에 나선 행위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학생들의 새로운 건설 데모"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미란, 2010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間SAI≫ 9, 31~32쪽).

18) 혁명의 주체에서 도시빈민이 배제된 것은 대학생들과 언론이 공유한 엘리트 의식의 산물이었다. 그들은 '구두닦이'로 표상된, 4월혁명 당시 시위에 적극 참여한 비엘리트층의 분출하는 열정을 무지한 대중의 정념, 즉 혼란으로 간주했다. 엘리트층의 이러한 혼란에 대한 두려움은 4월혁명 이전부터 이미 형성된 비엘리트층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의 투영이기도 했다(권명아, 2010 <죽음과의 입맞춤>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39쪽).

19) 1962년 4월혁명 2주년을 기념하여 한 잡지에서 진행한 대학생 좌담회에서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도시빈민들을 비난하며 오직 학생들만 혁명의 주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4.19 전에 민생고의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 하류층이었는데 그들은

그러나 대학생들의 순수와 질서에 대한 강조는 혁명의 확산과 심화를 가로막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4월혁명 직후 논란이 된 국회해산과 내각책임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이승만 하야 후 허정 과도내각이 들어서자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한 개헌 문제가 급부상하였다. 일단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국회는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 직후 본회의를 열고 '先개헌 後총선'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가 개헌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으로, 몰락 위기에 처한 자유당이 개헌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계파에 따라 입장이 갈렸지만, 오랫동안 자신들이 주장해 온 내각책임제 개헌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유당이 다수인 현 국회에서의 개헌에 동조했다.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허정 과도내각 역시 국회의 '先개헌 後총선'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자유당이 다수인 국회가 새로운 정치체제 수립을 위한 개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였다. 이에 곧바로 즉각적인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1960년 5월 1일에는 부산에서는 "4대 국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부산 각 대학 교수 약 300명이 합류했다. 다음날인 2일 부산에서의 시위는 더욱 커져 약 2만 명의 대학생과 남녀 고등학생들이 "개헌은 새 국회에 맡겨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했다. 5월 3일에도 부산에서 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밖에 서울, 대구, 용인, 양산 등에서도 국회해산을

오히려 4.19를 원망하는 실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패한 법망을 이용하여 오히려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대개가 쓰고 버린 외제 분갑이나 크림통을 수집해서 가짜 외국산 화장품 행상을 하면서 살던 토막촌 사람들로서 오히려 4.19를 저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부득이 주체세력이 되었다고 봅니다."(<(좌담) 그날의 喊聲을 回顧한다> ≪新思潮≫ 1962년 4월, 222쪽).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20]

국회해산 요구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정치권은 물론 언론들까지 이를 반대하고 '先개헌 後총선' 주장에 대부분 동조하였다. 사실 많은 언론들은 이승만 하야 직후 1960년 4월 말까지는 자유당이 다수인 현 국회를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 국회에서의 개헌은 일제 중추원 참의가 해방된 한국의 헌법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아가 제헌국회 수립을 통해 정치체제 변경에 대한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先개헌 後총선'을 통해 정치적 공백과 혼란을 피하고 최대한 빨리 개헌을 완성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물론 즉각적인 국회해산 요구도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1960년 5월 31일 단국대 학생 600여명은 "李독재 망명을 방조한 許首班 물러가라", "자격 없는 썩은 국회 즉시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단국대 학생들이 동국대에 가서 동참을 호소하고, 또 반대로 몇몇 동국대 학생들이 단국대 시위대로 가서 자제를 요구하다가 양측 사이에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동국대 학생들은 "학원으로 즉시 돌아가라", "무정부 상태 하의 혼란을 생각하라", "현 질서를 더욱 혼란케 하는 그 어떤 학생들의 데모에도 반대하여 투쟁하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학생 시위가 학생 상호간의 폭력 사태로 비화한 데에는 단국대 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바로 그 시간, 때마침 언론인이자 혁신계 성향의 고정훈이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해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즉 동국대 학생들은 단국대 학생들이 고정훈의 사주를 받고 국회해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단국대의 시위를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국대 학생들은 고정훈과의 관련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168쪽; 이혜영, 2010 <4.19 직후 정국수습 논의와 내각책임제 개헌> ≪이화사학연구≫ 40, 273~274쪽.

성을 분명하게 부인했다.[21] 한마디로 양측 모두 정치인과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순수성 곧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했고, 이를 침해하는 것을 순수성, 즉 "혁명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처럼 '혁명의 주체'로서 학생은 '순수'와 '질서'를 앞세워 스스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혁명의 주체'를 자임한 학생들은 자부심과 자신감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사명감을 함께 가졌다. 그동안 막연하고 체념적으로 생각했던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제 자신들이 나서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결국 그들은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현실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들이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현실에 참여했는지 다음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오전 강의를 들은 후 우연히 학생회 간부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 이하 서너 명의 친구들이 빡빡 깍은 중머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뜻 어느 영화를 연상하면서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후진국 대학생으로서 국토통일, 정치적 안정, 경제부흥, 사회개혁을 위한 새생활운동 등 해야 할 중대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만 하고 말만 하거나 거창하게 일만 벌려 놓았지, 아주 조그만 일에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서 머리를 깍아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하고 이로운 것을 알면서도 단지 사회관념이란 것 때문에 실천들을 못하고 있다. 우리 친구끼리 생각난 것을 행동했을 뿐이다."... (중략)... 교회가 썩고 학원이 썩고 사회는 역한 냄새로 가득 찼어도 저는 때때로 마음만 안타까웠지 손 하나 놀려보질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오를 패기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졌는데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21) <理性 잃은 議事堂 앞 不祥事> ≪東大時報≫ 1960년 6월 4일, 1면; <五月 三十一日 本校生들 데모 敢行> ≪檀大學報≫ 1960년 6월 11일, 1면.

> 백성의, 특히 지식인이란 사람들의 크나큰 병폐였습니다... (중략)... 소신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졸업하면 취직하고 돈벌이하고 예쁜 아내 맞이하여 아들딸 낳고 편안히 살다가 죽는다, 이런 평범한 생각은 우리 백성 모두가 잘 살게 될 때 저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세대에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런 안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난한 동안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빛 노릇은 못해도 소금 노릇은 해야겠습니다.[22]

'혁명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주장은 쉽게 무시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23] 새로 들어선 장면의 민주당 정부 역시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1960년 8월 31일 서울대 학생들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비와 시설확충비를, 학생들이 거출한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위를 전개하자,[24] 정부는 다음날 각 개인 등록금에 포함시켰던 시설비와 시설확충비 등 2만환을 즉시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국립대학에 모두 적용되었고,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5백여 명에게는 2만환을 모두 돌려주었다.[25]

한마디로 4월혁명은 애당초 대학의 목적에 걸맞게 대학생들을 명실상부한 지도적 엘리트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즉, 4월혁명은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을 지닌 지도적 엘리트라는 자각을 심어줬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엘리트 의

---

22) 김광일(서울대 학생), <削髮者의 辯> ≪大學新聞≫ 1960년 12월 12일, 8면.

23) 潘永煥, <大學街 20년의 증인들 (5)-四·一九世代> ≪大學新聞≫ 1966년 10월 15일, 10면.

24) <"運營費依存은 不當" 萬三千 학생 示威> ≪東亞日報≫ 1960년 9월 1일, 조간3면.

25) <國立大學 施設費 國庫서 부담키로> ≪東亞日報≫ 1960년 9월 2일, 조간3면.

식은 훗날 '콘트라엘리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과잉된 측면까지 있었다.[26] 4월혁명 당시 1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졸업 때 당시를 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 大學의 門을 두드리자마자 4.19革命의 힘찬 感激과 興奮을 體得한 우리는 그야말로 '자랑과 情熱'의 戰士였다. 우리는 우리의 後孫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神話의 主人公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社會를 建設하는 새 時代의 旗手로서 民族의 運命을 坐視할 수 없었던 銳利한 批判意識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우리는 社會의 矛盾과 不合理에 抗拒하는 줄기찬 作業에 果敢하였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스스로 新世代의 時限爆彈임을 自負하기에 부끄럽지 않았다.[27]

혁명주체, 엘리트로 자처하며 현실에 적극 참여한 대학생들의 모습은 한국 대학에도 새로운 성격을 부여했다. 4월혁명 이후 최소 30년 이상 한국의 대학은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변혁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특히 아직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엘리트의 선도성과 집단적 물리력을 동시에 확보한 곳은 대학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4월혁명은 학생들을 지도적 엘리트로 부각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을 위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대학의 목적을 '현실참여'라는 방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28]

---

26) <오늘의 大學生 表와 裏 1-엘리트 意識> ≪大學新聞≫ 1972년 6월 5일, 3면.

27) 李鍾律(서울대 학생), <새로운 出航> ≪大學新聞≫ 1964년 2월 27일, 3면.

28) 최근 국문학계에서도 대학생들이 4월혁명에 뒤늦게 참여했음에도 도시빈민 등을 배제하고 그 영광을 독점함으로써 "능동적인 문화적 주체"로 거듭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대학생이 4.19를 만들어냈다기보다 4.19가 대학생이라는 사회·문화적 주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19는 식민 말기에 태어나 해방기 및 한국전쟁기에 소년시절을 보낸 '침묵하는 세대'가 자기증명에 성공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 이후 '4.19세대'라는 이름을 얻은 그들은 다시는 침묵으로 가라앉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권보드래·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39쪽). 이는 본고의 논지와도 부합하는 면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국문학계의 연구들

이후 대학과 대학생의 현실참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대학생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현실참여가 불가피하며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학생들이 4월혁명같이 거족적인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실천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 가장 전형적인 비판이었다.[29]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비정치적인 ‘순수한’ 현실참여만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4월혁명 당시 대학생들이 혁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순수성’은, 이후 학생들의 현실참여 과정에서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그들의 활동을 제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현실참여의 방법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것일 뿐, 현실참여 자체는 그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대학과 대학생의 사명이 되었다.

4월혁명은 당시 학생들에게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다. 이후 학생운동에 가담하는 모든 학생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운동의 이념과 지향에 상관없이, 4월혁명을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근거로 앞세웠다. 4월혁명 10여 년 뒤인 1971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한 학생문제 연구위원회가, 지난 10여 년 간 학생운동에서 발표된 각종 선언문 결의문 구호 등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생운동에서는 4월혁명이 하나의 귀감처럼 언급되고 있으며, 그 표현은 4월혁명 당시의 것을 변형한 것이 많고, 모든 학생운동은 4월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30]

은 대체로 4월혁명과 관련한 ‘대학생 신화’를 벗겨내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1950년대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문화 속에서 운동의 잠재력을 키워나간 모습을 간과한 채 4월혁명 이전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이 4월혁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혁명의 주체가 되어 사회를 선도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이를 단순히 ‘신화’로 치부하는 한계를 보인다.

29) 玄勝鍾, <學生과 政治活動> ≪高大新報≫ 1960년 6월 11일, 2면.

30) <서울대 학생문제 연구위원회 보고서 요지> ≪大學新聞≫ 1972년 4월 10일, 4면.

그런데 대학생의 현실참여가 당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한국이 신생국, 후진국이라는 사실이었다. 즉, 한국과 같은 신생국, 후진국에서는 대학생들의 현실참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불가피하는 것이었다.[31] 한국의 대학과 대학생이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의 대학과 대학생이라는 점은 당시 대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그리고 독재를 무너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는, '후진성 탈피'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고양과 민족주체성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되었다.[32] 4월혁명을 계기로 선진적인 학생들은 한국사회의 명실상부한 지도적 엘리트로서 사명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한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33]

2) 학원의 자유 요구와 학원민주화운동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지만 혁명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역량은 아직 미약했다. 1950년대 내내 학생들을 짓누른 무기력과 보수적 타성은 쉽게 사라질 수 없었다. 학생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31) 李奎浩, <大學과 大學文化> ≪成大新聞≫ 1974년 6월 1일.

32) 洪善憙(고려대 학생), <歷史의 子正을 넘어서> ≪高大新聞≫ 1960년 12월 24일, 8면. 1960년 4월 19일 서울대 학생들이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 '부정선거 반대'와 '자유 요구'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훗날 당시 서울대 시위를 주도했던 윤식은 이 선언문에서 언급한 '자유'의 밑바탕에 "후진성 극복과 경제개발"이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단, 부강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향한 학생들의 관심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선언문의 성격과 맞지 않았고 몇 마디 말로 이를 표현하기도 어려웠으며 전술적으로 부적당해서 뺐다고 한다(<4.19 주역들과의 인터뷰-평가는 당신들께 맡깁니다> ≪月刊朝鮮≫ 1984년 4월, 265쪽).

33) 李秀正, <世界史 속의 四一九 學生革命-誤導된 定義의 批判的 克服> ≪思想界≫ 1970년 4월, 38쪽.

먼저 자신의 근거지인 학원을 민주적으로 정화해야 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린 뒤 곧바로 학원으로 돌아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4월혁명 직후에 나온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60년 2월 28일 이후 4월 19일까지 학생들이 전개한 시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주장은 '학원의 자유' 요구였다.[34] 그 어느 곳보다 학원에서 한국사회의 모순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통제와 동원에 의해 유린된 학원을 먼저 정화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존 연구들 가운데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간 사실을 "이승만 하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불철저한 인식 속에서 나온 후퇴"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35] 이는 당시 학생들의 주체적 조건과 항쟁 당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학원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곧바로 학원민주화운동에 착수했다. 우선 어용교수의 퇴진과 그동안 학원의 침묵을 강요했던 어용자치조직 '학도호국단'의 해체를 요구했다. 학도호국단의 가장 커다란 후원자인 이승만과 자유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학도호국단 해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결국 각 대학에 있던 학도호국단은 1960년 5월 3일 허정 과도정부의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모두 해체되었다. 대학 당국도 1960년 5월 13일 20개 대학 24명 학생지도 책임자들이 모여 새로운 학생 자치조직의 명칭을 '학생회'로 통일시키기로 하였다.[36] 이후 각 학교에서는 학

34) 학생들 주장을 유형화하여 그 빈도를 살펴보면, "학원의 자유" 23%, "부정선거 배격" 17%, "부패와 독재배격" 15% 순으로 되어 있다(김성태, 1960 <4.19 학생봉기의 動因> ≪성대논문집≫ 5(韓完相·李佑宰·沈載澤 外, 1983 ≪4.19革命論 Ⅰ≫ 일월서각에 재수록)).

35) 김동춘, 1991 <4.19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254쪽.

36) <'학생회' 조직 등을 협의-13일 각 대학 학생처·과장회의서 결정> ≪연세춘추≫ 1960년 5월 16일, 1면. 이 회의에서 학생지도 책임자들은 학생 자치는 학교 행정에 결코 간섭 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도호국단을 대체할 새로운 조직으로 우선 학생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들 학생자치위원회는 대학 별로 명칭이나 만들어진 시기, 구성방식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학생 자치조직이었다.[37] 학생자치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늦어도 1960년 말까지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학생회를 건설하였다.

학도호국단 해체와 학생회 건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 내 행정체계의 민주화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다. 어용교수 퇴진운동은 4월혁명 이전의 대학사회 부패상으로부터 야기된 논리적으로 이유 있는 운동이었다. 어용교수에 대한 비판은 이미 항쟁 과정에서 4·25 교수단 시국선언문과 고려대학교 4.19 결의문에도 잘 나와 있었다.[38]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학생들은 기다렸듯이 어용교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어용교수 퇴진 요구가 나온 학교는 성균관대였다. 1960년 4월 29일 성균관대 학생들은 이선근 총장이 참석한 학생조회 시간에 공청회를 열고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39] 이선근 총장은 이승만 정권에서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여 인사였다. 3.15부정선거 당시에도 자유당 정부통령선거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지도위원을 맡은 9명의 대학 총장, 1명의 대학 학장, 1명의 대학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40] 결국 이선근은 5월 9일 총장직을 사임했다.[41] 이후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조선대, 숙명여대 등 30여 대학에서 어용교수 또는 무능교수 퇴진운동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37) 물론 새롭게 구성된 학생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4월혁명 직전 학도호국단 간부였던 경우가 많았다(鄭桂庭, 1995 <'4月革命期' 學生運動의 背景과 展開>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7쪽).

38)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앞 책, 162쪽.

39) <"進退問題는 自身이 決定"-29日 朝會와 公聽會 開催> ≪週刊成大≫ 1960년 5월 4일, 1면.

40) 太倫基, <御用學者群의 肅正> ≪思想界≫ 1960년 6월, 214쪽.

41) <"餘生을 내 書齋에서"-疑惑 풀어준 李總長 聲明> ≪週刊成大≫ 1960년 5월 18일.

각 대학 별로 수업거부, 동맹휴업, 단식투쟁, 장기농성, 유혈사태 등 다양하고 격렬한 형태의 운동양상이 나타났다.[42] 서울대 미대나 한양대 등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끼리 충돌하기도 했다.

어용교수에 대한 배척은 교수들 사이의 알력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개입되어 혼탁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재단이사회를 포함한 학원 전체의 행정체계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학원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문의 자유, 그리고 외부권력으로부터의 학원의 자치는 옹호했으나, 학생들이 학원의 인사, 학사 등 대학행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비판했다. 즉, 학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교수의 배후에서 힘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본분이며, 학생들 자신이 독자적, 주동적으로 학원의 자치를 하는 것은 학원의 자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4월혁명처럼 민족전체의 운명에 부딪칠 때에 학생들이 조국을 위하여 총궐기하는 것과, 학원에 부패가 있다 하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주동자가 되어 운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학생들이 학원의 자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43]

학생들의 학원민주화운동은 6개월 이상 지속된 1960년 연세대학교의 '1·2차 파동'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의 처음 요구는, 무능교수의 사퇴,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지양, 총장과 이사장의 겸임 금지 등이었다.[44] 이에 발맞추어 교수단은, 1960년 5월 30일에 교수 권한의 정상화와 단과대학 중심의 행정분권화를 골자로 하는 기구개편안을 채택하였다.[45] 그러나 이사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학생들은 동맹휴업, 교수들은 수업거부에 돌입하였다. 이것이 '1차 파동'이다. 이 1차 파동은 총장과 이사장

---

42) 鄭桂庭, 1995 앞 논문, 41~46쪽.

43) <(사설) 學園의 自由> ≪東大時報≫ 1960년 5월 14일, 1면.

44) <학교 기구 개편 위원회서 건의안 작성> ≪연세춘추≫ 1960년 5월 23일, 1면.

45) <학교 기구 개편 위원회 초안, 일괄표결로 수정 없이 통과> ≪연세춘추≫ 1960년 6월 6일, 1면.

의 분리 원칙과 총장추천 물색 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봄으로써 6월 13일 일단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2학기에 들어서서 이사회가 외국인을 총장서리로 임명하고 기구개편 운동에 앞장 선 3명의 교수(박두진, 장경학, 장덕순)를 해임하면서 '2차 파동'이 일어났다. 이에 학생들과 교수들은 다시 거세게 반발하여 9월 15일 '연세대학교 학원민주화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사회와 충돌하였다.[46] 그런데 이 '2차 파동'은 학생들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교수 7명이 사표를 내는 등 교수들 사이의 내분과 얽혀 진행되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외국인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의 퇴진 요구라는 구도로 진행되었다.[47] 2차 파동은 동문회의 중재로 10월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0월 28일 학교당국이 1차파동 이후 해임된 교수 3명의 해임 조치를 재확인한 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교수 7명의 사표를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11월 15일 주동학생 3명을 퇴학시키면서 유혈폭력사태로 비화되었다. 11월 16일 연세대 학생들은 총장 원일한(언더우드)의 자택을 부수고 미국대사관 앞으로 달려갔다. 학생들은 대사관 직원에게 두 미국인(이사장과 총장)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국대사관은 사설 학교 분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학생들은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다시 학교 근처로 돌아가 이번에는 이사장 사우어의 집을 파괴하였다. 이날 51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12월 9일 한국인 총장이 임명되면서 연세대의 학원민주화운동은 일단락되었다.[48]

이러한 구도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연세대 학원민주화운동을 학생들의 민족적 의식을 각성시키고 운동이념을 민족주의로 승화시킨 계기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49] 물론 이러한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보

46) <분규로 흔들리는 반백년의 전통> ≪연세춘추≫ 1960년 9월 26일, 1면.

47) <대학사상 초유의 불상사 발생> ≪연세춘추≫ 1960년 11월 21일, 1면.

4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225~226쪽.

49)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앞 책, 162~164쪽; 李在五, 1984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形成社, 185~186쪽; 서중석, 1991 <4월혁명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

다 중요한 점은 당시 학원민주화운동도 통일운동과 마찬가지로 점차 고조되어 가던 민족주의의 영향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연세대 학원민주화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된 시기가 학생운동 내에서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민족주의는 4월혁명 직후 전개된 모든 학생운동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3) 계몽운동의 자립경제 지향과 후진성 극복 과제

4월혁명 직후 학원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학생회를 건설하고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비록 새로 건설된 학생회가 과거 학도호국단과 인적 구성이나 실제 활동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학원민주화운동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혼란스럽게 진행된 면이 있었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모순을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체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혁명주체로 자임하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학원을 넘어 사회로 눈길을 돌릴 수 있었다.

우선 학생들은 1960년 여름방학과 7·29총선을 맞이하여 그들의 활동을 사회운동 차원으로 확대시키고자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는 혁명주체를 자임했던 학생들이 학원민주화운동만으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성취할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또한 이들 운동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몰락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일부 구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혁명세력'의 반동에 대응하여, 혁명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혁명주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50]

해방론> ≪역사비평≫ 14, 131쪽.

학생들은 무엇보다 혁명정신의 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승만 독재가 무너짐으로써 일견 혁명이 끝난 듯 보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혁명주체로서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에도 혁명의 열기가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모든 국민들이 혁명 대열에 동참할 수 있어야 했다.

먼저 학생들은 농촌으로 달려갔다. 1960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 학생들은 '민주사상고취계몽대'를 만들었다. 이 계몽대의 17명 학생들은 주로 대구, 안동, 영주, 경주 등 경상도 지역을 순회하며 "4.19 혁명 이후 수습대책의 방법 및 학생들의 동태", "농민들의 민주사상 앙양과 4.19혁명의 의의", "우리학생들의 일치단결로 제2공화국 탄생에 협조" 등 9개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준법정신, 권리와 의무 인식, 신중한 투표 등을 강조했다.[51] 성균관대 '민주사상고취계몽대'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농촌계몽운동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은 지도적 엘리트답게 농촌을 '계몽'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일제시대 이래 이어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계몽운동은 혁명의 완수를 위해 앞으로 실시될 총선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즉 4월혁명의 무풍지대였던 농촌, 與村野都 현상에서 드러나듯 자유당의 주요 기반이었던 농촌, 무엇보다 후진적인 한국사회에서도 가장 낙후된 농촌에 혁명정신을 확산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당시 농촌계몽운동 속에 담긴 것이다.

1960년 6월 10일에는 서울대 학생회가 농촌에서의 국민계몽운동과 도시에서의 국민신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52] 6월 16일 국민계몽운동 단과대학별 조직 일원화 작업에 착수하였다.[53] 결국 7월 6일

---

50) 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현대사 2-1950년대 한국사회와 4월민중항쟁≫ 풀빛, 221쪽.

51) <民主發展에 貢獻-本校 啓蒙班 巡廻講演> ≪週刊成大≫ 1960년 6월 1일, 1면.

52) <活氣띤 學生自治活動, 社會改革은 우리 손으로> ≪大學新聞≫ 1960년 6월 13일, 1면.

서울대 국민계몽대가 결성되어 7월 8일부터 거의 전교생 전원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견되었다.[54] 국민계몽대 대장 안병규 외 21명의 참모위원을 선발하고, 중앙조직에는 총무부, 조직부, 섭외부, 선전부를 두며 그 아래에는 준비반, 서기반, 연락반, 기획반, 동원반과 몇 개의 대내반, 대외반을 두었다. 지방조직은 각도 및 군단위 조직을 전국적으로 편성하고 연락책임자를 두었으며, 각도 및 군단위 조직의 업무연락과 독찰을 위해 중앙본부에 기동반을 두어 순회 활동케 했다.[55] 서울대 국민계몽대는 출범과 더불어 4월혁명 정신의 보급, 국민 정치의식과 주권의식의 고양, 경제복지의 추구, 신생활체계의 수립, 민족문화의 창조를 강령으로 내걸었다. 즉 이것은 혁명의 완성이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들(특히 농민들)의 정치의식의 고양과 새로운 문화의 정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개량주의적 사회인식을 근저로 하고 있었다.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계몽대를 조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국대 등 서울시내 6개 대학 학생들은 '7.29선거계몽대'를 조직하여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를 순회하며 선거 계몽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낮에는 시장에서 연설회를 갖고, 밤에는 영사기를 들고 국민학교 교정에서 <선거는 이렇게>, <이 강산 좋을시고> 등을 상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몽대는 농민들에게 7.29총선에 임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농촌 피폐의 근본 원인, 협동조합의 기능과 실효, 청소년 4H구락부의 필요, 외래품 밀수의 한국경제 파괴와 재벌, 경제면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의 모순성과 시정책 등과 같은 생활경제적 측면에서의 계몽도 함께 진행하였다.[56]

---

53) <國民啓蒙戰線에 挺身-夏期放學을 利用하여> ≪大學新聞≫ 1960년 6월 20일, 1면.

54) <繼承된 四·一九 精神-서울大 國民啓蒙隊> ≪大學新聞≫ 1960년 7월 11일, 1면.

55) 고명균, 1990 <국민계몽대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길사, 73~75쪽.

56) <選擧啓蒙班 活動成果 至大> ≪東大時報≫ 1960년 8월 15일, 1면.

7.29총선 이후에도 농촌계몽운동은 계속 이어졌다. 연세대는 서울대와 같은 취지로 8월 3일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계몽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지역사회개발대'를 결성하였다.[57] 지역사회개발대는 그들이 들어가는 농촌에 향후 5년 동안의 장기적 개발활동을 벌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연세의 마을')을 시범적으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몽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계몽운동들은, 농촌에 대한 경험도 없고 계몽을 위한 시설도 구비되지 않은 채 오로지 의지만을 가지고 이 운동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기 어려웠다. 7·29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기성정치인들의 압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하면서 농촌에서의 계몽활동은 중단되었다.

1960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자 일부 학교에서 다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서울대의 경우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농촌으로 파견될 계몽대를 조직하였다.[58] 지난 여름방학의 농촌계몽운동에 비해 그 열기가 많이 시들기는 하였지만 학생들은 좀 더 계획적, 조직적, 효과적인 계몽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1년 봄에 접어들자 전국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기근이 나타났다. 그해 3월 현재 식량부족 때문에 정부의 구호를 요청하는 농가수는 총 22만 가구에 육박했고 이를 인원수로 따지면 115만 명 이상이었다.[59] 이때부터 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은 '절량농가구호운동'으로 전환되었다. 1960년 여름 당시의 농촌계몽운동과 1961년 봄의 절량농가구호운동은 그 주체가 모두 학생회로 동일하지만, 농촌계몽운동의 경우 관념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데 반해 절량농가구호운동은 농촌의 현실에 기반한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했다.[60]

---

57) <여름방학 이용하여 농촌계몽, 개발사업 활발> ≪연세춘추≫ 1960년 8월 15일, 1면.

58) <버림받은 땅으로 가자-師大生 계몽隊> ≪大學新聞≫ 1960년 12월 12일, 1면.

59) 김정원, 1985 ≪分斷韓國史≫ 동녘, 257쪽.

연세대는 1961년 4월 9일 '절량농가 구호반'을 결성하여 모금활동 등을 통해 모은 구호금을 농민들에게 전달하고 아울러 농촌지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61] 4월 30일에는 절량농가 구호반 제2진을 파견하여 낙농운동을 보급함으로써 일시적인 구제가 아닌 절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였다.[62] 고려대도 4월 7일 학생들의 모금활동으로 모인 구호금과 함께 '절량농가 실태조사반'을 농촌으로 파견하였다.[63] 이러한 절량농가구호운동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갑자기 추진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하지만 이 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은 농촌의 현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학생들이 농촌·농민운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농촌에서 국민계몽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에서는 신생활운동이 전개되었다. 신생활운동의 주장은 도시인들의 허영과 사치, 향락과 안일을 몰아내고,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기생한 모든 사회악을 척결하며, 외래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여 '자립경제' 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망국 사치품 건국 국산품", "한 가치 양담배에 불타는 우리 조국", "사치와 향락 속에 시드는 국민정신", "농민의 흘린 피땀 사치로써 낭비 말라", "오늘의 커피는 내일의 독배"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러한 운동은 일제 강점기 '토산품' 애용을 주장한 물산장려운동의 맥락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64]

먼저 서울대 학생회는 1960년 6월 10일 국민경제생활 중심의 신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서울대 여학생회도 "현재 요구되고

---

60) 절량농가구호운동 과정에서 당시 농촌의 현실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가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들은 장면 정권이 '국토개발사업'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61) <절량농민 구호반 옥구 향발> ≪연세춘추≫ 1961년 4월 10일, 1면.

62) <낙농운동을 보급> ≪연세춘추≫ 1961년 5월 1일, 1면.

63) <기른 힘 펼 곳은 絶糧地帶> ≪高大新聞≫ 1961년 4월 15일, 1면.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231쪽.

있는 국내 자립경제의 내외혁신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일체의 사치와 허영, 불의, 낭비를 배격하기로 결의했다.[65] 이에 7월 7일 서울대 신생활운동반이 결성되었다. 신생활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유당 시대의 부정부패가 특정 정치인의 도덕적 타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신자세의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66] 또한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 주체성이 뚜렷해야 하고 사치와 허영과 낭비를 배격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동의 심리적 구심점을 향해 민족의 에너지를 집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 서울대 신생활운동반은 7월 16일 세종로에서 양담배를 모아 소각하는 집회를 가졌고, 8월에는 관용차 91대를 고발하였다. 또 9월 22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가넘버 차량 51대를 시청 앞에 유치시켜 놓고 가넘버 차량의 폐지와 신생활운동의 입법화 그리고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67] 그러나 다음날 정부가 이러한 직접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다시 하면 단속, 입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10월 8일 장면 총리가 국민계몽대 대장 안병규를 비롯한 전국 학생 대표 4명을 만나 신생활운동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하면서 신생활운동의 열기는 급속히 식어갔다.[68]

뜨겁게 달아올랐던 신생활운동의 열기가 급속히 식은 것은 정부의 강온양면의 전략뿐만 아니라, 당시 학생들의 운동 방식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 4월혁명 10주년이 되었던 1970년 한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

65) <女性新生活運動, "奢侈를 排擊하자"> ≪大學新聞≫ 1960년 6월 13일, 1면.

66)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37쪽.

67) <假남버 實力으로 적발-爆發된 젊음의 正義> ≪大學新聞≫ 1960년 9월 26일, 1면.

6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232쪽.

> ‘四·一九’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기억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 못 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른바 ‘新生活’運動이다. 一部 學生들이 ‘四·一九’의 餘勢를 몰아서 新生活운동을 전개한 일이다. 外來品인 커피도 마시지 말고 洋담배도 피우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一部 學生들은 茶房에 느닷없이 침입하여 커피잔을 둘러엎고 손님들의 洋담배를 탈취하는 등 分에 넘치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뜻있는 사람들은 저런 學生은 ‘四·一九’의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가장 미워할 異質的인 요소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다.[69]

이러한 운동 방식은 4월혁명으로 고양된 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와 혁명주체로서의 자신감이 바탕에 깔린 것이었지만,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매우 불편하고 무례한 것이기도 했다. 결국 이후 신생활운동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서울대 신생활운동대가 196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부터 13일 동안 광화문 네거리에 포진하여 허례허식 타파를 위한 계몽을 벌이는 정도에 머물렀다.[70] 1961년에도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71] 등 각 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계속 신생활운동이 전개 되었지

---

69) 金成植, <‘四·一九’ 追憶> ≪思想界≫ 1970년 4월, 245쪽.

70) 원래 이 신생활운동대는 연말연시에 수수되는 뇌물왕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들 집 앞에 포진하고자 하였다(<虛飾 打破를 呼訴-새생활운동대> ≪大學新聞≫ 1961년 1월 9일, 1면).

71)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회(약칭 대총련)’는 전국의 각 대학 학생회 연합체로서 1960년 7월 7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 12일~14일의 대회를 통해 결성되었다. 11월 23일에는 전국 35개 대학 대표 백여 명이 모여 대총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다음날인 24일에는 중앙위원회가 열렸단. 그런데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자 지방 소재 대학들이 이에 반발하여 탈퇴하면서 2개의 조직으로 분열되었다. 서울과 지방으로 분열된 대총련 이외에도 1961년 2월 고려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18개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회가 참여한 ‘대한민국학생자치연합회’가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러한 학생회 연합체의 난립을 극복하고자 1961년 5월 ‘대한민국학생연합회’라는 통합기구가 모색되었으나 ‘남북학생연석회의’ 문제로 다시 혼란에 빠졌다가 5.16쿠데타로 모두 해산되었다(鄭桂庭, 1995 앞 논문, 39~41쪽).

만, 이때의 신생활운동은 1960년의 그것과는 달리 오직 학생들에게 의식개혁과 내핍생활을 계몽하는 학내 캠페인으로 그 성격이 대폭 축소되었다.

농촌계몽운동과 마찬가지로 신생활운동 역시 혁명정신의 확산을 위해 도시에서 전개한 계몽운동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말하는 혁명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사실 4월혁명 자체가 명확한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항쟁 당시 구호가 "부정선거 다시 하라"에서 "이승만 하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혁명정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 한국의 현실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만으로 한국사회의 모순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학생들은 엘리트로서 한국사회의 모순에 민감했다. 당시 학생들이 인식했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사회의 '후진성'이었다. 즉 그들이 책에서 보고 배웠던 이상적인 사회(특히 서구와 같은)와는 모든 면에서 거리가 있었던 한국사회의 현실이었다.[72] 1960년 이화여대 학보에 실린 다음의 기사는, 당시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했던 한국사회의 후진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 우리의 현실은 후진지역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 각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명동거리와 남산의 토굴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름도 모를 고급의 상품들이 찬란하게 놓인 진열장과 건물들 그리고 사람의 물결이 있는가 하면, 일년 내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축축한 토굴의 핏기없는 생활이 있는 것이다. 거의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화려와 초라함이, 사치와 비참이 대결하고 있다. 쇼핑과 구걸, 고급상품과 깡통, 이것이 바로 한국의

72) 이 당시 각 대학 학보의 특징은, 서구나 제 3세계와 같은 외국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함께 그에 대비되는 한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양지와 음지가 아니겠는가?[73]

1950년대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절망했지만 그들 스스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의지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무기력하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4월혁명을 통해 학생들이 혁명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4월혁명 직후 이루어진 ≪思想界≫ 좌담회에서 참여 학생들은 한국적인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출발하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이면서도 약간의 복지주의적인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운 국가", 즉 "서구식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4]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당장 국가의 모습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었다.

혁명의 주체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구조적인 사회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선 농촌과 도시의 민중들에게 후진적인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타파의 방법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론인 '계몽운동'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4월혁명 직후 학원민주화운동은 물론 계몽운동 역시 국가와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통이었다.[75]

계몽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후진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자립경제 건설이었다. 당시 용어로 '민생고'라고 불리는, 즉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완수는 불가능했다.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체제의 수립 없이는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은 장미꽃은 필 수 없

73) <(사설) 後進的 現實을 止揚하라> ≪梨大學報≫ 1960년 7월 4일, 1면.
74) <(좌담) 怒한 獅子들의 證言> ≪新東亞≫ 1960년 6월, 50~51쪽.
75) 서중석, <다시,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新東亞≫ 2000년 4월, 91쪽.

었다.[76]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제시됐던 4월혁명의 정신과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생고의 해결은 한국사회의 후진성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것은 당연히 '경제재건'으로써 달성해야 할 것이었다.

경제재건은 자립경제의 건설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자립경제의 수립을 통한 경제의 재건 그리고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은 바로 4월혁명 당시 학생들이 추구했던 가장 보편적인 목표였다.[77] 그 결과 1960년 9월 29일에 시내 13개 대학 경제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국자립경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자립경제만이 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8] 대체로 학생들은 과감한 계획경제를 실시함으로써 자립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79]

자립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1950년대까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먼저 서울대 신생활운동반 학생들은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소위 'P·X 경제'와 관련이 있었다. 신생활운동에서 가장 배격했던 것이 '양담

---

76) <(사설) 합리적 경제수립만이 민주혁명의 과업이다> ≪梨大學報≫ 1960년 6월 6일, 1면.

77) 황병주는 빈곤과 후진성은 자명한 현실이 아니라 쿠데타 세력이 '발견'한 담론적 재현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황병주, 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0~133쪽. 이는 빈곤과 후진성 인식이 '선진-후진'의 개념쌍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빈곤과 후진성 그 자체보다 그것이 문제가 된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켜준다. 그러나 빈곤과 후진성이 문제가 된 것은 황병주도 지적했듯이 이미 1950년대 중후반부터이고 특히 4월혁명 직후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쿠데타 세력이 빈곤과 후진성을 '발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4월혁명 직후 학생들이 추구한 후진성 극복과 5.16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이 추구한 후진성 극복의 내용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78) <一次事業으로 都市民을 啓蒙-全國自立經濟推進委員會 結成> ≪高大新聞≫ 1960년 10월 8일, 3면.

79) <學生層, 果敢한 '計劃經濟' 主張-21日 商大의 經濟政策 심포지움서> ≪大學新聞≫ 1960년 11월 28일, 1면.

배'로 대표되던 사치성 수입품들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 범람하고 있던 사치성 수입품들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치성 수입품들이 범람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군부대 P·X에서 상당수의 수입품들이 불법으로 반출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불법을 단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치성 수입품 배격에 앞장서던 학생들은 결국 이러한 불법을 막을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80] 한미행정협정 체결 주장은 주한미군 주둔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1961년 2월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 당시 민통련 주도의 학생투쟁위원회에서 배척된 바 있었다.[81] 그러나 신생활운동이 기본적으로 자립경제 수립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미행정협정 체결 요구는 의식개혁을 넘어 한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을 직접 문제 삼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자립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195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기반이었던 '원조'의 폐해들을 극복해야만 했다. 원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1960년 여름 결성된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의 지침서 중 <미국의 예속경제와 한국>이라는 항목에 잘 나타나있다.

> 대한민국은 건립 후 약소후진국가로서 경제원조를 받고 발전을 꾀하였지만 원조도입의 적절한 운영을 보지 못하였고 산업발전의 기계도입보다도 식민지적 소비시장을 이루어 놓았다. 한국으로서는 외국원조를 견제하면서 경제자립화를 계획하는 방향모색을 해야 되며 무식한 외국인의 식비제공보다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 의존성을 버려야 한다.[82]

---

80) <(이 주일의 시사) 조속한 행정협정 체결이 긴요> ≪연세춘추≫ 1961년 2월 27일, 2면.

81) <황건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0일, 면담자: 한찬욱).

82)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 1960 <국민계몽운동 지침서>, 20쪽.

미국의 원조는 당시 한국에서 “불가피한 생명소이면서도 여독을 남”겼다.[83] 많은 지식인들은 소비재나 잉여농산물 중심의 미국 원조가 한국 경제의 파행은 물론 예속성과 의존성을 가져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에 원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쿠바의 사례를 들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미국에게 “자기의 이권 유지만을 위하여 독재자의 보스”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우회적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84]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2월 원조를 빌미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가능하게 한 ‘한미경제협정’이 체결되자 미국 원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 한국의 주권 존중과 더불어 원조를 받는 나라의 이익도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함을 역설했고,[85] 또 어떤 이들은 한국경제를 교란시키고 경제적 자주성까지 저해하는 원조는 차라리 안 받는 것만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86]

원조 문제는 한국의 후진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였지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비판의 수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961년 2월 전개된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한국의 후진성의 근본원인으로 ‘분단’을 고민하는 순간 한국 분단의 결정자로서 미국의 책임은 보다 강도 높게 제기될 수 있었다. 분단이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여 오늘날의 빈곤과 생활고 그리고 원조 의존을 가져왔다는 인식이나[87] 분단으로 한국경제의 후진

83) 李炳吉, <主體性과 自律性을 찾자> ≪梨大學報≫ 1960년 8월 15일, 2면.

84) <(이 주일의 시사) 외국압력 벗으려는 후진국의 고민> ≪연세춘추≫ 1961년 5월 8일, 2면.

85) <(이 주일의 시사) 경제원조에 대한 미국의 책임> ≪연세춘추≫ 1961년 2월 13일, 2면.

86) 文炳鏶, <韓美經濟協定과 韓國經濟의 自主性 問題> ≪中大新聞≫ 1961년 3월 2일, 2면.

성이 결정되고 말았다는 인식은[88] 당시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보편적 인식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 즉, 1950년대에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통일이 되어야 잘살 수 있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1961년 4.19 1주년 행사 때 서울대 학생들이 "민족자주통일", "외세 물러가라" 등의 슬로건과 더불어 "이남 쌀 이북 전기",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와 같이 통일과 경제, 민생 문제를 결부시킨 슬로건을 내걸었던 이유도 이러한 보편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었다.[89]

---

87) <(사설) 생활 검소화 운동을 제창한다-살길은 경제자립과 통일뿐이다> ≪연세춘추≫ 1961년 1월 9일, 1면.

88) 朴鍾喆(단국대 학생), <韓國의 自立經濟가 指向할 길> ≪檀大新聞≫ 1961년 12월 11일, 3면.

8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344쪽. 당시 미국도 한국의 통일 논의가 민족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자극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통일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1950년대까지 대한정책의 중심이었던 국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경제 건설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Memorandum from Robert W. Komer to Walt Rostow, March 15, 1961, Kennedy Library, National Security Files, Countries Series, Korea, General, Box 127). 그런 의미에서 4월혁명 직후 "운동진영의 요구는 도시하층민의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었다. 민중의 빈곤, 絶糧 문제 해결 등의 욕구는 학생·사회운동에게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학생·사회운동 내에서 민중생존권과 통일문제의 결합은 무매개적이고 기계적이었"으며, 이는 결국 "민중의 요구를 통일운동, 자립경제 건설이란 프티 부르주아적 방식으로 대안화시킨 것이었다"는 평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김원, 2006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부마항쟁을 중심으로>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323~324쪽). 물론 당시 대학생들이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일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는 4월혁명 이후 통일운동이 전개된 기간이 약 반 년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시 통일운동은 위의 평가와는 달리 민중들의 경제적 빈곤 문제, 후진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도시하층민의 요구와 '괴리'되거나 이 문제가 '부차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통일운동, 자립경제 건설을 단순히 '프티 부르주아적 방식'으로 규정한 것 역시, 당시 대학생들은 물론 한국사회 각 방면에서 제기된 다양한 자립경제 건설이나 통일 논의들이 갖고 있는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단순하게 일반화시킨 평가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같은 맥락에서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컨대 계몽운동은 대학생들이 혁명주체로서 4월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개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경제 수립으로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계몽운동은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지만을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성과와는 별개로 계몽운동은 학원민주화운동과 함께 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방법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치적 경험이 되었다. 그 경험의 축적 위에서 학생운동 차원에서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이 시도될 수 있었다.

2.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추진 조직의 경향성

1) 통일논의의 활성화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후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학원민주화운동을, 대외적으로는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을 추진하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한국사회 후진성 타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진성의 근본원인으로 분단이 지목되었을 때 그 해결책은 통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그 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1960년 7.29총선을 계기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고양되었다. 7·29총선 당시 여러 혁신계 정당들은 다양한 형태의 통일방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당시 혁신계 정당들이 내건 통일방안은 기본적

것이 압도적이었고" 사회 체제의 핵심인 "경제, 사회, 여기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경향은 강하지 못했다"는 평가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김우창·최장집, 2010 <(대담 2)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성찰>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140~141쪽).

으로 유엔 감시하 총선거론으로서 보수정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시 일부 혁신계 정당 인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남북교류론', '중공의 유엔가입론' 등 보수세력과 차별성 있는 통일정책을 표명하였다. 7.29총선에서 참패한 혁신계 정당들은 이후 크게 4개의 정당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통일방안을 마련하였다. 혁신계 정당들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크게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혁신계 정당들은 자신들의 통일방안을 활발하게 표방하고 선전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90]

통일논의의 대중적 확산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중립화통일론'의 전파와 확산이었다. 중립화통일론은 주변 강대국 간의 합의로 한국을 영세중립화함으로써 냉전에서 벗어나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통일론은 이미 한국전쟁 휴전 무렵부터 김삼규, 김용중 등이 해외에서 주장해 오던 바였다. 그러나 북진통일론이 지배하던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논의가 철저하게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4월혁명 이후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비로소 각종 신문과 잡지에는 '중립화통일론'에 관한 논설들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 6월 김삼규가 일본에서 일시 귀국하여 각종 신문과 잡지에 중립화통일에 관한 논설을 발표한 것이 중립화통일론의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립화통일론을 둘러싼 각종 논쟁이 일어나면서 특히 지식인과 학생 사이에 통일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다.[91]

국외에서도 1960년 10월 미국의 상원의원 맨스필드가 한국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맨스필드는 극동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중국과 일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를 조건으로 한국 통일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

9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298~299쪽.

91) 홍석률, 2001 ≪통일문제와 정치 · 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출판부, 113~114쪽.

다. 이는 한국의 통일에 진전이 생긴다면 극동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한일관계 개선과 통상 증대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나온 맨스필드의 사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학생들은 민주당 원내 부총무였던 맨스필드의 위상과 관련하여 그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만약 1960년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한국의 통일과 관련한 미국의 대한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92] 여기에 더하여 북한 정권이 1960년 8월 통일로 가는 과도적 조치로써 남북 양 정부의 접근을 주장한 소위 '과도적 연방제안'을 제안하고, 반외세 자주통일과 남북 경제교류 등을 주장하는 등 전례 없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자, 남한에서도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93]

점차 많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일'과 '민족'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나 강연회가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주요 대학에서 잇달아 개최되었다.[94] 1960년 9월에 고려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시국토론대회'와 10월 동국대에서 열린 '학생시국강연회', 그리고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문제 심포지엄' 등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먼저 1960년 9월 24, 25일 양일에 걸쳐 고려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시국토론대회'에서는 각 대학에서 25명의 학생 대표가 나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토론대회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민족주의'와 '중립화통일'을 주장했다. 또한 이승만 정권 시절 절대적 가치였던 '북진통일론'은 완전히 부정되고 '평화통일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토론대회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매우 다양했다. 반미반소 형식의 중립화통일을 주장한 학생도 있었고,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주의를

92) 홍석률, 2001 위 책, 119~121쪽.
93) 홍석률, 2001 위 책, 127~134쪽.
94) 성유보, 1983 <4월혁명과 통일논의> ≪韓國民族主義論 Ⅱ≫, 創作과 批評社, 131쪽.

발달시켜 국력을 강대케 함으로써 통일을 하자는 학생도 있었고, 유엔 혹은 중립국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하여 통일하자는 학생도 있었고, 미소 양군의 철퇴를 주장한 학생도 있었고, 남북한 문화교류를 주장한 학생도 있었고, 민족주체사상으로서 '얼'을 확립함으로써 통일을 하자는 학생도 있었다.[95] 또한 기형적 경제상태를 바로잡아 자립경제를 수립하는 문제와 통일을 연결시키고, 막대한 군비를 통일을 통해 경제부흥에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96] 이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혁동은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며, 통일 중립화된 국가의 체제로 사회민주주의를 거론했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는 중립화 통일론과 연결되는 이념으로 자주 언급되었다.[97]

1960년 10월 11일 동국대학교 학생시국강연회에 나온 학생연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음성적으로 침투하는 침략의 식민정책 같은 것은 단호히 경계하면서 경제적 자립으로 주권을 확보하여 통일된 민족을 이룩해야한다는 민족주의였다. 특히 동국대 시국강연회에서는 학생 연사들로부터 "今後 4.19 혁명과업의 완수로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벗어나 오직 한국민 자신이 자주 · 자립적이고 확고한 민족사상을 수립하여 국토통일의 聖業을 이룩하고 민족자활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족주의 사상의 확립으로서 전국민이 일치한 민족통일혁명이어야 한다", "한민족은 한민족끼리 자립하여 다시는 과거와 같은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영구적 민족번영의 길을 꾀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外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자립경제 원칙을 수립하여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자유당과 또 현 민주당 및 혁신계의 사회대중당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통일방안을 면밀히 검토 비판하여 이들의 비합리성과 비현실

95) <"民族主義로 南北統一을"-全國大學生時局討論大會 閉幕> ≪高大新聞≫ 1960년 10월 1일, 3면.

96) 서중석, 1991 앞 논문, 146쪽.

97) 홍석률, 2001 앞 책, 273쪽.

성을 지적하고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간에 강력하고 조직적인 통일연구기구 및 북한실정연구의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언젠가는 한번 있을 남북한통일에 우리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또 이에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 등의 주장이 쏟아져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98]

1960년 11월 2일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문제 심포지엄’에서는 학생들이 기성 정치인, 지식인들과 함께 통일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기성세대들은 통일비관론으로 기울어졌으나, 학생 대부분은 국제적 분위기로 보아 통일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주체성을 살려 하나의 이념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이 심포지엄에서는 세대 별로 통일문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지만, 결국 공통된 결론은 “경제자립만이 통일에의 첩경”이라는 것이었다.[99] 자립경제 수립은 통일운동과 신생활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였다.[100]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은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을 위한 또하나의 방법론이었다. 특히 계몽운동 과정에서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자립경제 수립은, 통일운동에서도 핵심적인 주장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 통일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는데 있어, 1950년대부터 활성화된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생들이 자주적인 통일을 원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각 대학의 학교신문에는 “우리가 살 길은 통일 밖에 없

98) <韓國現實의 歷史的 悲運을 解剖-11일 自治委 主催 '時局講演會' 盛況>, ≪東大時報≫ 1960년 10월 15일, 1면.

99) <統一問題 심포지움-共通點은 “經濟自立”> ≪大學新聞≫ 1960년 11월 7일, 1면.

100) 당시 통일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용중도 1961년 2월 중순 장면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하루빨리 자주적 경제력을 갖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金龍中氏 張總理에 公開狀-統一은 民族의 至上命令> ≪民族日報≫ 1961년 2월 19일, 2면; <自立經濟 爲해 統一時急-金龍中氏 公開書翰에 好意的 反應> ≪民族日報≫ 1961년 2월 20일, 1면).

다”[101], “조국 통일은 민족지상의 명령이요 민족의 최대 최고의 사업이다”[102], “통일은 시급한 지상 명령이다. 통일은 흥정이 아니요 민족정기의 엄숙한 명령이며 민족생존권의 정당한 요청이다”[103] 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다. 물론 “먼저 국민생활의 향상과 민족의 견고한 단결을 통해 공산 외세를 물리”치고 난 후라야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건설 후통일’ 주장도 공존했다.[104] 일정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은 학생들을 혁명의 대의 안으로 다시 한 번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학원민주화운동, 농촌계몽운동, 신생활운동에서 표출되던 민족주의가 역시 일정한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의 결성

신진회, 신조회, 협진회와 같은 1950년대 대학 내 이념서클들은 비록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지만, 극우반공주의가 압도적인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이러한 가능성은 1960년 4월혁명으로 현실화되었다. 4월혁명 과정에서 혁명을 주도했던 특정한 조직이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학교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열혈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이념적 지향

101) 金基洙, <六·二五의 反省-特히 民族과 思想에 對하여> ≪東大時報≫ 1960년 7월 2일, 2면; <(一題一言) 統一問題와 韓國史의 한 側面> ≪檀大學報≫ 1961년 2월 11일, 4면.

102) 趙潤濟, <四月革命과 學生精神> ≪週刊成大≫ 1960년 11월 1일, 2면

103) 李世基(고려대 학생), <젊은 피는 統一戰線으로> ≪高大新聞≫ 1961년 4월 15일, 3면; 洪善憙(고려대 학생), <民族的 主體勢力은 總集結하라-統一‘레지스탕스’運動을 提唱함> ≪高大新聞≫ 1961년 4월 29일, 1면.

104) 文終述(중앙대 학생), <中立統一論 (下)-‘맨스필드’議員의 中立統一論과 우리의 覺悟> ≪中大新聞≫ 1960년 12월 1일, 3면; 高炳喆(단국대 학생), <(특집) 墺式 中立統一論 批判-墺地利式 統一 幻想에 不過> ≪檀大學報≫ 1960년 12월 1일, 3면.

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시위에 앞장섰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4월혁명 자체에 이념서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4월혁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끝나고 이념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세상이 열리자, 그동안 소극적으로 혹은 음성적으로 활동했던 이념서클의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학도호국단을 학생회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념서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단, 서울대 문리대의 경우, 학도호국단 해체 직후인 1960년 5월 10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 600여 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새로 만들어질 '학생자치회'의 조직형태와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결의했는데, 이때 결의문을 낭독하고 통과시킨 학생이 신진회의 윤식이었다.[105] 그는 며칠 후 각 학과 대의원들로 구성된 서울대 문리대 대의원회에서 의장을 맡기도 했다.[106] 그러나 이러한 윤식의 활동은 이념서클의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정치학과 과회장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원민주화운동에 이어 전개된 '계몽운동'에는 이념서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졸업생이었던 고석원과 이돈녕을 고문으로 하고, 문리대 학생회장 안병규를 대장으로 한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는 지도이념이 김진균과 두 고문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황활원, 염길정, 이영일, 이수정, 신용하 등 신진회와 후진사회연구회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다.[107] 하지만 계몽운동에 이념서클 학생들이 적극 참여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들은 점차 한국사회 후진성 타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념서클의 학생들은 7.29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빛이 바랜 농

105) <整頓되 가는 學園秩序> ≪大學新聞≫ 1960년 5월 16일, 1면.
106) <單大別로 選擧戰> ≪大學新聞≫ 1960년 5월 23일, 1면.
107) 權榮基, <4.19의 뿌리를 찾아서-新進會에서 民統聯까지> ≪月刊朝鮮≫ 1984년 4월, 254쪽.

촌계몽운동과 정치적 소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신생활운동을 넘어서는 학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현실과 연관성을 가지고 좀 더 이념적인, 그러면서도 학생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통합적인 학생운동체를 만들고자 했다.[108] 그 결과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 후진사회연구회, 서울대 법대의 사회법학회 등을 주축으로 1960년 11월 1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18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약칭 민통련)이 결성되었다. 서울대 민통련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은 신진회의 윤식과 조직위원장을 맡은 사회법학회의 황건은 민통련의 결성 과정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윤식: 민통련 결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10월 초의 일이었다. 신진회를 중심으로 친구들끼리 서울대 문리대와 법대 구내에서 만나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그런 과정 속에 단체의 명칭을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전선으로 정했다. 그러나 '전선'이란 용어가 듣기에 이상하다고 하여 나중에 '연맹'으로 고쳤다.[109]

> 황건: (1960년) 9월초, 처음엔 문리대, 법대의 일부 서클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10월 들어서면서 문리대, 법대, 상대, 미대, 의대, 수의대로 확산됐지요. 마침내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대 강당에서 발기인 264명을 포함,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이어 11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결성대회를 가졌지요.[110]

---

108) <윤식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한모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앞 책, 178쪽).

109) 權榮基, 1984 앞 글, 259쪽. 애초에 정해진 '민족통일전선'이라는 명칭이 '민족통일연맹'으로 바뀌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0년 11월 1일 서울대 민통련 발기인대회에서 처음 정해진 명칭인 '민족통일전선'과 서울대 문리대 학장과 학생들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민족통일추진학생회'라는 명칭이 모두 폐기되고, 이 자리에서 새롭게 '민족통일연맹'이라는 명칭이 결정된 것이다(<旣成에 못 미룰 至上課業-11月 1日 假稱 '서울大民統聯' 發起大會> ≪大學新聞≫ 1960년 11월 7일, 1면).

110) 李根成, <당시 서울大 민통련 조직위원장 黃建씨 증언-"민통련은 4.19 통일'논

서울대 민통련은 그동안 전개된 학생회 중심의 운동을 무이념적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민족주의와 통일을 학생운동의 지상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들은 한국사회 모순의 근본원인을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분단을 깨트려야 한다고 믿었다.[111]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회측은, 모든 학생운동은 학생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민통련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회의 권위를 인정한 위에서 그 밑으로 민통련을 끌어드리려는 시도에 불과했다.[112] 정치적 소극성을 띠면서 학내 문제로 침잠하던 학생회는 운동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났다. 반면 농촌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은 민통련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113]

현재 서울대 민통련 관련 자료로는 1960년 11월에 작성된 <假稱 서울大學校 民族統一聯盟 規約(草案)>과 1960년 12월 1일 서울대 민통련 중앙위원회 의장 윤식이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한 <서울大學校 民族統一聯盟 代議員 及 中央委員 名單>이 남아 있다. 이들 자료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활용된 바 없으므로, 이들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서울대 민통련의 조직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假稱 서울大學校 民族統一聯盟 規約(草案)>(이하 <서울대 민통련 규약>)은 크게 '발기문', '강령', '선서', '對정부 및 사회 건의문', '규약(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114]

의'를 '운동'으로 끌어올려"> ≪月刊中央≫ 1990년 4월, 221쪽.

111) <(좌담) 最近 서울大生의 統一論과 學生運動의 潮流> ≪大學新聞≫ 1960년 11월 14일, 3면.

112) <(좌담) 最近 서울大生의 統一論과 學生運動의 潮流> ≪大學新聞≫ 1960년 11월 14일, 3면. 서울대의 경우, 학생회는 민통련이 '서울대'라는 명칭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學生會서도 決議-'서울大' 名儀 冠稱 問題에> ≪大學新聞≫ 1960년 11월 14일, 1면).

113)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9월 5일, 면담자: 오제연).

114)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규약(초안)'의 前文만 따로 '對정부 및 사회 건의

6쪽 분량의 '발기문'은 "오늘 우리는 벅찬 의욕과 지성의 결단으로써 빈곤과 패배와 노예의 쇠사슬만이 지배했던 너무나 슬픈 우리 조국의 역사 앞에 섰다"는 말로 시작한다.[115]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우리들 민족자주역량의 결핍은 국제적으로 민족과 조국의 양단을 국내적으로 극악한 이승만과 그 惡流의 반동독재와 비인도적 전체주의의 적색독재를 가져왔을 뿐 민족적으로 또는 조국의 사회경제적으로 유일한 활로인 민족통일에의 주체적 노력도 한마디의 발언조차도 없이 우리는 묵묵히 노예의 사슬만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고 진단했다.[116] 끝으로 "우리는 민족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 민족이 하나같이 묶여온 노예의 쇠사슬을 절단할 마지막 사수대다"라고 선언했다. 이 발기문은 민족통일을 이 나라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규정함으로써 분단 모순 극복을 통한 후진성 극복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당시 정권은 물론 훗날 쿠데타 세력이 추구한 후진성 극복 지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민통련 학생들은 남과 북의 독재정권을 모두 비판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대학생뿐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민족은 통일되어야 한다. 민족통일 없이 우리의 살 길 없다", "우리의 조국은 완전무결한 자주독립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등 총 5항으로 이루어진 '강령'은 '적색독재와 백색독재 배격', '구시대적 보수반동의 제요소를 단호히 배격'과 같이 앞서 제시한 '발기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117] 단, "우리는 학구적 입장을 견지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서울대 민통련이 대학생들의 학술적 단체라는 점을 강조한 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세대와 제휴하여 전국학생의 민족통일연맹의 결성을 촉진한다"라는 구절을 넣어 이후 이 조직을 다른 대학까지 확대

문' 앞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시 여러 문서들을 합해서 <서울대 민통련 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인다.

115) <서울대 민통련 규약>, 1쪽.

116) <서울대 민통련 규약>, 3~4쪽.

117) <서울대 민통련 규약>, 7~8쪽.

시킬 것을 분명히 한 점 등이 주목된다. 즉 서울대 민통련은 자신들의 활동이 미칠 파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학문'이라는 안전장치를 강조했던 것이고, 시작부터 전국 단위의 조직 확대를 꾀했던 것이다.

3개 항의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우리는 민족의식과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민족통일에로 매진한다.", "一. 우리는 젊은이로서 세대의식과 역사적 사명감으로서 일치단결한다.", "一. 우리는 본연맹의 규약, 강령 및 모든 결의를 준수한다."[118] 역시 '발기문', '강령'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4월혁명 직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세대의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주목된다. 앞서 강령에도 '우리세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에 이러한 세대담론이 미치는 영향도 별도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對정부 및 사회 건의문'은 1960년 11월 1일 서울대 민통련 발기인대회 당시 채택된 것으로 "사월혁명의 주체세력이었고 조국의 내일을 담당한 젊은 세대의 이름으로 건의함"이라는 말과 더불어 총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성세대는 남북분단의 비극을 야기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민족통일에 대한 새세대의 정당한 발언을 묵살 내지 억압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공격하면서 "남한의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는 패배의식을 철저히 불식하고 남북한총선거에 대비하여 공산세력과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할 기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현실에 입각한 적극외교로 전환"하고 특히 장면 총리는 "한국통일문제만을 협의하기 위하여 미국과 소련을 특별방문하고 미소 지도자들과 회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書信의 자유를 남북한에 하루바삐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119] 이 '건의문'은 '공산세력과 대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특히 장면 총리에게 소련 방문을 요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장면 정부는 이 '건의문'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를

118) <서울대 민통련 규약>, 9쪽.
119) <서울대 민통련 규약>, 12~13쪽.

검토하는 등 서울대 민통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120]

총 4장 21조, 그리고 부칙으로 짜여진 '규약(초안)'은 민통련의 조직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우선 제2조에서 "본연맹은 민족통일과 후진성 극복과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민족통일과 후진성 극복을 같은 맥락에서 파악했으며,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 "본연맹의 회원은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라고 하여 민통련이 단순히 서울대만의 조직이 아니라 전체 대학 차원으로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같은 제4조에서 회원 가입 자격을 "회원 2인과 대의원 1인의 추천을 얻어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經한 자"로 규정했다.[121]

'규약(초안)'의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서울대 민통련의 조직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일단 서울대 민통련은 크게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3개 조직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직은 '총회'인데, 서울대 민통련의 '중요기본방침'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는 매학기 초에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었다. 단, 대의원회, 중앙위원회나 회원 2백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122] '대의원회'는 각 단과대학 별로 회원 10인 당 1인씩 선출된 임기 1년의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총무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한 달에 한 번 소집되는 대의원회의 주요 권한은 선언, 강령, 방침, 규약 등에 대한 결정 또는 제정,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 중앙위원회의 집행에 관한 감독 및 집행의 승인 등이었다.[123] 실질적으로 서울대 민통련을 움직이는 집행기구인 '중앙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120) <政府, 强硬策 樹立키로> ≪東亞日報≫ 1960년 11월 3일, 조간1면.

121) <서울대 민통련 규약>, 14쪽.

122) <서울대 민통련 규약>, 15쪽.

123) <서울대 민통련 규약>, 16~17쪽. 황건에 따르면 규약상 대의원회가 매월 열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울대 민통련 결성 직후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61년 5월 3일 한차례 소집됐을 뿐였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대 민통련은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李根成, 1990 앞 글, 222쪽).

20~25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회 의장'이 서울대 민통련 전체를 대표했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의장의 임기는 6개월이었다.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3개의 직속기관(기획위원회/조직위원회/통일문제연구회)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7개의 부서(총무부/재무부/공보부/섭외부/출판부/동원부/여학생부), 그리고 '학술위원회'를 구성하는 10개의 연구회(정치외교학회/경제학회/법학회/사상종교연구회/사회심리학회/교육문제연구회/농업문제연구회/공업문제연구회/민족예술연구회/민족優生보건연구회)가 있었다. 그밖에 '고문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124]

끝으로 '규약(초안)'은 서울대 민통련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강연회, 연구발표회, 토론회 등의 연구활동', '민족에의 봉사 및 민족계몽', '회지, 공보 발간', '기타 본연맹의 목적 수행에 관련된 활동 및 사업' 등이다.[125] 그런데 앞서 살펴본 서울대 민통련의 조직 체계와 여기서 언급한 활동 및 사업 내용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민통련의 조직 체계는 개별 학교 차원의 이념서클 혹은 이념서클 연합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방대한 것이었다. 이는 서울대 민통련이 애초부터 학교 울타리를 뛰어 넘는 전국 단위의 거대 조직을 목표로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그러나 '강연회, 연구발표회, 토론회'나 '회지, 공보 발간' 같은 그들의 활동 및 사업 내용은 소규모 서클에서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평범한 학술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민족에 대한 '봉사와 계몽', 또 조직의 '목적 수행'이라는 표현 속에 활동 및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세세하고 거대한 조직 체계에 비해 소소하고 추상적인 활동 및 사업 내용은, 당시 서울대 민통련 주체들이 의욕만 앞섰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정세의

124) <서울대 민통련 규약>, 17~21쪽.

125) <서울대 민통련 규약>, 23쪽.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민통련이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요인이었다.

<서울大學校 民族統一聯盟 代議員 及 中央委員 名單>(이하 <서울대 민통련 명단>)에는 1960년 말 당시 서울대 민통련의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총 59명의 대의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을 단과대학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문리대 29명, 법대 17명, 사범대 3명, 상대 5명, 약 1대, 의대 2명, 치대 1명, 농대 1명. 음대, 수의대, 미대, 공대는 아직 대의원을 뽑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분포는 서울대 민통련이 문리대의 신진회, 후진사회연구회, 법대의 사회법학회와 같은 이념서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이후에도 196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은 계속 문리대와 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앙위원 명단을 보면 의장: 윤식, 서기: 조헌정, 전유효. 위원: 이익환, 윤식, 이수정, 유세희, 황활원, 이영일, 이한표, 임응식, 정기환(이상 문리대), 김광일, 김석조, 황건, 이상배, 윤용남, 황태영(이상 법대), 전유효, 김정구(이상 사대), 이평섭, 이대근(이상 상대), 조헌정(의대), 유태붕(농대), 양정강(치대), 이우재(수의대), 未選 위원 2명. 그밖에 이 문서에는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각 부 부장 명단도 나와 있다. 집행위원장: 윤식, 총무부장: 정정홍, 재정부장: 김현주, 공보부장: 이수정, 섭외부장: 정기환, 출판부장: 안동일, 동원부장: 조창구, 여학생부장: 미정.[126]

그런데 이 명단은 아래에 제시된 서울대 민통련 조직위원장 황건의 증언과 다소 차이가 있다.

> (당시)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했는데, 그러나 일부 위원회와 부서, 연구회는 편성도 되기 전에 5.16을 맞았고 또 그나마 모든 기록을 5.16 직후에 파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대로라면 대의원회 의장 ○○○(후에 유근

126) <서울대 민통련 명단>.

일), 중앙위원회 의장 윤식(후에 유근일), 조직위원장 황건, 총무부장 ○○○, 재정부장 정정홍, 공보부장 이수정(후에 이영일), 동원부장 심재택씨 등이었습니다. 또 중앙위원으로는 유세희, 서정복, 하일민, 박종열, 박한수, 김정강, 정정홍, 이익환, 김구, 주섭일, 김석조, 이재후, 안동일, 이대근, 이우재씨가 선출됐습니다.[127]

일단 <서울대 민통련 명단>에는 재정부장 김현주, 동원부장이 조창구로 되어 있으나 황건은 이를 각각 정정홍, 심재택으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황건이 언급한 중앙위원의 명단 중 서정복, 하일민, 박종열, 박한수, 김정강, 정정홍, 이익환, 김구, 주섭일, 이재후, 안동일 등이 <서울대 민통련 명단>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황건 본인도 전제했듯이 그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대 민통련 명단>이 작성된 이후 중앙위원이나 부장 중 일부가 실제로 황건의 기억처럼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황건이 언급한 사람들 중 하일민, 김정강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민통련 명단>에도 대의원으로 이름이 나오는 만큼 이 두 기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일민과 김정강의 경우도 다른 기록들을 통해 그들이 민통련에서 활동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신진회나 사회법학회 회원이라고 해서 모두 서울대 민통련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회법학회의 경우 황건, 심재택 등은 적극적으로 서울대 민통련에 참여하여 간부직까지 맡았으나, 좀 더 온건하고 보수적이었던 다수의 사회법학회 회원들은 서울대 민통련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다.[128] 이처럼 같은 이념서클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중요한 지점에서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사회법학회가 '학회'라는 틀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127) 李根成, 1990 앞 글, 222쪽. 참고로 위 인용문에 나오는 ○○○ 표시는 원문 그대로 따랐다.

128) 權榮基, 1984 앞 글, 261쪽.

당시 유신 이전까지 이념서클 전반의 이념적 지향이 비교적 느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점은 서울대 민통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출범 당시 서울대 민통련의 규모는 매우 컸다. 1960년 11월 1일 서울대 민통련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황건은 발기인 264명을 포함 총 420명이라고 기억했고,[129] 당시 언론에서도 약 3백여 명으로 추산했다.[130] 또한 11월 18일의 서울대 민통련 결성식에도 ≪大學新聞≫ 추산 약 250명[131], ≪東亞日報≫ 추산 6백여 명[132]의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그러나 서울대 민통련에 참여한 이들의 조직적 결합 정도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 민통련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했고, 남북학생회담 추진에도 관여한 조동일[133]은 자신이 서울대 민통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활동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 구술자(조동일): 민통련도 이제, 그 민통련을 제일 주동을 누가 했나 하면 윤식이 했어요. 4.19를 주동한 윤식이 민통련에 참, 주동을 하고, 의장을 해서, 윤식이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하는 게 가장 맞아요.
>
> 면담자: 그러니까 이제 윤식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의 동의 받지 않고 그냥 거기다 넣었다.
>
> 구술자: 예. 그래서 대의원 명단을 어느 날 게시판에 게시했는데, 조동일을 맨 위에 썼어요. 대의원 명단을... 사실 그건 도용당

129) 李根成, 1990 앞 글, 221쪽.

130) <(政界余白) 서울大의 統一聯盟> ≪京鄕新聞≫ 1960년 11월 2일, 조간1면.

131) <'서울大 民統聯' 결성> ≪大學新聞≫ 1960년 11월 21일, 1면.

132) <學生會 산하 硏究機關으로> ≪東亞日報≫ 1960년 11월 19일, 석간3면.

133) 김지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61년 5월로 예정된 남북학생회담을 앞두고 조동일이 "판문점 학생회담에 민족예술과 민족미학 분야에서 자기와 함께 나를 남한 학생대표로 선정, 밀어붙이고 지도부가 이 안을 승인"했다고 기술했다(김지하, 2008 ≪흰 그늘의 길-김지하 회고록 1≫ 학고재, 415쪽). 조동일도 구술을 통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지하의 회고록 내용이 맞을 거라고 확인해 줬다(<조동일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9일, 면담자: 오제연)).

한 거예요. 이름을 도용당한 건데. 그렇다고 그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았고, 모임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면담자: 모임에는 거의 참여 안하셨나요? 그러면 윤식 선생님은 왜 선생님 이름을...

구술자: 친하게 지냈고. 4.19 때도 그런 정도로 서로 관여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의례히 동의를 해 주리라 생각하고... (중략)... 이렇게 했고,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모임에 딱 한 번 참가했어요. 모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남북학생회담을 한다, 그래서 5.16 후에 잡혀 들어가서 동대문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는데, "너 무슨 활동을 했느냐?" "아 남북학생회담 제의하는 그 회담에 참여를 했다" 더 묻지도 않고 A급으로 분류되어 가기고 오랫동안 유치장에 있었어요.

면담자: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민통련의 다른 활동에는 참여 안 하셨다는 거죠?

구술자: 참여 안했어요.[134]

조동일의 구술을 통해 보았을 때, 당시 서울대 민통련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일운동의 대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조직에 결합하는 강도나 구체적인 활동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민통련이 규모는 컸지만 조직의 결속력은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남북학생회담이 추진되고 각 대학 민통련이 통합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3) 남북학생회담 제안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1960년 11월 18일 서울대 민통련이 결성되었지만, 겨울방학이 곧바

134) <조동일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9일, 면담자: 오제연).

로 이어진 관계로 본격적인 활동을 즉각 전개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서울대 민통련 핵심멤버들은 겨울방학에도 서울에 남아 정세분석과 토론, 조직 확장, 다른 대학과의 연락과 제휴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처가 있는 간부의 집에 합숙하면서 하숙비를 전액 갹출, 활동비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조달했다. 일부 간부들은 새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회비로 납부하기도 했다. 또한 신진회(후진국문제연구회), 신조회(사회법학회) 출신 선배들을 비롯한 언론계, 학계 인사들의 찬조금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대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민족통일연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름은 약간 다르더라도 통일운동의 지향을 분명히 한 조직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60년 11월에 경희대에서 민족통일문제연구회(회장 이수병)가 결성된 것을 비롯, 12월까지 건국대(노원태), 고려대, 국학대(곽태영),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김승균), 중앙대, 한국외대(연현배), 항공대(이상익) 등에서 통일운동 조직이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가 구성되었다. 또한 지방에서도 부산대(손병선), 수산대(나택균), 경북대(기세환), 대구대(정만진), 전남대(김시현), 조선대 등에서 통일운동 조직이 추진되었다.[135] 이들은 조직의 정확한 명칭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민통련'으로 지칭되었다.

겨울방학 동안 급속히 조직을 확대시킨 각 대학 민통련은 1961년 2월과 3월 연이어 발생한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과 '2대악법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미경제협정'은 미국이 한국에게 공급하는 원조물자에 대해 미국이 임의로 원조계획을 중단하고 또 그 원조의 사용에 대해 감독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한국이 정부예산의 절반 이상을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협정은 곧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혁신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으며, 한창 통일과 민족주의의 열기를 드높이

135) 李根成, 1990 앞 글, 222~223쪽.

고 있던 학생들도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1961년 2월 12일 서울대 민통련 등 각 대학 조직들이 연합하여 '한미경제협정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한미경제협정반대 투쟁위원회'에는 서울대 민통련, (가칭) 고대 민족전선 발기준비위원회, 항공대 민통련, 건국대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 성균관대 민족통일연맹 발기준비위원회, 외국어대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 단국대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 민족통일문제연구소, 경희대 민족통일문제연구회, 서울대 국민계몽대, 전국학생조국통일추진회가 참여하였다.[136]

'한미경제협정반대 투쟁위원회'는 2월 14일 낙원극장 앞에서 약 100여 명이 모여 성토대회를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은 "오늘 우리 조국은 아직도 외세에 의하여 분할지배 되고 있으며 갖은 굴욕과 참극을 강요당하여" 왔다고 규정하고, "민족의 분할을 영구화하고 조국의 주권을 굴욕적으로 침해하는 한미경제협정"은 을사조약보다도 더 가혹한 예속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137]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한국을 분단하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식민지처럼 지배함으로써 전쟁과 빈곤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반외세 민족혁명론의 관점을 보여주었다.[138]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한미경제협정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종속적 원조경제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운동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139]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 역시 2월 14일 집회와 2월 21일 명동성당 앞에서 가진 성토대회를 제외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140] 결국 한

136) <(광고) 呼訴文> ≪民族日報≫ 1961년 2월 15일, 3면.

137) <(광고) 呼訴文> ≪民族日報≫ 1961년 2월 15일, 3면.

138) 서중석, 1991 앞 논문, 134~135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320쪽.

139) 서울대 민통련 중앙위원회 의장 윤식 조차 "일반의 무관심 무반응에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정도 이상. 민족의식이 박약합니다."하면서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의 전망을 비관하였다(<一般의 無關心에 놀랐다, 國會議員 個別 訪問할 터> ≪大學新聞≫ 1961년 2월 20일, 1면).

미경제협정은 1961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동의로 비준되었다.

반면 3월부터 시작된 '2대악법 반대운동'은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2대악법'이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일컫는 것으로서,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과 같은 학생들과 민중들의 저항에 위기의식을 느낀 장면 정권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었다. 물론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즉각 이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면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난하고 나섰다. 학생들 역시, "2대악법이 통과되면 국토통일 영 못 본다"라는 구호와 함께 민통련이 중심이 되어 1961년 3월 16일 17개 학생 단체가 참여한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에는 전한국학생총연맹, 서울대 민통련, 고려대 민족통일전선, 성균관대 민족통일전선, 전국학생자립경제추진회, 전국학생혁신연맹, 항공대 민통련, 계랑단, 건국대 민족통일전선, 피양민학살유족회 중앙학생위원회, 단국대 민통련, 외국어대 민족통일전선, 민주학생통일연맹, 민족통일연구소, 동국대 민통련, 중앙대 민통련, 전국근로고학생총연맹 등이 참여했다.[141]

3월 18일 대구에서 2대악법 제정에 반대하는 약 1만 명이 모여 시위를 전개한 이후 시위는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3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반민주악법반대성토 대강연회'는 1만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2대 악법은 물론 국가보안법 철폐할 것, 민족 통일을 방해하는 장면 내각은 총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연회를 마친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이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 "배가고파 못살겠다" 등의 플래카드와 횃불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142] 경찰은 이날 시위에서 윤식, 이창홍 등 민통련 학생들을 검거하여 구속한 후,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140) <"經濟的 隷屬 反對"-反經協全國大學生鬪委 聲討大會서 聲明> ≪民族日報≫ 1961년 2월 22일, 1면.

141) <(광고) 聲明書> ≪民族日報≫ 1961년 3월 20일, 3면.

1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329~330쪽.

가 과격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간부 27명 중 위원장 노정훈을 비롯하여 하일민, 황건, 김정강 등 10명을 체포하였다.[143]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경찰의 강력한 탄압 이외에도, 학생들이 혁신계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유언비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3월 23일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위원장 노정훈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탄압 일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동정권은 본 투위의 대표 노정훈 동지와 통일사회당의 고정훈 선생을 고의로 신문지상에 클로즈업시킴으로써 우리 투위를 혁신제당의 사주를 약간이나마 받은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다. 본 학생투위는 악법반대의 전 민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민족적 양심에서 결성되고 그에 따라 공투위(혁신계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공동투쟁위원회-필자 주)와의 공동투쟁 전열에 참여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144] 4월혁명 직후부터 맹위를 떨친 "학생들은 순수하다"는 인식은 이 운동에서도 강박증처럼 운동 주체들을 계속 따라다녔다. 그만큼 2대악법반대운동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각 지방의 2대악법반대운동은 4월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었다. 특히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대도시지역의 시위 규모가 컸는데, 여기에는 지역 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 거센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권은 4월 국회를 연장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나아가 이른바 '비둘기작전'으로 알려진 군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군을 동원해서라도 반대시위를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인 신민당마저 여론 악화를 이유로 2대법 제정과 관련한 여당과의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자, 결국 장면 정권은 두 법안의 상정을 포기하였다. 2대악법

143) <惡法反對 學生鬪委 幹部 27名 全員拘束?> ≪民族日報≫ 1961년 3월 27일, 3면.

144) <(광고) 성명서> ≪民族日報≫ 1961년 3월 25일, 2면.

제정이 무산된 것이다.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과 2대악법 반대운동에 다양한 학생 조직이 참여하였지만 중심은 각 대학 민통련이었다. 투쟁 과정에서 민통련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투쟁위원회'를 통한 힘의 결집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민통련의 조직적 역량은 크게 강화되었다.[145] 여기에 더하여 1961년 4월 12일 유엔에서는 유엔주재 미국대사 스티븐슨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도전에 직면하여 북한이 유엔의 자격과 권한을 인정하면 남한과 북한을 모두 유엔에 초청하자고 제안한 소위 '스티븐슨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통일 논의에 큰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민통련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나설 수 있었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대의원회에서는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들은 통일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통일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할 남북학생회담, 남북학생기자 교류, 학술토론대회, 예술학문창작의 교류, 체육대회 개최 등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민통련은 현실적 조건과 북괴정권의 성격을 망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는 이어 5월 5일에 열린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하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국민대, 국학대, 단국대, 대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외국어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청구대, 항공대 등 총 18개 대학이 참여한 '민통전학련'은 몇 달 전 '투쟁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한 명실상부한 학생운동 연대체였다.[146]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윤식, 재정위원장에 노

---

145)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 민통련이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과 '2대악법반대운동'을 전개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참조.

146) 민통전학련에 참여한 대학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고려대가 빠져있다. 앞서 조직된 2개의 '투쟁위원회'에는 각각 '(가칭) 고대 민족전선 발기준비위원회'와 '고려대 민족통일전선'이 참여하였다. 민통전학련에 고려대가 빠진 이유에 대해 ≪고려대학교

원태, 공보위원장에 이영일, 연락위원장에 김승균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서울대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학생 및 당국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147] 그리고 남북학생회담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5월 내 판문점 개최' 등을 제시했다.

조직적인 면에서 봤을 때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서울대의 몇몇 이념서클이 힘을 모아 대학 전체 수준의 연대조직을 만들고, 이후 각 대학에 비슷한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들 조직이 힘을 합쳐 결국 전국 단위의 학생운동 연대체로 발전했다. 전형적인 '상향식 조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조직적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했다. 둘째, '상향식 조직 구성'에도 불구하고 조직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 1960년 11월 서울대 민통련이 만들어지고 불과 6개월만에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빠른 조직화는 그만큼 4월혁명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조직화 과정에서 충분한 내부 논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셋째, 가장 기초적인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나 기존의 다른 서클들을 배제하고 각 대학 민통련 위주로만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는 당시 학생회나 다른 서클들이 운동 역량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민통전학련의 조직적 폭이 협소해질 위험이 있었다.[148] 한마디로 민통전학련은 단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

학생운동사≫는 고려대 민통련은 이미 1961년 3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활동력을 갖지 못해 민통전학련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대 민족전선'이 민통련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전국대학조국통일민족전선'(사회대중당/민자통 관련 학생 연합체)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a)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59~160쪽). 물론 이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려대가 민통전학련에 참여하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47) 權榮基, 1984 앞 글, 262쪽.

148) 민통련의 통일운동이 대학생 일반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약점을 갖게 되었다.

민통전학련의 조직적 약점은 남북학생회담 제안 이후 민통련 내부의 균열, 구체적으로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분열로 이어졌다. 균열의 원인은 층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균열 지점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였다. 민통련 내의 온건파와 강경파는 모두 '민족주의'를 지향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이어진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을 견지한 온건파 그룹은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앞세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남한의 이승만 독재를 '백색독재'라고 비판하듯 북한의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도 '적색독재'라고 똑같이 비판했다. 반면 강경파 그룹은 온건파 보다 이념적으로 더 왼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공공연하게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했던 김정강처럼, 공산주의는 물론 북한 김일성 체제에 거부감이 적었던 인물들을 강경파

있다. 황건의 기억에 따르면 서울대 민통련은 4월 15일 학우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론조사의 집계 결과는 5.16 후 파기되어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민통련의 운동방향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찬동을 입증한 것이었다고 한다(李根成, 1990 앞 글, 224쪽). 그런데 1960년 5월 5일자 ≪民國日報≫에는 서울대 민통련이 1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황건이 언급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를 보면 통일 후 국가형태에 대해 '통일 총선거에 맡긴다'가 65%, '중립국가'가 30%, '반공국가'가 5%였다. 통일 후의 국가형태를 전적으로 총선거에 맡기자는 주장은 남북협상론자들이 중립화통일론자들을 비판하면서 했던 주된 논리였다. 때문에 당시 민국일보도 학생들의 논리가 대체로 '남북협상 → 통일협의체 구성 → 총선 → 총선결과에 따라서 국가형태를 일임한다'는 식으로 기울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홍석률, 2001 앞 책, 140쪽).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봤을 때 분명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던 민통련의 입장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통련이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기 직전인 1961년 4월 연세대 4학년 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을 지지한 학생은 22.4%에 불과했고, 반면 유엔감시하 남북총선과 대한민국 주권하 총선을 지지한 학생이 각각 43.7%와 18.8%나 되었다. 남북통일의 시기에 있어서도 52.0%가 선건설 후통일을 지지한 반면 34.4%만이 선통일 후건설을 지지하였다(<現實을 보는 大學生의 눈> ≪연세춘추≫ 1961년 4월 17일, 7면). 물론 각 여론조사의 학교별 학년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었지만,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분명히 드러내기에는 당시 한국사회가 여전히 사상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또한 곧바로 발생하는 쿠데타로 인해 사상과 이념 투쟁을 버릴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었다.

두 번째 균열 지점은 통일의 방법과 지향을 둘러싼 차이였다. 이 차이는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대회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면서 채택한 <결의문>과 이틀 뒤인 5월 5일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이 두 문서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두 個의 祖國으로 現在 分裂에까지 이르는 諸事件과 諸事實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自主獨立과 人間的인 基本權과 眞正한 意味의 自由가 確保되고 現在의 分斷狀態에서 統一에의 모든 方法을 採擇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民族의 判斷과 勇氣에 달려있다. 南韓은 美國과 同盟關係를 맺고 北韓은 蘇聯, 中共 等과 同盟關係를 維持하면서 南北은 各其 同盟國의 巨大한 軍事經濟援助 下에 形式上의 前後復舊를 어느 程度 完成해 놓았지만 南北間의 對立은 美蘇의 그것처럼 緩和 解消되기는커녕 分斷된 社會體制를 强化하고, 軍事力을 강화하여, 雙方이 平和統一을 渴望하는듯 하면서 事實은 敵對意識과 分裂政策을 强化하여 왔다... (중략)... 우리들은 强大國의 目的에 대한 手段이 아니라 우리들 自身의 目的이어야 한다. 그들의 目的이 侵略이든 集團防衛든 援助이든 搾取이든 간에 그것은 그들의 目的이지 우리들의 目的일 수는 없다.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精神과 흐루시초프의 愛嬌로만이 우리가 잘 살게 되리라는 이 虛妄한 迷信이 어디서 緣由되었든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南北의 내 民族은 憎惡할만한 서로의 敵이 아니라 理解와 協調와 同情을 아끼지 않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149]

149) <決議文-서울大學 '民族統一聯盟' 代議員 大會> ≪民族日報≫ 1961년 5월 5일, 2면.

廣大한 아세아 아프리카 中南美의 大部分의 人民들은 이미 植民主義와 軍事基地的 예속體制를 拒否하고 國內의 매판관료세력을 打倒하여 民族自主의 獨立路線 위에 經濟的 번영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그들의 단결된 國際的 세력은 유엔에 있어서의 發言權의 增大하여 戰爭勢力을 壓倒하고 있다... (중략)... 本 準備大會에 참석한 모든 代表들은 全國의 學生同志들을 代身하여 '알제리아' '콩고' '큐바' '라오스' 및 여타의 亞阿中南美에 있어서의 民族解放鬪爭을 熱烈히 성원하는 바이다.

李朝와 日帝統治로부터의 遺産인 社會構造의 植民地的 半植民地的 半封建性의 要素는 八.一五 解放 後 政府樹立 以來 今日에 이르러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社會相이 東西冷戰의 激流 속에 함입되어감에 따라 여기에 軍事基地的 예속성이 부가되고 非合理的인 원조정책이 加重되어 더욱더 買辦性과 예속性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下部構造를 大衆수탈의 道具로 使用하면서 反民族的 事大主義者 買辦관료들은 家父長的 專制政治를 延長하여왔다... (중략)... 四月革命을 계기로 하여 民族·大衆勢力은 매판관료세력을, 統一세력은 反統一 세력을 압도하게 되었으며 平和세력은 전쟁세력을 압도하게 되었다. 人間의 基本權을 爭取하기 위하여 파쇼的 테러統治를 打倒한 이 땅의 大衆勢力은 다시 目前의 貧困을 탈피하기 위하여 統一을 갈망하게 되었고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제는 反統一勢力으로서의 外勢依存的 매판세력의 타도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인 것이다.[150]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대회의 <결의문>은 기본적으로 非美非蘇의 기조를 담고 있다. 냉전체제의 진영 논리를 탈각한 이러한 비미비소의 논리는 이 <결의문> 이외에도 당시 학생들의 발언 속에서 쉽게 발견할

150) <共同宣言文-民族統一全國學生聯盟 結成準備大會> ≪民族日報≫ 1961년 5월 7일, 2면.

수 있다.

> 美蘇가 서로 제국주의라고 헐뜯고 남북한이 서로 괴뢰라고 욕지거리다. 아무리 우기더라도 서로 불리우는 이름이 그러하니 美蘇가 다같이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남북이 괴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두 괴뢰는 두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쩔쩔매다가 어느 틈에 만신창이가 되어 고꾸라질지 아무도 모른다.[151]

> 한마디로 北韓의 金日成政權이 民族을 떠난 蘇聯의 傀儡라면 南韓의 保守政客은 自由民主主義에 中毒된 美國的 盲信者들이 아니고 무엇이냐![152]

위의 인용문처럼 냉전체제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미소와 남북 모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전부터 지속돼 온 친미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상대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153] 4월혁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이 고조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탈냉전 논리의 확산 덕분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미비소의 탈냉전 논리는 비동맹 중립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대회 <결의문>은 중립화통일론에 입각한 것처럼 보인다.

---

151) 尹鍾千(중앙대 학생), <主體性과 民族意識> ≪中大新聞≫ 1960년 11월 24일, 3면.

152) 朴贊世(고려대 학생), <自由民主主義냐 '패시즘'이냐> ≪高大新聞≫ 1961년 5월 6일, 1면.

153) '외세'를 소련 혹은 국제공산주의세력으로 한정하는 '반외세' 주장도 있었다. 이는 소련의 제3세계 정책을 국제주의, 제국주의로 비판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북한의 동포를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냉전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은 해방 직후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1950년대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강조되었다. 반공주의에 입각한 반외세 담론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결의문>에는 '중립'이란 용어가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민통전학련의 <공동선언문>은 제3세계 민족해방을 지지하면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민족혁명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립화통일론과는 구분되는 남북협상론의 통일방안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방안 중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의 차이는 당시 혁신계 정당들의 통일론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29총선에서 참패한 혁신계는 이후 이합집산을 거쳐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 등 4개의 정당으로 재편되었다. 가장 규모가 컸던 통일사회당은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했다. 중립화통일론은 한반도 영세중립화를 위한 국제적 타협을 추구하고, 북은 보다 민족적인 사회주의로 변화하고, 남은 '민주사회주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양 체제를 수렴한다는 점진적 통일을 상정한 것이었다. 이들의 입장은 한국 통일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남북협상론에는 명확히 반대했다. 반면 혁신정당 중 가장 급진적인 성향의 정당은 사회당이었다. 다른 혁신정당 간부들이 대부분 해방 직후 우익정당 또는 중도우익정당 출신인데 반하여, 이들은 해방 직후 중도좌익정당인 근로인민당계 세력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다른 혁신정당이 '민주사회주의'를 내세운 데 반하여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우고 대기업 국유화를 주장했다. 사회당은 통일 과정에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는 '남북협상론'을 주장했다. 반외세 남북협상론은 실질적으로 통일문제를 반제국주의, 반봉건, 반매판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혁명, 즉 사회변혁의 과제와 결합시켜 보았다. 그밖에 혁신당과 사회대중당은 통일사회당과 마찬가지로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했지만 그 맥락에 차이가 있었다. 통일사회당은 영세중립화를 선결조건으로 했고, 남북협상은 김일성의 퇴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혁신당과 사회대중당은 영세중립화를 주장했지만 이를 위한 국제적 협상과 남북협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154)]

혁신계 4개 정당의 통일방안과 이념적 지향은 통일사회당이 주장한 국제적 타협을 통한 중립화통일론이 가장 오른쪽에, 그리고 사회당의 반외세 민족혁명을 통한 남북협상론이 가장 왼쪽에 있었다. 양측은 1961년 초 통일운동 연합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 분열하여 각각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약칭 중통련)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약칭 민자통)를 별도로 조직하였다. 그러나 중통련이 통일사회당의 외곽단체에 머무른 반면, 민자통에는 사회당 이외에도 혁신당, 사회대중당은 물론 민족건양회, 민족민주청년동맹(약칭 민민청), 통일민주청년동맹(약칭 통민청) 등 진보적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였다.

5월 5일 민통전학련 <공동선언문>은 분명히 제3세계 민족혁명론에 입각한 남북협상론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의 <결의문>을 중립화통일론의 입장에 있다고 규정한다면 이 두 문서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대회의 <결의문>을 통일사회당 식의 중립화통일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애초에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통련 온건파로서 이 <결의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일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영일에 따르면 당시 자신들은 "강대국의 일방에 편들지 않고 우리끼리 살겠다는 통일 이후의 외교정책"으로 중립화를 지지했지, 그 자체를 통일의 방법으로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 역시 남북협상론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했다고 한다.[155] 따라서 '민통련 온건파=중립화통일론', '민통련 강경파=남북협상론'의 도식은 성립하기 힘들다. 양자 모두 외세에 비판적이었고,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을 추구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통련은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 민족혁명론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민통련 온건파는 비미비소와 평화공존을 중시하고 비동맹 중립화에도 관심이 많았

15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298~300쪽.

155)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9월 5일, 면담자: 오제연).

던 반면, 민통련 강경파는 제3세계 민족해방과 자주적 통일을 중시하고 중립화에는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양자의 차이는 '노선'의 차이라기보다 통일운동 과정에서 '정세에 대응하는 전술적 방식'의 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민통련의 균열에 통일의 방법과 지향의 차이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민통련 균열 지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학생회담 추진 의지와 혁신계와의 연대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남북학생회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애초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했던 민통련 온건파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 의장이자 온건파를 대표했던 윤식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5월 5일 전국학생민족통일연맹 준비위원회를 문리대 내 휴게실에서 소집했습니다. 그 때 그 모임을 학교에서는 못하게 했고 그 때문에 내가 학교와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에 또 하나의 결의문이 통과됐습니다. 그전에 결의문 초안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남북한 학생회담을 5월 이내로 강행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북한 학생회담이 안 되어도 그것을 제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 5월 이내로 강행한다는 내용을 없애라고 했었죠.
>
> 그런데 결국 "남북한 학생회담은 5월 이내로 하고 장소는 판문점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됐습니다. 장소야 괜찮지만 '5월 이내에 한다'는 부분이 급박함을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침 북한의 대남방송에서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 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한다. 장소와 일정은 당신들이 원하는 데로 하겠다"고 하면서 대남방송의 문안을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의장인 내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내통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했죠. 게다가 제2탄의 성명서가 나왔으니 5월 말쯤 판문점으로 강행할 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우리는 사회를 혼란시키려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난감해졌습니다.[156]

민통전학련 내 온건파는 남북학생회담을 하나의 상징적인 논점으로 설정했을 뿐 실제로 밀어붙일 의지가 별로 없었다. 반면 강경파는 남북학생회담을 보다 급박하게 몰아감으로써 통일운동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자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통련 학생들이 대학 밖에서 통일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던 민자통과 같은 혁신계 통일운동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윤식과 같이 온건파였던 이영일은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혁신계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래서 1961년 5월 13일 민자통 주최로 열린 '남북학생회담 환영집회'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영일의 구술은 다음과 같다.

> 민자통이라는게 좀 우리하고 순 순수성이 전연 다르구나.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느닫없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는 남북학생회담 지지촉구 국민대회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건 벌써 우리하고 완전히 가는 각도가 달라.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순수한 남북학생회담과는 거리가 멀더라고... (중략)... 전부 빨갱이 같고, 오히려 우리들이 걔들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회에 사람을 파견하지 말자. 그래서 내 방침에 의해서 유근일이 하고, 유근일이가, 나하고 유근일이가 안나갔어요. 그런데 인제 경희대학교 민족통일연맹에 이수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희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우리한테 등록이 안된 사람이야. 자기가 경희대학교 민족통일연맹 위원장 이수병이라고 발표했지, 거가 누가 있는지, 그 결성대회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경희대학교 민족통일연맹 위원장 자격으로 그 시민대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157]

156) <윤식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한모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앞 책, 184~185쪽).

157)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9월 5일, 면담자: 오제연).

그러나 온건파 윤식, 이영일과는 달리 강경파였던 김정강, 이수병 등은 혁신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5월 13일 민자통 집회에도 직접 참여를 했다. 이에 대해 김정강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저는 이수병씨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혁신계 단체들이 나왔습니다. 혁신계 단체들이라는 게 좌파단체였거든요. 혁신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 개의 통일전선체를 결성했는데, 이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즉 민자통입니다. 그래서 전국민통련에서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민자통 학생 대표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수병, 박영섭, 이 사람은 이수병씨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민자통에 파견된 겁니다... (중략)... 그때 이미 민통련하고 혁신계 당이나 사회단체들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청년단체로는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과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이 있고, 사회대중당 등 각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략)... 2대악법 반대투쟁부터 5.16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민자통 선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민통련에 다니고 하면서, 학교 출석은 최소로 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158]

김정강의 동기로서 함께 신진회와 민통련에 참여했던 배춘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

> 그 민통이라는 것도… 어디 가나 강온파가 있는데... (중략)... 민통련 생긴 후에 알게 된 게 박영섭, 박영섭이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의 서클이 있었어요. 암장이라 그러는데. 그 서클 사람들이... (중략)... 친구를 특별히 봐주, 평생 친구로 대하고, 그러고 일류대학을 나오고 알리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권력에 발탁이 안 해요, 안 당해요. 꾸준히 그 계통에서

158) <김정강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김지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앞 책, 42~44쪽).

살고 안 되면 쉬고. 그런 분의 영향이 나 개인적으로는 컸습니다. 암장 선배들이, 암장 선배들이.[159]

암장 그룹은 1955년 부산시내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이념서클로 이수병, 김금수, 박영섭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4월혁명 이후 민민청을 만드는데 앞장섰고 민자통의 핵심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민통련 강경파 학생들은 바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유지했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민통련 온건파인 이영일 역시 통민청의 김영광 등 자신들의 선배가 민통련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160] 단 자신들(민통련 온건파)은 이러한 혁신계 인사들이 "전부 굉장히 빨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리를 뒀다고 한다.[161]

---

159) <배춘실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10일, 면담자: 신동호).

160)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9월 5일, 면담자: 오제연).

161) 민통련과 민자통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민통련에 대한 민자통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통전학련은 정당 및 사회단체에 가입한 학생은 절대로 연맹에 가맹시킬 수 없음을 다짐하고, 기성 정치세력과의 모든 관련을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나 민통련의 핵심들인 이수병, 황건, 이영일, 심재택 등 상당수의 학생들이 민자통의 통일방안과 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랐다는 점에서 그같은 선언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식의 서술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지형, 2000 <4월민중항쟁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노선과 활동> ≪4.19와 남북관계≫ 민연, 135쪽).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민통련 내부의 분화와 동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통련을 단일한 입장으로 움직이는 조직처럼 전제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이 정치권과 공개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고자 한 것은 4월혁명 이후 학생운동이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내세우며 오랫동안 견지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앞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4월혁명 직후부터 학생들은 자신들의 '순수성'을 내세웠고, 통일운동 과정에서도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앞세워 보수정치권은 물론 혁신계와의 연계를 부정했다. 이러한 '순수성'에 대한 강박은 언론 등 기성사회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폭을 제한하기 위해 조장한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전유하였다. 셋째, 민통련과 민자통이 통일운동 과정에서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민자통이 민통련에 영향을 준 것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민통련 강경파는 민자통 등 혁신계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 지방의 경우 그 관계가 보다 긴밀했는데, 일례로 전남대 민통련의 경우 통민청 세력과 밀접한 연계를

1961년 5월 13일 민통전학련 결성준비위원회 명의로 발표되고 이후 각 신문의 광고를 통해 알려진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우리의 요구>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균열 속에서 동요하는 민통련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줬다.[162] 이 원칙은 사회적 반발을 의식하여 비정치적 교류임을 재강조하고, 회담 주체를 민통련에서 일반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이전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었다. 특히 학생회담 문제를 두고 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학생회담을 당면의 실천 과업으로 강행하기 보다는 상징성 있는 제안으로 남겨 두고, 5월 내에 학생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을 사실상 유보해 버리는 인상을 주었다.[163] 이 광고는 민통련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온건파가 주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윤식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혁신계의 동향 등이) 당혹스러워서 친구들과 함께 장면 총리실까지 찾아갔습니다. 아마 송원영씨가 비서였을 겁니다.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순수한 뜻에서 제의한 거다. '5월 이내로 한다'고 한 것도 우연히 절차상 차질이 생긴 것이므로 오해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해 주면 우리도 좀더 건설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민통전학련 결성대회를 할 건데 거기서 '남북한 학생회담 강행' 조항을 철회할 거다. 그런 복안도 있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지상에도 밝히려고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을 찾아갔죠. "우리가 이런 뜻의 큰 성명서를 내려고 하는데 학생들이라서 돈이 없다. 그러니 한국일보에서 실

맺고 있었다(오승용, 2010 <광주전남의 4월혁명>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351~355). 그러나 민통련 지도부는 혁신계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했던 온건파가 주도하고 있었다. 시간적으로 봐도 민통련의 활동이 민자통 보다 선행하는 면이 있고, 남북학생회담 제안 등 실천성도 민통련이 더 강하다. 따라서 민통련과 민자통의 관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2) <(광고)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우리의 요구> ≪民族日報≫ 1961년 5월 16일, 3면.

163) 홍석률, 2001 앞 책, 148~149쪽.

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중략)... 우리가 초안을 잡아오기로 하고 한국일보 앞면에 싣는 것으로 승낙을 얻어서 5월 13일에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중략)...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뇌를 했던 겁니다.[164]

민통련 온건파는 단순한 입장의 후퇴 수준을 넘어, 정부, 언론 등과 협의하여 사실상 남북학생회담 제안을 철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직적 균열이 심화된 상태에서 민통련 학생들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맞이했다. 그리고 민통전학련은 물론 각 대학 민통련은 모두 붕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통련에 적극 가담한 신진회와 같은 이념서클도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직이 없어졌어도 이념서클과 민통련 등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내에 남아 있었다. 이들은 이후 이념서클과 학생운동 조직을 재건하면서 학생운동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164) <윤식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한모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앞 책, 185~186쪽).

三. 5.16쿠데타와 한일회담반대운동

1. 군사정권 하 대학생들의 현실인식과 현실참여

1) 군사정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1961년 5월 16일 새벽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사회는 예상외로 평온했고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쿠데타 당일에는 모든 수업이 취소되었지만, 곧바로 다음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쿠데타 직후의 대학생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관망적 자세'였다. 쿠데타 직후에 나온 서울대와 고려대 학교신문의 1면 톱기사 제목은 각각 "쿠데타 성공, 학원은 평온. 當然感 속에 사태주시"와 "군사혁명에 학생들은 침묵·무표정. 사태 진전을 주시"였다.[1] 학생들의 관망 속에는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생 자신에 대한 자기반성이 투영되어 있었다. 즉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학생 스스로의 자기반성은 5.16쿠데타를 학생들이 즉각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게 했던 요인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었고 또 쿠데타 직후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대량 검거가 단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은 쿠데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 한국사회를 정화하고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결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5월 22일에는 2,100명의 공산주의 동조 혐의자와 함께, 도시 지역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4,200명의 깡패를 체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도시 엘리트의 상류생활을 비난하였고, 립스틱과 같은 수입사치품들을 수거해 태우기도 하였다. 440명의 뚜쟁이가 체포되고 4,411명의 매춘부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1) <쿠데타 成功, 學園은 平穩> ≪大學新聞≫ 1961년 5월 18일, 1면; <軍事革命에 學生들은 沈黙> ≪高大新聞≫ 1961년 5월 20일, 3면.

농어민의 모든 고리대 부채를 폐기하며 합법적인 이자율 내에서 정부가 그 빚의 지불을 보장한다고 선언하였다. 51명의 부정축재자를 구금하여 약 57억 5천만원을 국고에 환수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공무원 숙청을 단행하여 4만 1천명의 관리를 정실인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하였다.[2] 이러한 단호한 조치는 국민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는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상계≫는 "5.16 군사혁명으로 우리들이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자기탈피하여 일체의 舊惡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혁명정권은 지금 법질서의 존중, 강건한 생활기풍의 확립, 不良徒黨의 소탕, 부정축재자의 처리, 농어촌의 고리대정리, 국토건설사업 등에서 괄목할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정권에 지지를 보냈다.[3]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먼저 서울대 학생회가 5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원의 자유'를 전제로 쿠데타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 이제 祖國은 새로운 歷史의 轉換點에 섰다. 腐敗의 要素를 除去하고 새로운 革命政府가 登場했다. 우리는 먼저 革命課業을 完遂하며 累積된 舊惡을 除去하겠다는 公約에 同調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課題는 오로지 한 가지임을 認識한다. 이 革命政府와 어떻게 相互協助하여 祖國의 歷史를 이끌어 나아가는 가의 問題이다. 우리들은 그들의 公約에 그리고 현재까지의 움직임에 積極的인 支持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꼭 지켜야할 限界는 있다. 그것은 가장 民主的인 自由祖國의 維持와 아울러 學園의 自由化이다. 四·一九의 革命精神과 五·一六의 革命精神은 同一한 目標를 가져야 한다. 여기는 先後도 優劣도 있을 수 없다.[4]

---

2) 김정원, 1985 ≪分斷韓國史≫ 동녘, 279쪽.

3) <(卷頭言) 五·一六革命과 民族의 進路> ≪思想界≫ 1961년 6월, 34~35쪽.

서울대 학생회의 지지성명 이후 많은 학생들이 5·16쿠데타를 4월혁명의 계승으로 인정하고 4월혁명의 목표와 5·16쿠데타의 목표를 동일시하면서 군사정권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들의 쿠데타 지지분위기는 6월에 진행된 서울대 ≪대학신문≫의 학생대담에서 잘 드러난다. '5·16 혁명과 우리의 반성-혁명에 대한 최초의 발언'이라는 제목하에 벌어진 대담에서 참가 학생들은, 학생들이 5·16쿠데타 초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 이유로, "군사혁명의 필연성에 대한 막연한 느낌 / 각종집회의 금지와 행동의 구속 /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우들을 잡아들여간 것에 대한 공포감 / 그리고 군부에 대한 견제심리"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반공과 4·19 혁명의 완수를 위해 군사혁명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고, 경제·민족주의 확립이후 정권을 이양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에 과감하라", "善意의 독재는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있었다.[5]

그러나 1961년 말부터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9월 30일 민통련 관련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중형이 선고되자 선처를 바라고 있었던 학생들은 큰 충격에 받았다. 또한 4월혁명 직후 학생들이 건설한 학생회를 군사정권이 소위 '재건학생회'로 재편하려 했다. 재건학생회는 일반 학생회와는 달리 각급 학교 학생회에 전교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두며 지도위원장에 총학장과 총장이 취임토록 해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6] 사실상 학생회가 대학 학생과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자치활동의 범위도 상당히 위축되었다.[7] 이에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 당

4) <4·19와 5·16은 同一目標> ≪大學新聞≫ 1961년 5월 25일, 1면.

5) <(좌담) 5.16革命과 우리의 反省-革命에 對한 最初의 發言> ≪大學新聞≫ 1961년 6월 5일, 3면.

6) 呂永茂, <學生會냐, 護國團이냐> ≪新東亞≫ 1984년 12월, 244쪽.

7) 金哲洙, <組織的 學生團體와 그 現況-壓力團體로서의 學生組織> ≪世代≫ 1964년 6월, 131쪽.

시 학도호국단의 재판을 우려한다", "재건국민운동은 학생회 활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8)]

1962년 4·19 2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 학생회가 발표한 <4월혁명 제3선언문>을 보면 "평화를 동경하던 백의민족은 양대세력의 정치적 이해의 상품으로서 국제적으로 전시된 때부터 남북은 무연성을 주장하였고 민족의 비극은 잉태되었다"고 하여 민족 모순의 근원을 외세에 의한 분단에서 찾고 있으나, 쿠데타와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9)] 1961년 5월 말 쿠데타 지지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침묵 속에는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었다.

1962년 4월혁명 2주년 기념으로 ≪연세춘추≫에서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표2>)는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인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표2>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질문	답변	응답자(명)	비율(%)
4·19가 5·16 발발에 끼친 영향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127	54.7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36	15.5
	전혀 별개의 성질이다	49	21.2
	모르겠다/무반응	20	8.6
군사정부 하에서 4·19의 의미	5·16이 4·19의 계승이므로 의의가 있다	41	17.7
	4·19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	140	60.4
	현재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35	15.1
	생각한일 없다/모르겠다/무반응	16	6.8
앞으로 수립될 민정의 전망	순수한 민정이 되리라 기대한다	56	24.1
	군사정부의 연장이 될 것이다	152	65.7
	관심없다/모르겠다	24	10.2

8) <(좌담) 學生會活動과 再建國民運動> ≪大學新聞≫ 1961년 10월 30일, 3면.

9) <서울대학교 4월혁명 제3선언문>(김삼웅 편저, 2001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민족 · 민주 · 민중 선언≫ 한국학술정보, 38~39쪽); 이해찬, 1985 <한국 학생운동의 발전과 민중지향> ≪韓國民族主義論 Ⅲ≫, 創作과 批評社, 394쪽.

5·16의 원인	국민전체의 요구였다	23	9.7
	정치 혼란이 초래한 결과였다	170	73.3
	세계사적 추세일 뿐이다	10	4.3
	의외의 일이었다	22	9.5
	모르겠다/무반응	7	3.2

출전: <통계상에 나타난 4.19의 어제와 오늘> ≪연세춘추≫ 1962년 4월 16일, 3면.

<표2>와 같이 많은 학생들은 5·16쿠데타에 4월혁명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서는 상호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5·16쿠데타는 정치 혼란의 산물일 뿐 국민적 요구나 세계사적 추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앞으로 수립될 민간정권은 군사정권의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순수한 민간정권의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962년 4월혁명 2주년 당시 한편으로는 학생들 사이에 쿠데타와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쿠데타에 대한 지지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4월혁명 2주년을 기념해서 ≪신사조≫에서 주최한 학생 좌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5.16혁명은 불가피했"고, 4월혁명 정신이 "5.16의 혁명정신에 연결되어 살아 있"으며 "5.16 혁명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경제적 정치적 자립>과 <자주성 확립>의 길로 매진하고 그러한 정신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내적 통제성, 즉 <신분상의 한계성>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개성미를 없앨 염려"가 있으며, "학원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10] 이를 통해 5.16

10) <(좌담) 그날의 喊聲을 回顧한다> ≪新思潮≫ 1962년 4월, 229~233쪽. ≪신사조≫는 1962~1963년 동안 ≪최고회의보≫와 함께 쿠데타 주체들의 입장을 가장 잘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4월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립'과 '자주'에 입각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라면서도, 군사정권에 의한 '통제'와 '간섭'을 경계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군사정권이 이후 주장하게 되는 '민족적 민주주의'가 학생들 사이에 일정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후자는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되었다.

학생들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학원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해 나갔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부터 국가주의 교육이념을 분명히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집약적으로 반영되었다.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제정, 공포되는 법령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것들이 주로 고등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었다. 요컨대 국가주의 교육이념에 기반한 군사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고등교육정책에서 핵심은 대학의 정비였다.[11]

군사정권은 대학을 자유나 자치의 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통제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군사정권이 스스로 밝힌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제정 취지에서 잘 드러난다.

> 行政權은 國民의 富를 創造하고 國家生活의 秩序를 維持하는 國家權能의 擔當機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社會的 힘을 强化시키기 爲하여 蜂起한 革命政權은 行政權을 通하여서만 그 目的을 達할 수 있는 것이고 革命政府의 行政權은 分明히 國家의 富와 힘을 强化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敵-共産主義, 淪落, 貧困 等-을 이겨 보려고 하는 國家作用의 執行隊에 該當한다. 그

대변하는 잡지였다. 참고로 이 좌담의 사회는 4월혁명 직후 민통련 대의원이었던 조동일이 맡았다(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 334쪽).

11) 5.16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정비책에 대해서는 최긍렬, 1989 <5.16군사정부의 고등교육통제에 관한 연구>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金正仁, 2012 <1960년대 근대화 정책과 대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참조.

러기 때문에 모든 理念과 制度를 確立 實踐하는 것은 行政을 通하여서 行하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行政의 組織과 그 作用方法이 먼저 刷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現代國家가 例外 없이 갖고 있는 尨大한 行政法規의 制定 및 改廢가 必至의 事業으로서 登場된다. 이것이 敎育에 關한 臨時 特例法을 제정하게 된 政權擔當者의 背景이 된다.[12]

행정력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행정만능의 사고가 군사정권의 대학정비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학정비안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군사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그러했듯이, 대학정비 역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했다. 군사정부는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시와 학사학위 국가고시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962년 10월 12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14대 대학 학생대표들은 공개적으로 학사고시 거부를 선언하면서 반대운동에 돌입했다.[13] 이에 군사정권은 열흘 후인 10월 22일 학생고시 거부 주동 학생 9명을 구속하여 강압적으로 이 반대운동을 저지하였다.[14] 그러나 결국 이 두 시험은 실시 2년만에 모두 폐지되고 말았다.[15] 쿠데타 이후 폐지되거나 격하되었던 각종 학교와 학과들도 해당 조직의 강력한 반발과 현실적인 필요성에 직면하여 1963년 말 민정이양을 앞두고 대부분 부활하였다. 덕분에 대학 정원도 불과 2년만에 쿠데타 전의 수준을 넘어서고 말았다.[16] 군사정부도 자신들의 대학정비 정책이 실패했음

12) 劉在奉·金康鉉·愼斗範, 1962 ≪(革命政府) 文敎法令解說≫ 法通社, 78쪽.
13) <學士考試 反對 결의> ≪京鄕新聞≫ 1962년 10월 13일, 7면.
14) <主動學生 九名을 拘束> ≪東亞日報≫ 1962년 10월 22일, 7면.
15) <다시 轉換點에서 서서-文敎政策은 어디로?> ≪東亞日報≫ 1963년 2월 7일, 3면.
16) <배움의 門은 넓어졌지만-大學生 增員에 敎育界 反映> ≪東亞日報≫ 1963년 12월 21일, 5면.

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만능의 일방적인 대학정비와 관련한 강압, 혼선, 무능 등을 경험하면서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지는 점점 약해졌다.

대학정비 뿐만 아니라 1962년 말에서 196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군사정권이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말았다. 경제개발계획 시행 첫 해인 1962년의 실질성장률은 목표치인 5.7%의 절반 정도인 2.6%에 머물렀으며, 국내저축률과 해외저축률 역시 계획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화개혁 역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만 야기했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면 1963년 초 박정희가 약속을 뒤집고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하여 정치적 파동이 일어나고, 4대의혹사건 같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소위 舊惡을 능가하는 新惡이 드러나자 군사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월혁명 이후 고양된 민족주의는, 이미 많은 한계를 보인 군사정권에 대해 학생들이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민정이양을 위한 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정희가 표방한 '민족적 민주주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군사정권은 5.16쿠데타와 동시에 반공을 國是의 제일로 내세우고, 그동안 통일운동을 주도해 오던 민통련 관련 학생들을 다수 체포하여 엄벌에 처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 역시 4월혁명으로 고양된 민족주의의 자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군사정권은 '5.16은 4.19'의 계승이며 자신들 역시 민족주의자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박정희의 이름으로 1962년 간행된 ≪우리민족의 나갈 길≫은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적 자의식을 강조하면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비약할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민족주의적 열정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17] 그런데 이 책은 박정희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전문

17) 홍석률, 2004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가들, 즉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집필한 책이었다. 박정희 등 5.16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세력은 '민족중흥', '국가재건' 등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필요한 여러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식인 혹은 관료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18] ≪우리민족의 나갈 길≫은 이러한 군부와 지식인들의 결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기본적으로 군부와 지식인들의 결합은 4.19항쟁 전후부터 한국 지식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제3세계 근대화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로스토우와 같은 미국의 '근대화론자'들은 일찍부터 제3세계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군부와 지식인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의 성격과 역할에 주목했다. 미국에게 있어서 제3세계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았다. 그것이 미국을 팽창주의적인 외세로 간주할 경우 공산주의의 또다른 표현에 불과했지만, 반대로 미국에 유리한 경제개발을 가능케 할 국민통합의 동력이 된다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다.[19] 후자의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민족주의를 매개로 군부와 지식인이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한 지식인들 역시 수입대체와 內資 동원을 통해 자립경제, 내포적 공업화를 지향한 군사정권의 초기 경제개발계획에 동의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자문단체인 '기획위원회'에 들어가 군정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으며, 중앙정보부의 '정책연구실'에도 일부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민정 이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도 지식인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통로였다.[20] 비록 미국의 통제로 인해 경제개발의 방향과 방법이 수

지식인≫ 선인, 191쪽.

18)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산업화와 근대화론의 대두와 지식인사회의 변동>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203~204쪽.

19)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172~173쪽.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정되고 군사정권 초기의 개혁이 '舊惡보다 더한 新惡'으로 귀결되면서 군부와 지식인의 결합력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식인들이 군사정권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민족의 나갈 길≫에서 박정희 혹은 군사정권과 손잡은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革命期間에 우리가 指向하는 民主主義는 西歐的인 民主主義가 아닌 우리의 社會的 政治的 現實에 알맞은 民主主義를 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民主主義가 다름 아닌 行政的 民主主義라고 할 수 있다.[21]

'행정적 민주주의'는 수카르노의 '敎導 民主主義'를 차용한 말이었다. 행정적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스스로 다스려나가는 힘을 길러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임시 정책으로 행정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쿠데타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하고 군정마저 민주주의로 포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22]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력을 앞세운 군사정권의 행정만능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1963년 민정이양을 위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행정적 민주주의'는 '민족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선거 기간 중 박정희와 김종필 등 군사정권 세력들이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이유는, 쿠데타의 원죄는 물론 군정기간 나타난 '新惡'이라고 불리는 실정으로 인해 그들이 대중적 지지를 확실히 획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23] 즉, 선거 때 자신들

366~368쪽.

21) 朴正熙, 1962 ≪우리民族의 나갈 길-社會再建의 理念≫ 東亞出版社, 229쪽.

22)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47쪽.

23) 반면 김경일은 군정기간 내내 지속된 박정희와 미국의 갈등 양상이 선거 기간에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김경일, 2009 <박정희 시기 민족주의와 미국-1960년대 전반기의 '민족적 민주주의'> ≪박정희시대 한미관계≫ 백산서당, 82~84쪽.

을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정확히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이자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황용주는, 자신이 아세아 아프리카 내셔널리즘과 미국 정치인의 연설에서 영감을 얻어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민족적 민주주의를 할 것을 박정희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24] 기존 연구에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반공주의 지식인 김범부가 군부에 이 용어를 진상하여 채택되었다고 하거나,[25] 1962년 ≪사상계≫ 5월호에 발표된 권윤혁의 <민족 민주주의-이념과 주도세력의 확립>이라는 글이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한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26]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해방 직후 백남운은 자신이 주창한 '연합성 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설명했고,[27]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양우정이 이승만의 시정방침에 나온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一民主義'를 설명하였다.[28] 5.16쿠데타 직후인 1962년 1월에는 역시 일민주의 이데올로그 중 한 명이었던 안호상이 언론을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민족주체성' 확립과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을 공개건의한 적이 있었다.[29] 물론 이러한 용어의 동일함만을 근거로 연합성 신민주주의나 일민주의를 박정희 정권이 주장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계보 안에 집어넣

24) <황용주 구술>(구술일시: 1997년 11월 30일/12월 7일, 면담자: 김수자·정창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5~136쪽).

25) 박태순·김동춘, 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38쪽.

26) 황병주, 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72~273쪽.

27)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315쪽.

28)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255쪽.

29) 安浩相, <最高會議에 붙이는 公開建議 2> ≪京鄕新聞≫ 1962년 1월 3일, 1면.

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1950년대 이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해서 인식하는 것이 낯선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민족적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으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사상논쟁 때문이었다. 1963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간의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당시 언론은 5대 대통령 선거를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자유경제적이며 의회를 중시하는 반면 민족주의적 성격이 약한 이른바 '구세력'과, 교도 민주주의적이고 계획경제적이며 의회를 경시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른바 '신세력'의 사상적 대결이라고 평가했다.[30]

9월 23일 첫 번째 라디오 연설에서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자주와 자립이야말로 제3공화국의 集約的 目標인 것입니다... (중략)... 이번 選擧를 어떤 사람은 思想과 思想의 대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選擧도 사상과 사상을 달리하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더욱 폭 넓게 사상과 사상을 달리하는 世代의 대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民族的 理念을 망각한 가식의 自由民主主義 思想과 강력한 民族的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대결입니다.[31]

여기서 언급된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곧 '민족적 민주주의'로 불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윤보선은 박정희가 과거 여순사건에 관련했다며 그의 좌익 경력을 폭로함으로써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사상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9월 28일 주말을 맞이하여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사상논쟁은 절정에

---

30) <記號도 決定됐다, 불 뿜을 '한 票' 爭奪戰> ≪朝鮮日報≫ 1963년 9월 17일, 3면.

31) 박정희, <정견발표> 1963년 9월 23일(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1≫ 대한공론사, 519~520쪽).

다다랐다. 윤보선은 중립노선을 걷는 나세르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박정희의 사상을 중립주의로 규정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중립노선을 걸으면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정희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잔존하는 봉건성과 식민지근성 등 전근대적 요소를 일소해야 하고 민족의 자주의식을 확립한 바탕 위에서 외래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32] 29일 윤보선은 “박정희씨 같이 미국을 배격하면 소련과 연결하여 공산주의를 끌어넣느냐는 의심이 드니, 위험한 박씨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보다 노골적으로 박정희의 사상 문제를 건드렸다.

10월 5일 다시 주말 대규모 유세를 통해 사상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윤보선은 “공산당의 세계혁명은 후진지역에 있어서 민족·민주혁명이라는 탈을 쓰고 있다. 박씨는 ‘강력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이것과 다른 것을 말하라”고 박정희를 공격했다. 다른 야당 인사들도 “미국 원조를 더 받아야겠다는 우리를 사대주의로 보는 사상의 근저를 의심한다”, “박씨가 주장하는 민족의 자주, 자립은 우연히도 북괴의 주장과 같다” 등의 연설로 박정희를 반미민족혁명 노선을 가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다.[33] 이에 박정희는 “외국에 대하여 目不忍見의 자세를 취하는 이른바 ‘정신의 식민지화’의 상태 아래에서는 민족주의는 물론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 고작 가지고 있다는 입후보자의 포부와 경륜이 ‘인질이 되더라도 외국원조를 많이 타오겠다’는 類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식과 불건전한 對우방 의존태도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로 윤보선을 외세의존적인 사대주의자, 식민주의자로 공격했다.[34]

곧이어 치러진 11월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 당의장 김종필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그는 외유 중이던

32) <全國民 耳目 속에 불 뿜는 舌戰> ≪朝鮮日報≫ 1963년 9월 29일, 1면.

33) <말의 激流... 입의 砲火-民政黨 서울講演會 抄錄> ≪朝鮮日報≫ 1963년 10월 6일, 1면.

34) <(광고) 전진이냐? 후퇴냐?> ≪朝鮮日報≫ 1963년 10월 6일, 1면.

1963년 9월 20일 미국의 한 대학에서 행한 후진국 민족주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다년간에 걸쳐 이민족의 혹독한 착취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후진 국가들의 민족주의 운동에의 필연성”과 오늘날에도 “많은 후진국들이 소수의 강대국에 의하여 사실상 그 나라의 주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 이때 김종필은 이러한 현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내일을 지향하는 강렬한 민족 자주의식과 ‘내 나라’ 속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다는 투철한 자각을 견지하는 민족주의, 이러한 이성적인 민족주의 없이 후진민주국가의 생존과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35]

11월 초 김종필은 고려대와 서울대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적 민주주의를 설명했다. 먼저 11월 4일 고려대 강연에서 김종필은 “미국의 원조는 적절한 방법과 용도에만 주어지지 않았다”, “후진국의 공동과제인 근대화를 위해 민족주의는 절실히 요구되며 민족주의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강력한 리더쉽의 확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다음날 그는 서울대 문리대에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당시 새롭게 발족한 민족주의비교연구회(약칭 민비연) 학생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필은 공화당이 내거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외국자본의 지배를 벗어나 경제적 식민지 양상의 현실을 탈피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한다. ②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는 수구주의, 사대주의, 급진적 서구사상 및 자유방임적 자유의 퇴폐를 탈피한다. ③ 정서적인 면에서는 반미가 아닌 ‘양키즘’을 배격한다. 김종필은 미국의 원조 방식을 고쳐달라는 주장이 반미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공격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 한 번 한

35) 金鍾泌, 1965 <後進 民主國家의 ‘리더쉽’-1963년 9월 27일 미국 페어리 디킨스 대학에서의 연설문> ≪理念과 政策-共和論叢 2≫ 民主共和黨, 4~7쪽.

36) <論爭 民族主義-總學生會, 學術思想講演會 盛況> ≪高大新聞≫ 1963년 11월 9일, 3면.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경제적 자립을 강조했다.[37]

이후 김종필은 신문칼럼 연재를 통해 “한국을 근대화시키려면 근대화를 추진시킬 이념과 세력이 있어야 한다. 민족적 민주주의와 민족적 지도세력은 바로 이러한 근대화 작업을 추진시킬 이념과 세력”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우리 조국의 근대화와 이의 추진력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민족적 지도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족주의니 자주의식이니 하는 단어만 듣고도 혼비백산하여 이러한 주장을 빨갱이로 취급하려는 한국판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바로 낡은 세력들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세대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38]

1963년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박정희와 김종필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민족주의자로 호명했고 상대방을 민족이념이 결핍한 사대주의자로 비난했다. 처음엔 실내용 없는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던 민족적 민주주의는 사상논쟁이 가열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정치노선을 상징하는 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윤보선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립주의, 반미주의, 공산주의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족적 민주주의가 민족주의 담론으로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는 박정희가 아니라 윤보선이 만들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민족적 민주주의는 당시 4월혁명 이후 민족주의가 고양된 대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민족적 민주주의가 실내용과 이론체계 없는 실체가 모호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대통령 선거 내내 언론에는 박정희의 민족주의가 지식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실렸다. 특히 해방 후 대학을 나온 많은 젊은 學士들이

37) <韓民族의 主體性 確立하자-金鍾泌씨·서울大生 間의 政治討論 內容> ≪東亞日報≫ 1963년 11월 6일, 3면.

38) <韓國의 近代化와 새 指導勢力> 1~3 ≪朝鮮日報≫ 1963년 11월 8~10일, 각3면.

쿠데타 반대와 혁신정치 지지의 틈바구니에서 주저하다가 박정희 지지로 기운 경우가 많았다.[39] 다음의 좌담은 당시의 대학생들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 김승옥: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민정이양 형식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왔을 때 나는 박정희에게 투표했어요... (중략)... 민주적 세력들이 어쩐지 미국 원조물자 가지고 나눠먹고 사는 똘마니구나 싶은 느낌밖에 안 들었단 말예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촌티나는 박정희의 민족주의가 낫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박정희한테 표를 찍었어요.
>
> 염무웅: 박정희씨 자신이 사석에서는 놈자를 안 붙이고 미국사람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요. 꼭 미국놈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
> 임헌영: JP가 만든 휘황찬란한 단어 '민족적 민주주의' 때문에 아주 황홀해서... 김형도 박정희 찍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박정희를 찍으라고 저는 운동할 정도였어요.[40]

물론 개인별로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를 곧바로 일반화할 수 없겠지만, 민족적 민주주의가 그 정치적 동기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민족사회에 대한 현실적 처방으로서", 즉 "시대의 進運과 민중의 감각방향에 맞추려는 움직임으로서 주로 대학생, 지식인들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 동조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로 보인다.[41] 이는 비단 대학생,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공화당 강연에 별로 반응을 보

---

39) <10.15 決算-그 分析과 評價 (中)> ≪朝鮮日報≫ 1963년 10월 19일, 1면.

40) 최원식·임규찬 엮음, 2002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46~48쪽.

41) 林芳鉉, <'自主', '事大' 論爭의 底邊-이른바 民族的 民主主義 思想의 周邊> ≪思想界≫ 1963년 11월, 128쪽.

이지 않던 청중들이 미국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자 박수를 쳤다는 사실은, 민족적 민주주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42] 대통령 선거 직후 ≪고대신문≫에 실린 다음의 두 학생의 대화도 민족적 민주주의가 어떤 지점에서 효과를 거두었는지 잘 보여준다.

> "누구에게 찍긴? 野黨후보 찍어줬지. 與黨이 이길 줄이야 뻔히 알고 있었지만 너무 壓倒的으로 이기면 軍人양반들 코가 더 높아질테니 말하자면 '까불지 말아라' 하는 調로 牽制票를 찍어준 셈이야. 풀 죽은 野黨사람들께 격려도 되고..." "이 친구야 차라리 棄權을 하지, 그런 死票는 뭣하러 찍어. 난 선선히 與黨후보 찍어줬어. 中盤戰까지 작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人質' 얘기 있지? 그리고 '民主主義' 얘기. 施政이야 구체적으로 어찌 됐든 '民族'이란 구호가 내 氣分과 통했단 말이야..." (중략)... "그 美國 몰래 카나다에서 사들이겠다던 밀 얘긴 어찌 됐을까?" "허, 이 사람, 나중에야 어찌됐든 우선 기분이 그게 아니야. 對外的으로 '들어라 양키들아!'式으로 한마디 했으니 기분이 후련하구 또 오랜만에 '民族' 얘기가 났으니 어감부터가 기분에 맞구..."[43]

미국의 '인질'이 되어서라도 원조를 더 타오겠다는 윤보선의 발언은, 민족적 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외교적 자주성을 외치고 국가이익을 최전선에 앞장세워 과거 만성화 되었던 여러 가지 대외관계와 한국적 위치를 대담하게 뜯어고치겠다는 박정희를 더욱 돋보이게 해줬다.[44]

후진성 담론 역시 대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질 수 있

---

42) 南載熙, <朴政權의 公約과 '未知數' 民主主義> ≪思想界≫ 1963년 12월, 58쪽(김경일, 2009 앞 논문, 85쪽에서 재인용).

43) <(冷箭) 氣分的> ≪高大新聞≫ 1963년 11월 16일, 1면.

44) 趙世衡, <四·一九와 五·一六과 保守勢力의 再覇> ≪靑脈≫ 1965년 4월, 87쪽.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윤보선의 '인질' 발언은 대학축제 등에서 대학생들에 의해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서구적인 방식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후진국인 한국에는 선진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으며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연쇄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로 '주체성'이 강조되었고 둘째로 민주주의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다.

주체성을 앞세운 그들은 서구식 민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우리에게 적합한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찾고자 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있는 것은 각종 형용사가 붙은 민주주의뿐이다"[45],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할 생각을 버리고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46] 등의 주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조화를 추구했다. 아래의 글이 이를 잘 보여준다.

> 民主主義는 個人의 平等에 붙잡혀 全體에서 떠나기 쉽고 民族主義는 全體의 優位를 主張하기 위하여 個人을 소홀히 하는 때가 있다. 우리들은 民主主義의 '平等의 義'에 의하여 民族主義를 살리고, 民族主義의 '全體의 義'에 의하여 民主主義를 살려야 할 것이다.[47]

'민족적 민주주의'의 주장도 비슷했다. 1964년 말 민주공화당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우리는 이미 大韓民國의 樹立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政治的 基本秩序로서 自由民主主義를 選擇했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는 우

45) 許鉉, <自由民主主義와 來日의 韓國> ≪週刊成大≫ 1961년 4월 10일, 2면.
46) 金敬琢, <南北統一論>, ≪高大新報≫ 1960년 6월 18일, 2면.
47) <(隱語金言) 金基錫 著 '倫理全書'에서>, ≪檀大學報≫ 1961년 2월 21일, 2면.

리 民族의 政治的 形成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生存과 發展을 위한 最大의 方法이지 그 自體가 決코 目的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 있어서의 最終의 政治的 目的은 結局 우리 民族의 生存과 發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와의 結合이 不可避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民族의 生存과 發展을 위한 最良의 手段으로써 民主主義的 政治秩序가 要請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主張을 우리는 民族的 民主主義라고 한다.[48]

실제로 박정희는 집권 18년 내내 '주체성' 확립을 소리 높여 외쳤다. 또 집권 내내 민주주의 앞에 '행정적'이든 '민족적'이든 '한국적'이든 수식어를 붙였다. 주체성 확립과 '수식어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수식어 민주주의'는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어갔지만, 최소한 '민족적 민주주의'가 등장한 시점에서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지식인들의 생각과 통하는 지점이 많았다. 특히 그동안 '민주주의'에 새로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젊은 세대들은 '민족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에 참신한 기대를 가졌다.[49] 1962년 10월 전국 12개 대학 1,8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에 서구식 민주주의가 적합하다고 대답한 학생이 30%였던 반면, 적합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이 38%, 적합한 면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29%였다는 사실도 당시의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50]

또한 많은 대학생, 지식인들은 주체성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갈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다.[51] 심지어는 5.16쿠데

48) 韓泰淵, 1964 <韓國 民主主義의 方向> ≪理念과 政策-共和論叢 1≫ 民主共和黨, 5~6쪽.

49) 安秉煜, <混亂의 씨는 어디서 뿌려졌나, 민족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1-精神的 不毛와 '이즘'> ≪朝鮮日報≫ 1964년 5월 26일, 1면.

50) 洪承稷, 1963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亞細亞硏究≫ 11, 70쪽.

51) 申基珍, <民主主義와 後進國의 運命> ≪東大時報≫ 1961년 4월 24일, 2면; 姜秉

타 이전부터 '선의의 독재자'를 원했던 경우도 있다.[52] 비록 한국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자유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런 면에서 주체성을 강조하며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건 박정희는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역사가 잘 보여주듯 대학생들이 박정희와 민족적 민주주의에 걸었던 기대는 곧바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민족적 분노가 채우게 된다. 한마디로 5.16쿠데타 초기 군사정권과 대학생의 민족주의적 지향은 유사한 면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2) 축제를 통한 현실 풍자와 비판의 확산

5.16쿠데타로 대학생들의 현실참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군사정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현실참여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월혁명으로 고양된 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는 쉽게 꺾기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군사정권 하의 여러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축제와 같은 학내의 문화적 행사를 활성화하여 자신들의 에너지를 발산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축제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한 현실 풍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대학생 일반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성을 유도했다.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시기에도 이러한 문화적 수단을 통해 학생운동의 역량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몇몇 대학에서 시작된 축제는 1960년대가 되면

奎, <韓國的 民主主義의 反省> ≪中大新聞≫ 1961년 5월 4일, 2면; 崔相哲(동국대 학생), <참된 英雄은 없는가?> ≪東大新聞≫ 1963년 4월 12일, 4면.

52) 朴贊世(고려대 학생), <自由民主主義냐 '패시즘'이냐> ≪高大新聞≫ 1961년 5월 6일, 1면.

거의 모든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먼저 4월혁명 직후인 1960년 10월 서울대 상대에서 '홍릉제'라는 이름의 축제를 개최했다. 이틀에 걸쳐 카니발, 체육대회, 문학의 밤 등의 행사를 거행한 홍릉제는, 그러나 시작부터 큰 논란에 휩쓸렸다. 10월 30일 홍릉제 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31일 새벽 4시 학교 교정을 출발하여 횃불행진을 벌였다. 그런데 이 횃불행진 때 학생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불온구호'를 외쳤다는 경찰 보고가 나오고, 검찰총장이 이에 대한 조사를 천명했다.[53] 물론 곧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당시 학생들이 들었던 '붉은 깃발'은 홍릉제를 상징하는 깃발에 일부 적색이 들어 있던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조사 결과 불온 구호는 나온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횃불행진도 학생운동과 무관한 질서정연한 행진에 불과했다.[54]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당시 막 서울대 민통련을 발기했던 학생들은 홍릉제에 대한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장관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법무장관은 순수한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불순세력이 있을 우려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55]

1960년대 축제의 시작을 알린 홍릉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후 대학 축제가 갖게 되는 정치적 성격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축제 마지막 행사 후 학생들의 '횃불행진'이 벌어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축제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잠시 미뤄놓고 한 자리에 모여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행사였다. 이는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결집하여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축제 기간 동안 정치적 성격을 가진 집회나 행사가 자주 열렸고, 마지막 날에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 홍릉제의 '횃불행진'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

53) <不穩與否를 調査-檢察總長 談, 商大生 횃불데모에> ≪京鄕新聞≫ 1960년 11월 1일 석간3면.

54) <不穩事實 없었다-商大生 횃불行進 調査 結果> ≪東亞日報≫ 1960년 11월 2일, 석간3면.

55) <不純分子 便乘 憂慮-曺法務長官 談> ≪東亞日報≫ 1960년 11월 3일, 조간1면.

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4월혁명 이후 고조된 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 속에서 가능했다. 당시 정부가 횃불행진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해명 과정에서도 '불순세력' 운운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홍릉제 이후 1961년 4월에는 서울대 문리대에서 '4.19 1주년 축전 카니발'이 열렸다. 이 역시 당시 축제가 4월혁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축제의 확산은 5.16쿠데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1962년부터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에서 대규모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서울대의 경우도 문리대의 학림제와 공대의 불암제가 이 해부터 시작했다. 당시 각 대학은 축제의 목적을 "외면적으로는 아카데믹한 분위기를 이루고 내면적으로는 학문의 본질과 의미에 접할 한 계기를 이룩하고"(서울대 문리대)[56] "아카데미즘의 본질을 재인식하고 현실과 대학의 거리를 극한권 내에서 단축시킴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도와서 종합적인 단일체로서 고대의 면목을 대외에 선양하는데"(고려대) 두었다. 따라서 대체로 축제의 프로그램도 강연회, 토론회 등 학술 행사와 음악회, 전시회, 문학의 밤 등 예술 행사, 그리고 가장행렬, 장기자랑, 카니발 등 오락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1963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창경원(현 창경궁)에서 8천명의 서울대 학생은 물론 5천명의 이화여대 학생을 초청하여 포크댄스와 쌍쌍파티를 위주로 한 대규모 카니발을 별도로 열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대학 축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행사가 바로 현실 풍자를 통해 학생들의 공감과 각성을 이끌어 낸 고려대의 '역사상인물가상재판'과 연세대의 '가장행렬'이었다. 1963년 고려대 축제인 석탑축전의 한 행사로 '고대신문사'에 의해 열리기 시작한 '역사상인물가상재판'은 역사 혹은 문학 속의 인물은 물론 각종 사회현상을 의인화하여 법정에 세워, 이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는 일종의 연극이었다. 1963년의 첫 번째 행사 때 법정에 선 인물들은

56) <'學林祭' 개최> ≪東亞日報≫ 1962년 4월 22일, 석간4면.

아이히만, 놀부, 원자폭탄, 마릴린 몬로, 카셈(이라크의 군인 지도자)이었다. 이 자리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의 유태인 학살이 인류의 체질개선과 인구 조절을 위한 것인 만큼 '재건국민운동본부'로부터 표창장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고, '사기횡령, 부정축재' 죄로 기소된 놀부는 자신이 흥부가 자립경제대책을 세우길 바라는 뜻에서 일부러 도와주지 않은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 뜻을 받들어 자립경제를 촉구해야지. 外援에 의존 말고." 또 "그리고 제비 죽인 게 어쨌단 말야? 나는 그렇잖아도 제비박멸운동을 거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참인데... 그래서 대사관 앞으로 데모까지 할 방대한 복안도 세웠지."라는 식으로 군자정권은 물론 재야세력들도 함께 풍자하였다. 박정희와 유사하게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가 쫓겨난 카셈은 "내 묘비에는 혁명아 압둘 카셈. 혁명 바람에 신세 팍 조진 사나이라고 써 달라. 내가 살아 있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혁명을 말리겠소."라고 뼈 있는 일침을 가하면서도, "나보고 탄압정치를 했다구? 탄압정치의 흉내만 냈을 뿐이지. 탄압정치를 하는 체해서 민중이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교훈적인 정치를 한 것뿐이란 말야."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57]

1964년 행사 때는 이완용, 김선달, 햄릿, 킬러, 트위스트 등 5명이 법정에 섰다. 당구 큐를 휘휘 내저으며 나타난 김선달은 그 작대기를 높이 쳐들어보이며 "이건 말야, 민족적 빠찡꼬 주의라는 거야"라고 빈정거렸다. 그는 재판장에게 새로운 학설을 소개하겠다고 떠벌렸다. "민족적 빠찡꼬 주의, 민족적 닷도산 주의, 민족적 워커힐 주의, 민족적 사꾸라 주의, 민족적 YTP 주의, 민족적 대동강 주의 등. 이것이 본인이 새로 생각해 낸 사기학의 학설"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명백히 군사정권 기간에 문제가 되었던 4대의혹사건과 박정희가 1963년 대선 당시 표방했던 민족적 민주주의, 그리고 학원사찰의 대명사로 급부상한 YTP를 직접 겨냥한 정치 풍자였다.[58] 특히 당시가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

57) <아이히만, 놀부, 몬로, 카셈의 裁判> ≪京鄉新聞≫ 1963년 5월 7일, 5면.

58) 1960년대 전반기 박정희 정권이 벌인 학원사찰의 대명사로 알려진 YTP의 실상

이 막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그 정치적 의미는 매우 강했다. 풍자의 정치적 성격은 이완용에 대한 재판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완용은 “吾等은 玆에 我조선이 대일본제국의 속국임과 합방국임을 선언하노라.”고 하는 日製(?) 독립선언서를 외며 등장했다. 그의 어깨엔 게다 짝이 얹혀 있었다. 그는 “한일보호조약 때 미리 받은 정치자금으로 잠시 지옥에서 천당으로 외유를 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1년 전에 있었던 김종필의 외유를 꼬집은 얘기였다. 또한 이완용은 “적어도 정치인은 가식적 민족주의라든지 舊惡 일소 新惡 조성이라는 가장 참신한 정치적 신념과 꿈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역시 앞서 김선달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시니컬한 역설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 행사가 “사뭇 우리 현실의 허점을 찌르는 일종의 성토대회 같은 무드였다.”고 평했다.[59]

1965년의 행사 때는 재판관들이 법정의 이름을 ‘못다 푼 한을 散華하는 유구무언자의 발언대’로 명명하여 이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해에는 乙巳노인, 마키아벨리, 대원군, 자유부인, 달러 등이 기소를 당했다. 거지행색의 을사노인은 이완용과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청구권으로 8억 달러를 요구했다. 청구권 문제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였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을 권모술수의 챔피언으로 뻐기며 데모를 진압하는 오른팔이 되겠다고 자원했는데, 그의 데모진압법은 “우선 기동대를 동원하여 학생 놈의 XX들을 빨래처럼 마구 때리면 됩니다.”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강력한 악질적 파쇼 민주주의를 재건하여...” 운운했다. 이는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 당시 학생 시위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응을 빗대어 비판한 것이었다. 대원군은 “일본물 미국물, 바터(버터)이즘 다꾸왕이즘으로 체질 개선된” ‘요즘 아이’들을 나무라면서 신식민주의를 경계했고,

---

에 대해서는 金元基, <YTP(靑思會)> ≪新東亞≫ 1964년 10월호; 송철원, 2012 <YTP(청사회: 靑思會)> ≪기억과 전망≫ 26 참조.

59) <逆說과 諷刺와 詭辯 속에-高大에서 審判廷 마련> ≪京鄕新聞≫ 1964년 5월 5일, 5면.

‘엽전 학대죄와 의존경제 고무죄’로 기소된 달러는 자신이 후진국 마다 ‘달러 문화’를 이식했다고 우쭐거렸다.60)

이렇듯 ‘역사상인물가상재판’은 강력한 현실 풍자를 통해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고대 석탑축전에서 가장 인기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기성 언론까지 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건강하고 바람직한 축제 행사의 표본으로서 높이 평가했다.

연세대 축제에서 행해진 ‘가장행렬’도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물론 사회에 주목을 받았다. 1963년 축제 때 행해진 가장행렬에서는 학생들이 ‘장례식’을 거행했다. 관 속에 드러누운 시체는 ‘舊惡’ 公. 상여꾼들은 목소리도 구성지게 ‘구악’ 공의 행적을 주워섬겼다. 그밖에도 “아버지가 배울 때나 아들이 배울 때나 똑같은 대학교수의 노트”, “79년간 강의실에 쌓인 담배꽁초”, “허벅지까지 오르는 여대생의 스커트” 등이 장례의 대상이었다. 만장들 가운데는 서울대 학생으로서 군 입대 후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상사를 살해하고 처형당한 “최영오 일병을 쏜 소총”도 끼여 있었다.61) 이 행사 역시 정치는 물론 학생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익살과 풍자로 표출한 것이었다. 1964년 가장행렬에서도 학생들은 “박사실업자에게 직업을 달라!”, “5.16 대 1의 환율을 4.19 대 1로 인하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를 했는데, 그들의 구호 가운데는 “최루탄 살 돈 있으면 사람 입 풀칠하라!”는 민생고 타령이 있는가 하면 “불하만 하지 말고 사람 좀 살려라”는 애원도 있었다.62) 아마 실제 시위였던 경찰에 의해 곧 강경 진압을 당했겠지만 축제의 가장행렬이었기 때문에 모두 웃고 즐기는 가운데 학생들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특히 연세대의 가장행렬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현실 풍자

60) <담뿍 담은 ‘아이러니’-高大의 ‘歷史上人物 假想裁判’ 法廷 스냅> ≪京鄕新聞≫ 1965년 5월 5일, 5면.

61) <무악의 기슭에 베풀어진 5월의 향연> ≪연세춘추≫ 1963년 5월 13일, 3면.

62) <캠퍼스 누빈 5월의 熱風> ≪연세춘추≫ 1964년 5월 11일, 3면.

와 비판을 위해 '장례식'이라는 퍼포먼스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목되는 이유는 1964년 3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운동 때 다양한 문화적 퍼포먼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3월 24일에 서울대 학생들은 김종필을 상징하는 이완용 인형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가졌는데, 이후 시위에서 화형식은 흔히 등장하는 퍼포먼스가 되었다. 그리고 1964년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에 서울대,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학생 등 3천여 명이 모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은 불과 반년 전 선거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을 직접 겨냥했다. 대회장에는 "축(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고 쓴 만장이 펄럭이는 가운데, 건(巾)을 쓰고 죽장(竹杖)을 잡은 네 명의 학생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관을 메고 입장하였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반외세, 반봉건, 반매판의 민족·민주 정신을 분명히 하고 5·16쿠데타를 민족·민주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노골적인 대중탄압으로 규정했다. 또한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 조사(弔辭)'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통렬하게 풍자·비판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학생들은 관을 앞세우고 교문을 향해 나아갔고 이화동 삼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이날 시위는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낳았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은 학생들이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고 이에 대한 전면 부정과 도전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이 장례식은 그 어떠한 시위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을 크게 자극했다. 그만큼 상징성이 컸기 때문이다. 과연 학생운동은 어떻게 운동 과정에 이러한 문화적 퍼포먼스를 활용할 수 있었을까? 원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장례'라는 형식이 처음 이용된 것은 1960년 3.15부정선거 때였다. 3월 15일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자 즉시 민주당 전남도당은 광주에서 '哭 民主主義'라고 쓴 만장을 앞세우고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당시 '민주주의 장송데모'라고 불렀다.[63]

63) 四·一九革命負傷者會 光州全南支部, 湖南 四·一九 三十年史 編纂委員會, 1995 ≪

그러나 이 시위는 '장례식'이라고 하기에는 '哭'자를 붙인 만장을 앞세운 것 이외의 특별한 형식이 없었고, 무엇보다 같은날 마산과 달리 시민들이 제대로 시위에 결합하지 못해 그 파급력이 미약했다.

4월혁명 직후 '장례식'을 정치적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생들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계몽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례식'이라는 문화적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1960년 7월 6일 결성식을 가진 서울대 국민계몽대는 결성식을 마친 뒤, 과거의 낡고 썩은 정치세력의 再擡를 嚴戒하는 '故 反革命勢力之柩'라는 상징적인 유해를 앞세우고 무언의 장례시가행진을 하였다. 이 상징적인 棺에는 "비현실적 선동을 일삼는 혁명세력", "은둔위장으로 참여하는 무소속세력", "제1공화국의 아부자의 정치참여", "舊자유당 핵심분자의 정치참여", "과도정부의 미봉책" 등의 글발이 적혀 있었다.[64] 그런 의미에서 연세대 축제의 가장행렬에서 다시 등장한 '장례식' 퍼포먼스는 4월혁명 당시의 문화적 의례를 한일회담반대운동 당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으로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 가장행렬 직후인 1963년 10월에도 숙명여대 학생들이 교내체육대회(청파체육전)에서 소복을 입고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공산주의를 안 할 것을... 에헤야, 에헤야!" 하고 구성지게 悔心曲를 주워섬기며 '김일성 장례식'을 진행한 바 있다.[65] 비록 그 내용은 반공적인 것이었지만, 정치권력에 대한 장례식은 그 대상을 바꿔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곧이어 살펴볼 1963년 11월 서울대 문리대에서 개최된 <향토의식초혼굿>도 정치적 의미를 담은 문화행사로서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문화적 퍼포먼스를 이용한 학생운동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은 단순한 시위 이상으로

湖南 四·一九 三十年史≫ 四·一九革命負傷者會 光州·全南支部, 150~153쪽.

64) <反革命勢力을 警戒, '젊은 獅子'들 示威> ≪東亞日報≫ 1960년 7월 7일, 조간1면.

65) <(大學新聞街) 희한한 葬禮式과 데모> ≪京鄕新聞≫ 1963년 10월 17일, 5면.

강했다. 문화를 통한 정치적 자극은 상대방에게는 큰 충격을 주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논리나 주의주장보다도 그들을 학생운동의 대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배경이 되었다.[66]

3) 농촌운동과 한미행정협정 체결 촉구시위

앞서 언급했듯이 1961년 5.16쿠데타 직후 한동안 학생들의 현실참여는 군사정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촌운동'이었다. 학생들은 4월혁명에서 충족되지 못한 요구가 5.16쿠데타로 채워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후진성 극복을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농촌에서의 계몽운동, 봉사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다.

먼저 1961년 6월 3일에는 "생활혁명은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를 걸고 서울시내 15개 단과대학 대표가 모여 '대한민국 학도건설단' 설립을 추진하였다.[67] 비슷한 시기 고려대 학생들은 '학생자진근로반'을 결성

---

66) 축제 등에서 발현되는 정치적 풍자가 강한 대학문화를 1960년대 당시 누가 주도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축제가 '학생회' 주관으로 치러지지만 개별 행사들의 주체들은 제각기 다르다. 이념서클의 경우 주로 축제 때 '토론회'나 '강연회'를 개최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념서클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이념서클 학생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직접 문화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 풍자의 주체나 수준과는 별개로, 이미 톰슨이 영국 노동계급 형성에 영향을 준 18~19세기 영국의 민중적 급진주의 문화를 분석하면서 언급했듯이, 가시적으로 정치 현실을 풍자했던 "극장과 판화점의 문화는 급진파 장인들의 문자문화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대중적"이었다는 사실이다(E. P. 톰슨, 유재건 외 역 2000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398~401쪽). 즉 그 생산 주체가 누구든, 축제 등에서 행해지는 가시적인 정치적 풍자 행사는 대학생 일반에 다른 어떤 수단보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67) <生活革命은 우리 손으로-'大韓民國 學徒建設團(假稱) 具體化> ≪大學新聞≫ 1961년 6월 5일, 1면.

하였다.[68] 약 200여 명의 학생들로 조직된 자진근로반은 4월혁명 후 "교내외의 문란한 환경을 보고" 그것을 정돈하는 동시에, "근로를 천시하는 우리의 전통적 민족의식을 반성하면서 한국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개개인의 창의와 인내, 노력을 지닌 근로에 의하여 한국사회의 총체적 역량이 발휘됨으로써만 이루어질 것을 자각하고 학원에서 얻은 지식을 근로로 실천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69] 자진근로반은 '농촌협조대'를 조직하여 1961년부터 하계 및 동계 휴가 때 연 2회 농촌에 내려가 근로봉사를 하면서 농사개량, 생활개선, 문맹퇴치, 청소년 교도 및 부녀회의 지도, 육성 등을 함으로써 농촌이 자력으로 부흥할 수 있는 힘을 양성, 촉진하였다. 또 소년촌 또는 보육원 등에 출장하여 건축, 정지작업, 추수 및 식수 등을 도우며 공민학교의 설립, 운영에 조력했고, 충남 예산군, 전북 옥구군, 전남 무안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 및 강원도 평창군 등의 26부락과 자매결연을 하여 친목과 협조에 노력하였다.[70]

1961년 6월 24일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향토개척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그때까지의 농촌운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학생 자신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농촌에 참여하여 4월혁명의 정신으로 학생과 농민 간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였다. 1962년 1월 26일에는 연합회의 수준을 넘어 정식으로 서울대 '향토개척단'이 창설되었다. 1963년 5월 1일 서울대 향토개척단은 총 연장 350m, 간척면적 18정보 54,000평의 방조제를 완성하기도 했다. 이재오는 이러한 향토개척단 운동을 "정치지도조직의 부재와 지도이론의 빈곤으로 4월혁명 정신을 정치적 현실로 계승 발전시킬 수 없었던 학생들이 혁명의 마지막 보루로서 민족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향토에 불씨를 묻자는 소박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마디로 낭만적 민족주의에 기반했다는 것

68) <'學生勤勞班' 結成> ≪고대신문≫ 1961년 6월 3일.
69) 高麗大學校 六十年史 編纂委員會, 1965 ≪六十年誌≫ 高麗大學校, 460쪽.
70) 高麗大學校 六十年史 編纂委員會, 1965 위 책, 461쪽.

이다.[71]

연세대 학생들도 다양한 농촌봉사 단체를 설립하였는데 이들 역시 여름방학 동안 농촌에 내려가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1963년경부터는 각 대학에 향토개발연구회, 농촌문제연구회, 농어촌문제연구회, 농촌봉사부, 4-H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학생 농촌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전국 농과대학 연합회 주최로 각 대학에서 관련 심포지움, 세미나 등이 열려 농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농촌운동은 이념적 편차가 다양하기는 했지만 학생운동의 일각을 담당하였다.[72]

5.16쿠데타 직후 학생들이 전개한 농촌운동, 즉 향토개척운동 속에는 4월혁명 직후 계몽운동과 통일운동에서 발산된 민족주의적 정서가 깊이 깔려 있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장 쓰라린 양대 세력의 대립을 맛본 우리 민족은 이제 본연의 자세를 찾음으로써 그 값비싼 대가로서 오늘의 세계적 고민을 해결할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갈파하면서 그 민족의 '상징'을 농민의 현실 안에서 추출해 내기도 했다.[73] 그리고 이 운동이 "제국주의자, 독재주의자로부터 받은 유일한 유산인 패배주의, 도락적 안일주의를 과감히 내던지고... (중략)... 거대한 기적을 완성하고 항구한 민족의 거점을 마련하는 성실한 작업을 수행할 민족의 마지막 보루"라고 선언했다.[74]

그러나 4월혁명 당시 운동과 비교했을 때 5.16쿠데타 후 농촌운동은 혁명정신의 확산과 같은 목적의식이 많이 탈각되고 단순한 봉사활동, 노력활동으로 그 활동의 폭이 좁아졌다. 무엇보다 군사정권의 통제 속에서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타율성이 강했다.[75]

---

71) 李在五, 1984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形成社, 192~193쪽.

72) 李在五, 1984 위 책, 193쪽.

73) 서울대학교 향토개척단, 1965 <향토개척 지침서>, 25쪽(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학생문제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74쪽 재인용).

74) <천보 향토개척단 선언문(1963년 7월 18일)>(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위 책, 174쪽 재인용).

따라서 이들 농촌운동은 4월혁명 직후 계몽운동이 보여준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점차 체제내화 되었다.[76]

군사정권이 학생들의 농촌운동을 관리, 통제한 현황은 1962년 4월 15일 공보부조사국에서 작성한 <(전국대학생) 농어촌계몽활동상황>에 잘 드러나 있다. 1960년 1월부터 1962년 3월월까지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이 진행한 농촌운동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대학생 농촌운동은 크게 농사지도 및 부업장려, 자매부락 개척, 무의촌 진료, 교육 및 문맹퇴치, 순회시국강연 및 위안회, 농어촌생활개선, 원호 및 구호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교육 및 문맹퇴치, 순회시국강연 및 위안회, 농업지도 및 부업장려, 농어촌생활개선의 비중이 컸다. 그런데 5.16쿠데타 이후 교육 및 문맹퇴치와 농어촌생활개선은 재건국민운동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었다. 즉 교육 및 문맹퇴치운동은 "농촌문고를 설치하고 문맹자에 대한 공민교육과 성인들에 대한 제반교양강좌를 실시하여 농어촌교육향상을 기하였다." 또 농어촌생활개선운동은 "농어촌주민들의 고루한 폐습과 나태한 생활을 일소시키고 진취성 있는 향토재건의 근로정신을 고취시켰"으며, 주민들이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가족계획운동을 비롯해서 국민체위 향상을 위한 재건체조 보급과 국민도의 앙양 및 미신타파, 위생관념 주입" 등의

---

75) 5·16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은 내핍생활의 실천, 근면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의욕의 증진, 국민도의의 앙양, 정서관념의 순화, 국민체위 향상 등 7개 항을 목표로 '재건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에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설치되었고, 민간단체의 임원이나 저명한 언론인, 출판인, 교육자, 연예인, 종교인 등이 이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임명되었다. 모든 시·읍·면에 지부가 설치되었고 각 가정마다 1인씩 회합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다. 당시 사회 활동에는 '재건'이라는 구호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1963년 재건국민운동본부는 30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의 대중 기반으로 전화되었다(김정원, 1985 앞 책, 282쪽).

76) <鄕土를 불 밝히는 젊은 役軍들-서울大學校 鄕土開拓團의 발길을 좇아> ≪大學新聞≫ 1961년 8월 14일, 4~5면; <새 社會建設의 役軍들 都市에서 農村으로> ≪高大新聞≫ 1961년 8월 12일, 4~5면.

활동을 전개하였다. 순회시국강연 및 위안회의 경우도, 승공민주주의 이념과 5.16쿠데타의 불가피성과 그 의의, 재건국민운동의 요강, 기타 시사해설 등을 학생들이 순회 강연함으로써,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재건정신을 고취시키는 한편 각종 문화 교육 영화를 상영하여 농어촌주민들을 위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명랑한 정서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다.”[77] 한마디로 군사정권은 대학생들의 농촌운동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재건국민운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둘째, 1960년 1월부터 1962년 3월까지 농촌운동에 참여한 대학과 학생들, 그리고 참여 회수와 일수의 통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각 대학 농촌운동 현황

	1960년			1961년			1962년 3월 현재		
구분	회수	학생수	延일수	회수	학생수	延일수	회수	학생수	延일수
전 체	25	2,392	332	144	15,486	1,746	99	10,522	1,424
서울대	3	1,598	33	7	527	88	6	304	57
고려대				1	109	20	1	64	22
연세대				3	127	39	6	59	32
부산대				20	1,847	453	7	1,375	79
조선대				12	9,098	121			

출전: 公報部調査局, 1962 <(全國大學生) 農漁村啓蒙活動狀況>, 16~19쪽 요약.

그런데 이 <표>를 보면 5.16쿠데타 전후로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 2,400명 정도에 불과했던 농촌운동 참여 학생수가 5.16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15,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었고, 1962년에는 아직 3월밖에 안되었음에도 벌써 10,000명을 넘는 등 그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5.16쿠데타 이후 학생들의 농촌운동에 대한 열의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77) 公報部調査局, 1962 <(全國大學生) 農漁村啓蒙活動狀況>, 9~11쪽.

군사정권이 학생들을 농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원한 결과였다. 군사정권에 의한 학생 동원은 각 학교별 추이를 보면 더 잘 드러난다. 1960년의 경우 4월혁명 직후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서울대 학생들이 1,600명 정도 참여하였지만, 1961년에는 그 수가 오히려 500명 정도로 급감하였다. 또한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1960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는 이 보고서도 인정하듯이 1960년 관련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려대와 연세대는 1961년 이후에도 그 참여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즉 이들 학교에서 쿠데타 이후 농촌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부산대와 조선대의 경우 1960년에는 농촌운동 참여가 없다가 1961년에 각각 1,800명과 9,000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1960년 통계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1961년의 수치는 쿠데타 직후 이들 학교에서 농촌운동이 급증했음을 잘 보여준다. 더 주목되는 것은 엄청난 참여 학생수에 비해 운동 회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다. 특히 조선대는 한 번 활동을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천명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를 했다. 한 번 활동을 벌일 때마다 학생들이 전교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한 강제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강제의 주체가 학생회인지, 학교당국인지, 아니면 군사정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쿠데타 이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강제성에 기반한 집단적인 농촌운동이 전개되었음은 분명하다. 이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62년 하기 학생봉사활동의 경우 8천여 명이 동원되었다.

민정이양 이후 박정희 정권은 보다 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농촌운동을 이용했다.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결국 6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각 대학은 휴교 상태에 들어갔고 이것이 그대로 여름방학으로 이어졌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격앙된 학생들의 현실참여 분위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1964년 7월부터 대대적인 대학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964년 9월 정부가 작성한 <1964년 학생봉사활동상황

종합보고>에 나와 있는 이 봉사활동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 3.24 以後 學生들의 政治的 現實에 積極 參與하게 된 動機는 純粹한 愛國的인 至誠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니 그 뒤 漸次 그 樣相을 달리하여 마침내는 合憲政治의 否認, 反政府, 甚至於는 亂動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政府는 國家社會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上 不得已 一部地域에 戒嚴令을 宣布하고 大學의 全面的인 休校措置를 斷行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는 바 今般의 學生亂動은 一部 激烈學生의 不純한 行動에 由因한 것이며 大部分의 學生은 學園에서 眞理探究를 希求하는 善良한 學生임에도 불구하고 非常事態로 因한 全面休校措置는 學生들의 計劃性 없는 消日, 時間의 浪費, 焦燥感으로 意氣가 沈滯되고 修學의 意慾을 喪失케 할 憂慮가 많으므로 休校 中인 學生들로 하여금 自發的으로 建設的인 社會奉仕活動에 積極 參加케하여 學生들의 現實參與 雰圍氣를 轉換시키는 同時에 過去 行하였던 無責任 無分別한 政治現實參與 意慾을 完全 拂拭토록 함으로써 學園의 氣風을 健全한 方向으로 振作시키고 學生들로 하여금 社會奉仕活動을 通하여 國家社會에 對한 貢獻하는 態度와 이에 依한 矜持를 가지는 方向을 提示코자 하는 것임.[78]

또한 이 봉사활동은 "현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 학생들의" "근로정신을 앙양 실천케 하고 향토개발의 기풍을 진작시켜 산업부흥의 일익을 담당케" 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애초 전국 대학생의 약 7%인 8,960명이 참가하여 전국 일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연인원 141,107명이 참여하여 학생 1인당 평균 16.2일간 봉사활동에 종사했다. 봉사활동은 주로 모내기와 제초 등 노력봉사, 도로와 교량 등 보수공사, 녹지 측량 등 개간사업, 그밖에 아동오락장 건립과 같은 기타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다.[79] 특히 이 봉사활동은 국고에서

78) 文敎部, 1964 <1964年度 學生奉仕活動狀況 綜合報告書>, 3~4쪽.
79) 文敎部, 1964 위 문서, 29쪽.

비용이 보조되었는데, 정부 보고서는 이 사업이 “정치참여분위기를 완전 불식하고 건전한 학원분위기 조성에 성과가 지대”하였다고 결론내리고, 앞으로도 학생봉사활동에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여 더욱 치밀한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농촌운동,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의 분위기와 대학생의 모습이 박정희 정권의 의도대로 바뀌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이 시기 농촌운동, 봉사활동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농촌운동과 봉사활동을 울타리 삼아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3년 서울대 향토개척단이 개최한 <향토의식초혼굿>이었다. “대학에서 처음 보는 민속적인 행사”라는 평을 받은 제1회 <향토의식초혼굿>은 1963년 11월에 진행되었다. 서울대 향토개척단이 주관한 이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순서로 농촌 현실에 대한 교수들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으로 탈춤과 풍물과 굿이 어우러진 ‘신판 광대놀이’ <원귀 마당쇠>(조동일 작) 공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가 ‘향토의식 소생굿’, ‘사대주의 살풀이’, ‘난장판 민속놀이’, ‘조국발전 다짐굿’ 등 농악굿을 행했다. 이 행사는 농촌운동을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키고 한일회담을 강행하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되었다.[80]

1964년 11월에 열린 제2회 <향토의식초혼굿>에서는 <녹두장군진혼제>가 열려 탈을 쓴 농민대표가 제문을 낭독하고, 갑오농민전쟁 당시 농민대표가 고종에게 보낸 호소문과 ‘녹두장군 전봉준’의 궐기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농악대의 공연에 맞추어 뒤풀이가 있었다. 1965년 11월에 열린 제3회 <향토의식초혼굿>에서는 강연에 이어, 수농신이 왜곡된 이론과 제도의 타파를 약속하는 강림하는 <농신제>가 행해지고, 탈춤과 판소리가 어우러진 <야 이놈 놀부야!>(허술 각색)가 공연되었

80) 조동일, 2009 ≪세계 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0-학문하는 보람≫ 계명대학교 출판부, 53쪽.

다.[81]

이 행사를 개최한 서울대 향토개척단은 5.16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이 학생들의 농촌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그런데 조동일의 구술에 따르면 그는 향토개척단의 간부들과 협의해서 <향토의식초혼굿>을 기획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대학에서 문화운동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 행사를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군사정권과 관련된 향토개척단의 보호막 아래 학생들이 연합하여 각자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했던 것이다.[82] 이렇듯 군사정권은 대학생들을 농촌운동에 동원하여 그들의 현실참여 의지를 순치하려 했으나 그것이 의도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농촌운동은 '농촌'으로 상징되는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여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운동은 한일협정반대운동을 앞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경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향토의식초혼굿>은 1970년대부터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곧 확고한 대학문화로 자리잡은 '민속'의 선구적 행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이 시기 농촌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통제 하에서 진행되었지만, 정권의 대학생 통제가 가지고 있는 균열지점과 함께 그러한 균열지점을 따라 학생운동을 전개해 나간 대학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동시에 직접적인 집회나 시위 못지않게 문화를 통한 우회적인 접근이 학생운동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도 잘 보여줬다.

'농촌운동'이 군사정권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현실참여의 방식이었다면, 1962년 6월 발생한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시위'는 군사정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쿠데타 이후 최초로 감행한 학생 시위였다. 5.16쿠데타와 동시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안 대학생들의 집

81) 김재석, 2003 <'향토의식초혼굿'의 공연 특질과 연극사적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18, 172~173쪽.

82) <조동일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9일, 면담자: 오제연).

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학생들 역시 섣불리 정치적인 의사 표시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2년 6월 6일 한미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며 고려대 학생 2천여 명이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틀 뒤 8일에는 서울대 학생 1천여 명이 역시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1960년대 초 주한미군의 폭력에 의해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미군의 폭력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는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내내 이어졌지만, 소위 대전협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승만 정권은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문제가 생겨도 그 책임을 한국인들의 잘못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와 4월혁명으로 고양된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학생들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1962년 봄 미군에 의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꾼이 살해되고, 또 다른 한국인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1962년 3월 서울대 학생들은 대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박정희와 케네디에게 진정하고자 했다.[83] 이 시도는 군사정권과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정치 관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이후 일단 잠잠해졌다.[84] 하지만 1962년 5월 말에 파주에서 미군 장교 등 6명이 한국 소년을 절도로 몰아 私刑을 가해 결국 그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이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은 한미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면서도, 모두 이 시위가 결코 '반미'나 '반정부' 시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시위의 <행동강령>에서 "오늘 우리의 행동은

83) <'韓美行協' 촉구 論議> ≪大學新聞≫ 1962년 3월 5일, 1면; <서울大 學生會長會議> ≪大學新聞≫ 1962년 3월 15일, 1면

84) <政治關與 斷 不容> ≪大學新聞≫ 1962년 3월 15일, 1면.

반미감정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항의이기보다는 촉성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85] 서울대 학생들은 시위의 <선언문>에서 "오늘 이 우리의 의식은 단순한 반미도 아니고 피부적인 반정부도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 당국자의 행정협정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86] 이 시위가 군사정권 하 최초의 시위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학생들이 이 시위가 '반미' 시위가 아님을 분명히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4월혁명 이후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경제의 모순을 심화시킨 미국의 원조와 분단을 초래한 외세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반미'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대학생들이 가진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은 한국사회 전체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고려대에서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를 주도했던 서진영과 서울대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 당시 사회를 봤던 김승의의 구술은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이 미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잘 보여준다.

> 사실은 4.19 때도 상당히 친미적인 분위기가 강했죠, 그리고 어 오히려 인제 나도 이게 그 이걸 미국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강대국으로서 본 거야. 그래서 이 약소국가에 대해서 하는 어떤 이런 오만함, 이런 것에 대해서 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했던 건 아니에요.[87]

---

85)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a)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72쪽.

86) <서울大生들도 行協促求데모> ≪京鄕新聞≫ 1962년 6월 8일, 석간3면.

87) <서진영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18일, 면담자: 오제연).

>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라 하는 거는 뭐 반미, 친미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게되면, 독립국가의 가장 정당한 최소한도의 요구였다, 이건 반미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뭐 지난번 저 독도 다녀 와가지고 이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그 선진국사람들에게 당연히 얘기할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이건 반미 이전에 얘기할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는 거다 그런 차원이었고, 그러구 소박하게 생각하게 되면 미국도 이런 사태들에 여러가지 그 해프닝, 국민들의 한국민들의 염원 이거를 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양식을 가진 선진국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한미행정협정은 체결해야 마땅하다, 이거를 빨리 알아듣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반미가 아니었고...[88]

당시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반미'가 아님을 강조한 것은 단지 탄압을 피하기 위한 修辭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이 고조되었지만, 당시 함께 추진되었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침묵했던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가 크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학생들은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한일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것에 실망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조인된 직후 고려대 학생들이 "Yankee Keep Silent"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벌인 격렬한 대규모 가두시위는,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미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사례였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이 종료된 후인 1966년에 서울대학교 학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45.3%가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 미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9.8%에 불과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88) <김승의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21일, 면담자: 오제연).

대답한 학생은 36.4%였다. 이 통계는 일단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89] 그러나 동시에 이 통계는 미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준다. 1960년대 대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결코 반미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친미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당시 학생들이 이 시위가 '반미' 시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으나, 군사정권은 이 시위가 가진 파급력을 우려하여 예민하게 반응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학생 시위 대처방안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직후인 1962년 6월 14일 중앙정보부가 김낙중 등 고려대, 단국대 출신 7명이 포함된 학생간첩단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북한이 이들을 통하여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를 이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북한이 평양방송을 통하여 김낙중 일당에게 지령을 내렸으며, 대학생들을 선동하는 불온 비라가 서울대 근처에 살포된 사실을 들었다.[90]

당시 중앙정보부가 밝힌 북한의 지령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의 반미시위를 전 군중적인 반미투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과 동시에 적(남한 정부)들을 와해 혼란시키는 사업을 즉시 조직 집행할 것. 미제의 만행과 괴뢰군당국의 처사를 규탄하여 학생들의 의거를 찬양 지지하고 고무 충동하는 내용의 격문 비라 등을 애국학생투쟁위원회의 명의로 인천, 서울, 의정부 기타지역에 살포할 것. 둘째, 미국대사, 유엔군사령관, 각 대학총장들에게 학생들의 반미시위를 지지하라는 내용과 군사당국의 처사에 따라 학생전체 그리고 퇴역장교들을 지지하여 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협박장을 상기 명의로 보낼 것. 기타 모략, 와해공작을 동지의 실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활

89) 金基錫廉泰鎬金英吉, 1968 <1966年度 在學生 實態調査> ≪學生硏究≫ 5-2, 23~24쪽.

90) <學生 중심 對南 間諜 地下서클을 摘發> ≪京鄕新聞≫ 1962년 6월 14일, 석간1면.

동할 것. 이와 관련하여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직후 서울 문리대와 법대 사이의 구름다리 부근에서 붓으로 쓰인 '반미구국투쟁동지회' 명의로 된 3매의 불온 삐라와 '반미구국학생투쟁위원회' 명칭으로 된 삐라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각각 "행정협정을 체결하라", "양키의 야수적인 만행을 배격한다", "모두 일어서서 총궐기하라"(이상 반미구국투쟁동지회), "고대생과 서울대 학생들이여! 약소민족의 비애를 어찌 이 이상 더 보고 견디겠는가? 당신들은 조선민족에 대한 만행을 배격하며 군사도당의 처사를 반대하며 끝까지 항거하라. 우리들 전체 조선인민들은 당신들의 의거를 더욱 지지, 성원한다"(이상 반미구국학생투쟁위원회) 등이었다.[91] 한마디로 북한이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를 본격적인 '반미' 공세의 계기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간첩단의 핵심인물인 김낙중은 1950년대 고려대 이념서클인 협진회에서 활동하다가 1961년 8월 15일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으로 월북한 뒤 1962년 3월 월남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월북 문제로 1962년 5월에 체포되어 수감 중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보부도 김낙중 등 학생간첩단이 고려대와 서울대의 한미행정협정 반대시위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낙중 등을 간첩으로 몰아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직후 사건을 터트린 군사정권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 시위를 북한의 '반미' 공세와 연결시켜 손쉽게 탄압하고, 이후 유사한 학생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훗날 1964년 서울대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주도한 민비연 학생들은 실제로 이 학생간첩단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운동에서 '반미'적 성향이 나타나 탄압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정권의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에서 학생들이 표방한 '반정부'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분명하게 이 시위가 '반정부' 시위

91) <不穩삐라 發見> ≪京鄕新聞≫ 1962년 6월 14일, 석간1면.

가 아님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군사정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술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당시 학생들이 군사정권에 가지고 있었던 일정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민정이양이 약속된 상황에서 군사정권을 자신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서진영과 김승의의 구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정부, 군사정권하고는 그 때는 내가 이 정부, 군사정권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마는, 이걸 반대하고 타도할 대상이라고는 생각은 아직 안했어요. 왜냐면 군정이 그니깐 민정 이양을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아 이게 이게 파쇼정권이고 군부독재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좀 유보적인... (중략)... 그거는 그래서 반정부가 아니다.[92]

> 군사정부에 대해서는 인제 집권 후에 아까 얘기한대로 정통성은 없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인제 2년 후에는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그러구 인제 아까 얘기한 네이션빌딩을 위해가지고, 다소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써써래두 스피드를 좀 내야되겠다하는 어떤거에 맞는 일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군부라고 우리가 명백히 자처해가지고 움직이… 나는 적어두 생각할 때 그런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93]

군사정권도 학생들의 시위에 표면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시위 과정에서 고려대 학생 13명을 구속하고, 서울대 학생 47명을 연행하였다. 그러나 1962년 6월 8일 하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순진한 학생들의 충의와 동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일체 불문에 붙이는 한편,

92) <서진영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18일, 면담자: 오제연).
93) <김승의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21일, 면담자: 오제연).

즉시 전원 훈계 방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이날 밤 이들 학생들은 모두 방면되었다.[94] 또한 군사정권은 "동기와 목적은 이해하지만 또 데모를 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학생들의 요구대로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였다.[95]

이러한 군사정권의 태도를 보면 마치 그들이 학생들과 같은 민족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위에 대한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미행정협정 체결과 같은 민족적인 데 있지 않았다. 군사정권은 5.16쿠데타 이후 학생들의 시위가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군사정권의 솔직한 입장은, 1962년 6월 15일 내무부가 내각수반 지시각서 13호에 대한 보고로 작성한 <'데모' 발생원인 및 '데모' 연발시 정부로서 취할 방책 수립안>이라는 문서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문서는 일단 시위의 遠因으로 '한미행정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 측의 무성의'와 더불어, 군사정권이 한미행정협정 체결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는 듯한 인상을 준 점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지적했다. 그리고 "5.16군사혁명 이후 압박감을 느껴온 학생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보겠다는 잠재적 의식"과 "모교 전통을 과시하려는 학생들의 자부심과 영웅심"을 지적했다.[96] 이는 먼저 군사정권이 시위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등 외부에서 찾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의 시위를 그 본의가 아닌 '지위향상', '자부심', '영웅심'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고 또 폄하하고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

94) <拘束된 데모學生 全員 釋放> ≪京鄕新聞≫ 1962년 6월 9일, 조간1면; <大學生 데모 이번만은 不問> ≪東亞日報≫ 1962년 6월 9일, 석간1면.

95) <韓美行政協定 早速締結토록>·<"動機·目的은 充分 理解, 또 데모하면 斷乎 措處> ≪大學新聞≫ 1961년 6월 11일, 1면.

96) 內務部, 1962 <'데모' 發生原因 및 '데모' 連發時 政府로서 취할 方策 樹立案>, 1~2쪽.

다음으로는 近因으로 최근 일어난 주한미군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아울러 학생들이 “확증은 없었으나 정치활동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구정치인의 사주와 5.16 이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민자통 계열 학생의 배후조종”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97] 확증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하는 군사정권의 태도는, 1960년 3.15부정선거 직후 이에 항의하는 마산시민의 항쟁에 대해 이승만 정부가 그 배후에 ‘敵의 五列’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상투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은 모든 시위 때마다 학생운동의 ‘배후’에 집착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 배후를 만들어냈다.

더 흥미를 끄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데모 발생에 대한 당국 조치의 제결함’이다. 이 문서의 최대 관심은 자신들이 어쩌다가 학생들의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는가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원부족이라는 이유 아래 각 대학별로 단 일명의 학원전담형사도 고정배치 하지” 않은 점, “각 대학에 대한 학교별, 학생별, 교수별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학생들에 대한 계속적인 동향 감시에 소홀”했던 점, “학원정보망은 형식적이었고 학원 간부급에 편중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점, “데모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고 상사에 보고치도 않고 임의처리 한 후 이상 없다고 회보”한 점, “평소 경찰이 학생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또 “학교 내의 주체세력을 사전에 포섭치 못하”여 “사전 와해 공작”에 실패한 점 등을 꼽고 있다.[98] 여기서 군사정권의 학원사찰의 실상이 잘 드러난다. 일단 경찰 내 ‘학원전담형사’는 아직까지 없었고, 대학과 그 구성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 학원 정보망은 있었고 그 대상은 일부 학생회 간부들이었다. 반면 학생회 밖에서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들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여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처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

97) 內務部, 1962 위 문서, 2쪽.
98) 內務部, 1962 위 문서, 2~3쪽.

다. 즉 1950년대 이래 1960년대 초까지 정권 차원의 학원사찰은 계속 이어졌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이 많았던 것이다.[99]

또한 이 문서는 "학원 내의 학생 각종 사고 미연 방지는 학교 당국의 책임이라는 관념을 양성시키지 못하였"고 "학장, 총장은 학생들의 활동에 무관심하였고 '데모'의 제지에 소극적이었"으며, "교수들은 학생에게 위엄과 권위로서 훈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부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100] 학생들의 시위를 1차적으로 막지 못한 학교당국과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의 가장 핵심 부분은 앞으로의 '대책' 부분이다. 여기서 가장 강조된 것이 "정보망의 재정비 강화"였다. 즉 학교별, 학생별, 교수별 성분을 분석하고, 데모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고, 학원 내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망을 조직하며, '데모'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주동자를 예비 검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간부는 물론 각 분야에서 활동력 있는 학생이나 신망이 있는 학생들을 사전 포섭하는 등 "적극적인 공작"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만약 시위가 발생하면 발포를 제외한 모든 강력 수단으로 이를 진압하도록 했다. 그밖에 시위 학생을 찬양하거나 영웅시하는 기사 게재를 막고, 시위가 결국 북한에게 선전자료만을 제공하는 이적행위임을 강조하며, 시위를 막지 못한 학교 책임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것 등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101] 결국 학생들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학원사찰과 학교당국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

99) 학원사찰은 195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그 강도는 1960년대 중반 이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시위 직전에, 교내에 들어와 있는 사복경찰이 학생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학교당국에서 관할 경찰서에 사복경찰 철수를 요청하자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곧 철수를 했다고 한다(<(대담) 革命은 성공, 精神은 未完> ≪月刊朝鮮≫ 1987년 4월, 349쪽). 학교당국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학교에서 철수할 정도로 1960년대 초까지 학원사찰은 허점이 많았다.

100) 內務部, 1962 앞 문서, 4쪽.

101) 內務部, 1962 위 문서, 5~6쪽.

내용이었다.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 당시 YTP로 대표되는 학원사찰 문제가 한일협정 문제 못지않게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문서의 내용처럼 1962년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 이후 학원사찰이 대폭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7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965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교수들의 동향을,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성명을 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매우 상세하게 파악했음이 드러났다.[102] 또한 1964년 사립학교법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64년 3월 24일부터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전개하자, 정부는 시위 방지책으로 사립학교법을 이용하고자 했다. 즉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정부가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학교당국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데모가 있을 경우 총·학장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었다.[103]

1964년 6월 3일의 대규모 시위와 계엄령 선포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만들고자 했던 <학원보호법>은 보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학원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학원을 '통제'하는 법이었다. 먼저 이 법안은 수사기관 직원의 학원출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허용하였다. 당시 시위가 격화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학원사찰 문제였는데, 이 법안은 오히려 학원사찰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원이나 학생은 정치적인 일에 일

102)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학원·간첩편(Ⅵ)≫ 국가정보원, 85~88쪽.

103) <(사설) 私立學校法의 改正은 保留되어야 한다> ≪東亞日報≫ 1964년 4월 25일, 2면.

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중립과 이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법 제78조(정당을 지지 배격하기 위한 학생지도의 금지)는 그 정신이 편파적인 정치교육을 하지 말라는 데에 있는 것이지 결코 정치에 대하여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원이나 학생의 정치 관여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었다.[104] 결국 박정희 정권은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였지만, 철저하게 대학을 통제하고 학생운동을 억압하고자 하는 박정희 정권의 의지는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학원사찰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4월혁명으로 고양된 현실참여 의지와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1962년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에 앞장섰던 학생들은 이 시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학교 안에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 보다 강화시킬 서클, 즉 서울대 민비연과 고려대 민사연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학생운동의 역량을 더욱 키워 1964년부터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거대한 항쟁에 적극 나섰다. 한마디로 1962년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시위는 정권의 학원사찰이 강화되는 계기이자, 쿠데타 이후 일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학생운동이 다시 재개되어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2. 이념서클의 한일회담반대운동 주도

1) ‘민족혁명론’ 對 ‘민족적 민주주의’

104) 金曾漢, <‘學園保護法’에 부쳐> ≪大學新聞≫ 1964년 8월 6일, 2면.

5.16쿠데타 직전이었던 1961년 4월 19일 4.19 제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 4.19 제2선언문>을 발표했다.

> 오늘 우리는 가시지 않은 일년 전의 통분과 분노를 지닌 채 우리의 선혈로 물들여지던 4월의 광장에 다시 모였다... (중략)... 우리는 여기서 3·4월항쟁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이 땅의 역사 사실을 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 이 민주,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들 젊은 대열은 정비하고 전진한다.[105]

이 선언문은 서울대학교 학생회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사실 당시 학생운동,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서울대 민통련이 중심이 되어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 작성자는 민족혁명론을 주창한 이종률이었다. 이종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성립을 통해 서울대 민통련의 김정강을 접촉하여 "한국 학생운동은 앞으로 변혁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초기부터 이론적 지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자기가 4.19선언문을 써서 보내겠다고 했고, 결국 이종률이 쓴 선언문을 민통련 지도부가 이종률 특유의 난해한 조어들을 수정한 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106] 그러나 수정 과정에서도 이미 이종률이 ≪현순간정치문제소사전≫에서 '4월혁명'이라는 성격규정을 비판하며 사용한 '3·4월항쟁'이라는 용어[107]와

---

105) <서울대학교 4월혁명 제2선언문>(김삼웅 편저, 2001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민족 · 민주 · 민중 선언≫ 한국학술정보, 37~38쪽).

106) <김정강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김지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45~46쪽). 김정강의 일방적인 증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4.19 제2선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종률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3반테제, 그리고 민족혁명이라는 단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는 민통련 학생들이 이종률의 민족혁명론과 비슷한 인식을 공유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민통련 내부에서 미소의 냉전과 제3세계의 민족해방에 대한, 그리고 중립화 통일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통련의 민족주의는 3반테제에 입각한 민족혁명론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민통련의 민족주의는 조직이 확대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민통련 밖의 다른 학생들로 점차 확대되었다. 4월혁명 이후 고양된 대학생들의 민족주의와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은 내용적, 논리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서울대학교 4.19 제2선언문>에서 언급된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3반테제가 지향한 민족혁명은, 한마디로 4월혁명 이후 학생들이 계몽과 통일을 통해 추구했던 후진성을 극복한 국민국가의 완성과 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이 쿠데타 직전까지 활발할 활동을 벌이던 통일운동 세력을 탄압하면서 민족혁명론에 입각한 발전론은 물론, 민주사회주의적 발전론까지 모두 체제 밖으로 퇴출되었다.[108] 하지만 5.16쿠데타 후 박정희도 민족중흥, 민족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근대화 등의 구호를 앞세워 역시 후진성을 극복한 국민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1963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출간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미국의 원조 정책이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 국내 생산공업을 답보 상태에 낙후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원조를 “이왕 줄 바에야 우리의 뜻에 맞도

107) 李一九(이종률의 필명), 1960 ≪現瞬間政治問題小辭典≫ 國際新報社, 34~38쪽.

108) 홍석률, 2004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3쪽. 4월혁명 이후 중립화통일론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 논리와 관련이 있었으며, 남북협상론은 반제, 반봉건 민족혁명의 완수를 통한 산업화를 주장했고, 이것은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야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연관되었다(정용욱, 2004 <5.16쿠데타 이후 지식인의 분화와 재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169쪽).

록” 줄 것을 요구하였다.[109] 또한 같은 책에서 박정희는 한국의 분단이 “미국의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적어도 그 일단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10] 여기에 더하여 사상논쟁에서 ‘자주’를 강조한 박정희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반미주의자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덕분에 외세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진영 논리 속에서 반공과 미국 비판은 양립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반공을 ‘國是의 제일’로 내건 대한민국의 집권자가 개인적인 성향을 앞세워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 민주주의가 내세운 ‘자주’는 민족혁명론의 ‘반외세’와 비슷해 보이나 결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정권은 “승공통일을 목표로 자주,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한 민족적 과제”라고 하면서 “통일의 내셔널리즘”은 오늘날 “주체성 확립의 내셔널리즘”으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했다.[111] 통일 없이도 주체성 확립을 통해 자주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선건설 후통일’론은 ‘통일=후진성 극복=민족혁명’의 논리를 가진 대학생들의 민족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4월혁명을 전후로 대학생들은 자립경제 건설에 관심을 가졌다. 자립경제 수립을 통한 한국사회 후진성 극복은 그들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4월혁명 직후 ‘계몽운동’과 ‘통일운동’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을 각각 모색하였다. 이때 계몽운동에서는 자립경제 지향이 내핍이나 국산품 애용과 같은 수준에서 제기된 반면, 통일운동에서는 외세의존 청산, 남북교류, 분단 극복이라는 수준에서 제기되었

109) 朴正熙, 1963 ≪國家와 革命과 나≫ 向文社, 50쪽; 227~228쪽.

110) 朴正熙, 1963 위 책, 225쪽. 그밖에도 이 책은 나세르와 같은 중립주의를 추구하는 제3세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111) 金永棹, 1965 <主體性 問題의 解釋과 構想> ≪理念과 政策-共和論叢 2≫, 民主共和黨, 32쪽.

다. 이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꾸준히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통일이 되어야 잘 살 수 있다며 '북진통일'을 외쳤던 것과 통하는 면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다. 5.16쿠데타 직후 그들이 처음 만든 경제개발계획은 내자동원, 수입대체, 내포적 공업화 등 일국 단위의 국민경제의 대내적 완결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112] 민족적 민주주의에서도 자주를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를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대학생들과 박정희 정권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운동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이 '중심-주변'의 문제틀을 가지고 분단 극복을 전제로 '반제' 혹은 '반중심부' 차원에서 후진성 극복을 추구한 반면,[113] 박정희 정권은 '선진-후진'의 문제틀 속

112)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320~323쪽; 기미야 다다시, 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71~74쪽.

113) 4월혁명의 경험은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개항 이후 근대성 형성의 연속성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해방 이후 남북한 두 개의 국민국가 형성과 분단의 고착화 등을 전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분단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 두 개로 나뉘고 그에 따라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 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분단의 발생과 이후 그것이 고착화되는 과정, 그리고 분단에 따라 두 개의 국민국가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합되어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분단이 한반도의 삶 자체에 내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방과 함께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분단의 문제는 이전의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식민의 과제를 더욱 난해하게 만들면서 그 해결을 방해하였고, 그에 덧붙여 새로운 문제들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냉전과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들이 더욱 얽혀갔고, 분단의 문제는 한반도의 모든 문제들에 교직되어 내재화되었다. 따라서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과제이다. 이는 분단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 극복의 과제는 한반도에서 근대성 형성의 역사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탈근대, 나아

에서 후진성 극복의 문제를 시간적 선후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인 이른바 'catch-up', 즉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추격해 따라잡는다는 전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했다. 똑같이 자립경제 수립을 통해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했더라도 대학생과 박정희 정권 사이에는 내용적인 차이가 컸던 것이다.

대학생들과 박정희 정권의 인식 차이는 '매판'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매판의 문제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여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경제개발에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은 한일회담이 굴욕적으로 타결되면 일본자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되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일본에 종속될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일본 자본과 결탁한 한국의 독점자본(재벌)을 매판자본으로 규탄했으며, 자본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매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매판 담론이 만들어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청맥≫ 1965년 10월호의 '이것이 매판이다'라는 특집 기획이다. <매판시민>, <매판지식인>, <매판학자>, <매판정치인>, <매판경제인>, <매판문학>, <매판예술>, <매판윤리> 등의 제목으로 약 50페이지에 걸쳐 8편의 글을 게재한 ≪청맥≫은 이 특집 기획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우리는 買辦資本, 買辦經濟 만이 買辦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허영에 젖은 市民의 얼굴에서, 갈 바를 모르는 知識人의 自己喪失에서, 아니면 事大意識과 모방에만 汲汲하는 學者의 비굴성에서, 혹은 집권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 政治人의 야욕에서,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욱 本質的인 買辦을 發見한다. 이 風土의 拂拭없이 그 다음 단계의 논리는 있을 수 없다.[114]

가 민족주의 극복의 과제와 맞물려 존재할 수밖에 없다(홍태영, 2010 <4.19와 국민국가의 계기>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164~167쪽).

114) <(특집) 이것이 買辦이다> ≪靑脈≫ 1965년 10월, 28쪽.

‘매판’ 담론의 확산과 더불어 ‘신식민지’라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쓰이기 시작했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던 1964년 3월 24일 시위에서 고려대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독점 자본가들이 이 국가를 경제적 식민주의의 질곡과 철쇄에 덮어씌우려 한다.”고 규탄했고, 연세대 학생들은 “4.19이념과 민족자립경제의 반역적 망국 재벌을 처단하고 그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여 민족자본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학생들도 “중지하라 매국외교 박멸하라 매판세력”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제국주의 매판자본’의 축출을 요구했다.[115] 이는 한마디로 평등지향적인 강력한 민족국가 확립을 주장하는 것이었다.[1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족혁명론의 ‘반매판’ 테제는 대학생들의 핵심 주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 민족적 민주주의는 반봉건, 반외세와는 달리 반매판과는 어떠한 결합지점도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경제개발계획마저 대외의존적인 내용으로 완전히 수정되자, 민족적 민주주의에서 주장한 자립의 개념은 이제 ‘경제성장’, ‘생산력증진’으로 그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동안 높아졌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이러한 균열지점을 따라 하나 둘씩 해체되기 시작했다.

결국 1964년 5월 20일 학생들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함으로써 결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대신 학생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민족혁명론을 부활시켰다.

>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압세력,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다. 5월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민주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115) <知性이 憤怒했다> ≪高大新聞≫ 1964년 3월 28일, 3면; <굴욕외교에 분노한 지성> ≪연세춘추≫ 1964년 3월 30일, 1면; <韓日會談 굴욕妥結 反對, 大學生 流血데모> ≪大學新聞≫ 1964년 3월 26일, 1면.

116)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앞 책, 186~187쪽.

대중탄압의 시작이었다.[117]

동시에 발생한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와 민족혁명론의 부활은 극적인 사건이었다.[118] 한일회담반대운동의 클라이막스인 1964년 6월 3일, 당시 운동을 주도한 김중태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한일회담반대, 5.16 부정, 현정부 반대 등 3단계를 거쳐 민족혁명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119] 비록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은 좌절되고 말았지만, 이후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와 저항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보다 분명하게 경계를 짓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미 김종필이 언급했던 것처럼 민족주의를 근대화, 정확히 말하면 경제성장, 생산력증진을 위한 국민 동원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는 한국인들 사이의 점증하는 민족주의를 경제건설의 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한 196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120] 즉 5.16쿠데타 이후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에 입각한 경제개발론, 통일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배제하고 오직 산업화만 강조하는 '근대화론'이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의 실내용이었던 것이다.[121] 반면 3반테

117)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선언문>(6.3동지회, 2001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466쪽).

118) 당시 모든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번 집회가 학생 총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집회 참석 인원도 당초 예상보다 적은 편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규탄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는 당시 대부분 학생회가 기본적으로 '친체제적'이였다는 점과 더불어,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추진한 학생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하여, 반대의 대상을 민족적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박정희 정권으로 한정하려 했다. 김도연의 구술에 따르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말 앞에 공화당을 상징하는 '황소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420쪽).

119) <斷食鬪爭 엿새째의 大學街 周邊> ≪大學新聞≫ 1964년 6월 4일, 3면.

120) 홍석률, 2004 앞 글, 199쪽.

제에 입각한 민족혁명적 지향을 가진 학생들은 비민주적이고 불평등적인, 외세의존적이고 반통일적인, 예속적이고 매판적인 현실에 저항하며 박정희 정권과 대립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가 분화되는 계기가 된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었다. 한일협정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찬성했다. 1964년 12월 ≪동아일보≫가 전국적으로 약 1천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45%가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28%, '모르겠다'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대학 출신의 81%가 국교정상화에 찬성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45%는 박정희 정권의 대일교섭 태도에 반대했고 단 19%만이 이에 찬성했다. 정부가 일본에게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비판도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커졌다.[122] 한마디로 국민들, 특히 젊고 학력이 높은 대학생들은 한일협정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 일본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 채 이루어진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했다.

양보와 굴욕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이나, 청구권 금액을 너무 적게 받은 것, 평화선을 완전히 포기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이러한 양보와 굴욕을 통해 일본의 식민주의가 한국 땅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1965년 한일협정 조인 직후 ≪사상계≫가 한일협정을 "준식민주의자와 준식민지간의 협정", 본질적으로 "상전과 하인의 조약"이라고 혹평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123] 학생들 역시 일본 식민주의의 부활을 신식민주의로 규정하고 이

121) 정용욱, 2004 앞 글, 169쪽.

122) 한일 국교정상화에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학(無學)의 8%, 국민학교 출신의 20%, 중고등학교 출신의 28%, 대학 출신의 40%가, 그리고 50대 이상의 14%, 40대의 21%, 30대의 23%, 20대의 27%가 정부의 교섭 태도에 비판적이었다(<對日交涉을 어떻게 보나-本社 全國輿論調査> ≪東亞日報≫ 1965년 1월 19일, 3면).

123) 박진희, 2007 <한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기억과 전망≫ 16,

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주장한 '반매판'은 경제적 침략과 종속을 통해 관철되는 신식민주의에 대한 반대였다.[124] 그런 의미에서 일본상품불매운동은 당시의 긴박한 국면에서 핵심쟁점과 동떨어진 돌출적·감상적 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일협정 체결이 임박할수록 점점 실체가 뚜렷해진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종속에 대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다. 비록 6·3 항쟁의 패배 경험으로 1965년 학생들이 더 이상 반정부을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반외세, 반매판 논리는 이와 같이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2) 민족주의 이념서클의 확산

민통련의 조직적 균열이 심화된 상태에서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리고 민통전학련은 물론 각 대학 민통련은 모두 붕괴되어 버렸다. 민통련에 적극 가담한 신진회와 같은 이념서클도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다. 사회법학회 같이 살아남은 경우도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통일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군사정권에 의해 체포되었다.[125] 하지만 대학에는 아직 4월혁명과 통일운동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들 학생들은 군사정권의 비민주성과 실정을 비판하면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서클들을 각 대학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주도

347쪽.

124) <안성혁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8일, 면담자: 오제연).

125) 5.16쿠데타 직후 930명의 혁신계 인사가 '잠재적 용공주의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뒤로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용의자로 몰려 투옥되었다. 그 가운데 605명은 정당의 당원이었고 264명은 사회단체원, 630명은 교원, 학생, 신문기자 등이었다(데이비드 콩드, 1988 ≪남한 그 불행한 역사(1953~1966)≫ 좋은책, 133쪽).

했던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연세대 한국문제연구회, 고려대 민족사상연구회와 민주정치사상연구회를 중심으로 당시 이념서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시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념서클 이외에도 다른 이념서클들(혹은 이념서클 회원들)이 운동에 적극 가담한 바 있었다. 서울대 법대에는 기존의 사회법학회가 활동을 계속하며 특히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에 적극 나섰고, 그 외에도 새롭게 농촌법학회가 1961년 등장하여 학생운동에 일정한 힘을 보탰다. 서울대 상대에서도 1950년대부터 계속 이어진 '경우회'가 있었고, 서울대 농대에는 1959년 창립한 '한얼'과 1962년 창립한 '농사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이념서클은 '학술' 활동이 더 중심에 있었고 학생운동에 가담한 정도는 서클에 따라 또 회원에 따라 편차가 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독자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외에서는 1960년대 전체를 통틀어 학생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이념서클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운동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26]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 경북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이념서클 麥嶺會(1963~1964), 正思會(1964~1970), 正進會(1970~1971)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 서클들은 '경북고'라는 학연을 매개로 서울의 이념서클들과 연계를 가졌고, 무엇보다 대체로 대학 외부 세력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자 했던 서울의 이념서클들과는 달리 경북대 이념서클들은 대구경북 지역의 혁신계와 교류와 연대를 계속했다.

126)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 관련 구술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이외의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관여한 인물들은 이념서클의 회원이 아니었다. 또한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대학에 이념서클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단, 당시 여러 대학에는 이념서클은 아니지만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양한 사적 조직(혹은 결사)들이 존재했다. 이들 사적 조직은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의기투합한 경우(서울대 법대 척사회, 고려대 의활단), 학생회 선거 때 함께 선거운동을 한 학생들끼리 모임을 가진 경우(동국대 지용단회)가 대부분이었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여정남이 이들 서클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러나 맥령회, 정사회, 정진회에 대해서는 최근 구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다.[127]

①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념서클은 196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에서 결성된 '민족주의비교연구회'(약칭 민비연)였다. 민비연은 민통련과 같은 공개운동조직 대신 '연구회'를 표방하여 합법적으로 학생운동기반을 확대하고 학생운동의 새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

민비연 창립을 주도하고 민비연 초대회장을 맡았던 이종률의 회고를 통해 민비연의 창립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128] 이종률에 따르면 '민비연'의 결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 하나는 1962년 6월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였다. 1962년 5월 파주에서 미군 장교 등 6명이 한국 소년을 절도 몰아 私刑을 가해 결국 그 소년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6월 6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6월 8일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각각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내세우며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5.16쿠데타 이후 최초의 대규모 학생시위였다. 서울대의 경우 이종률을 비롯해서 당시 정치학과 2학년이었던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등이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

127) 허종, 2012 <1964~1965년 대구지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大丘史學≫ 106; 2013 <1969년 대구지역 삼선개헌반대운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66; 임채도, 2013 <인민혁명당사건과 경북대학교 학생운동-1960~7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메커니즘>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128) 李鍾律, <"6.3사태는 '젊은 민족정신'의 발화였다"> ≪新東亞≫ 1994년 6월, 560~564쪽. 민비연의 이종률은 앞서 언급한 민족혁명론의 이종률과는 同名異人이다.

은 다음해인 1963년 3월 군정연장반대시위에도 앞장섰다. 이들이 바로 민비연을 창립하고 주도한 핵심세력들이었다.

민비연 결성의 또다른 계기는 1963년 5월 23일 서울대 문리대의 축제(학림제) 당시 '한국적 민족주의의 진로'라는 논제로 사회학과가 주관한 토론대회였다. 이날 토론대회에는 정치학과 이종률, 사회학과 이경재, 조봉계, 영문과 정기인, 그리고 법대의 김영철 등이 발표를 맡았는데, 훗날 민비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런 모임 등을 통해 제3세계 민족주의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체계적인 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1963년 10월 4일 드디어 민족주의비교연구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다. "고립적, 일방적 전수식 강의의 맹점을 탈피하고 여러 유형의 민족주의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민족주의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여 민족사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한국적 민족주의 이념을 모색, 정립하겠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회장 이종률, 총무부장 박범진, 연구부장 김경재, 기획부장 김승의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129] 지도교수는 민족주의 강의로 인기를 얻고 있던 황성모 교수가 맡았다. 회원은 약 50명 정도였다. 창립 당시 민비연의 주요 활동목표는 첫째, 가능한 대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학생운동의 기반을 넓히자, 둘째, 연구발표회나 세미나를 통해 학술적 이념적 지표를 확립하자, 셋째, 민정이양에 대비해 학생운동의 새 방향을 정립하자 등이었다.

당시 민비연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조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에 대해 김도현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유근일씨가 그 아프리카 민족주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강연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 그런 강연회, 뭐 이런 게 아주 열기가 뭐 고조되어 있었던 때지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학생들이 그 무슨 최문환 선생의 뭐,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또 뭐 '리슨 양키', 뭐

129) <'民族主義比較硏究會' 創立> ≪大學新聞≫ 1963년 10월 7일, 1면.

그런 거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애. 그리고 어, 정치학과 학생들은 이제 뭐 '라스키' 같은 거, '라스키', 그 민병태 교수라고 있었는데, 민병태 교수가 '라스키'를 좋아하고, 이렇게 다원주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자유당 때에 그거 한 가지 주의에서 뭐까지, 아주 그 진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원주의까지는 이게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었는데, 하여튼 '라스키' 같은 거를 많이 봤고, 일부 학생들은 이제 또 그 해방직후에 나온 그 좌익서적들 있어요. 뭐 좀 낡은 종이로 만든 거, 뭐 '대중철학'이니, 뭐 세, 저, '세계사 교정'이니 전석담의 '조선사 교정'이니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을 거예요. 예.[130]

현승일 역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에, 그 때는 일본 책도 무슨 '빈보모노가다리' 같은 거. '궁핍물어'인가? 일본 말을 대충 배워가지고 그런 것도 읽고 또 백남운의 '조선사연구'도 읽고, 무슨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문리대에는 그런 좌익 서적을 이렇게 다 묶어있는 마대를, 포대가 있었어요. 자루에, 그걸 우리가 이제 지하도서관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읽고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가 독서 마,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좌익 서적을 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독서 중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131]

김도현과 현승일의 회고를 종합해보면 민비연 학생들은 민주사회주의,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밖에도 해방 전후에 나온 좌익 관련 서적,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서적 등을 함께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마오이즘에 대한 관심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132] 그런데 이러한 민비연 학생들의 이념적 관심과 독서 경향은 과

130) <김도현 구술>(구술일시: 2007년 6월 19일, 면담자: 오제연).
131) <현승일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6일, 면담자: 오제연).
132) <김영배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26일, 면담자: 신동호).

거 1950년대 신진회 선배들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즉 민비연이 신진회를 조직적으로 계승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이념과 사조의 맥을 잇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현승일이 언급한 '좌익 서적을 담은 포대 혹은 마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민비연 관련 구술에서도 이러한 좌익 서적들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학교 3학년 땐가, 4학년 땐가 도망댕기고 그럴 땐데, 중태가 우리 집에다 책을 갖다 놓은 게 사과박스 큰 거 하나 가득 갖다놓은 게 뭔가 하면, 이게 민통학련서부터 내려오는 책들이다. 이거 니가 보관해라. 하여튼 그걸 끌고 댕기느라고 참 걸리면 감방 가니까, 그때는 그런 놈의 책을 들고 있으면, 근데 그게 몇 군데… 저도 사건 나면 집에다 못 놔두니까, 친구 집에도 갖다 놨다 해서 꽉꽉 싸가지고 놨다 해서 그거 치느라고 혼났는데, 제 사건나면서 여동생 집에 갖다 놨던 거 겉은 데, 그 담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하여튼 중태한테 그렇게 영향을 받았죠.[133]

> 저를 어느 날 도서관 옆쪽이지 싶은데 부르더니마는, 사실은 사회주의 이동문고가 있다, 그게 한 2,3백 권 되는데, 그 리스트하고 책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듣자 하니까 너가 그거를 제법 한다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선배들이 일치해서 니한테 다음 그걸 주기로 했다… 그러니 그 양반은 4학년 아닙니까, 그죠. 나갈 때가 됐으니까 아마 저한테 줄려고 그랬던 거 같애요. 그러면서 그 리스트, 그걸 잘 걸 하고, 줄 만한 사람한테 주고, 잘 회수를 하고, 비밀 잘 엄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이념을 많이 확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며는 중요한 임무죠, 어떻게 보면.[134]

위의 구술에서 언급된 책들이 모두 동일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133) <손정박 구술>(구술일시: 2013년 9월 16일, 면담자: 신동호).
134) <김영배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26일, 면담자: 신동호).

서울대 문리대에는 그 연원을 알 수 없는 수백 권의 좌익 서적들이 암암리에 보관, 관리되고 있었고, 그 책들을 신진회, 민통련 선배들은 물론 민비연 후배들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현승일 강조하듯 민비연 학생들이 이 좌익 서적만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 좌익 서적의 존재와 계승은 민비연 학생들이 다른 이념서클 학생들에 비해 보다 좌파적인 입장으로 기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과 관련하여 서울대 이외의 다른 대학 학생들의 구술자료를 보면, 당시 서울대 민비연의 이념적 색깔에 의구심이 들어 접촉을 꺼렸다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 심지어 서울대 민비연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똑같이 '민족주의'를 지향했던 고려대 민사연의 서진영도 구술을 통해 서울대 민비연과 고려대 민사회의 이념적 차이를 강조한 바 있다. 즉, 고려대 민사연은 민주사회주의적 지향을 견지했지만, 서울대 민비연은 맑시즘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려대 민사연에서는 서울대 민비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963년 11월 12일에 예정되었던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공동학술토론대회에서 이 문제를 쟁점으로 토론을 벌이려 했다고 한다.[135] 서진영은 당시 고려대 이념서클 회원들 가운데서 가장 좌파적인 인물로 평가되는데, 그런 그가 서울대 민비연이야 말로 진짜 맑시스트라고 지적한 것이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민비연의 현승일은 구술을 통해 자신들은 절대로 좌파가 아니었다고 부인한 반면, 김영배는 당시 자신이 분명 사회주의자였다고 회고했다. 아마도 민비연 내부에서도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겠지만, 대체로 민비연은 당시 다른 이념서클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민족주의를 지향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좌파적 색채, 즉 맑시즘적 혹은 민족혁명론적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비연은 창립 직후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 대

135) 서진영과 함께 고려대 민사연 회원이었던 김병길은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좌파로 빠질까봐 항상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사회주의는 안된다. 민족주의여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김병길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3일, 면담자: 신동호)).

표적인 것이 창립 직후에 나온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민비연의 창립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 학생들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가 순수한 학술그룹인지 또는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연구발표회 연구지 발간 강연회 등에 쓰일 돈의 출처도 밝혀져 있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136] 한마디로 민비연이 혹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정치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었다. 이에 민비연 학생들은 자신들은 "순수한 학술단체"이며 회비는 60명 회원이 매달 50원씩 내어 프린트한 회지를 발행키로 했다고 해명했다.[137]

민비연의 창립 이후 활동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의혹은 신빙성이 없다. 단,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1963년 창립 당시 민비연이 박정희 정권과 일정한 공유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박범진의 회고는 이를 잘 보여준다.

> 5.16군사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의 정체가 뭐냐는 것에 대해 한 2년간 탐색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책이 3권 나왔었거든요... (중략)... 그 책을 보면 과거 한민당 즉 야당이죠, 옛날 한민당세력이 지주계급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세력이었다는 비판을 하고,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글들이예요.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학생들의 생각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건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어서 학생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가 뭐냐... 좀 지켜보자고 했었습니다... (중략)... 한미갈등이 학생들에게 군사정부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구나라고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지요.[138]

---

136) <'民族主義理念' 學園으로, 서울大에 硏究會> ≪朝鮮日報≫ 1963년 10월 9일, 7면.

137) <純粹한 學術團體-서울大 民族主義比較硏究會 闡明> ≪朝鮮日報≫ 1963년 10월 10일, 7면.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민비연 학생들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많은 학생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이념서클 답게 민비연 학생들의 관심의 정도나 고민의 깊이는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민비연 창립 이듬해인 1964년 김중태가 2대 회장이 되면서 주도권이 김중태, 현승일 등 61학번들에게 넘어갔다. 이 무렵 민비연은 당시 한일 간에 추진되고 있던 국교정상화 협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민 사이에 반일감정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 태도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민족적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민족주의도 그 진정성이 의심되었다. 무언가 학생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식이 민비연 모임 안에서 커져갔다. 특히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무상원조 3억 달러를 받는 대가로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을 팔아넘기는 박정희 정권에 민비연 회원들은 물론 대다수 학생들이 분노했다.

결국 1964년 3월 24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학생 5천여 명이 동시에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라는 조직이 3.24시위를 비롯한 1964년 서울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 조직은 민비연 회원들과 서울대 문리대 신문사 ≪새세대≫를 중심으로 결집한 학생들이 연합해서 만든 투쟁위원회였다. 그러나 양자에 모두 관여한 김도현의 회고에 따르면, 3.24시위 이후 1964년 서울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기 보다는 민비연과 ≪새세대≫ 그룹 등 운동 주도세력들이 학생운동 전면에 나서기 위해 편의적으로 이름만 갖다 붙인 문서상의 조직이었다고 한다.[139]

---

138) 박범진, 2010 <증언>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 선인, 26쪽.

139) <김도현 구술>(구술일시: 2008년 11월 26일, 면담자: 김주관). 이현배에 따르

그런데 이렇게 민비연이 서울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과거 민통련에 가담했던 선배들과 민비연을 이끌고 있는 후배들 사이에 일정한 연계가 있었다. 현재 이들의 기억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정강은 자신과 박종열, 서정복 등 과거 민통련 선배들이 사실상 민비연의 배후 역할을 했으며, 민비연이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에 가담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140] 그러나 민비연 3대 회장으로 1964년 서울대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주도했던 현승일은 민통련 선배들의 영향력은 미미했으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민비연을 만들고 시위를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이 선배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선배들의 직접적인 어떤 조언이나 지시에 의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141] 현승일 이외에 이원재도 선배들의 영향력을 부정했다.[142]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민통련 선배들과 민비연 후배들 사이에 일정한 연계는 있었고, 이때 선배들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지만 후배들은 스스로 상황을 주도하고자 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계≫와 ≪한양≫ 같은 잡지도 민비연 학생들이 한일회담반대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 두 잡지 모두 당시 진행 중이던 한일회담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 방향은 서로 달랐다. ≪사상계≫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일회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보이는 조급함, 저자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청구권 자금의 성격이나 규모 문제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양≫의 경우 좌파적인 시각이

면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고조되면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이후 민비연의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등이 정부의 탄압으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민비연 보다 ≪새세대≫ 그룹이 사실상 서울대 문리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이현배 구술>(면담일시: 2008년 12월 1일, 면담자: 김주관)).

140) <김정강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김지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앞 책, 64~67쪽).

141) <현승일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6일, 면담자: 오제연).

142) <이원재 구술>(구술일시: 2013년 9월 7일, 면담자: 신동호).

강했다. ≪한양≫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동북아 방위동맹에 전위로 편입하고자 한일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은 생산과잉에 빠진 일본 경제의 새로운 시장으로 한국을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결국 한국경제는 일본에 종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43]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 과정에서 민비연 학생들이 '굴욕외교' 문제와 더불어 '신제국주의와 매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이유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비단 민비연만의 독특한 입장이 아니라 다른 이념서클도 대부분 공유하는 입장이었다. 일례로 1965년 서울대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법대의 '사회법학회' 회장 임종률은 당시 자신과 사회법학회 회원들이, 앞서 민비연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상계≫와 ≪한양≫는 물론 1964년 8월에 창간된 ≪청맥≫을 열심히 읽고 학생운동의 이념을 정립했다고 회고했다.[14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는 분명하게 분화할 수 있었다.

② 고려대 민족사상연구회와 민주정치사상연구회

서울대에서 민비연이 조직되던 비슷한 시기에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도 민족주의를 앞세운 이념서클들이 만들어졌다. 서울대 민비연 보다 조금 앞선 1963년 4월 29일 고려대에서는 '민족사상연구회'(이하 민사회)라는 이념서클이 탄생하였다. 민사회는 그 조직 이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듯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이념서클이었다. 그런데 민사회의 창립 배경에 대해 ≪6.3 학생운동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모임은 당초 일부 민통 회원과 사조회를 주축으로 출발하였

143) <김도현 구술>(구술일시: 2008년 11월 26일, 면담자: 김주관).
144) <임종률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4일, 면담자: 신동호).

으나 사조회가 한미행협 촉구시위의 사상적인 배경으로 집중 추궁당하자 발전적으로 해체된 후 결성되었다.[145]

즉 민사회는 4월혁명 이후 민통련의 통일운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와 관련된 '사조회'라는 조직을 이어받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사조회'가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1962년 6월 2일자 ≪고대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 있다.

새로운 민족의 이념을 창조하고 동서의 사상 연구를 통해 노력하는 학생이 되자는 취지로 발족한 본교의 '思硏會'가 지난 二十六일에 그 창립준비총회를 가졌다. 동 총회에서는 동회의 취지문과 규약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지도교수 金敬琢 교수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金교수는 이 자리에서 험산준령을 넘는 결코 절대적일 수 없는 젊은이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어 존재와 당위에 관한 이율배반을 지적하고 현하 위기에 직면한 제반 사태에 관해서 한층 더 회원의 분투가 있기를 당부하였다.[146]

이 기사에서 언급된 '사연회'는 '사조연우회'의 약칭이다. 아마도 ≪6.3 학생운동사≫에서 언급한 '사조회'는 ≪고대신문≫에서 언급한 '사연회', 즉 '사조연우회'를 다른 방식으로 줄여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조연우회는 고려대 법학과의 손주환, 홍영유, 전용호, 정치외교학과의 양영식, 정재원, 서진영, 최장집, 경제학과의 장화수 등이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 모임으로 발전시킨 조직이었다.[147] 이들 중 선배 그룹들은 이미 1960년 4.19 이후 서클 형태의 모임을 만들었지만

145) 6.3동지회, 2001 앞 책, 178쪽.
146) <創立準備總會-26일 思硏會서> ≪高大新聞≫ 1962년 6월 2일, 3면.
147) 孫柱煥, 2008 <'高大生 6.6데모'와 思潮硏友會> ≪(고대 법대 58학번 입학 50주년 기념문집) 숨겨진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 세창미디어, 135쪽.

1961년 5.16쿠데타로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다가,[148] 1962년 5월에 정식 서클로 창립했던 것으로 보인다.[149] 최정무, 양영식, 정재원 등 사연회 멤버들은 1962년 6월 6일 고려대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를 주도하다가 지명수배를 받고 결국 자진출석을 하였는데,[150] 이 여파로 사연회는 정식 창립 직후 다시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63년 4월 기존 사연회 멤버와 김원국 등 과거 민통련 관련 선배들이 결합하여 '민족사상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151]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과 민족사상의 제 연구"를 목적으로 1963년 4월 29일 발족한 민사회는 김경탁 교수를 지도교수로 회장과 서기, 그

---

148) 홍영유, 2010 ≪4월혁명통사 6≫ 천지창조, 355~356쪽.

149) 앞서 언급한대로 ≪高大新聞≫에는 1962년 5월 26일 사연회의 창립준비총회가 열린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고려대 법학과 58학번으로서 1962년에는 이미 학교를 떠났던 홍영유는 자신과 동료들이 1960년 4.19 직후 1960년 가을 정도에 '민족사조연우회'를 만들었다가 "5.16쿠데타로 인해 별다른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홍영유에 따르면 자신들이 서클을 만들 때 다른 서클들처럼 "선언서라든지 발기취지서라든지 정관 같은 것은 없었고" 의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홍영유, 2010 위 책, 355~356쪽). 이를 통해 봤을 때, 아마도 4월혁명 직후 '사연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조용하게 서클을 만든 뒤 곧바로 터진 5.16쿠데타로 별다른 활동 없이 서클 활동을 중지했다가, 그로부터 약 1년 뒤 정도에 다시 정식 서클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0) 손주환, 2008 앞 글, 138쪽; <背後없는 學生만의 데모-手配 中인 세 學生 出頭> ≪京鄕新聞≫ 1962년 6월 8일, 조간3면.

151) 사연회, 민통련, 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앞서 각주에서 언급한대로 1961년 초 고려대에 민통련과 유사한 조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1961년 5월 민통전학련이 출범할 당시 고려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홍영유의 구술이 주목된다. 홍영유는 다른 대학에서 민통련이 한참 확대될 당시에도 고려대에는 민통련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은 서울대 민통련 방식의 통일운동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민족사조연구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홍영유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12일, 면담자: 오제연)). 이를 통해 봤을 때, 고대 내에 민통련 관련 학생은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에서 민통련 관련 학생들이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는 미약하나마 민통련 관련 활동을 한 고려대 학생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리고 정치문제연구부, 법률문제연구부, 경제문제연구부, 사회사상연구부 등 4개 부문의 연구부장을 임원으로 두고 있었다.[152] 초기 민사회의 회원은 약 30여 명으로 주로 민족주의 사상의 고취와 아울러 우리 민족의 새로운 진로의 모색을 목적으로 격주에 1회 세미나를 열었다.[153] 서진영의 구술은 당시 민사회의 모습에 잘 보여준다.

> 고대에서 만일에 이념서클이 있었냐, 그러면 이 민사회가 이념서클의 원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민사회에도, 민사회는 정외과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나하고 오히려 인제 그 최교수만 아마 거기 관여했던 걸로,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지 어땠는지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주로 이제 그 법대, 또는 다른 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인제 우리가 들어가보니까, 내가 들어가보니까 오히려 법대 출신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인제 그 있었던 선배들 중에 보면 손주환씨라고, 나중에 그 양반이 5공 때 와서 이렇게 됐지만, 그 양반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경향신문사에 그 사회부 기자였었는데, 법대 4학년으로, 그래 손주환씨라든가, 또는 윤성천씨라든가, 이 광운공대 총장을 했던 양반인데, 뭐 아무튼, 그런 그 이태영씨라든가, 뭐 이런 그 선배들이 좀 있었구요. 거기서 인제 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죠.[154]

당시 고려대에는 민사회 이외에 1960년대 전반기 고려대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민주정치사상연구회(약칭 민정회)'라는 또하나의 서클이 존재하고 있었다. 민정회는 김영두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내의 학술서클이었는데, 대략 1960년 4월혁명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상토론회와 더불어 교수나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정하여 좌담회나 강연회를 개최해 왔다. 민정회에는 1963년 11월 현재 43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

152) <'民族思想硏' 發足> ≪高大新聞≫ 1963년 5월 4일, 3면.
153) <(써클 써베이) 民族思想硏究會> ≪高大新聞≫ 1963년 10월 26일, 3면.
154) <서진영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18일, 면담자: 오제연).

었다.[155]

기본적으로 민정회 회원들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답게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당시 다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지만 민사회보다는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에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민정회가 민사회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반면 민사연은 서진영, 최장집 등 민사연과 민정회에 모두 가담한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한일협정반대운동 전면에 나서지 않아 서울대 민비연과 같은 대대적인 탄압을 당하지 않았다.[156] 이와 관련하여 서진영은 당시 고대 학생운동에서 민사회가 이념, 이데올로기 지향적이였다면, 민정회는 액션 오리엔트, 즉 행동이 중심이 되었다고 회고했다.[157] 그런 의미에서 민사회와 민정회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었다.

서울대, 연세대와 함께 1964년 3.24시위를 시작으로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고려대에서는 박정훈 등 민정회 회원들이 시위에 앞장섰고 민정회원이자 동시에 민사회원이었던 최장집이 서울대와의 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려대는 이전부터 시위를 하게 되면 전교생이 모두 동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념서클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주도해도 결국 학생회가 앞장 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당시 민정회 박정훈이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경대 학생회가 시위 전면에 나섰다. 그밖에 법대와 상대 학생회도 학생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반면 총학생회는 학생운동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민사연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부 고려대 학생들이 서울대 문리대에서 열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 참여하자,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이들을 쫓아와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준비한 플래카드를 빼앗아 가는 일까지 있었다.[158]

---

155) <(써클 써베이) 民政會> ≪高大新聞≫ 1963년 11월 16일, 3면.

156) 신동호, 1996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12쪽.

157) <서진영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18일, 면담자: 오제연).

158) <김병길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3일, 면담자: 신동호).

1964년 6월 3일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고려대 학생들은 이념서클과 학생회 등 학내 모든 역량을 모두 끌어 모아 '구국투쟁위원회'라는 투쟁조직을 결성했다. 고대 학생운동의 핵심세력 중 연배가 높은 선배가 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부위원장을 정경대, 법대, 상대 학생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그리고 기획, 선전, 행동 등 조직의 실무책임은 민정회와 민사회 회원들이 맡았다.[159] 즉 고려대의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은 공식적으로 정경대, 법대, 상대 학생회가 전면에 나서 학생들을 모으고, 그 배후에서는 민정회와 민사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단과대학 학생회와 이념서클들을 고려대 전체 차원의 단일조직으로 묶기 위해 서울대처럼 별도의 투쟁조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③ 연세대 한국문제연구회

연세대에서는 1963년 10월 29일에 '한국문제연구회'(약칭 한연회)라는 이념서클이 창립되었다. 한연회의 창립 과정은 오건환의 회고와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60] 한연회의 전신은 1962년 연세대 정외과와 행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五時會'라는 독서모임(스터디그룹)이었다.[161] 처음에 독서모임, 스터디그룹으로 시작했던 오시회가 그 다음해 연세대의 주요한 이념서클로 발전했던 데에는 1963년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가 큰 계기가 되었다. 오시회에는 김용서, 오건환 등

159) <박정훈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3일, 면담자: 오제연).

160) 오건환, 2003 <한국문제연구회의 창립과 초기 활동> ≪(한국문제연구회 창립40주년 기념자료집)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 디컨하우스, 237~242쪽; <오건환 구술>(구술일시: 2008년 12월 2일, 면담자: 오제연).

161) '五時會'라는 명칭은 하루에 다섯 번 책을 읽고 또 하루 다섯 시간 책을 읽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서울고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같은 서울고 출신으로 당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안성혁과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합했다. 이후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안성혁은 오시회를 바탕으로 총학생회를 지원하는 강력한 이념서클을 만들고자 했고,[162] 또 오시회 멤버들도 총학생회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과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 이에 오시회가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1963년 10월 29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단체로 '한국문제연구회'가 탄생하였다. 한연회는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라는 모토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이념서클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창립인 22명과 명예회원(선배) 4명으로 시작한 한연회는 "한국의 사상, 통일, 정치, 산업경제, 민족문화, 과학기술 등의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여 한국 민족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찾기에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163] 총학생회장 안성혁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총학생회 간부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학생처장이었던 김찬국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창립총회에서는 한연회의 활동범위를 순수한 학문 도야에만 국한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대다수 오시회 출신들은 한연회도 오시회와 같이 회원 개인의 학문도야와 교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시회 출신 중에서도 김용서, 오건환 등과 또 안성혁 등 총학생회 간부들은 한연회가 연세대 이념서클로서 학생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 한연회의 활동은 전형적인 학술서클의 모습을 보였다. 한연회는 회칙과 사업계획에 따라 매주 금요일 오후, 문과대학 지하 강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마다 한 가지 주제와 주제발표자를 정해 토론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지도교수의 평가를 들었다. 당시 토론회에는 거의 2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했었는데, 그 중에 대학원생도 포함되

162) <안성혁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8일, 면담자: 오제연).

163) <한국문제연구회 창립> ≪연세춘추≫ 1963년 11월 4일, 1면.

어 있었다. 오건환은 당시의 토론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그걸 뭐 뚜렷하게 경향성이라고 그러는지...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 방법은 그랬습니다.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누가 대표적으로 또는 무슨 그룹 스터디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책에 그걸 가지고서 그 책 읽은 걸 가지고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전원이 다 그 책을 읽을 때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세 명이 주도적으로 그 책을 이제 해석하고, 하는, 나름대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토론하는 식으로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미나를 그렇게 이제 매주 하는 걸로 했는데, 에...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크게 잘 되거나 한 거는 뭐 그거는 의문이고, 그거를 정리해서 후에는 매번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주보라는 거는 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스텐실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철판에다 철필로 직접 써서 우리가 써가지고 이, 활판 등사, 등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했습니다.[164]

한연회는 또한 수시로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일례로 1963년 11월 11일에는 '제3공화국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함석헌, 조동필 등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반면 한연회는 똑같이 민족주의를 지향한 서울대 민비연이나 고려대 민사연에 비해 이념적 경향이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4년 한일회담이 급진전 되자 한연회의 활동도 더 이상 '학술' 모임에만 묶여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울대, 고려대의 이념서클들과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한일회담반대운동에 뛰어들었다.

연세대의 경우 한연회 회장 안성혁이 총학생회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학생회가 연세대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섰

164) <오건환 구술>(구술일시: 2008년 12월 2일, 면담자: 오제연).

고, 이 운동을 한연회 초대회장 안성혁과 2대회장 오건환 등 한연회 회원들이 주도하였다. 첫 시위가 벌어진 1964년 3월 24일에는 시위에 앞서 총학생회가 주최한 장준하, 함석헌의 시국강연회가 열렸고, 이 강연회 도중 안성혁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전교생이 곧바로 시위에 돌입하였다. 이후 연세대는 당시 결성 중에 있었던 전국적인 대학 학생회 연합체 '한국학생총연합회'(약칭 한학련)를 중심으로 운동에 결합하였다.[165] 한학련은 일종의 대학연합투쟁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난국타개학생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1964년 5월 25일 전국 32개 대학에서 각 대학 별로 '난국타개궐기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였다. 또 6월 1일에는 난국타개학생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각 대학 대표 35명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시도하다 전원 연행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연회는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민비연처럼 독자적인 투쟁기구를 만들 필요 없이 총학생회를 통해 연세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였다.

3) 이념서클 간 접촉과 동시 시위

1964년 3월 24일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흔히 '3.24시위'로 불리는 이 시위는 5.16쿠데타 이후 암중모색 중이었던 학생운동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시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동시다발적인 시위로

165) '한국학생총연합회(한학련)'은 1963년 11월 서울 시내 32개 대학의 학생회장들이 모여 교내 학생운동에서 교외 학생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해 조직체를 갖기로 합의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학련은 주도권 다툼과 더불어 일부 학생들이 공화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내분에 휩싸여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주로 일부 학생회장들이 정부 측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의 집회 계획을 잡는 수준에서 활동했다. 1965년이 되면 일부 학생회장들이 한학련의 이름을 내걸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

이루어졌다. 물론 과거 1960년 4월 19일의 항쟁도 수많은 학교들의 동시다발 시위로 이루어졌지만, 당시의 시위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1964년 3.24시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학교의 사전 접촉과 연계 속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렇다면 대학 간의 이러한 사전 접촉과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실 3월 24일의 날짜는 매우 급박하게 잡히고 합의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이전부터 각 대학 이념서클 간에 만들어진 일정한 네트워크가 작동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서울대 민비연과 고려대 민사회의 관계였다.

고려대 민사회 회원들은 일찍부터 서울대 민비연 회원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1963년 11월 서울대 학생들과 고려대 학생들의 공동학술토론대회 추진이었다. 서울대 ≪대학신문≫ 지령 5백호 및 고려대 ≪고대신문≫ 창간 16주년을 각기 기념하는 차원에서 양교 대학생들의 공동토론대회가 1963년 11월 12일 개최 예정으로 추진되었다. 이때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지속되는 연례적인 행사로 기획되었다.[166] 이 공동학술토론대회는 명목상 서울대 ≪대학신문≫과 고려대 ≪고대신문≫이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그 배후에서 서울대 민비연 회원들과 고려대 민사회 회원들이 움직였다.

앞서 1950년대 이념서클에서도 확인했듯이 이념서클 구성원들이 상호 교류하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 바로 각종 '토론회'였다. 1950~60년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많은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는 개별 대학의 틀을 넘어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토론회는 이념서클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가다듬고, 무엇보다 다른 학교 이념서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대 민비연 멤버들과 고려대 민사연 멤버들

166) <(사설) 模範的인 學術討論大會를 期待한다-서울大·高大 共同學術討論大會에 부쳐> ≪大學新聞≫ 1963년 11월 4일, 1면.

도 이러한 공동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대 민비연과 고려대 민사연이 이념서클의 이름을 걸고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각 서울대 ≪대학신문≫과 고려대 ≪고대신문≫을 앞세웠다는 점이다.[167] 이는 당시 이념서클들이 학교당국에서 운영하는 신문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영향력은 이념서클의 구성원들이 당시 학교신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념서클 회원들이 학생회 회장 또는 간부를 맡아서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당시 이념서클들은 조직 자체의 역량보다 회원 개인의 역량과 역할에 크게 의존했다. 회원 개인의 역량에 의해 이념서클들은 서클의 범위를 뛰어넘는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반면 개인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조직 자체의 안정성과 역량은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공동학술토론대회는 '한국민주주의 진로'와 '안정정책이냐? 성장정책이냐?'의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었다.[168] 그러나 공동토론회는 1963년 11월 12일 개최 직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대와 고려대 양 측의 '준비부족' 때문이었지만,[169] 사실은 행사 당일 정부에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이 공동학술토론대회를 무기연기 하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었다.[170] 하지만 이 공동학술토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서울대 민비연과 고려대 민사회 사이의 네트워크는 그 다음해인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1964년 3월 24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

167) 원래 ≪고대신문≫이 접촉했던 곳은 서울대 문리대 신문이었던 ≪새세대≫였다. 그러나 대학 대 대학의 교류라면 단과대학 신문인 ≪새세대≫보다 대학교 전체 신문인 ≪대학신문≫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대상이 바뀌었다.

168) <서울大 高大 學術討論大會-政治·經濟問題로 12日 三·一堂서> ≪大學新聞≫ 1963년 11월 11일, 1면.

169) <서울大 高大 討論大會 延期-兩校側 準備 不足으로> ≪大學新聞≫ 1963년 11월 14일, 1면.

170) 신동호, 1996 앞 책, 114쪽.

학생들이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1964년 3월 24일의 3개 대학 동시 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의 현재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엇갈리는 면이 많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일단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 사이의 접촉은 1963년 12월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서울대 민비연의 김중태와 고려대 민사연의 최장집이 접촉하였으나, 고려대 측에서 상대적으로 이념성이 강한 김중태를 기피하는 바람에 서울대 민비연의 접촉창구가 이원재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최장집은 연세대 한연회의 정준성과 접촉하여 3개 대학의 동시 시위가 합의되었다.[171] 합의 시점은 3.24시위의 2주 전 정도였다.[172]

3월 24일의 3개 대학 동시 시위 이후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은 6월 3일의 대규모 시위로 클라이막스에 올랐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기존 연구에서 이미 상당부분 설명된 이 운동의 전개과정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운동의 양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문화'적인 퍼포먼스가 주요한 운동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에 문화적 퍼포먼스가 등장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3.24 시위 당시의 이완용-이케다 허수아비 소각식,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서울대 문리대의 '단식농성'이다. 1964년 6월 3일의 대규모 시위 직전에 서울대 문리대 학생

171) <최장집 구술>(구술일시: 2013년 10월 12일, 면담자: 신동호).

172) <(좌담) '三月의 물결'을 말한다> ≪高大新聞≫ 1964년 3월 28일, 4면. 현승일에 따르면 3개 대학은 단순히 동시에 시위를 벌이기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 별로 시차를 두고 거리에 나오기로 사전에 약속했다고 한다(<현승일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6일, 면담자: 오제연)). 실제로 3개 대학의 시위 시작 시간을 보면 서울대 1시 30분, 고려대 3시, 연세대 4시 등 시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승일의 구술 이외에는 시차에 대한 사전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증언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들은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집단 단식농성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성토대회 뒤에 열린 '최루탄박살식'에서는 "회개하라 최루탄아 죽음이 가까우니 생전에 이룩한 죄 능지처참 大罪로다"라는 내용의 '최루탄조사'와,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가사를 "탄아 탄아 최루탄아 8군으로 돌아가라 우리 눈에 눈물 나면 朴哥粉이 지워질라"로 改詞한 '최루탄가'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 시위 진압 방식을 풍자했다. '최루탄박살식' 후 문리대 학생들은 "반매판 반외세 반봉건 반전제를 지향하는 오늘의 단식투쟁은 내일의 피의 투쟁이 될지 모른다."고 선언하고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시까지 유례를 찾기 힘든 학생들의 집단 단식농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5월 30일 오후 1시 2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단식농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 학생 수가 계속 늘었다. 특히 각 학교의 교내 방송뿐만 아니라 일간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이 단식 학생들의 상황을 수시로 전하면서, 단식농성은 그 자체가 운동의 효과적인 퍼포먼스이자 선동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속속 단식농성에 합류하였다.

그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던 집단 단식농성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학생운동 문화를 계속 창조해 나갔다. 단식농성 이틀째인 31일에는 단식 24시간 돌파기념으로 '반민주요소소각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서는 검은 안경을 쓴 황소와 매카시가 악수하는 그림이 불태워졌다. 동시에 학생들은 "사찰 폭력 사형(私刑) 기만", "통일대책 없는 무능", "소영웅적 민주정치", "조국 없는 매판자본", "주체 잃은 외세의존", "무르익는 일본예속", "불온문서 연구서적" 등의 항목을 써서 노끈에 나란히 걸어놓고 하나씩 뜯어내 박수 속에 소각했다. 이날 밤에는 풍자극 "위대한 독재자"가 공연됐다. 박정희를 연산군에 빗댄 박산군(朴山君)과 김종필을 상징하는 이완용을 등장시켜, 썩은 쌀, 민족적 민주주의, 한일회담, 4대 의혹사건 등을 비꼰 일종의 마당극이었다.[173]

---

173) 신동호, 1996 앞 책, 67~70쪽.

이후 한일회담반대운동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을 풍자하는 문화적 퍼포먼스는 수시로 등장했다. 1964년 6월 1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단식 중인 학생들이 '국민총궐기호소대회 및 학원침입·민생고 책임자 매장식'을 진행했다. 여기서 학생들은 짚으로 만든 학원침입자와 민생고 책임자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조사를 낭독하였다. 다음날인 6월 2일에는 서울대 상대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매판자본'을 신랑으로, '가식적 민족주의'를 신부로, '제국주의'를 주례로 한 결혼식과 화형식을 갖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학생 시위가 절정에 이른 6월 3일 성균관대생 1,000여 명은 '박정희 씨'와 '민생고'라는 이름의 꼭두각시 인형을 앞세우고 중앙청 부근 종각으로 진출했다.[174] 이렇듯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문화적 퍼포먼스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풍자를 통해 한일회담반대운동의 대중화와 고양에 일조하였다.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양상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학생운동 과정에서 투쟁의 목표가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에서 '박정희 정권 타도'로 급속히 고양되었다는 사실이다. 1964년 3월 24일 처음 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학생운동에 나선 학생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굴욕적, 저자세 한일회담에 대한 실망에서 운동에 나선 경우도 있었지만, 이념서클 학생들처럼 이념적 지향이 강한 민족주의로 무장한 경우도 있었다. 김중태 등 민비연 일부 학생들처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처음부

17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426~429쪽. 문화적 퍼포먼스를 통한 저항은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한일협정이 조인된 1965년 6월 22일 연세대생들은 한일협정이 조인되는 시간에 맞춰 '매국노 황제추대식'을 갖고 박정희 정권을 풍자했다. 한일협정이 여당만의 일당국회에서 조인된 후 8월 21에는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매국국회, 매국문서, 매국정부'의 화형식을 가졌고, 같은날 고려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모형에 불을 지르는 '일당국회 화형식'을 거행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전북대생 800여 명이 교정에서 한일협정 문서를 소각하는 화형식을 갖고 시위에 들어갔다. 이후 위수령 발포로 학원이 군인들에 의해 유린당하자 1965년 9월 6일에는 서울대 상대 학생 400여 명이 '학원방위 및 한일협정무효 성토대회'와 함께 '군화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동맹휴학에 돌입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위 책, 451쪽; 461쪽; 466쪽).

터 박정희 정권 타도까지 목표로 했던 경우도 있었다.[175]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잘 드러나듯 박정희 정권과 그들이 표방한 민족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도 큰 차이가 있었다. 또 이념서클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투쟁 노선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노선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급속히 고양하면서 1964년 6월을 전후로 '박정희 정권 반대와 타도'라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176] 1960년 4월 19일을 방불케 한 1964년 6월 3일의 대규모 항쟁은 그 최종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절정을 이룬 6.3시위 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항쟁에 적극 가담했던 많은 학생들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념서클의 회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대 민비연은 3.24시위는 물론 1964년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도하면서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상징하는 이념서클로 부각되어 더 철저하게 탄압당했다. 회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민비연 조직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정부는 민비연이 과거 민통련의 후신이며 사회주의 찬동자로서 외부의 혁신세력

175) 김중태의 민비연 후배였던 김영배는 이미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963년에 김중태로부터 '倒朴운동'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김영배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26일, 면담자: 신동호)).

17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479쪽. 박정희 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당한 뒤 1965년에 재개된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에서는 '박정희 정권 반대와 타도'라는 목표가 전면화되기 어려웠다. 때문에 1965년 운동의 방향은 한일협정 조인 반대, 비준 반대, 비준 무효화 등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1965년 8월 23일 연세대 학생들은 "나라 팔고 축배 드는 매국 정권 물러가라"며 1964년 6.3시위 후 사라진 박정희 정권 타도 구호를 다시 외쳤다. 또 같은날 전남대 학생들은 "한일협정 체결의 주점은 바로 미국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월남의 사태에 양키들의 총알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그동안 학생운동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베트남전 참전 문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처음으로 표시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이들 시위를 반국가적, 반미적 시위로 규정하고 '내란죄와 반공법'을 적용할 것임을 공언했고, 결국 8월 26일 위수령을 발동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위 책, 461~462쪽).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비난했다.[177] 이에 민비연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민비연 일부 회원들의 시위 주도는 민비연 차원이 아닌 개별적 행동에 불과하며 정부의 비판은 매카시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178] 1964년 6월 3일 계엄령 선포 후 한동안 민비연은 서울대 문리대 당국에 의해 학생단체로서 등록이 보류되었다가 1964년 11월 27일 되어서야 보류 조치가 해제되었다.[179]

어렵게 다시 문을 연 민비연은 1965년부터 다시 일상적인 학술강연회와 세미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이 운동이 1965년 8월 26일 위수령 발동을 통해 탄압을 당하는 과정에서,[180] 민비연은 1965년 운동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1965년 9월 16일 강제로 해산 당했다.[181] 그리고 얼마 후 중앙정보부는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김중태 등 민비연 회원 11명을 구속하고 김도현 등 6명을 수배했다.[182] 이렇게 민비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연회나 민사연, 민정회 등

---

177) <“革新系서 데모 幇助> ≪東亞日報≫ 1964년 5월 26일, 1면.

178) <民比硏서 痛駁> ≪大學新聞≫ 1964년 5월 28일, 1면.

179) <民比硏 保留조치 해제> ≪大學新聞≫ 1964년 11월 30일, 1면.

180)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8 앞 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965년 운동에서도 서울대 법대 ‘사회법학회’, 고려대 ‘민정회’, 연세대 ‘한연회’ 등 이념서클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1964년 운동에 비하면 이념서클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학생회나 투쟁위원회 같은 공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의 이념적 수위는 1964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반면 운동의 저변은 확대되었다. 이에 본고는 이념서클을 분석의 중심에 놓은 관계로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181) <民族主義比硏 解體-政治活動 서클 첫 케이스로> ≪大學新聞≫ 1965년 9월 20일, 1면.

182) 1965년 민비연 회원 구속 사건을 흔히 2차 민비연 사건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1차 민비연 사건은 1964년 6월 3일 계엄령 직후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민비연 회원들이 다수 처벌된 사건을 말하며, 3차 민비연 사건은 1967년 동백림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민비연 지도교수였던 황성모가 연루되면서, 과거 민비연 회원들이 함께 처벌당한 사건을 말한다.

다른 이념서클들은 일부 회원들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서클의 위축과 침체는 오래가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이념서클이 새롭게 등장하여 학생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대학과 대학생의 모습이 바뀌면서, 학생운동의 양상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四. 박정희 정권의 독재 권력 강화와 대학생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1. 대학사회의 변화와 학원 통제 강화

1)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과 대학생의 현실인식

196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경제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제개발을 위해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64년 경제개발계획의 수정과 함께,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과 그에 따른 청구권자금 및 일본 자본의 합법적 진출을 통해 '종속적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환율현실화와 단일변동환율제의 채택(1964.5), 각종 수출지원정책의 수립과 수입규제의 완화조치, 금리현실화(1965), 외자도입법의 제정(1966), GATT 가입(1967), 수입규제제도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1967), 관세개혁(1967) 등 일련의 무역, 외환, 자본자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종속적 개방체제로의 전환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이 구축된 것이다.[1] 그 결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차관이 급속히 팽창했다.

차관은 원조와는 달리 상환을 요하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자본수입국에게 수출을 강제하게 된다. 즉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환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국민경제 전체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야만 한다. 국민경제의 이러한 재편은

---

1) 박동철, 1991 <5.16정권과 1960년대 자본축적과정> ≪한국 자본주의 분석≫ 일빛, 54~55쪽.

국제분업체계에 이전보다 더 긴박된 형태로 포섭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러한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 이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7.8% 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독점자본은 노동계급에 대한 초과착취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수출산업에 뛰어들었다. 독점자본은 강제수출로 인한 수출결손을 보상받기 위해 국내의 판매가격을 독점적 고가격으로 설정하여 독점적 초과이윤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해서 재벌이 탄생하였다. 독점화의 진전과정은 직접적으로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광범한 수탈을 강화시켰다. 이를 뒷받침 한 것이 국가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폭력 위에 세워진 저임금, 저곡가체제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공업화과정은 노동계급을 양적으로 팽창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궁핍화를 진행시켰다. 또한 공업 위주의 산업정책과 저곡가 정책에 짓눌린 농민들의 삶 역시 갈수록 피폐해졌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1970년대에 들어와 기층 민중의 저항을 야기했고, 여기에 1969년 3선 개헌 이후 독재의 길을 분명히 한 박정희 정권이 1971년 양대 선거에서 고전하게 됨으로써 체제의 균열이 가속화되었다.[3]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 속에서 대학의 위상과 대학생의 의식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본격화 되면서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전인적 지도자 양성'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으로 점차 바뀌었다. 한일협정반대운동 직후인 1966년 초 박정희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세대≫에 실린 중앙교육연구소 소장 백현기

2)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새길, 184쪽.
3)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위 책, 186~195쪽.

의 글은 국가가 요구하는 대학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4)]

>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저개발국가에 있어서 大學은 이중적인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정치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國民의 지도자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經濟的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고도한 기술 manpower를 양성하여 국가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최근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5)]

국가는 이제 대학생들이 전인적 인격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지도적 엘리트'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적 엘리트'가 되기를 원했다. 즉 건설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편달하고 국민을 계도하며,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 국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자기를 지키며 조국근대화에 조용히 진군하는 것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조된 참다운 대학생의 모습이었다.[6)]

이와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대학과 관련한

---

4) 1963년 1월 창간된 ≪世代≫는 5.16쿠데타 주도세력이 지식인과 대학생 등 젊은층에 접근하고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창간된 잡지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 잡지는 쿠데타 주도세력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낙선의 주도와 재정적 지원 아래 창간되었다. 사장 오종식은 이낙선의 친구였고, 편집장 이광훈은 이낙선의 친척이었다. 또한 박정희의 최측근인 황용주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안경환, 2013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 422~424쪽). 또한 중앙교육연구소는 1953년 문교부와 대한교련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연구기관으로 1960년대 중반 사단법인이 된 이후에도 1973년 문교부에 의해 해산될 때까지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5) 白賢基, <무엇이 學園 正常化인가-특히 大學의 正常化에 대하여> ≪世代≫ 1966년 3월, 119쪽.

6) 허은, 2007 <1960년대 후반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당 지식인의 인식> ≪사학연구≫ 86, 258쪽.

언급에서 끊임없이 '생산'과 '건설'을 강조했다. 1967년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발전적인 지도자의 유형은 한 마디로 '생산하는 지도자'"이며 이는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흐름이요 시대적인 요구"라고 규정하였다.[7]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역시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다가온 이 70년대를 긍정적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여 조국 건설의 선도적 사명을 다하는 공헌의 시기로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였다.[8]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대학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1974년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였다.

>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진실하고 유능한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9]

어찌 보면 <교육법> 제108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유능한' 인물의 양성이었다. 더 이상 대학생들은 전인적 인격을 도야한 지도자가 될 필요가 없었다. 조국근대화, 곧 '생산'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됐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들에게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역설했다.[10] 반면 학생운동과 같은 현실참여에 나선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단지 "공부하기 싫어 시험 치기 싫어서"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였다.[11] 1967년에 정부가 <공부하는 학생, 연구

7) 박정희,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 1967년 2월 27일(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3≫ 대한공론사, 395~397쪽).
8) 박정희,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 1970년 2월 26일(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5≫ 대한공론사, 193~194쪽).
9) 박정희,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 1974년 2월 26일(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7≫ 대한공론사, 255~257쪽).
10) 박정희, <전국대학 총·학장 및 교육감 회의 유시> 1967년 1월 24일(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3≫ 대한공론사, 368~371쪽).

하는 교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학의 기풍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국가가 요구하는 대학의 위상이 전인적 지도자 양성기관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바뀌고 본격적인 경제 성장으로 고급 기술인력 수요가 그만큼 커지게 되자, 군사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대학 정비 정책에 의해 1960년대 전반기 억제되었던 대학 정원이 아래의 <표4>와 같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12] 1960년대 후반 이후에도 문과 계열의 정원은 여전히 규제되었으나, 고급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대학의 새 목적에 발맞춰 이공계와 특히 전문대학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

11) 박정희, <학생 데모에 대한 특별담화문> 1965년 8월 25일(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2≫ 대한공론사, 429~433쪽).

12) 대학 정원 규제는 1950년대부터 국가와 대학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군사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고등교육의 질적인 저하의 원인을 대학의 팽창에서만 찾음으로써, 팽창의 억제로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단순논리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 최긍렬은 군사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대학 정원 규제에 집착하게 된 것은, 대학생의 급증이 학생집단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급진세력의 학원 내 온존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박정희 정권이 강력한 대학 정원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가 한일협정반대운동 직후인 1966년과 6.8부정선거 규탄시위 직후인 1968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즉 대학생들의 반정부운동이 고양되었던 시기에 뒤이어 정원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최긍렬, 1989 <5.16군사정부의 고등교육통제에 관한 연구>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313~314쪽). 물론 정황에 따른 추론에 불과하지만,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대학의 팽창을 억제하려 한 데에는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4> 1961~1973년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의 수

연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1961	78	142,232
1962	126	134,470
1963	141	129,086
1964	157	139,428
1965	162	137,794
1966	160	170,649
1967	162	166,061
1968	166	166,918
1969	171	180,520
1970	168	194,666
1971	170	207,353
1972	173	220,286
1973	191	240,781

출전: 문교부, 1962 ≪문교통계요람≫; 문교부, 1964 ≪문교통계요람≫; 문교부, 1965~1973 ≪문교통계연보≫ 각 년도 판.

대학 교육의 목적이 크게 바뀌면서 대학의 분위기도 보다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물론 '상아탑'으로 상징되는 유럽의 전통적인 대학관을 고수하던 일부 대학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반발했지만, 1970년대가 되면 그동안 대학의 자유와 권위를 앞세웠던 대학 언론들마저 실용적인 직업교육과 취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학은 더 이상 실용적인 직업교육과 취업교육을 터부시 하지 않았다. 물론 이 때도 대학생은 '고급인재', 즉 '엘리트'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학과 대학생의 위상이 일정하게 변화했음에도 굳건하게 이어진 '대학생=엘리트'라는 인식은, 대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까지 대학 취학 가능 연령 인구 중 대학생의 비율이 10%를 넘지 못했던 상황과 맞물려,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를 계속 유지시켜줬다.

한편 대학 교육의 목적이 조국근대화, 즉 생산과 건설을 위해 고급기술인력, 즉 '기능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으로 바뀌자, 대학은 대학

대로 국가의 요구에 발맞춰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3대 기능으로 연구, 교육, 봉사를 꼽는다. 그런데 과거 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육이 주로 강조된 반면, 현대에 와서는 사회에 대한 대학의 봉사가 주요한 기능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사회봉사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미국 대학이 자주 언급되었다. 미국 대학은 사회봉사 기능을 통해 거대화, 대중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버시티(Multiversity)'가 앞으로 한국 대학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대학의 봉사 기능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대부분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당시 한국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강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국가주의적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대학생은 '기능적 엘리트'로서 '조국근대화'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며 이것이 곧 대학의 사회봉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1969년 한 대학생은 대학축제를 대학의 사회봉사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봉사의 기능이란 연구와 교수의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직접 적용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강구 또는 상당 역의 제 활동 또는 사회 참여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적 기능을 축제의 행사로서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대학축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대학생의 낭만을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대학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학 축제의 한계점으로 가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 문화의 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밑받침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봉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13]

13) 李丙振, <대학축제의 한계와 방향> ≪高大新聞≫ 1969년 4월 28일, 2면.

대학이 봉사할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사회 전반이라고 한다면 대학축제는 물론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현실참여'도 얼마든지 봉사가 될 수 있었다.[14] 그리고 그 봉사의 대상이 민중이라면 봉사의 방식이나 내용은 국가에 대한 봉사와 더욱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15] 실제로 당시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국민들, 특히 민중들을 '대변'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강조는 국가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았다.

요컨대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가 대학에 요구하는 목적이 기존의 '전인적 지도자' 양성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으로 바뀌면서, 대학생들의 위상도 '지도적 엘리트'에서 '기능적 엘리트'로 점차 변화하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엘리트'라는 인식은 굳건하게 유지됐다. 또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대학은 '사회봉사' 기능을 강조하며 박정희 정권에 협조하였지만, 그 '사회봉사'의 방향은 상황에 따라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권에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 한국의 현실과 대학생의 현실참여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6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전국 14개 대학(서울 소재 6개교: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 지방 소재 8개교: 경북대, 부산대, 동아대, 조선대, 전남대, 대전대, 계명대, 충남대) 2,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현재 남아 있다. 응답자의 59%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이었고, 41%는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다양한 지역에서 매우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세한 질문들을 담아 이루어진 만큼, 당시 대학생들의 현실인식을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16]

---

14) <서울대 학생문제 연구위원회 보고서 요지> ≪大學新聞≫ 1972년 4월 10일, 4면.

15) 李洪九, <韓國社會와 大學> ≪大學新聞≫ 1971년 12월 6일, 5면.

16)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학생문제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31~289쪽.

설문조사의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이전부터 대학생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던 '엘리트로서의 자신감'이 196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엘리트로서의 자신감'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현실참여 의지가 강하며,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하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치, 사회 문제가 대학생의 대화에 오르는 빈도를 보면, 자주 오른다는 학생이 남학생의 35%이며 종종 오르는 경우가 26%로서 약 61%의 남자대학생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친구들끼리의 대화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그만큼 대학생들이 엘리트답게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학생인 경우는 34%가 정치, 사회 문제를 화제로 삼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50%가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보다 직접적인 설문으로 "정치란 학생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진술에 대한 반응을 보면, 남학생의 67%, 여학생의 63%가 부동의를 표하고 있어 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생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대표자를 뽑는 주권행사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79%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77%가 이에 부동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임기마다 돌아오는 대표자 선출로만 만족치 않고 그들의 일상적인 현실참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참여 의지와 관련해서 69%의 남학생과 67%의 여학생은 자기들 자신이 이 사회의 엘리트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이 엘리트 의식은 곧 그들에게 현실 참여의 책임을 느끼게 하여 73%의 남학생과 70%의 여학생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학생은 참여할 책임이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하게 정치적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집단은 학생들뿐이다"라고 느끼는 학생도 남녀 각각 57%, 61%로서 대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하 각주가 없는 설문결과는 모두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현실에 참여했을 때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진술에도 남녀 각각 61%, 63%가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감과 관련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학생의 현실참여를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 80%의 남녀 대학생이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사회참여가 때로는 역사의 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한다”는 진술에 83%의 남학생과 80%의 여학생이 동의한 것 역시 4월혁명의 승리 경험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학생의 현실참여에 대한 태도는 자기들의 의견이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 “나 같은 사람은 정부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설문에 대하여 남학생의 54%, 여학생의 43%가 부정함으로써, 자기들의 의견이 정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학생의 반수 정도가 생각하고 있다. 이 역시 4월혁명 이후 커진 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와 자신감이 1960년대 내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월혁명으로 커진 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와 자신감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대학생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전용신 교수에 의해 1968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S대, K대, Y대, 경북의 P대, 전남의 N대 등 5개 대학 학생 5,88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7] 이 조사(이하 전용신 조사)에 따르면 “4.19의거는 역사에 빛나는 민족적 궐기다”라는 설문에 86%가 찬성을 표시했고 반대는 3%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생이 현실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은 당연하다”는 설문에는 84%가 찬성했으며, “대학생이 현실문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일이다”는 설문에도 63%가 찬성했다.[18]

이러한 학생들의 엘리트로서의 자신감과 사명감은 1969년 삼선개헌

17) 田溶新,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五個大學의 調査를 中心으로> ≪新東亞≫ 1970년 4월, 74~76쪽.

18) 田溶新, 1970 윗 글, 82~83쪽.

반대운동에 대한 설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삼선개헌에 대한 대학생의 반대데모와 관련하여 먼저 73%의 학생은 삼선개헌에 대해 순수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집단은 학생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만이 입을 열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주위에서 그들이 데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느꼈다고 61%의 남학생과 64%의 여학생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4월혁명의 전통이 이 데모에 작용하였다고 보는 학생이 남녀 각각 60%와 56%였다.

이번 데모를 한 것이 정치적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안정을 깨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55%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40%가 정치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 남학생의 31%와 41%의 여학생은 사회적 안정을 깨뜨리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데모가 학생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55%의 학생이 학생 전체의 의견이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28%였다.

데모를 의사표시의 유일한 방법임을 시인하는 남학생과 부정하는 남학생이 각각 41%, 42%로 양분되었고, 여학생은 반대쪽이 많아 44%이고 동의하는 비율은 35%이다. 그러나 이번 데모는 가두데모보다 교내에서 성토하는 것이 좋았다고 보는 축이 남학생은 51%, 여학생은 66%인데, 남학생인 경우는 34%가 부정을 하고 있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찬반 의견을 표하는 것으로 그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남녀 각각 53%, 46%로 동의하는 쪽보다 강하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찬반 의견을 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약 반수의 학생이 믿고 있는 것이다. 행동에 의한 현실참여는 경험 삼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59%의 학생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 데모에 참여하는 경우는 적어도 70%의 남학생이 이 점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데모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학생이 남녀 각각 68%와 60%이다. 학생은 학교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62%의 남학생과 42%의 여학생이 동의하고 있다. 비록 데모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어야겠다는 요구가 90%의 학생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과반수의 학생이 결과적으로 이번 데모를 잘못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음은 사실이다. 잘못한 것으로 보는 학생이 남녀 각각 17.7%, 23%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학생이 남녀 각각 67%, 58%로 나타나고 있다.

삼선개헌반대운동에 대한 설문조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 특히 한일협정반대운동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고는 현재까지 그런 설문조사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삼선개헌반대운동에 대한 당시 대학생들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추세 속에서 나온 것인지 확언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설문조사 역시 남녀별 수치만을 따로 정리했을 뿐 역시 각 대학 별 혹은 서울과 지방 별 수치를 따로 정리하지 않아 그 편차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체로 1960년대 말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엘리트로서의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삼선개헌반대운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 이를 저지하고 학생들을 처벌한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당시 대학생들은 대체로 학생운동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트로서의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이 강했다. “정치인들은 나와 같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진술에는 남녀 각각 71%, 68%가 동의하였다. 또한 “정치현상이란 우리가 모르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진술에는 69%의 남학생, 65%의 여학생이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표면상의 움직임보다는 막후적인 움직임, 공개보다는 비공개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성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극도의 불신감을 반영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불신 풍조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으로도 나타나 37%의 남학생과 34%의 여학생이 기성세대가 국가를 위해 해

놓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발전을 위해 세대교체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는 의견에 71%의 남학생과 63%의 여학생이 동의하고 있음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1960년대 후반의 기성세대 중 정치인들 다수가 1961년 5.16쿠데타 직후만 하더라도 소위 '세대교체'를 앞세워 자신들의 쿠데타와 집권을 합리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학생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신의 조사를 살펴보면, "5.16과 같은 군사혁명은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문항에 70%가 동의하고 10%만이 동의하지 않았다.[19] 물론 대다수 대학생들은 상식적 차원에서 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쿠데타를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5.16쿠데타 초기만 하더라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대는 큰 편이었다. 따라서 이 설문 결과는 5.16쿠데타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신감이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성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신감은 다음 설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치란 원래 더러운 것이다"라는 진술에서 남·녀 각각 45%, 40%가 동의하였다. 또 83%의 남학생과 80%의 여학생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권을 앞세운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신 풍조는 정치, 사회 문제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남학생의 58%, 여학생의 45%가 부동의하고 있다. 이것을 대학생들이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본다면, 소극적인 자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의의 수준은 남자 30%, 여자 40% 정도이다. 남학생은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여자 역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이나 언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74%의 남학생과 77%의 여학생이 "지성인들은

19) 田溶新, 1970 윗 글, 83쪽.

부정의를 보고도 자신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식인에 대한 불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언론자유가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이 남녀 각각 75%, 63%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들이 언론을 불신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의견형성과정에서 언론, 특히 신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남자의 69%, 여자의 71%가 그들의 정치에 대한 의견 형성을 위해서 신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문 다음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정치에 관한 서적 및 친구들과의 대화가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며, 여학생의 경우는 TV나 라디오가 신문 다음에 가는 중요한 정보 출처이다. 대체로 기성 정치인, 교수, 선배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반응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매스 미디어>에서 받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대학생들의 엘리트 의식은 대중에 대한 우월감으로 표출되는 측면도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에 남녀 각각 74%와 68%가 동의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는 선량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량의식은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는 비율에서도 알 수 있다. 남대생의 68%와 여대생의 67%가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의견의 타당성을 믿는 대학생들은 또한 일반대중이 대학생에게 현실참여를 기대하고 있음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남녀 각각 50%와 53%가 이러한 역할 기대를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대학생들이 엘리트로서 자신들의 의견이 대중의 의견보다 더 옳은 것이며 대중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중에 대한 우월감은 대중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에게 '정치인', '청년', '선거', '정부', '지식인', '민주주의', '국회', '여당', '야당', '지도자', '기성세대', '대중' 등 12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 '정치

인', '선거', '기성세대'라는 세 가지 말에 대해서는 다같이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했고, 여기에 남학생들은 '대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일반 대중의 의견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밖에 없다는 엘리트 의식의 발로로 파악된다.

둘째, 이 설문조사에 주목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다"는 진술에 54%가 부동의하고 있는 바, 이들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는 우리나라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반하여 30%~33%의 학생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어느 정치 노선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가장 기여하는가를 알아 본 결과에서는 58%의 학생이 자유민주주의를, 18%의 학생이 교도민주주의, 12%의 학생이 중립주의를 들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963년도의 설문, 즉 서구식 민주주의가 한국에 맞는가 하는 설문조사에서 38%가 이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30%가 이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대답의 비중은 약간 줄어들고 긍정적인 대답의 비중은 크게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조사는 조사대상이 다르고 설문문항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이는 아마도 1960년대에 걸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보다 확고해지고, 삼선개헌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독재'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전보다 더 고조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의견을 보면 61%의 학생이 국민이 신뢰하는 소수의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진술된 설문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상은 어떤 형일까라는 문제에 답한 결과, 민주적 과정을 존중하는 지도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 남녀 각각 54%, 58%이다. 그러나 선의의 군주형을 좋아하는 학생도 27%, 25%가 나와 있었다. 5.16쿠데타를 전후로 '선의의 독재'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바랬던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여

전히 학생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군주형'보다 민주적 과정을 존중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아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용신 조사의 결과는 위의 결과와 크게 다르다. 즉 "선의의 독재는 비능률적인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설문에 무려 76%가 동의를 표했다. 이를 반대한 사람은 16%에 불과하다.[20] 물론 설문 문항에 들어가 있는 '비능률적인'이라는 표현이 준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이 '선의의 독재'를 선택한 것은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요한다. 일단 당시 학생들이 현실비판과 참여에 적극적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당시 학생들 사이에 팽배한 엘리트 의식이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 능력있는 소수의 결정을 더 선호하도록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 앞의 설문에서 '선의의 군주형'이 20%대 중반의 지지밖에 얻지 못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문결과는 아무래도 '비능률적'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능률'과 '효율'을 따지는 경제적 사고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압도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대학생들이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앞에서 보여준 것들과는 일정하게 배치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치적 자유와 넉넉한 경제생활 간의 하나를 택하게 하는 경우, 후자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자유가 중요한가 혹은 넉넉한 경제생활과 좋은 직장이 중요한가를 물었을 때 53%의 남학생과 50%의 여학생이 후자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전자를 더 중요하다고 한 대답은 남녀 각각 34%, 33%

20) 田溶新, 1970 윗 글, 82쪽.

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를 1964년 이루어진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964년 서울대 김태길 교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5개 대학과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 등 지방 소재 5개 대학 학생 1,692명(남학생 938명, 여학생 754명/인문·사회계 864명, 자연과학계 828명)을 상대로 여러 문항에 걸쳐 그들의 '가치관'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중 "설령 독재정치에 의하여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라리 민주정치 아래서 굶주리는 편이 낫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46%가 "그렇다"고 답했고 42%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1969년 조사와 직접 비교를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치를 나누어 보았을 때는 그 비율이 남학생은 각각 43%와 46%, 여학생은 각각 49%와 37%였다.[21] 즉 남학생의 경우 '정치적 자유'와 '넉넉한 경제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1964년 43 對 46에서 1969년 34 對 53으로 바뀌었고, 여학생은 49 對 37에서 33 對 50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1960년대 후반 대학생 일반의 인식 변화를 일정 정도 엿볼 수 있다. 우선 1960년대 전반기에도 남학생의 경우는 '정치적 자유'보다 '넉넉한 경제생활'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기에 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1960년대 전반기에 '정치적 자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1960년대 후반기에는 오히려 '넉넉한 경제생활'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졌다.

1960년대 후반의 대학생 인식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969년 설문조사의 다른 문항을 살펴볼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근대화 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 남녀 각각 23%, 30%였다. 다음은 공업화 또는 산업화로 18%~15%가 주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지적된 요인은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데,

21)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道德觀念> ≪世代≫ 1965년 11월, 322~325쪽.

남학생인 경우는 중간 계층의 성장 및 확대를 16%가 중요시했고, 여학생의 15%는 민족적 자주성의 확립을 꼽았다. 민족적 자주성의 확립을 꼽은 남학생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가 경제건설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81%의 남학생과 77%의 여학생이 동의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4월혁명 직후나 한일협정반대운동 당시와 비교했을 때 1960년대 후반 대학생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경제' 문제가 중요했다는 점은 196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가 동일하다. 4월혁명 직후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경제자립을 통한 후진성 극복이었다. 한일협정반대운동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공통된 문제로 꼽았던 것은 매판과 신식민지로 대표되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 문제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시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경제적 침략도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자 박정희 정권이 제시한 조국근대화라는 가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생산력을 중시하는 경제성장제일주의가 대학생 일반에 이전보다 조금 더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1963년 선거 때처럼 민족적 민주주의를 다시 언급하였지만, 이때 언급된 민족적 민주주의에서는 자주 개념이 아예 사라지고 자립 개념도 단순한 경제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22]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과거 중시되었던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고민이 점차 약화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에도 이념서클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이 여전히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 이 시기 학생운동에서 그 이전 시기보다 '민족주의'가 전면에 드러나지 못했던 근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1964년 설문조사와 1969년 설문조사 모두 통계상의 오차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표본의 추출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또

22) 박정희, <放送演說> 1967년 4월 15일(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3≫ 대한공론사, 442~444쪽).

당시 대학별로 학생운동이 전개되던 상황에서는 대학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1960년대 후반기 대학생들 역시 경제성장으로 변화된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의 논리에 완전히 경도되지는 않았다.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남학생의 47%와 여학생의 36%가 빈부의 차를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부정부패는 남녀 각각 12%, 27%가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대학생들이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대학생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전용신 조사에서도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설문에 79%가 찬성했고, 반대는 10%도 안 되었다.[23] 196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이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화를 지향했던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민속과 민중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1960년대 후반 이후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나타났다. 그 흐름은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사회의 기성문화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대학생들만의 '대학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대학문화 중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대학가에서 '민속'의 유행이었다.[24]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1960년대 말부

---

23) 田溶新, 1970 앞 글, 82쪽.

24) '민속'과 더불어 1970년대 대학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청년문화'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대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성장의 결과 같은 시기 본격화 된 소비문화의 확산과 결합하여, 대학생들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문화적 주체로 부각시켰다. 1960년대 중반까지 대학생들은 정치적으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기성문화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대학생들은 기성문화와 구별되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거대 집단으

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내내 확산된 현상으로, 1960년대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대학문화가 1970년대 학생운동과 결합하여 어떻게 연속되고 또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대학가에서 민속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70년 9월 열린 제1회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 이후이다. 이때 열린 민족예술제가 각 대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25] 그러나 1970년 이전에도 몇 가지 민속행사가 대학가 축제에서 행해진 바 있었다. 1967년 꼭두각시놀음 등을 행한 서울대 법대 낙산제의 '민속예술의 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6] 하지만 1960년대 대학가의 민속행사 가운데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앞선 언급한대로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대 향토개척단에서 매년 개최한 <향토의식초혼굿>이었다.

로 성장하였다. 이때 대학생을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해 준 상징이 '통기타', '블루진(청바지), '생맥주'로 대표되는 소비성이 강한 서구문화였다. 당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의 확산에는 자본의 논리가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라디오와 TV 등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서구적 소비문화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가던 새로운 문화적 흐름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1970년을 전후로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서구의 'Youth Culture'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청춘문화' 혹은 '청년문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 대학문화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문화'라는 용어 역시 197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 1970년대에 '대학문화'라는 용어가 비로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학생들이 '청년문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구적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기성문화와 자신들의 문화를 구별지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등에서 잘 드러나듯,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청년문화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현실참여와 학내 자치활동은 물론 그들의 일상까지 통제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의 억압으로 인해, 일정한 자유를 전제로 한 청년문화는 그 생산자나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정치적인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청년문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를 끊임없이 탄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결국 청년문화의 흐름 중 일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각 대학 노래서클을 통해 점차 현실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 흐름은 1980년대 본격적인 '노래운동'으로 이어져 학생운동과 깊이 결합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년문화가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5) <활발한 大學街의 民俗行事> ≪大學新聞≫ 1974년 6월 17일, 8면.

26) <法 · 師大 祝祭> ≪大學新聞≫ 1967년 10월 23일, 1면.

물론 <향토의식초혼굿>이 1970년대 민속행사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27] <향토의식초혼굿>은 1966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서울대 향토개척단은 그 대신 훨씬 관변적 성격이 강한 '개척제'라는 행사를 1966년부터 매년 개최했다.[28] 한 동안 대학가에서 학생운동과 연결된 민속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던 1969년 4월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가 4월혁명 9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초혼제>를 거행하였다. <초혼제>는 과거 <향토의식초혼굿>과 같이 민속적인 제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사배례와 함께, 제문, 진혼시, 위령사 등을 낭독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에 의한 '풍자素人劇'이 공연된 후, 남사당 굿거리가 펼쳐졌다. 그리고 초혼제에 모인 2백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대 문리대 4.19 기념탑을 횃불을 들고 도는 '횃불행진'으로 막을 내렸다.[29]

다음해인 1970년 4월에도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4월혁명 10주년 기념행사로 초혼제가 다시 열렸다. 형식과 내용은 1969년의 초혼제와 거의 동일했다. 이 해에는 서울대 법대에서도 4월혁명 10주년을 기념하여 '진혼제'가 열렸다. 단, 서울대 법대의 '진혼제'는 문리대의 '초혼제'에 비해 민속행사로서의 성격은 약했다. 대신 법대 학생들은 얼마 전 발생한 '정인숙 살해사건'과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을 풍자한 두 편의 단막극(상감마마와 기녀, 가까운 나라의 근대화)을 공연한 뒤, 법대 본

---

27) <향토의식초혼굿>이 1970년대 민속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1970년대 민속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향토의식초혼굿'을 주도한 조동일의 민속 관련 연구성과들을 기본텍스트로 학습하였다.

28) 1966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회 개척제에는 박동묘 농림부장관을 비롯하여 박근창 중앙대상경대학장 조동필 고대정경대학장 박희범 교수(상대) 등이 참석하였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보면 지도교수와 선배 그리고 시내 각 대학 농촌활동단체 대표자를 초청한 좌담회가 9, 10일 각각 열렸으며, 같은 기간 시화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또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화성군에서 선배 상임위원 그리고 전체 회원들이 모여 田園訓練을 가졌다(<제1회 開拓祭 閉幕> ≪大學新聞≫ 1966년 6월 13일, 1면).

29) <소란 속의 招魂祭> ≪大學新聞≫ 1969년 4월 21일, 7면.

관 앞의 정의의 종을 울린 다음 횃불시위에 들어갔다. 법대생들은 횃불을 들고 교문까지 진출하여 미리 출동한 기동경찰과 대치했다. 그들은 한 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 등을 부른 다음, 다시 법대 안으로 돌아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토론을 벌였다.[30]

1969년에 시도된 서울대 문리대의 초혼제는 당시 학생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이 행사는 1960년대 전반기 <향토의식초혼굿>의 맥을 1970년대 이후 민속행사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1969년 초혼제는 명백히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지속된 <향토의식초혼굿>을 참고해서 기획된 행사였다. 이 행사 준비에 관여했던 서중석의 구술은 다음과 같다.

> 그 전에도 남사당패를 서울대에서 조동일, 김지하, 허술 중심으로 한 적이 있어요. 65년도에 내 했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 양반들 했다는 얘기를 많이 참고를 하면서 유홍준씨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낸 게 초혼제였어요.[31]

초혼제가 처음 열린 1969년은 대학가에서 민속행사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한 해였다. 초혼제 이외에도 고려대 석탑축전과 서울대 농대 상록문화제에서 각각 차전놀이가 거행되었고, 서울대 문리대 학림제에서는 남사당 초청 공연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속행사를 중단했던 서울대 향토개척단도 1969년 제4회 개척제부터는 탈춤 및 농악 공연을 거행하였다. 또한 같은 해 부산대에서는 대학 최초의 '탈반(탈춤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예술연구회'가 만들어졌다. 물론 민속에 관심을 갖는 학생은 아직 소수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행사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

30) <時事풍자극 공연-횃불시위도 가져> ≪大學新聞≫ 1970년 4월 27일, 3면.
31)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다음해인 1970년 이후 몇몇 대학에서 탈춤을 직접 전수받고 이를 공연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 인물인 채희완의 경우 대학 입학 전부터 탈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1970년 서울대 문리대에 입학하자마자 '탈반'을 만들고 탈춤을 직접 배웠고 축제에서도 직접 공연을 했다.[32] 채희완과 같이 민속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노력과 교류의 결과 여러 대학에 '탈반'이 만들어졌다.[33] '탈반'의 확산과 함께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민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캠퍼스 마다 다양한 민속행사가 줄을 이었다.[34] 가히 '민속붐'이라고 부를만한 현상이었다. 비록 대학 밖에서도 민속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커진 상황이었지만, 대학만큼 그 정도가 강하진 않았다. 이제 민속은 기성문화와 대학문화를 구별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 전반기 <향토의 식초혼굿>을 참조한 1969년 초혼제는 그 해에 진행된 대학가의 다른 민속행사들과 함께, 1970년대 민속붐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1969년 초혼제는 학생운동의 맥락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명목상 초혼제는 4월혁명 때 희생당한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였고,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가 주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념서클에 기반한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이, 조만간 예상되는 박정희 정권의

---

32) <채희완 구술>(구술일시: 2008년 7월 14일, 면담자: 이영미; 이영미 편, 2011(a) ≪구술로 만나는 마당극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85~106쪽).

33) 1970년대 각 대학별 탈반의 결성 시기와 공연 사례에 대해서는 채희완, 1982 <70년대의 문화 운동-민속극 운동을 중심으로> ≪문화와 통치≫ 민중사, 206~209쪽 참조.

34) 대학에서 탈춤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데에는 채희완과 서울대 탈반(민속가면극연구회)의 역할이 분명 컸다. 그러나 주강현에 따르면 이와는 다른 맥락도 짚어볼 수 있다고 한다. 당시 백기완이 전통연희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민속학자 심우성과 김세중 등의 그룹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영향이 역으로 대학에 접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주강현, 2005 <반유신과 문화예술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34쪽.

삼선개헌 추진에 맞서, 학생들의 정서적 통일성을 고양해 삼선개헌반대운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문화적으로 확충하자는 의도에서 벌인 행사였다.[35] 素人劇에서 “처음에는 ‘4.19혁명’이던 것이 ‘4.19의거’로, 이제는 벌거숭이 ‘4.19’가 되었다.” “‘매스콤’은 오로지 조국근대화 시책에 호응하여 정부사업의 PR에 주력하고 국민의 계몽에 힘써야 할 터.” 등의 현실을 풍자하는 말들이 이어진 것도 이러한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36]

이 때문에 초혼제 진행과정에서 초혼제를 주도한 학생들과, 학생회, 그리고 학교당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초혼제 주도 학생들은 애초 횃불행진을 계획했으나, 학교당국이 이를 금지하는 바람에 일단 철회한 상태였다. 그러나 초혼제의 마지막 행사였던 남사당 굿거리가 끝나자 초혼제 주도 학생들은 학교당국 관계자들과 교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횃불행진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학생들이 4.19기념탑 주위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진행하자, 명목상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학생회 간부들이 이를 적극 말리면서 횃불을 꺼버렸다. 그 바람에 학교와 학생의 갈등은 물론,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3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 법대 ‘진혼제’에서도 횃불행진이 가두시위로 이어질 뻔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이념서클에 기반한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은 왜 굳이 ‘초혼제’라는 ‘문화’ 행사를 통해 삼선개헌반대운동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을까? 이는 뒤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1968년 통혁당 사건 이후 조직적 ‘학습’을 통한 학생운동의 전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문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다.[38] 한마디로 문화는 정치의 우회로가 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상황에서 감시와 탄압을 피해 조금 더 쉽게 모이고 정치적인 모

35)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36) <소란 속의 招魂祭> ≪大學新聞≫ 1969년 4월 21일, 7면.
37) <소란 속의 招魂祭> ≪大學新聞≫ 1969년 4월 21일, 7면.
38)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색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문화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민속의 경우 민족문화 진흥을 부르짖는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무조건 탄압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배논리가 탄압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문화 행사는 정치적 집회보다도 일반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에 훨씬 용이했다.

문화가 정치의 우회로라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를 통해 정치적 비판의 의미를 감췄다든지 또는 강도를 약화시켰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적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39] 구체적으로 초혼제의 기획과 진행 속에는 1966년부터 중국에서 벌어진 '문화혁명'에 대한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이 담겨 있었다.[40]

민속행사는 아니었지만 1970년 10월 서울대 문리대 학림제에서 이념서클들이 연합해서 진행한 '풍자극'은 당시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이 문화를 이전보다 적극으로 고민했음을 잘 보여줬다. 낙산사회과학연구회, 문우회, 후진국사회연구회 등 3개 서클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풍자극은 제1부 '학림위령제'와 제2부 '반사회적 행위규제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으로 구성되었다. 풍자극 1부에서는 외래풍조에 멋모르고 도취하는 학생, 침체한 학내언론, 어쩔 수 없이 사회풍조에 끌려가는 교수에 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2부에서는 '저임금을 통한 잉여가치의 독점', '사회계급간 및 지역간의 소득격차의 유발',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이 현실을 판치고 있는 형편이라고 풍자했다. 이 풍자극에서는 '대통령특명', '황색일보', '막輸入씨', '倭차관氏', '수입개발공사', '차관도입공사의 社是-모든 어렵고 중요한 일은 외국돈

39) 1970년대 전후 대학문화 중 '민속'과 더불어 학생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연극'이었다. 특히 김지하가 오랫동안 관여했고, 임진택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울대 문리대 연극반은 당시 대학연극에서 주로 행해지던 서구 번역극 대신 우리 현실을 반영한 창작연극을 주로 무대에 올리면서 문화를 통한 현실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단, 연극의 경우 1970년대 학생운동과의 결합이 민속만큼 강하지 않아 일단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40)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과 외국사람의 힘으로', '기모노제국' 등의 용어가 주로 등장했다.[41] 즉 이념서클 학생들은 문화 행사를 통해 일본 차관을 기반으로 한 종속적 경제성장과 이 과정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체제에 순응하는 교수와 언론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대학가에 민속붐이 일어난 후 민속과 학생운동의 결합은 더욱 강해졌다. 물론 본고의 연구 대상인 1971년까지는 대학 내에서 민속행사가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결합도가 아직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970년대 내내 그 결합도는 계속 커져 갔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민속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민속의 주체인 민중에 대한 의식이 각성되었다. "가면극은 민중의 연극"이며 "우리 전통예술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면극만큼 민중의식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하는데 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없다"는 조동일의 말은 당시 학생들이 생각한 민중과 민속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42] 같은 맥락에서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민중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민속극의 애호로 표현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속의 배경이 되는 민족과, 민속의 주체가 되는 민중은 하나로 결합했다. '민중적 민족의식'이라든지 '민족적 민중의식'이라는 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중과 민족을 동일 개념으로 파악하는 대학의 민속 운동은, 식민주의적 불평등구조가 지속적인 억압상태로 되어 있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부터 민속붐, 탈춤부흥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학생들이 '민속'에 열의를 갖고 이를 전승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종종 민속에 대한 관심이 '복고주의', '문화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현장성을 상실하고 탈춤을 전시용 박제로 만든다든지, 탈춤을 저항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든

41) <學林祭 모든 행사 끝나> ≪大學新聞≫ 1970년 11월 2일, 7면.
42) <민속붐을 진단한다> ≪大學新聞≫ 1976년 11월 15일, 8면.

지, 반대로 탈춤만 추면 저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든지 하는 식의 비판도 있었다.[43]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억압이 강해질수록 민중 지향적인 민속이 학생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1980년대에 가서 더욱 분명해졌다.

셋째, 당시 대학가의 민속행사들은 박정희 정권의 지배논리와 미묘한 관계가 있었다. 민속행사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강력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의 민족의식이 '민족주체성'과 '민족문화 진흥'을 앞세운 박정희 정권의 지배논리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대학가에서 민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60년 4월 혁명 이후 고양된 민족주의의 영향력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민족주의는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지배이데올로기이기도 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체성'을 앞세우며 민속 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쿠데타 직후인 196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연례행사로 만들었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공포하고 1964년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70년 제1회 대학문화예술축전에도 '민족예술' 부분을 따로 만들어 민속행사가 대학가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정희의 민속 진흥정책과 대학가의 '민속붐'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사실 1970년대 대학문화 자체가 처음부터 박정희 정권의 지배논리와

---

43) 주강현, 2005 앞 논문, 635~637쪽. 이영미에 따르면 민속에 관심을 갖고 직접 연행에 참여한 학생들 사이에도 활동방식의 차이에 따른 세대 구분이 있다고 한다. 68~71학번의 제1세대는 대학가에 민속을 처음으로 보급한 세대답게 뛰어난 예술적 기량과 상상력으로 졸업 후에도 전업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다. 72~75학번의 제2세대는 민청학련 사건 등 유신체제의 폭압 속에서 정치적, 사회운동적 관심을 갖고 현장으로의 접근을 시도했다. 76학번 이후의 제3세대는 긴급조치 9호와 학도호국단 시대에 다른 운동권 학생들처럼 체계화된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조직성이 강하며 기층민중으로의 현장 이전을 강조했다(<김영철 구술>(구술일시: 2008년 8월 7일, 면담자: 이영미; 이영미 편저, 2011(b) ≪구술로 만나는 마당극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6쪽)).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970년 9월에 열린 제1회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은 대학가에서 민속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학문화'라는 용어가 사실상 처음으로 쓰이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행사에는 처음부터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1970년 3월 전국대학 학생처 과장회의에서는 대학체전과 대학문화예술축전을 각각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 4월에 먼저 열린 대학체전은 4.19 10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으로 급조되었다는 비난을 받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9월에 열린 대학문화예술축전도 마찬가지였다. 문교부가 이 행사를 적극 주도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그 중에는 다음해인 1971년 실시 예정인 대선과 총선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정치적 불만을 문화에 대한 물량적인 보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마디로 "간접적인 학원탄압"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행사에 고려대나 연세대 등 私學의 참여는 저조하였다.[44] 하지만 민속 등 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45]

민속을 비롯한 1970년대 대학문화의 형성 과정에 박정희 정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만큼 당시 대학문화는 정권의 지배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물리적 억압과 통제가 대학생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단순히 물리적 억압과 통제 때문에 대학문화가 정권의 지배논리와 연결된 것만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이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만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나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 같은 여러 장치들이 직간접적으로 1970년대 대학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46]

---

44) <無視된 '自主' 착잡한 反應-全國大學文藝祝典> ≪東亞日報≫ 1970년 9월 7일, 5면.

45) 서울대 민속가면극연구회 학생들도 1971년 제2회 대학문화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부산대 전통민속연구회 학생들과 만나 교류를 시작했다(<채희완 구술>(구술일시: 2008년 7월 14일, 면담자: 이영미; 이영미 편, 2011(a) 앞 책, 137~141쪽)).

46) 청년문화의 형성 과정에도 박정희 정권의 지배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청년문화

하지만 1970년대 대학문화는 박정희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1970년대 대학문화는 박정희 정권의 의도와는 별개로 1960년대 후반 국내외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서구의 '68혁명'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나라 안에서는 196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침체(1967년 부정선거규탄운동과 1969년 삼헌개헌 반대운동에 대한 대중의 외면)를 극복하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운동을 통한 영속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47] 즉 당시 대학문화의 주체들은 정권의 지배논리를 무조건적으로 흡수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대학문화'는 처음부터 박정희 정권과 대학생들이 밀고 당기는 정치적 전장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의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앞세우며 민족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문화 중에서 민속은 몇몇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

탄생, 포크의 유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1960년대 중반의 YMCA <싱얼롱Y>는 정권 차원에서 '합창'을 강조하던 분위기 속에서 인기를 얻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초 쿠데타 직후부터 국가재건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개창운동'을 전개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합창보급운동을 벌였다. 이는 진취적이고 명랑하며 힘찬 내용을 담은 노래를 통해 국가에 유용한 인간형, 말하자면 순종적이고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주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개창운동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합창'이다. 합창은 대중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탄력있는 활기를 배양해주며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단합을 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각급 학교나 직장, 취미생활에서 다양한 합창단이 만들어졌고, 라디오, TV와 같은 매스미디어도 합창단이 부른 건전가요, 국민가요들을 적극 보급하였다. 방송매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일례로 '싱얼롱Y 합창단'은 1965년부터 1967년 사이 주요 라디오 방송에서 만든 건전가요를 위주로 한 합창프로그램들에 잇달아 출연하여 <싱얼롱Y>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젊은이들이 야외에서 통기타를 들고 이 노래들을 함께 부르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기 시작했다(김형찬, <트롯이 싫어 미국 음악을 받아들인 통기타 세대> ≪월간 말≫ 2004년 6월, 32~33쪽).

47) 任重彬, <社會參與를 通한 學生運動> ≪다리≫ 1970년 11월. 이 글은 곧 필화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정희 정권이 관심을 가진 민족문화는 이순신, 세종대왕 등 선택된 몇몇 역사 위인들, 또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같은 중요 문화재, 그리고 대몽항쟁과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극복의 사례들이었다. 박정희의 어록들을 잘 살펴보면 박정희는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그가 계승 발전시키고자 했던 민족문화는 '미풍양속', '민족 고유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으로 한정되었다. 오히려 박정희는 농민과 같은 일반 민중들에 대해 "스스로 잘 살려는 의욕과 자신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정신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그들이 "자포자기와 체념에 빠져 전통사회의 여러 가지 낡은 폐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라고 비판했다.[48]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민속 배제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새마을운동은 민간신앙이나 전통 생활문화를 미신으로 몰아 '장승'이나 '당집'과 같은 민속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민속의 토대를 와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특히 경찰이 앞장섰다. 당시부터 문화재전문위원, 민속학계, 언론 등에서 무분별한 민속 문화재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49]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당국에서 뒤늦게 '민속마을'을 육성하고자 했으나 남아있는 민속 문화재가 없어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50] 같은 맥락에서 민속자료로 선정되었지만 문화적 가치를 잃은 '국사당'과 한강개발 과정에서 소멸될 뻔하다가 밤섬 사람들에 의해 보존된 '밤섬 부군당'도 박정희 정권이 민속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51] 비

48) 박정희, 1978 ≪민족중흥의 길≫ 광명출판사, 87~88쪽.

49) <'새마을'에 밀려나던 固有의 民俗-장승·서낭당 保護令> ≪東亞日報≫ 1972년 5월 6일, 5면; <"民俗의 올바른 保護를..."-처음열린 民俗學 전국대회> ≪京鄉新聞≫ 1972년 6월 6일, 5면; <(사설) 文化遺跡의 受難> ≪東亞日報≫ 1973년 12월 13일, 2면.

50) <자취감춘 固有의 農村, '民俗마을' 育成 차질> ≪東亞日報≫ 1978년 1월 25일, 7면.

51) '국사당'과 '밤섬 부군당'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유진, 2012 <박정희 정부기 문화

록 박정희 정권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지만, 이 행사는 대운동장에서 마치 메스게임처럼 진행되면서 민속을 일종의 '쇼'로 변질시켰다.[52]

한마디로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민족문화를 선별하여 대중들에게 제시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속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민족주체성'과 '민족문화 진흥'과 같은 박정희 정권의 지배논리를 일정정도 공유하면서도 정권에 의해 배제된 민속에 주목했고, 자신이 직접 탈춤을 배워 이를 연행하면서 민속의 주체인 민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켰다.[53] 그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와 민중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대학생들을 복고주의가 아닌 현실참여로 나아가게 했다.

3) 일상적 학원 탄압과 병영화

1964~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을 계엄령과 위수령을 통해 탄압한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대학생과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1965년 위수령 발동 직후 8월 31일 정부는 "정치만

재정책과 민속신앙-국사당과 밤섬부군당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9 참조.

52) 백현미, 2009 ≪한국연극사와 전통 담론≫ 연극과 인간, 282쪽.

53) 박정희 정권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탈춤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조력 등을 되살리지 못했다. 대학 밖 무대에서 기획에 의해 가면극 공연이 이뤄지는 경우도 대부분 단발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탈춤을 추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고, 민중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탈춤을 향유하는 자', '탈춤을 생산하는 자'로 성장해 나갔다(백현미, 2009 위 책, 301쪽). 같은 맥락에서 정이담은 탈춤이 당시까지 무형문화재의 차원 이외에는 대중적으로 제도문화권에서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도문화의 보수적 악영향을 처음부터 피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대학가에서 탈춤부흥운동이 연극운동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분석했다(정이담, 1986 <문화운동시론 Ⅲ> ≪문화운동론 2≫ 공동체, 95쪽).

을 일삼는 학생, 정치교수를 모조리 학원 밖으로 몰아내어 선량한 학생과 교수, 학원을 보호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강경 대책들을 종합한 7개항의 시책을 발표하였다. 1965년 9월 4일 정부는 시위 주동 학생과 소위 정치교수에 대한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고려대와 연세대에 무기휴업령을 내렸고 학사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의 대표 사학 두 학교를 본보기로 그동안 정부의 협박이 단지 말뿐이 아님을 모든 학교에 경고한 것이었다. 문교부가 징계를 지시한 정치교수는 11개 대학 21명이었다. 무기휴업령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은 교수 처벌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문교부에서 징계를 지시한 교수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교수 5명이 자진 사임하자 9월 20일 휴업령이 해제되었다.[54]

또한 문교부의 요구로 각 대학 학칙이 개정되어 학생들의 대사회적 발언은 그 내용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정치 관여'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일례로 1966년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성토대회를 벌이자 이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잇달았다. 이미 한일협정반대운동 당시 매판자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던 학생들은 일본으로부터 밀수를 벌인 재벌의 행위를 역시 강하게 규탄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재벌의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 상사를 즉시 추방하라"는 요구가 대학가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일협정반대운동의 좌절로 큰 상처를 입은 학생들은 밀수규탄의 내용이 정치적 요구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다. 시종 가두시위를 피한 채 성토대회만 벌였다. 그러나 이 조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밀수 규탄에 나섰던 학생들이 학교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밀수규탄의 목소리는 학원자유에 대한 요구로 급변하였다. 서울대의 경우 결국 학생 처벌을 밀어붙였던 총장이 학생들의 배척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

5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466~467쪽.

까지 벌어졌다.[55]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향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 정족수 확보를 위해 1960년 3.15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선거 부정을 자행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9일부터 연세대 한국문제연구회의 성토대회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부정선거규탄운동이 전개되었다. 6월 12일 서울대 법대 시위 이후 대학가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15일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각 대학에서 교내 농성도 17일 정도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6월 13일부터 서울대 문리대와 법대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대부분의 대학에 휴교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학생 시위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6월 21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5개 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여 '부정부패일소 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투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결국 7월 3일 휴교가 해제되자마자 각 대학 학생들은 기말시험을 거부하고 다시 성토대회와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7월 휴교가 방학으로 이어지고, 7월 8일 과거 서울대 민비연 학생들을 간첩단으로 엮어버린 동백림 사건이 터지면서 부정선거규탄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56] 그런 의미에서 1967년 부정선거규탄운동은 휴교와 방학,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의 활용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 사건이었다.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당시 문교부는 1969년 7월 7일 학술활동이 아니고 교수의 지도권을 벗어난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활동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일체 허용하지 않겠으며 데모에 참가하는 학생은 강경히 다스리겠다는 공식태도를 밝혔다. 특히 홍종철 문교부장관은 "사전에 신고하면 시위도 할 수 있다는 법률에 대해 학생들의 데모는 법률 이전

55)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앞 책, 202~203쪽.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498~507쪽. 1967년 2학기 개강 이후 일부 대학에서 부정선거규탄운동이 재개되는 조짐이 있었으나 이미 열기가 많이 식어 더 이상 동력을 얻기 힘들었다.

의 문제이므로 학생 신분을 떠나 이성을 잃은 학생활동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강경 방침에 따라 7월 24일 서울시내 국·사립대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징계에 대한 공동보조 문제 등을 의논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이례적으로 방학 중인 것도 도외시하고 데모 주동학생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각 단대에 지시, 제적, 자퇴,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하였다. 서울대가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문교부가 데모 학생에 대한 엄중처벌을 종용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학생 징계는 대학을 넘어 고등학교로까지 번져, 경상북도 내에서만 대구, 경북, 안동, 金泉, 계성고 등 8개 고교에서 7명이 퇴학 처분당하고 77명이 정학 처벌당했다.[57]

1971년 교련반대운동 때에도 문교부는 5월 27일 서울대의 4개 단과대에 휴업령을 내렸다. 문교부는 휴업령 철회의 전제로서 데모 요인의 제거를 학교 측에 지시했다. 이에 서울대는 5월 31일에 문리대, 법대, 상대, 사대의 교수회의를 각기 열어 데모 주동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되었다. 교수회의에서는 데모 주동학생의 처벌이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으나, 학생징계를 해야만 휴업령이 해제되어 개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관철되어 결국 학생처벌이 결정되었다. 4개 단과대에서 제명 3명, 자퇴종용 2명, 무기정학 7명, 근신 1명의 무더기 징계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고, 서울대 학생회는 "문교부의 휴업령 철회와 교환조건으로 된 부당한 학생처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58]

학생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탄압은 집회나 시위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념서클 주도로 열리는 학내 강연회에 대한 탄압이었다. 초청연사 중에 야당정치인 또는 재야인사가 끼어 있을 경우 정부는 학교당국에 초

57) <(風向計) 데모學生의 闕席징계> ≪月刊中央≫ 1969년 9월, 64~65쪽.
58) <(風向計) 大學休業令 後의 大學문제> ≪月刊中央≫ 1971년 7월, 58쪽.

청연사를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다. 연세대의 경우 한국문제연구회 주최의 '한국문제 강연회'가 1966년 5월 12일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학교당국에서 집회허가를 취소하여 무산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문교부에서 초청연사가 야당정치인과 재야인사(김대중, 김영삼, 함석헌)라는 점과 함께, 한연회의 '초대말씀'에서 쓴 "부정의 아성"이란 구절 때문이었다. 문교부의 압력을 받은 학교당국은 강연회 당일인 12일 오전 10시 교무위원회를 열고 '한국문제 강연회'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연사를 바꾸어 집회를 가지도록 한연회에 권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한연회 뿐만 아니라, 이 강연회를 방청하려고 모였던 학생들은 강연회를 유산시킨 학교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강당에 모여 1시간 30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해산하였다.[59]

연세대에서는 1969년에도 한연회와 관련된 강연회가 정부의 압력으로 또다시 파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1969년 5월 16일 한국문제연구회가 주최하는 학술강연회가 '혁명의 진통 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초청연사는 송건호(동아일보 논설위원) 씨와 홍성원(대한일보 정치부장) 씨였다. 그런데 이날 강연회는 원래 그 전에 연세대 축제인 무악축전 시 같은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강연회가 초청연사가 야당정치인(국회의원 송원영)이라는 이유로 학생처가 집회허가를 취소하고 적극적인 만류에 나서면서 무산되자, 결국 초청연사를 교체한 후에야 간신히 열릴 수 있었다.[60]

서울대에서도 1970년 10월 교양과정부 횃불제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모의국회, 학회대항토론대회, 한일관계 세미나 등 일부 행사가 학교당국의 간섭으로 파행되거나 혼란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후진사회연구회(후사연) 주관 '한일관계 세미나'는 학생과의 연기주장과 후사연의 강행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진행되었다. 학교당국과의 마찰 속에 이 세미

59) <압력으로 유산된 강연회> ≪연세춘추≫ 1966년 5월 16일, 1면.

60) <"신문은 자주성 지켜야"-한문연 송씨 등 강사로 강연회 속개> ≪연세춘추≫ 1969년 5월 19일, 1면.

나가 시작된 후에도 교양과정부 학생과장은 이 집회가 “집회허가원을 내지 않았다”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횃불제가 끝난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등의 이유로 불법집회라는 강조했으나, 학생들은 이 세미나를 끝내 강행하였다.[61] 이러한 현상은 비단 연세대와 서울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비일비재한 것이었다.

대학 내 일상적 활동에 대한 통제는 교련의 도입과 강화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1960년대 후반 남북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자 박정희 정권은 사회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1966년 한국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되면서 전면화 되기 시작한 남북긴장관계는 1967년 급속히 고조되었고, 1968년 초부터 연이어 터진 1.21청와대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사건 등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를 극도의 긴장사태로 몰아갔다. 이러한 안보위기를 박정희 정권은 대민, 대사회 통제 강화로 연결시켰다. 1968년 ‘주민등록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그 해 10월경에 이르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주민등록 신고 현황에서 90%의 등록률을 보였다. 주민등록법의 시행은 국가가 성인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통제 수단을 확보했음을 의미했다. 1968년 4월 1일에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이는 국가의 통제 강화 속에서 사회 전체가 병영화 되고 있음을 의미했다.[62]

사회 전체가 병영화 되는 상황에서 대학도 예외일 수 없었다. 반공교육 강화와 함께 박정희 정권은 학생군사훈련 강화를 추진하였다. 1968년 4월 정부는 남자 대학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비롯한 일련의 학생군사훈련강화방침을 공표했다. 그리고 1969년부터 교련은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실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군사훈련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진 박정희 정권은 1970년 하반기부터 교련강화를 통한 대학 병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교련강화안의 골자는 대학생의 4년간

---

61) <敎養部 횃불祭 盛了-토론대회 등 일부행사에 혼선 빚어> ≪대학신문≫ 1970년 10월 12일, 7면.

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541~542쪽.

총 수업시간의 약 20%인 711시간을 교련에 할애해야 하며, 군사교육을 위해 대학에 현역 군인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학생들은 반발했다. 너무 많은 교련 시간도 문제였지만 현역 군인이 교련교육을 직접 담당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다수의 현역 군인들이 대학 내에 들어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대학의 병영화를 촉진하는 조치였다.[63]

학생들은 교련이 국방력 강화나 국방의식 고취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교련 비용으로 무기를 현대화하는 편이 국방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교련강화를 1971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정권이 학생운동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파악했다. 한마디로 교련강화는 군사독재의 전주곡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획일적인 군사훈련이 맹목과 절대복종만을 강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활발한 사고를 질식시키고 그들을 피동적으로 만들어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의 성명서는 교련강화에 대한 당시 학생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영구집권이라는 망상 하에 反民主的인 절차에 의해 三選改憲을 감행하였고 올해 실시될 총선거에서 官權과 金力을 총동원하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들은 이러한 '파쇼 체제'의 확립을 위해 軍國主義化를 강력히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강력한 비판세력인 학생세력을 無力化, 小市民化 시키려 기도하고 있다. 학원 내의 정치 사찰, 학생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국방력 강화라는 명제 하에 학생들에게 二重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중략)...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학원의 병영화를 통해 학생들을 無力化, 小市民化 시킴으로써 학원의 완전한 장악을 기해 양심적이고 순수한 비판세력인 학생세력을 분쇄하려는 의도에

6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위 책, 545~550쪽.

서 나온 것임을 학생들은 간파하고 있다.[64]

교련강화와 대학의 병영화 비판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자유 수호 의지로 이어졌다.

> 이제 大學軍事訓鍊은 중대한 局面에 돌입하였다. 이것은 長期執權의 野慾에 불타, 全國民의 軍事化에 급급하고 있는 저들 反民主集團이 民主良心勢力의 先鋒인 大學의 自由를 완전히 抹殺하려는 음모의 제2단계이다. 大學의 自由는 대학만의 자유에 그치지 않는다. 祖國의 民主主義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大學뿐이며 만일 대학의 자유가 말살되면, 동시에 조국의 民主主義가 구원될 모든 희망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대학의 자유는 곧 三千萬의 自由이며, 대학이 軍事化 되면 三千萬 國民 전체가 自由의 빛을 잃고 파시스트의 軍靴 밑에 영원히 노예상태를 强要당할 것이다. 歷史는 大學에게 祖國과 民族을 위한 先驅로서의 使命을 위탁하였다. 이제 결단의 時期가 다가왔다. 영원히 파시스트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祖國의 民主化를 위한 偉大한 계기가 되느냐의 중대한 時期이다.[65]

교련강화를 통한 대학의 병영화라는 박정희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군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대학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민주화에 대한 사명감을 자극하였다. 1971년 내내 교련 수업 거부를 비롯한 교련반대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은, 1971년 10월 5일 새벽 군인들이 고려대에 난입하여 이념서클 학생들을 불법으로 납치해가자 다시 한 번 크게 반발했다. 이미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 때에도 군인들의 학원 난입에 반발하며 당시 학생들이 '학원방위군'을 결성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군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은 뿌리 깊었다. 또한

64)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선언문> 1971년 3월 22일.
65)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史學科, 社會學科, 外交學科, 政治學科, 哲學科 決議文> 1971년 3월 24일.

1971년 8월에는 서울대 교수들의 '대학자주선언'을 시작으로 각 대학에 교수들의 자주선언이 잇달아 이루어졌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여 학생들의 비난까지 받았던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의 자유와 자주를 주장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한마디로 박정희 정권의 학원병영화 시도는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자극하여 학원자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열망을 더욱 높이는 역효과를 냈다. 그럴수록 박정희 정권은 대학과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권과 대학생의 대대적인 충돌은 불가피했다.

2. 이념서클의 재편과 반독재 민주화운동

1) 소위 '지하신문'의 발행과 민중의식의 대두

196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을 개관해 보면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를 규탄 혹은 반대하는 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은 한일회담의 진전, 한일협정의 조인, 비준이라는 사안에 따라 회담반대, 조인반대, 비준반대, 비준무효화 등의 운동이 차례로 전개되었다. 1966년 삼성재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자 학생들은 재벌밀수규탄집회를 가졌고, 1967년 박정희 정권이 6.8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을 벌이자 학생들은 역시 부정선거규탄운동을 전개했다. 1969년에도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추진에 맞서 삼선개헌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선도적으로 삼선개헌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 운동 속에는 4월혁명 이후 학생운동의 기본 이념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적 지향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특히 1969년 4월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가 발표한 <4.19 제9선언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추진을 "독재독선의 망령이 재림"했다고 질타한 것처럼,[66] 삼

66) <(資料) 時局宣言文-民主 · 自由의 메아리> ≪思想界≫ 1969년 5월, 52~54쪽.

선개헌반대운동에 이르면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을 분명하게 '독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선언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대학생들의 삼선개헌반대운동은 1969년 6월 12일 서울대 법대생 500여 명이 동교 합동강의실에서 모여 '헌정수호 법대 학생총회'를 열고 "여하한 개헌추진음모도 분쇄하겠다"고 성토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6월 27일까지는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과 몇 개의 지방대학이 삼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열었을 뿐 데모에 돌입하는 사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28일 고려대 학생 700여 명이 동교 강당에서 성토대회를 연 다음 교문 밖으로 스크람을 짜고 나와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고, 이 시위를 기점으로 대학생들의 삼선개헌반대 성토대회는 점차 가두시위로 전환되었다. 이미 대학생들의 삼선개헌반대운동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했던 박정희 정권은 고도로 훈련된 경찰기동대는 물론 페퍼포그라는 최루가스 분사기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학생 시위를 진압했다. 7월에 접어들어서도 학생들의 시위는 그칠 줄을 몰랐다.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말 시험을 연기했고, 연기하지 않은 대학에선 학생들이 시험을 보이콧하면서까지 데모에 나섰다.[67] 결국 7월 7일 약 20개 대학에서 조기방학이 실시되었다.

대학이 방학 중에 있었던 1969년 8월 7일 드디어 삼선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삼선개헌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리고 8월 말 개강 이후 대학생들도 삼선개헌반대운동을 재개하였다. 8월 21일 고려대의 호헌 학생총회와 연세대 호헌투쟁위원회의 결의로 시작된 2학기 삼선개헌반대운동은 9월에 들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결국 서울대는 9월 1일 무기휴교에 들어갔고, 다른 학교들도 순차적으로 휴교에 들어가 9월 11일 현재 전국 38개 대학이 휴교 상태를 맞았다. 대부분 대학이 휴교에 들어가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1969년 9월 10일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대, 사대 등 서울대생 100여 명이 기습적으로 서울대 법대 도서관을 점거하고, 수도와

67) 安澤秀, <학생 데모의 어제와 오늘> ≪思想界≫ 1969년 8월, 151쪽.

전기조차 끊긴 도서관에서 9월 14일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개헌안 국회 통과 직후 며칠간 학생 시위가 재개되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68] 1969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삼선개헌반대운동 이렇게 막을 내렸다.

치열하게 전개된 대학생들의 삼선개헌반대운동은 정작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이 침묵했기 때문이었다. 삼선개헌반대운동의 시작을 알린 6월 12일 서울대 법대생들의 '헌정수호 법대 학생총회'는 일부 신문에만 보도되었을 뿐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기사로 취급조차 되지 않았다.[69] 심지어 이 성토대회를 신문의 1판에서 1단 기사로 보도했던 某紙는 1판이 나간 직후 경영자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성토대회 기사가 보도된데 대해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 신문의 2판부터는 그나마 1단짜리 보도마저 삭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에도 언론은 대학생들의 성토대회나 가두시위, 그들의 주의와 주장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어떤 신문이고 간에 제목 2단에 각 대학 데모기사 1단 이상 된 신문은 보기가 어려웠다. 이것이 며칠이고 계속되자 학생들은 삼선개헌 규탄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성토대회나 가두시위에서 기자들의 취재를 스스로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의 상황을 한 기자는 "옛날엔 가자들이 학생대열 뒤에서 취재했으나 지금은 경찰 뒤에 숨어서 취재하게 되었다"는 말로 설명했다.[70]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1960년대 전반기의 4월혁명이나 한일협정반대운동 때와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4월혁명에서 대학생들을 혁명의 주체로 만들어준 것은 대학생들의 행위를 찬양한 언론이었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이 급속하게 고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언론들이 학생들의 동향을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사회 곳곳에 상세하게 전달했기

6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534~538쪽.
69) 安澤秀, 1969 앞 글, 150쪽.
70) 李祥雨, <言論의 눈, 붓과 얼> ≪思想界≫ 1969년 8월, 51~52쪽.

때문이었다. 그동안 언론은 학생운동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이 학생운동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언론의 태도가 바뀐 것은 물론 박정희 정권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 시기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신문도 발행 부수 증대, 자매지 간행, 사옥 신축, 시설 확장 등 '경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즉 당시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신문 가독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구매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문 독자 수는 물론 방송 시청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박정희 정권은 각종 규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언론활동의 자유를 계속 제약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언론의 기업화를 위한 물량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신문사에 상업성이 강한 자매지의 창·복간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기업화를 촉진시킨 반면 비판적 논조를 크게 약화시켰다.[71] 한마디로 언론의 상업화, 기업화 과정에서 언론과 박정희 정권 사이에 일정한 '흥정' 혹은 '결탁'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외부적 압력과 관계없이 신문 경영자 레벨에서의 상업주의가 편집자에 대한 압력으로 하달되어 일선 기자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른 지면이 제작되었던 것이다.[72]

삼선개헌반대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을 외면한 것은 언론만이 아니었다. 역시 그동안 학생들의 우군으로 생각되던 교수와 지식인들도 학생들과 거리를 뒀다. 4월혁명 당시 직접 거리에 나서 교수단 시위를 감행했고, 한일협정반대운동 당시에도 집단 성명까지 발표했던 교수들은 삼선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침묵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즉 한일협정반대운동 과정에서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일부 교수들은 정치교

71) 강상현, 1999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160~162쪽; 176쪽.

72) 李祥雨, 1969 앞 글, 51쪽.

수로 낙인찍혀 학교에서 축출되었던 과거 상처가 교수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심지어 정치와는 아무 관계없는 한글 전용 문제에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교수가 이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다.[73] 학생들은 교수를 이러한 '나약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만큼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져 갔다. 그 결과 정권과 결탁한 기성 언론은 물론, 대학 당국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대학 언론들마저 학생운동을 외면했다. 학생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서울대 문리대 ≪형성≫, 서울대 법대의 ≪Fides≫와 같은 경우도 종종 필화사건에 휘말려 발행이 정지되고 기사가 강제로 빠지는 등 많은 탄압을 당했다.

철저한 외면을 받으며 학생들은 삼선개헌이라는 특정 사안을 넘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사회의 모든 부정적 현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한 학생은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언론과 지식인은 보이지 않은 위협 앞에 굴복하였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무관심에로의 편향은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였으며 조작된 위기의식은 국민을 기만하였다. 위기의식이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이제 유일하게 그 자세를 지키는 학생은 가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쓰라린 경험은 차라리 하나의 교훈이었다. 그것은 대학이 본질적 가치와 기능과 그 권위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민주투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략)... 거듭하거니와 '우리의 대학'을 갖기 이전에는 어떠한 민권투쟁도 불가능하다.[74]

언론과 지식인마저 침묵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

---

73) 玄勝鍾, <'斷絶敎授'의 實像과 虛像> ≪月刊中央≫ 1969년 11월, 184쪽.

74) 李哲遠(서울대 학생), <大學改革의 氣流> ≪思想界≫ 1969년 11월, 204~205쪽.

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는 자각 아래 기성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까지 스스로 담당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 탄생한 것이 소위 '지하신문'이었다. 1970년 10월부터 서울대 법대의 운동 주도 학생들은 기성 언론과 대학 언론을 대체하는 저항 언론으로 ≪자유의 종≫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자유의 종≫은 창간호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불의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주체적 역사의식에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통찰하며 새 역사의 횃불을 높이들 것이다.[75]

이후 여러 대학에서 운동 주도 학생들에 의해 동인지 형식으로 이러한 신문이 연이어 만들어졌다.[76] 정부는 이들 신문을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유포한 '지하신문'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발행인까지 실명으로 명시하고 배포되는 공개적인 신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지하신문'은 대학생들은 물론 대학원생과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인기를 끌었다.

소위 '지하신문'의 간행 주기는 주간, 격주간, 월간 등 제각각이었고, 활자로 인쇄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프린트한 것이 많았다. 발간경비는 대부분 간행 주체들의 회비로 충당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부당 10원씩 받아 제작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개중에는 자체경비의 조달을 위해 자금염출과 판매 계획을 세우는 그룹도 있을 정도였다. 이

---

75) <'자유의 종'을 내며> ≪자유의 종≫ 창간호 1970년 10월 3일, 1면.

76)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 선포 이전까지 각 대학에서 간행된 소위 지하신문은 다음과 같다. ≪자유의 종≫(서울대 법대), ≪의단≫(서울대 문리대 대의원회), ≪전야≫(서울대 문리대 언론협의회), ≪활화산≫(서울대 상대), ≪새벽≫(서울대 교양과정부), ≪횃불≫(서울대 교양과정부), ≪향토개척≫(서울대 향토개척단), ≪한맥≫(고려대 한맥), ≪산지성≫(고려대 한사회), ≪내나라≫(연세대 한연회), ≪활로≫(연세대 목화회), ≪새얼≫(이화여대 새얼모임), ≪필맥≫(전국대학언론협회).

들 신문의 발행부수는 최고 2천부까지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최저는 2백부 정도였다.[77]

이들 소위 '지하신문'에는 교련반대운동 등 학원 내 소식들과 더불어 정치문제, 노동문제, 도시빈민문제, 농민문제, 한일문제, 사법문제, 언론문제 등 다양한 소식이 실렸다. 아래의 <표5>는 1970년 10월 창간 이후 위수령으로 강제 폐간되는 1971년 10월까지 1년 동안 발행된 1~36호 ≪자유의 종≫ 가운데, 현재 확인이 어려운 23~25호, 32~36호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에 실린 총 297개의 기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1개 기사 당 최대 3개까지 중복해서 내용 분류를 했음.)

<표5> ≪자유의 종≫ 기사의 내용별 분류

분류	기사수	(총297건 중) 비율
학생운동	122	41.1
한일관계	45	15.2
정치	43	14.5
경제	40	13.5
대학통제	35	11.8
언론	30	10.1
민생	29	9.8
사회운동	28	9.4
교련	24	8.1
학생처벌	24	8.1
학내행사	20	6.7
학외행사	20	6.7
노동	14	4.7
인권	14	4.7
민족	11	3.7
학원자치	8	2.7

77) 金鍾斌, <오늘의 大學文化, 그 現住所> ≪世代≫ 1971년 11월, 129쪽.

문학	6	2.0
문화	6	2.0
기타	5	1.7
사회	5	1.7
외자	5	1.7
학생서클	4	1.3
한미관계	4	1.3
대학제도	3	1.0
통일	3	1.0
농업	2	0.7
국제정세	2	0.7

출전: ≪자유의 종≫ 1~36호(단 23~25호, 32~36호는 缺)

<표5>와 같이 ≪자유의 종≫에는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학생운동 이외에도 한일관계, 정치, 경제, 대학, 언론, 민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는 그만큼 당시 학생운동이 단순히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의 諸모순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78] 특히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노

78) ≪자유의 종≫ 기사 내용을 분류했을 때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한일관계' 기사가 매우 많고, 반면 '통일' 기사가 적다는 사실이다. 일단 '한일관계' 기사가 많은 것은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의 결과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고, 여기에 더해 1970년대 초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사또 수상의 방한 문제가 논점이 된 결과였다. 반면 '통일' 기사가 적은 것은 1960년대 중후반 내내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통제 속에 통일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통일' 문제가 학생운동의 논점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을 전후 국제적인 데탕스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결과 박정희 정권도 1970년 8.15선언 등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학생운동 세력들은 통일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례로 서울대 문리대에서 발행되던 ≪전야≫의 경우 4호부터 <통일에의 제언>이라는 통일 관련 칼럼을 연재했는데, 남북경쟁을 강조하는 박정희 정권의 통일방안을 '새로운 북진통일론'로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대신 자주적 반외세 운동의 전개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추진 등 과거 4월혁명 직후 민통련이 추구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을 주장했다(<통일에의 제언> ≪前夜≫ 1971년 10월 1일, 4면; 10월 8일, 3

정된 부정부패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졌다.

4월혁명 때부터 학생들은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부정축재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5.16쿠데타 직후 잠시나마 군사정권에 기대를 가졌던 것도 그들이 부정부패와 같은 舊惡 청산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었고, 곧 기대를 접은 것도 그들이 결국 구악보다 더한 新惡을 자행했기 때문이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권력에 기댄 매판자본과 특권층의 부정부패는 날로 심해졌고, 이러한 사회정의와 윤리의 타락은 학생들에게 민족발전의 암이며 민주주의의 악독한 병균이자 민족 최대의 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발생원인은 명백히 집권지배층에 있었다.[79] 1971년 교련반대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교련철폐 요구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이 강하게 제기된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학생들이 부정부패와 결부시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불평등의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성장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해졌다. 대외경제에의 의존구조, 불평등한 소득배분, 노동현장의 핍박, 농촌경제의 파행성, 도시빈민의 비참한 삶이 서서히 학생운동의 쟁점으로 등장했다.[80] 특히 1970년 11월 전태일 분신사건과 1971년 8월 광주대단지사건이 많은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민중에 대한 자각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1970년 4월혁명 10주년을 기념하여 ≪신동아≫가 마련한 대학생 대담에서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와 民衆은 전혀 유리된 상태에서 운동하여 왔다,

면). 이는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본 것처럼 1960년대 후반 대학생 일반에서는 '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운동 주도 학생들은 여전히 과거부터 이어온 민족주의적 입장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79) 金永達, <聖職에서 御用으로> ≪思想界≫ 1969년 11월, 199~200쪽.

80) 吳世徹, <두 變數... 학생, 노동운동> ≪月刊朝鮮≫ 1985년 1월, 124쪽.

>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자세를 씻고 戰略上으로나 當爲적으로나 民衆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학생들이 民衆으로 하여금, 꿈틀거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生存段階로부터 人間적인 權利意識을 갖게 하고 社會意識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81]

물론 아직 학생들에게 '민중'은 그렇게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다. 심지어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학생들은 강한 엘리트 의식 속에서 일반 대중이나 민중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불평등의 모순이 심화되자 고통당하는 민중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조금씩 커졌고, 전태일 분신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은 이를 촉진시켰다. 이제 학생운동의 이념으로 기존의 민주, 민족과 더불어 민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혁명으로 정립된 1960년대의 '3반(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권력 강화와 양적 경제성장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1970년대에 들어와 '3민(민중, 민주, 민족)'으로 그 중심이 서서히 옮겨졌다.[82] 결국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학생운동은 단순히 정치적 사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모순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교련철폐 등 학내 민주화부터 부정부패와 불평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민주화까지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960년대 후반 각 대학에서 재편성 된 이념서클이 있었다.

2) 각 대학 이념서클의 재편

---

81) <(좌담) '參與의 四月'에 서서> ≪新東亞≫ 1970년 4월, 96쪽.

82) 서중석,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 32쪽.

① 서울대의 다양한 이념서클들

1964~1965년의 한일협정반대운동이 두 차례나 군대를 동원한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실패로 끝나자, 이념서클 회원들을 비롯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학생들은 큰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한동안 캠퍼스에는 패배감과 무력감이 팽배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은 다시 세력과 조직을 추스르면서 운동역량을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학생운동을 주도해 오던 이념서클들도 일정한 재편을 겪었다.

1960년대 후반 가장 복잡한 이념서클 재편을 겪은 학교는 서울대 문리대였다. 1965년 민비연 강제 해산 당시 서울대 문리대에는 '낙산사회과학연구회'(약칭 낙산연)라는 다른 이념서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1965년 6월 11일 "한국적 이념의 형식을 위한 일반 사회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학과, 철학과, 정치학과 학생 등 약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출범한 낙산연(지도교수 김태길)은,[83] 창립 이후 금요특강, 월 정기세미나, 초정강연회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1967년의 경우 4월 혁명을 기념하며, 뒤에서 언급할 후진국문제연구회 등과 함께 '한국 학생운동의 의의와 방향'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고, 그밖에 동학사상의 의의, 한국의 근대화 발자취, 맑시즘에서의 인간 소외문제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회를 열었다. 1968년도에도 사회과학 방법론, 한국사회의 이중구조 등에 대한 토의를 가졌고 대학 축제(학림제)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병폐 요인'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84] 그러나 낙산연은 학생운동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학술적 성격이 강했고 집회나 시위 등에는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 회원 중 일부가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과 1971년 교련반대운동 등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결국 1971년 위수령 선포 당시 다른 이념서클들과

83) <駱山社會科學硏究會 發足> ≪大學新聞≫ 1965년 6월 21일, 7면.

84) <(서클활동) 文理大 駱山社會科學硏究會> ≪大學新聞≫ 1968년 11월 11일, 3면.

함께 강제 해산 당했다.

1960년대 후반 서울대 문리대에서 낙산연 보다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념서클은 '후진국문제연구회'(이하 후문회)였다. 후문회의 창립 시점과 과정은 현재 명확치 않은데,[85] 손학규, 김용태, 송승락 등 한일협정반대운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징계가 풀려 학교에 복학하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즉 후문회는 과거 민비연을 계승하는 면이 강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서울대 문리대 운동을 이끌었던 이념서클인 민통련과 민비연은 모두 정치학과 학생들이 중심이었던 반면, 후문회부터는 참여 폭이 보다 넓어졌다는 점이다.[86]

후문회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1967년이었다. 이 해 후문회는 '민족주의의 이해' 등의 주제를 가지고 큰 발표회를 가졌는데, 이런 발표회는 결국 선배들이 일본책을 통해 습득한 사회주의 이론과 제3세계 민족주의에 대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반제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있었고, 일본교양학술서적들은 이러한 사회주의를 해설한 것이 많았다.[87] 또한 후문연 회원들은 역시 1967년에 전개된 '6.8부정선거규탄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6월 13일 문리대, 법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서울대학교 민주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이현배)를 구성하기도 했다.[88]

그러나 후문회는 1968년 지도교수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온 후

---

85) 필자는 아직 '후진국문제연구회'의 구체적인 조직시점을 보여주는 1차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단, 1967년 입학 후 곧바로 후문연에 가입했던 서중석은 자신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 해(1966)나 그 전전 해(1965)에 후문연이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다른 기록에 따르면 1965년 말 당시 손학규 등 1학년들의 주도로 결성된 '민족문제연구회'라는 조직이 후에 후진국문제연구회로 재발족되었다고 한다(신동호, 1996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380쪽).

86)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87)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88) <高大 · 서울法大 · 文理大 · 延大 등 不正選擧 규탄데모> ≪東亞日報≫ 1967년 6월 13일, 7면.

결국 사퇴를 하면서 학교에 의해 정식 서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후문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때 대안으로 만들어진 서클이 '농촌문화연구회'(약칭 농문회)였다. 농문회는 1968년부터 준비해서 1969년 3월 발족했는데, 이들이 서클 이름에 '농촌'을 앞세웠던 것은 이념적 색채를 옅게 하여 탄압을 피하고자 한 면도 있었지만, 학생들 사이에 "농민한테 배워야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당시 이념서클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였던 중국 문화혁명의 영향이 있었다. 즉, 당시 학생들은 중국 문화혁명을 "혁명을 제대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운동도 선배들의 영웅주의적 활동을 뛰어 넘어 어떤 뿌리를 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89]

또한 이 시기 농문회와 같은 이념서클들은,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 통혁당 사건의 여파로 후배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꺼렸다. 특히 통혁당 사건으로 서울대 상대의 '경우회'와 '경제복지회'가 괴멸되다시피 하자,[90]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이념서클에서는 개별적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만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은밀한 방식의 접촉과 학습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이념서클들이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반공개' 형태로 활동 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아직 '반공개' 활동의 지향이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문회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정서적 통일성

89)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90) '경우회'는 1958년 경 상과대학 경제학과의 진보적 성향의 학술서클로 출발했다. 다른 학술서클들과 마찬가지로 토론과 연구는 물론, 총회 및 연구발표회 등을 수행했다. 오랫동안 선배로서 경우회에 관여해 온 신영복이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결국 경우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우회 회원들은 곧바로 이론경제학회(약칭 이경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이경회는 심재권의 후사연과 함께 서울대 상대 학생운동을 이끄는 이념서클로 성장했다. 박성준이 이끈 '기독청년경제복지회'도 통혁당 사건으로 경우회와 함께 해체되었는데, 이 서클에는 서울대 상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문리대와 법대 학생들도 여러 명 참여했다고 한다.

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앞서 살펴본 '초혼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하였다. 다음의 서중석과 안병욱의 구술은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혁당과 같은 이런 냄새를 풍기거나 그런 조직을 갖거나 이런 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지. 이런 속에서 새로운 형태, 초혼제에서 봤던 방식이나 연극에서 봤던 방식, 또 농문회활동에서 봤던 방식 이런 것과 함께 자주 이삼십 명씩 떼 지어 가가지고, 또는 학림 근처 술집에 가가지고 몇 시간이 같이 떠들고, 술 먹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호 인간적인 집필을 결집시키자! 그런 식으로 냄새 안 나게 제일 초점을 뒀지. 그러고는 (학습은) 개별적으로 순전히 하자! 은밀하게 그걸 읽는 사람과 일대일로만 관계를 갖자![91]

> 운동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서클에 있었지만, 결단코 서클의 가입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이름을 넣었지만 몇몇 끼리끼리 모이는데 편의적인 것이었지, 지금 식으로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이념교육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 만나서 떠들고, 담론하고 주로 차나 하는 거야. 계획적인 학습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 (중략)... 중요한 문제가 있어 누군가 얘기하면 듣기는 하지만 주로 모여서 시국에 대해서 의견교환하고 논의하고, 몰라 그 전에는 공부를 했는가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떻든 없었어.[92]

농문회는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에 적극 가담했지만 대중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결국 개헌저지에 실패했다. 여기에다가 1969년 말 서울대 문리대 '3과폐합사건'[93]을 거치며 다수의 농문회 학생이 처벌되

---

91)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92) <안병욱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15일, 면담자: 이기훈).

93) '3과폐합사건'이란 1969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내의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를

었다. 이에 1970년대 초부터 문리대 학생운동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서클 통합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문회를 비롯해 한얼, pax Romana 등의 3개 서클이 통합하여 1970년 6월 6일 문우회라는 새로운 서클을 만들었다. 문우회는 '문리대 학우회'라는 전혀 이념적 색채가 없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서클의 표면적인 목표 역시 "현실의 문제점을 연구, 토론, 비판, 통합하며 대학 내의 아카데믹한 풍토 조성"한다는 식으로 학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문우회는 "민주, 민족 투쟁을 계속해온 선배들의 맥맥한 전통을 이어받아 조국의 현실에 대한 학구적 탐구와 그 실천적 행동을 목표"로 하였다.[94] 설립 직후 특히 '한일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95]

한마디로 문우회는 신진회-민통련-민비연-후문연-농문회로 이어지는 서울대 문리대 학생운동의 맥을 잇는 통합 이념서클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문우회 이외에도 또다른 새로운 이념서클이 등장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이 서클이 바로 '후진국사회연구회'(약칭 후사연)이다. 원래 후사연이 서울대 문리대 서클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1968년 서울대학교는 교양과정부를 신설하고 모든 신입생을 교양과정부 캠퍼스에서 공부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1969년 당시 삼선개헌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심재권 등 1학년들은 교양과정부 내에 독자적인 이념서클로 후사연을 조직했다. 이들은 다음해인 1970년 2학년이 되어 자신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각 단과대학으로 흩어졌으나, 이제는 그곳에 후사연 지부를 만들고 서클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후사연은 빈민촌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보고서를 서울대 문리대 학생잡지 ≪형성≫에 게재하려다가 막판에 원고가 삭제되는 파동을 겪었고,[96] 교양과정부 축제(횃불제)에서는 한일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계획

철학과로 통합하는 데 대해 문리대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총장실을 점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농문회 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이 처벌을 받았다.

94) <(서클순례) 서울文理大 文友會> ≪議壇≫ 제2호 1971년 10월 7일, 4면.

95) <'文友會' 출범> ≪자유의 종≫ 창간호 1970년 10월 3일, 4면.

했다가 학교당국에 의해 저지당했으나 행사를 강행하는[97]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덕분에 후사연 회장 심재권의 소속 단과대학이었던 상대는 심재권의 후사연과, 또 김대환, 김근태의 이론경제학회(경우회의 후신) 등의 활동 덕분에, 1970년대에 들어와 서울대 학생운동에서 문리대, 법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리대 내에서는 문리대 학생운동의 전통을 잇는 문우회와,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온 후사연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다. 문우회 측에서는 "문리대는 문리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리대 학생들은) 다 문리대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문리대 밖의 조직, 특히 상대 심재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문리대 학생운동과 상대 학생운동을 엄격히 구분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리대 내 후사연 회원들은 활동을 계속했고, 갈등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우회와 후사연 두 서클에 모두 가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98]

후사연은 다른 이념서클들과 비교했을 때 학술 또는 이론적인 관심보다 사회현실과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99] 그들은 앞서 언급한

---

96) <文理大 '形成' 發刊 지연> ≪大學新聞≫ 1970년 11월 9일, 3면.

97) <韓日問題 seminar 集會 방해-서울大 교양과정부> ≪자유의 종≫ 제2호 1970년 10월 13일, 1면.

98)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99) 후사연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 평자는 후사연의 리더 심재권을 사회법학회 장기표와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장기표의) 목표가 민주, 복지, 통일 등으로 좀 공허하기까지 했다면, 심 회원(심재권) 경우의 그것은 철저한 '박정희 타도'로 주 타깃이 정해졌던 것이고 이 점에서 장 회원(장기표)의 운동 개념이나 전략이 보다 순수했다면 심 회원의 그것은 좀 더 정치적이지 않았을까 한다... (중략)... (심재권)은 71년 당시 대학가에 중구난방이던 이슈를 민주로 결집시켜 조직 결성으로 역동화한 솜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중략)... 확실히 그는 운동의 '학생 선생'이 되기에 족했다. 다시 말해 그는 당시 교련반대, 부정부패 일소, 부정선거 규탄 등의 제 구호를 '민주수호' 하나로 묶어내는 이슈의 정핵화, 그리고 일부 대학, 혹은 재경대학 중심이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운동의 광역화, 이런 점은 그가 아마추어 단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허도학, 2001 <71동지회의 오늘> ≪(71동지회 30주년 기념문집)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224~225쪽).

빈민촌 실태조사는 물론 평화시장 노동자 실태조사의 보고서를 당시 야당인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게재한 바 있었다. 각 대학 학생회장 선거에도 적극 개입하여 1971년 문리대 이호웅, 법대 최회원, 상대 김상곤 등 주요 단과대학 학생회를 모두 장악했다.[100] 또한 후술하겠지만 후사연을 중심으로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약칭 민주수호전학련)이라는 대학연합운동조직을 만들어 1971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참관 및 부정선거규탄 등의 방식으로 적극 개입하였다.

서울대 법대의 경우 1950년대 말에 탄생한 사회법학회가 4월혁명과 한일협정반대운동을 거치면서 196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법대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1966년의 경우 3월 17~19일 강원도 삼척 도계읍과 장성읍 광산근로자 실태조사 하였는데, 이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동대문경찰서는 회장 임종률을 소환하여 실태조사의 의도와 배경에 온갖 의심을 품고 조사를 하면서 사회법학회의 목적에 나오는 "사회정의를 실현..."이라는 표현을 두고 사회법학회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용공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일도 있었다. 1970년 1월에는 서울시 용두동, 연희동, 성산동 빈민지구, 1971년 1월 10~15일 부산지역 노동자, 1971년 9월 경기도 광주대단지(현재의 성남시) 빈민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이영희, 임종률이 대학원에 재학하며 후배들을 '지도'했다. 여기에 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과 재벌밀수 성토로 징계를 받았다가 베트남 파병을 다녀온 이협, 장기표가 복학하여 후배들과 어울렸다. 조영래, 유정석, 송두환, 오제세, 최형무가 1965~1971년 기간의 회장을 역임했다. 학생운동의 주동자로 앞장선 이신범, 조희부, 이광택, 이상덕 뿐만 아니라 1967년 입학생인 권영철, 박병연, 최경락, 전광희, 1968년 입학생인 최칠규 등이 1960년대 후반 같이 활동했던 사회법학회 회원이었다.[101] 이들 중 이신범과 장기표 등은 1970년 10월

100) 신동호, 2007 ≪70년대 캠퍼스 1≫ 도요새, 111쪽.

101)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편찬위원회, 2008 ≪서울법대 학생운동사-정의의 함성

3일 소위 '지하신문'의 대명사인 ≪자유의 종≫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후사연의 심재권과 함께 1971년 4월 민주수호전학련 조직에 앞장섰다.

② 고려대 한국민족사상연구회와 한맥

민사회와 민정회가 196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고려대의 경우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민사회와 민정회를 대신하여 새로운 양대 이념서클이 등장하였다. 먼저 등장한 것은 '한국민족사상연구회'(약칭 한사회)였다. 한사회는 1967년 3월 15일 '민사회'(회장 김봉규)와 '한사회'(회장 김호일)라는 두 서클이 통합하면서 탄생했다.[102] 여기서 한국민족사상연구회의 모체가 된 두 서클 중 '민사회'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민족사상연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사회'는 '민정회' 회장이었던 김호일이 별도로 조직한 '한국사상연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103] 한사회의 모체 중 하나인 '한국사상연구회'는

1964~1979≫ 블루프린트, 22~23쪽.

102) <'韓思會' 統合總會> ≪高大新聞≫ 1967년 3월 18일, 3면.

103) 한사회의 모체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1차 자료의 부족과 혼란 때문이다. 1967년 한국민족사상연구회 발족을 알리는 ≪高大新聞≫ 기사를 보면 한사회의 모체가 된 두 서클에 대해 약칭만 사용했다. 따라서 이 기사만으로는 두 서클이 정확이 어떤 서클인지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高大新聞≫에는 이미 1966년 기사에 '한국민족사상연구회'라는 서클이 두 차례 등장한 바 있고, 두 기사가 각기 약칭을 하나는 '한사회', 또 하나는 '민사회'로 쓰고 있다(<'民族主體性' 강조-申교수, 韓思會 세미나서> ≪高大新聞≫ 1966년 11월 12일, 3면; <'民思會' 세미나 성황> ≪高大新聞≫ 1966년 11월 26일, 3면). 일단 기사의 내용 상 1966년 기사에 각각 한사회, 민사회로 다르게 언급된 '한국민족사상연구회'는 동일한 조직으로 보이며, '한국'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 보통의 용법을 보았을 때 이 조직은 한일협정반대운동을 주도한 민족사상연구회, 즉 민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사회'의 경우 이 조직의 회장이 민정회 회장 김호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민주정치사상연구회 앞에 관용적으로 '한국'을 붙여 한사회로 줄여 불렀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다른 기록에서 별도 조직인 '한국사상연구회'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아 일단 민정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성헌, 김극기 등 1964년 당시 고려대 교양학부 1학년으로서 한일협정반대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17명의 학생이 조직한 '신조회'가 그 뿌리였다. 1964년과 1965년의 교내외 시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은 1965년 8월 위수령 이후 동기생들은 물론 1년 선배인 김호일, 정해남 등을 규합해 1965년 12월 한국사상연구회를 발족시켰다.[104] 그리고 이들은 1년여 뒤 민족사상연구회, 즉 민사회와 통합해서 한국민족사상연구회, 즉 한사회를 만들었다.

한사회는 1967년부터 회지 ≪한사보≫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105] 1970년의 경우 10월 말에 발간 예정이었던 제15집이 모기관에 의해 일부 기사가 삭제, 절단, 압수되어 재인쇄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106] 그 밖에 다른 일반적인 학술서클들과 마찬가지로 정기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게 한국의 현안과 민족 문제였다. 특히 1968년 4월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된 '북한학 연속대강연회'와[107] 세계적인 냉전의 완화, 즉 데탕트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1970년 11월 진행된 '통일, 민족주의' 관련 심포지움이 눈에 띈다.[108]

또한 1971년 한사회가 강제로 해체된 후 그 회원들이 다시 결집을 시도하다 1973년 적발된 소위 '야생화 사건' 당시 공소장을 보면, 1970년 초 한사회원들이 ≪사회주의사상사≫(을유문화사), ≪공산주의

---

104) 신동호, 2007 앞 책, 60~61쪽.

105) <韓思報 發刊> ≪高大新聞≫ 1967년 6월 10일, 3면.

106) <韓思會報 압수 소동> ≪高大新聞≫ 1970년 11월 9일, 3면. 이 사건에 대해 서울대 ≪자유의 종≫에 나온 기사는 다음과 같다. "고대 한국민족사상연구회 회지 ≪한사보≫가 압수당했다. 고대 당국은 한사보의 '시시비비', '판자촌' 등 까십난을 문제로 삼았다고 하는데 동 까십에서 학생들은 솔제니친에 관한 기사와 교련문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학생들은 당국이 서울법대와 고대의 지난번 강연회의 초록과 同誌의 논설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 학내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다."(<고대 '한사보' 전부 압수> ≪자유의 종≫ 제4호 1970년 11월 2일, 1면).

107) <北韓學 강연 盛了-韓思會 주최> ≪高大新聞≫ 1968년 4월 22일, 3면.

108) <韓國問題 심포지움> ≪高大新聞≫ 1970년 11월 16일, 3면.

≫(사상계사), ≪중국공산당사≫(사상계사), ≪모택동사상≫(지문각, 김상협 저) 등을 읽은 것으로 나오는데,[109] 이 공소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더라도 중국공산당이나 모택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한사회는 1971년 5월 모택동 사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110] 한사회에서 중국공산당이나 모택동에 관심이 컸던 것은, 1950년대 이념서클 때부터의 관심이 지속된 면이 있고, 또 앞서 서울대 농문회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문화혁명의 영향이기도 했지만, 고려대의 경우 김준엽과 김상협이라는 두 교수가 이 분야를 전공한 관계로 학생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사회는 발족 직후 67학번들을 신입회원으로 선발하면서 면접 시험을 봤다고 한다. 즉 학기 초 각 학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1학년들을 지명해서 김호일 등 한사회에서 가장 높은 4학년 선배들이 면접시험을 봤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여 명을 신입회원으로 뽑았다.[111] 당시 시험 문제는 '한국민족주의에 대해 논의하라',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이념과 방향'이었다.[112] 이런 선발 방식이 이후에도 지속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념서클로서는 매우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사회는 연세대 한문연 못지않게 강한 공동체의식과 단결력을 강조했다. 67학번으로 한사회를 이끌었던 윤준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우리(한사회)는 좀 엉뚱한 게 요새는 엠티라고 하는데 이름도 그냥 가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수련회, 단합대회 이런 말 써서 구릉이라던가 강가나 이런데 가죠. 텐트 쳐놓고. 그리고 천마산 산

---

109) <야생화 사건 공소장>(고대 민주동문회, 2003 ≪민우지 · 야생화 자료집≫, 92쪽).

110) <韓思會 발표회-모택동사상 토론> ≪高大新聞≫ 1971년 5월 26일, 3면.

111) <이관영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115~116쪽).

112) <조성준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위 책, 138~139쪽).

속에 들어가서 주로 자기가 써,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2학년이라서 가르치는 것은 이슈에 대해서, 삼선개헌이면 삼선개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씁니다. 한번 연설문을 쓰게 하고 잘못 쓰면 다시 써라. 그 당시는 막 기합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발표회를 하죠. 연설을 자기가 성토를 합니다, 성토문을. 격문을 또 쓰고. 그것은 자기가 책을 읽어야 나오는 것이니까 잘못 쓰면 혼나는 것이지. 이것 밖에 못 하냐 그러면서. 잘못 쓴 놈은 어디 가냐 하면 밤에 산 밑에 가서 막걸리도 사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수유동 이런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착순 집합시키고. 그렇게 하는 훈련부장도 있었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단일한 조직. 정신적으로 지금과 같이 학습해서 이념적으로 뭉치기보다는 이념적으로는 이미 반독재에 뭉쳐져 있고, 주로 자유화·반독재 이런 테마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서울대, 부산과 같은 곳은 주로 지하써클로 들어가서 했으니까. 우리는 상당히 담백하고, 표면적으로 고대 쪽은 굉장히 명쾌했어요, 내용이. 교련반대면 교련반대 써라. 소신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연설하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남 성토도 하고. 성토해야 되니까. 저희 말은 성토라는 것이 사실 선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득·선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막 끌어오고 격렬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실천적 액티비스트들를 양산하는 것이지.[113]

한사회와 더불어 1960년대 고려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또하나의 이념서클은 한맥이었다. 한맥은 1969년 3월 17일 민족이념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활동해온 '민맥'과 휴머니즘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토론해 온 '한모임'이 통합하여 만들어졌다.[114] '한모임'은 1966년 당시 교양학부 1학년인 66학번 40~50명이 학생들이 교양학부 학생회장 선거와 사카

113) <윤준하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10일, 면담자: 이기훈).

114) <民脈과 한모임, 한맥으로 통합> ≪高大新聞≫ 1969년 3월 24일, 3면.

린밀수사건규탄시위를 함께 하면서 만든 서클이었다.[115] 처음에 이들 대부분은 한모임과는 별개로 기존의 다른 서클에도 중복 가입했는데, 1967에 만들어진 한사회에 가입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그 중 1966년 민사회 시절부터 가입했던 66학번들은 상당수가 통합 한사회보다 한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116] 이들이 1967년 6.8부정선거규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한모임의 독자적인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117]

그런데 1967년에 대학을 들어온 67학번들도 "민족문제나 계층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념서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양학부 1학년 말부터 독자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118] 그리고 2학년이 된 이들은 1968년 4월 19일 '민맥'이라는 이름의 서클을 만들고 창립기념토론회를 가졌다.[119] 민맥 역시 한모임과 마찬가지로 한사회 등 기존 서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자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이념서클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한모임과 민맥은 처음에는 각자 별개의 서클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조직의 지향이 동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968년 전국남녀대학 토론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보조를 맞추다가, 결국 1969년 통합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1969년에 2학년으로 진학한 68학번 후배들의 통합요구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120]

한맥의 주요 활동은 토론회였다. 한맥은 '한국민족주의의 전망', '한국 근대화 과정에 따른 빈곤과 소외의 문제'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었고, 1년에 한 차례씩 전국 주요 대학의 이념서클 학생들을 모아 1971년까지 대규모 토론대회를 계속 진행했다. 또한 한맥은 다른 이념서클들에 비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그래서

---

115) <이원보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앞 책, 47~48쪽).
116) <천영세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위 책, 97쪽).
117) <이원보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위 책, 48~49쪽).
118) <조성준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위 책, 138~139쪽).
119) <民脈會 발족> ≪高大新聞≫ 1968년 4월 22일, 3면.
120) <함상근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앞 책, 262~263쪽).

1970년에는 일부 회원들이 강원도 도계 탄광에 가서 노동자 의식조사를 벌였고, 창립 회원인 66학번 천영세, 이원보, 조춘구, 박찬억부터 67학번 조성준, 68학번 김영곤, 양재덕 등 많은 회원들이 졸업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121]

1960년대 후반기 고려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한사회와 한맥은 여러 모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같은 이념서클이었지만 한사회는 학술적인 면보다 실천적인 면이 강했고, 한맥은 그 반대였다. 이는 1960년대 전반기 민정회와 민사회의 관계와 유사했다. 윤준하의 지적처럼 "(한맥)은 토론회 쪽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한사회)는 데모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122] 다음으로는 학생회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 관계가 있었다. 앞서 지적했지만 1960년대 고려대 학생운동은 실제로는 이념서클이 주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면에는 학생회가 나서 전교생들을 끌어 모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사회와 한맥은 학생회 선거에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가졌다. 1969년의 경우 한맥이 총학생회장과 다수의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배출했다.[123] 이로써 1969년 고려대 학생운동의 주도권은 한맥이 잡았다. 일례로 이해 벌어진 삼선개헌반대운동 당시 '범고대 민주수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해서 먼저 운동에 나서 조직은 한사회였지만, 곧 한맥 출신 총학생회장 조춘구가 이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사회와 한맥이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중요한 국면에서는 결합하고 협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련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1971년 상반기에는 한사회가 지원하는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다수의 한사회 회원들이 총학생회에 포진하여 운동을 주도했다. 반면 2학기에 총학생회장이 바뀌자 투쟁동력이 많이 소모된 한사회를 대신해서 한맥이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124] 이처럼 양 서클은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

121) <김영곤 비망록-이기훈 교수 대담 준비> 2007년 9월 8일.

122) <윤준하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10일, 면담자: 이기훈).

123) <이원보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앞 책, 49~50쪽).

124) <유영래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앞 책, 231쪽).

③ 연세대 한국문제연구회

서울대 법대의 사회법학회처럼 연세대의 이념서클 한국문제연구회(한연회) 역시 많은 굴곡 속에서도 해체되지 않고 연세대 학생운동을 계속 주도해 나갔다. 한일협정반대운동 과정에서 해체의 위기를 맞았으나 1965년 후반 교내 단체로 재등록하는데 성공한 한연회는 다시 일상적인 학술활동, 즉 주간토론회와 다양한 심포지움, 강연회 등을 이어 나갔다.[125] 이 과정에서 한연회가 주최한 1966년 5월 '한국문제' 강연회가 장준하 등 초청연사의 신분을 문제 삼은 문교부의 조치로 인해 유산되는 일도 일어났다.[126] 또한 한연회는 1966년 초부터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한국연구≫라는 서클 연구지를 간행하기 시작했고, 그해 11월에는 ≪내나라≫라는 서클 기관지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내나라≫는 이후 1970년대 초 유행하기 시작한 소위 '지하신문'의 선구격인 의미가 있다.

---

125) 한일협정반대운동 당시 한연회의 부침과 관련하여 1966년 11월 21일자 ≪내나라≫ 제2호에는 "한일회담 파동으로 본회가 해체된 것은 1965년 3월이었다... (중략)... 본회가 재창립 된 것은 1965년 5월이었"다고 되어 있다(김영래·임진영·김영준 엮음, 2003 ≪(한국문제연구회 창립40주년 기념자료집)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 디컨하우스, 177쪽). 이로부터 2년 후 간행된 1968년 11월 25일자 ≪연세춘추≫에서는 한연회가 1965년 "교내 서클에서는 유일히 해체를 당했다가 동년 6월 재창립된 바 있다"고 밝혔다(<(각 서클을 찾아서) 한국문제연구회 편> ≪연세춘추≫ 1968년 11월 25일, 3면). 그리고 2003년 간행된 ≪(한국문제연구회 창립40주년 기념자료집)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에서는 1965년 "10월 6일 당국의 조치로 서클 재등록"이라는 설명이 나온다(김영래·임진영·김영준 엮음, 2003 위 책, 31쪽). 1965년 9월 27일자 ≪연세춘추≫에 "한국문제연구회에서는 오는 28일" "교내단체에 대한 재등록"에 "관한 것을 토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았을 때(<한국문제연구회 28일 회원총회> ≪연세춘추≫ 1965년 9월 27일, 1면), 마지막에 언급한 40주년 기념자료집의 내용이 사실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26) <압력으로 유산된 강연회> ≪연세춘추≫ 1966년 5월 16일, 1면.

1963년 창립 이후부터 한연회가 강제로 해체당하는 1971년까지 한연회의 회원 가입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는 한연회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에 동참하는 경우다. 64학번인 김영래는 한일협정반대운동의 시작을 알린 1964년 3월 24일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것이 한연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친구들고 한연회에 가입했다고 한다.[127] 70학번 김태향도 2학년 때인 1971년 봄 당시 한창이던 교련반대 시위 중 시위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연회 회원임을 알고 곧바로 한연회에 가입했다고 한다.[128] 둘째, 다른 한연회 회원들의 가입 권유를 받고 동참하는 경우다. 65학번 이시우는 누군가의 소개로 한연회 부회장 유현수를 만나 그의 권유로 한연회에 가입했으며[129] 68학번 한영수는 중학교 동창이자 대학 선배였던 홍정유의 권유로 다른 친구와 함께 한연회에 가입했다고 한다.[130] 셋째, 가입 홍보물을 보고 본인이 흥미를 느껴 서클에 가입하는 경우다. 70학번 김영호는 2학년 때 연대 정문 앞 굴다리 양쪽 벽에 붙은 한연회 신입회원 대자보를 보고, 특히 한연회의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라는 슬로건에 끌려서 한연회에 전무후무한 신학과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한다.[131] 이러한 모습은 당시 다른 이념서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연회 회원들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농활'과 '연수회(오늘날의 M.T)'였다. 물론 한연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주간토론회, 심포, 강연과 같은 학술 활동이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다. '농활'과 '연수회'가 한연회 회원들에게 끼친 영향은 다

127) 김영래, <한연, 민족주의, 단식농성, 그리고 농촌봉사활동>, 김영래·임진영·김영준 엮음, 2003 앞 책, 243쪽.
128) 김태향, <나의 비젼을 가르쳐 준 한연회>, 2003 위 책, 270쪽.
129) 이시우,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순수한 젊음>, 2003 위 책, 255쪽.
130) 한영수, <대학초년의 한연회를 그리며>, 2003 위 책, 260쪽.
131) 김영호, <한연회와 나>, 2003 위 책, 281쪽.

음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내가 명실공히 한연회의 일원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일은 이 해(71년) 여름 충남 태안군 팔봉면 고파도리에서 벌였던 하계 농촌봉사활동이었다. 7월 중하순에 열흘동안 벌인 이 활동을 통해 나는 비로소 진정한 한연회 동지로 받아들여졌고, 나 역시 그렇게 느꼈다.[132]

> (1971년) 봉사활동이 끝난 뒤 근처 해수욕장에 진을 치고 소위 MT가 진행되었는데 이때는 많은 선배들이 참석하여 한연회의 진수인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 사상의 대물림과 선후배간의 훈훈한 정이 아우러지는 시간이 되었다.[133]

1967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 한연회의 농활과 연수회 이외에도, 이때부터 신입회원에 대한 별도의 연수회가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일 년에 한 번씩 열리기 시작했다. 신입회원 연수회는 주로 북한산, 천마산, 수락산 등에서 열렸다. 이렇게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장치들이 1960년대 후반에 활성화되면서 한연회의 위계질서와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다. 다음의 회고는 이러한 한연회의 위계질서와 결속력을 잘 보여준다.

> 당시 한연회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확실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정말 미련하게도 선배들이 시키면 하나도 거역하지 못하고 모두 다 순종했다... (중략)... 많은 일들이 개인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채로 당일 갑자기 지시되었다. 어느날 갑자기 김영철 선배의 지시로 참석한 기독학생총연맹 수련회장에서 김 선배의 사주(?)로 수련회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게 중앙정보부 해체를 주장하던 일, 그리고 김건만 선배 따라서 고대 한맥회

132) 석인호, <한연회의 추억>, 2003 위 책, 284쪽.
133) 김건만, <1971년 한연회의 종언>, 2003 위 책, 268쪽.

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중략)... 그래도 나는 불만이 없었다. 한연회원들은 의례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134]

한연회는 서울대나 고려대의 이념서클에 비해 이념적 색깔이 약한 편이었지만,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1967년 6.8부정선거규탄운동과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그리고 1971년 교련반대운동에서 연세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언제나 한연회였다. 1960년대 후반 연세대 총학생회는 언제나 학생운동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한연회가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다. 1967년의 경우 6.8부정선거가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9일) 한연회가 주동이 되어 연세대 정법대학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벌였다.[135] 1969년의 경우 한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범연세호헌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이 조직이 연세대 삼선개헌반대운동을 이끌었다.[136] 반면 총학생회는 이 운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137] 1970년에는 4월혁명 10주년 기념행사를 총학생회가 무성의하고 미온적으로 진행하자, 역시 한연회가 중심이 되어 '범연세 4.19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조직이 시국 선언, 백서 발표, 결의문 채택 등 4월혁명 기념행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138] 끝으로 1971년 5월 20일에는 교련반대투쟁 과정에서 윤재걸 등 한연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연세대 내의 학생운동 세력은 물론, 자신들과 노선을 같이하는 타 대학 학생들까지 규합한 '범대학 민권쟁취청년단'을 발족시켰다.[139] 이 조직은 얼마후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과 통

134) 김태향, <나의 비젼을 가르쳐 준 한연회>, 2003 위 책, 271쪽.
135) <9일, 부정선거 규탄> ≪연세춘추≫ 1967년 6월 12일, 1면.
136) <"학원정상화 위해 노력"-범연세 호헌투쟁위도 성명 발표> ≪연세춘추≫ 1969년 8월 25일, 1면.
137) <총학생회 처사에 항의> ≪연세춘추≫ 1969년 9월 8일, 1면.
138) <독자적인 기념식 거행> ≪연세춘추≫ 1970년 4월 20일, 1면; 김영래·임진영·김영준 엮음, 2003 앞 책, 87쪽.

합하여 '전국학생연맹'으로 발전하였다.

3) 교련반대운동과 이념서클 간 연대

1960년대 후반기 이념서클과 학생운동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시기 각 대학 이념서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결국에는 모든 이념서클을 하나로 묶는 단일한 연합조직 결성으로 수렴되었다는 사실이다. 각 대학 이념서클 사이의 접촉과 교류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하나의 연합조직의 결성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4월혁명 직후 '민통전학련'의 결성이 추진되었지만, 민통전학련은 기존 이념서클의 연합이라기보다 같은 지향을 가진 새로운 이념서클의 등장과 확산의 성격이 강했다. 한일협정반대운동 당시 조직된 한학련의 경우 이념서클이 아니라 각 대학 학생회의 연합이었고, 또 1965년에 만들어진 '한일협정비준반대각대학연합체'(약칭 한비연)는 각 대학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상호 접촉하여 공동의 투쟁을 모색했던 기구로서 이념서클의 연합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각 대학 이념서클 학생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연합조직 결성까지 이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시 학생운동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4월혁명을 방불케 했던 1964~65년의 한일협정반대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또 3.15부정선거에 버금갔던 6.8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운동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69년의 삼선개헌반대운동 역시 큰 반향과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학생운동이 상대해야 할 박정희 정권의 탄압 강도는 매우 강했고, 기존 학생운동이 보여 왔

139) <활기띄는 학생운동-민권쟁취청년단 결성 언저리> ≪연세춘추≫ 1971년 5월 24일, 3면.

던 자연발생적이고 산발적인 저항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의 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교류, 협력, 연대,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이념서클들을 하나의 연합조직 안에 묶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기 이념서클의 교류과 협력, 그리고 단일한 연합조직 결성에서 맹아적인 형태를 보인 것이 1967년 3월 24일에 결성된 '한국연구학생연맹'이다. 이 조직은 1966년 12월 5일 연세대 한연회와 고려대 한사회의 접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서클은 단일한 연합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서울대 낙산연을 끌어들였다. 이들 세 서클은 1966년 말과 1967년 초에 걸쳐 수차례 모임을 갖고 단일한 연합조직의 회칙 제정, 상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1967년 2월 6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3월에 '한국연구학생연맹'을 정식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출범 당시 제정된 규약을 보면 이 조직의 목적을 "우리의 생활전통과 문화양식 속에서 민족적 특질을 계발하여 사상적 자립, 정신적 자립, 민족적 번영을 위하여 연구 토론한다. 동시에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140] 이는 한연회, 한사회, 낙산연 세 서클이 현실참여를 위해 '민족주의'를 매개로 결합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한국연구학생연맹'이 이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학생연맹'의 모체가 된 세 서클은 이전처럼 주로 자신의 대학 내에서 주요 활동을 벌였고, '한국연구학생연맹'의 차원의 활동은 1970년대 초까지 이어졌지만 1년에 1~2차례 친목모임 또는 세미나 정도가 전부였다. 친목의 수준을 넘어 학생운동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 6.8부정선거규탄운동과 삼선개헌운동을 전

140) <한국연구학생연맹 발기대회>, 김영래·임진영·김영준 엮음, 2003 앞 책, 211~215쪽.

개하면서 각 대학 이념서클 학생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수준은 보다 높아졌다. 1967년 6.8부정선거규탄운동 당시 고려대 한사회를 이끌었던 김극기의 회고에 따르면 고려대 한사회 회원들과 서울대 낙산연, 후문연, 사회법학회, 연세대 한연회의 회원들은 수시로 회합을 했는데, 함께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양유원지, 한강인도교 밑, 명동성당 시계탑 밑, 남산, 장충단공원 등 야외에서 저녁 때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141] 또한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때는 고려대 한사회의 윤준하, 연세대 한연회의 오승용, 서울대 사회법학회의 이신범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였다.[142] 이와 더불어 서울대의 경우 그동안 단과대학에 따라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던 학생운동을 넘어 단과대학 간 조직적인 협력이 모색되었다. 1967년 부정선거규탄운동 당시 서울대 문리대와 법대 학생들이 함께 조직한 '서울대 민주수호투쟁위원회'와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당시 서울대 문리대, 법대, 사대, 상대 학생들이 함께 진행한 도서관 농성 등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1970년 4월혁명 1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대학생연맹' 명의로 <학생운동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백서가 발표되었다. 이 백서를 만든 '전국대학생연맹'은 실제로 만들어진 연합조직이 아니라, 조영래, 조희부 등 사회법학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법대 학생운동 세력들이 삼선개헌반대운동의 실패 이후 더욱 절실해진 전국적 연합조직의 여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다. 특히 이해는 4월혁명 10주년이자 경술국치 60주년이었다. 그래서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국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주제로 각종 학술행사들이 열렸는데, 이 행사들에 이념서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연합조직 결성의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70년 9월 11~12일 각 대학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법대에서 진행된 '한일문제대강연회'와 9월 28~29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 그리고 10월 16~17일 서울대 상대에서 열린 '한일문

141) 김극기, <한연회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2003 위 책, 415쪽.
142) <윤준하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10일, 면담자: 이기훈).

제 남녀대학생 토론회' 등이었다. 여기에 이해 11월 13일 발생한 전태일 분신자결 후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추모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각 대학 간 연대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143]

그 중에서도 각 대학 이념서클 학생들을 가장 강하게 묶어주었던 행사는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열렸던 고려대 한맥 주관 '전국남녀대학 학술토론대회'였다. 1968년 고려대 축제기간 동안 열린 제1회 토론대회는 한맥의 전신인 한모임과 민맥의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후진국 민족주의의 성격과 방향' 및 '역사적 현실 속의 대학인의 모랄'이라는 논제로 전국 19개 대학 학생이 참가했다.[144] 1969년 한맥 결성 후 열린 제2회 토론대회에서는 '근대화와 전통 문제', '스튜던트 파워의 성격과 방향', '여대생이 본 대학인의 가치관의 문제' 등에 대해 경북대와 서울대, 고려대와 연세대, 숙명여대와 고려대 여학생 사이의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145] 1970년 4.18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3회 토론대회에서는 각 대학 학생 500여 명이 모여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고려대와 서울대 상대), '학생과 사회참여'(경북대와 서울대 문리대), '서구문화 특히 미국문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숙명여대)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146] 1971년 제4회 토론대회는 "무사안일의 소시민적 구각을 탈피하여 비판력과 응결된 힘으로서 민족사회 내의 부정적인 흐름을 불식하고 역사의 선구인 지식인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이틀에 걸쳐 열렸다. 주제는 '민족통일의 방향과 그 문제점'(서울대 법대와 연세대), '근대화에 따른 빈곤과 소외의 문제'(서울대 상대와 고려대, 충북대), '대학민주화투쟁의 성격과 방향'(경북대와 서울대 문리대),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대두'(전북대와 부산대) 등이었다.[147]

---

143)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편찬위원회, 2008 앞 책, 131쪽.

144) <石塔祝典 閉幕> ≪高大新聞≫ 1968년 5월 13일, 3면.

145) <學術討論大會-慶北大, 최우수단체상 차지> ≪高大新聞≫ 1969년 4월 28일, 3면.

146) <4.18기념 전국남녀대학 학술토론대회 閉幕> ≪高大新聞≫ 1970년 5월 4일, 3면.

고려대 한맥이 주관한 이들 토론대회는 연세대 한연회, 서울대 문우회, 후사연, 사회법학회, 이론경제학회(상대) 등 각 대학 이념서클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기회였다. 특히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경북대의 정사회와 정진회도 꾸준히 참석해서 서울 각 대학 이념서클과 접촉하였다.[148] 이 행사에서는 각 대학 이념서클 학생들이 민족주의, 근대화, 학생운동 등 굵직한 주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토론이 끝나면 도봉산의 수련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 1박을 하며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아침까지 놀면서 보다 깊은 얘기를 나누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149] 토론회를 매개로 한 각 대학 이념서클의 접촉과 교류는 이미 1950년대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1960년대 후반기의 양상은 단순한 접촉과 교류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협력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발전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시기에는 단지 고려대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경북대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토론대회가 열렸고, 이러한 토론대회나 강연회를 매개로 이념서클 회원들은 수시로 만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기 고조된 각 대학 간, 이념서클 간 협력의 분위기는 결국 1971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거대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1971년은 한국 학생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 대학 외적으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대학 내적으로는 1968년 안보위기 이후 대학에 강요된 군사교련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었다. 그 결과 1971년은 10월 15일 위수령이 내려지고 학생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1년 내내 교련반대, 선거감시, 부정선거, 부패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학생

147) <제4회 전국남녀 학술토론대회 폐막> ≪高大新聞≫ 1971년 9월 28일, 7면.

148) 1971년 4월에는 경북대에서 정진회 주최로 '전국대학서클대항 학술토론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이념서클 학생들이 대구로 내려가 행사에 참석했다(<혁명 11주년 학술토론대회-경북대 정진회에서> ≪자유의 종≫ 제11호 1971년 4월 6일, 4면).

149) <김영곤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앞 책, 231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앞서 학원 병영화에 대해 살펴봤듯이, 1970년 12월 27일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4년간 711시간의 교련 이수와 대학에 현역 교관을 파견하는 교련 강화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1971년 3월 신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학원 병영화가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때 학생들은 처음부터 교련 문제가 단순한 학내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150]

1971년 3월 2일 고려대 총학생회와 서클 대표들은 교련 수강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3월 15일에는 서울대 법대 학생회가 교련 수강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5%의 학생이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3월 19일에는 서울대 상대에서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결과는 법대와 비슷했다. 3월 23일에는 전국의 12개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전국대학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군사교육 폐지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4월 2일 연세대 학생들이 "교련강화반대"를 외치며 최초의 가두시위를 시도했다. 이후 4월 6일 서울대 상대, 고려대, 성균관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고려대 시위는 8일까지 이어졌다. 4월 13~14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감리교신학대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했고, 지방에서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4월의 교련반대시위는 15일에 절정에 달해 대부분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4월혁명 11주년이었던 19일에도 기념행사와 더불어 교련반대운동이 진행되었다.[151]

4월 20일 이후 각 대학의 학생들은 교련반대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수업에 정상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내려진 국립대학에 대한 휴강

15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550쪽.

1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위 책, 554~556쪽.

조치와 문교부의 사립대학 휴강 압력을 보면서 학생들은 학교폐쇄의 구실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은 4월 27일과 5월 25일에 각각 예정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공명선거 쟁취'에 더 많은 힘을 쏟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71년 4월 14일 서울대 상대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 300여 명이 모여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학생연맹'(민주수호전학련)이 교련철폐, 공명선거캠페인 등의 행동강령을 내걸고 결성되었다.[152] 위원장은 서울대 후사연의 심재권이었고, 대변인은 서울대 법대 사회법학회 이신범이었다.

민주수호전학련은 곧바로 4월 27일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선거참관인단을 편성해 전국 각지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부정선거규탄, 야당의 국회의원선거 보이콧촉구 등의 운동을 이어나갔다.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재야에서 만들어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라는 이름에 호응하여 '민주수호'라는 말을 앞에 붙인 점이나, 결성 이후 실제 활동들을 보았을 때 민주수호전학련은 학생운동 세력들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 후사연의 심재권, 서울대 법대 사회법학회의 이신범, 고려대 한사회의 오흥진, 연세대 한연회의 이상문 등이 모두 참여해서 이념서클 연합조직으로서의 모습을 어느정도 갖췄다.

하지만 민주수호전학련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민주수호전학련 결성 직후 발간된 ≪민주수호청년학생연맹보≫ 창간호를 보면 민주수호전학련의 조직 구조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대표기관-연맹위원장(서울대)
　　부위원장(고대, 성대)
의결기관-중앙위원회(전국 각 대학 대표)

152)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결성> ≪자유의 종≫ 제13호 1971년 4월 15일, 1면.

집행기관-운영위원회

총무부(고대), 조직부(연대), 기획부(외대), 섭외부(서강대), 선전부(서울대)

직속기관-연맹보편집위원회(전국 각 대학 대표)[153]

그러나 위의 체계 중 실제로 조직된 것은 중앙위원회에 불과했고, 하부조직은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154] 또한 민주수호전학련에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은 학생운동 세력들이 많았다. 특히 연세대 한연회 내에서 윤재걸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서울대의 심재권, 이신범이 주도하는 흐름에 반발하면서 독자적으로 '범대학 민권쟁취청년단'(약칭 민권쟁취청년단)을 조직하였다. 1971년 5월 20일 조직된 민권쟁취청년단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전국 9개 대학으로 구성되었다.[155] 범대학 민권쟁취청년단은 두 가지 면에서 민주수호전학련과 입장이 달랐다.

첫째, 당면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수호전학련은 야당의 선거보이콧을 주장한 반면, 민권쟁취청년단은 선거참관에 초점을 맞췄다. 4월 27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꺾고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선거를 참관한 학생들은 4.27 선거를 "내면적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입체 부정선거"라고 평가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선거의 진상을 알리는 '참관보고대회'를 서울대 법대, 상대, 고려대 등에서 가졌다. 이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탄하는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156]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수호전학련은 다가올 5.25 국회의원선거를 보이콧 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놨고, 반면 민권쟁취청년단은 대통

153) <民主守護全國靑年學生聯盟 기구> ≪民主守護全國靑年學生聯盟報≫ 창간호 1971년 4월 21일, 4면.

154) <민주주의 지켜라, 전국 학생운동 조직 앞장-장기표의 나의 꿈 나의 도전 16> ≪한국일보≫ 2009년 10월 12일, 37면.

155) <활기띄는 학생운동-민권쟁취청년단 결성 언저리> ≪연세춘추≫ 1971년 5월 24일, 3면.

1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567쪽.

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참관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결국 민주수호전학련 관련 학생들은 5월 17일 신민당사에 들어가 선거 보이콧을 요구하다가 27명이 체포되어 그 중 9명이 구속당하고 말았다.

두 번째 차이는 대학 내 가장 큰 논점이었던 교련반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서울대에서 교련반대시위가 재개되자,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서울대 4개 단과대학에 휴업령을 내리고 시위 주도 학생들을 무더기로 처벌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련반대운동 과정에서 민주수호전학련은 전면적인 교련 거부를 주장했지만, 민권쟁취청년단은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여 교련 강화 반대를 통해 학원병영화의 문제점을 부각시키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157] 하지만 민권쟁취청년단은 출범 직후부터 '유령서클'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조직적인 힘이 컸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158] 또 민주수호전학련과 아주 대립적인 관계도 아니었다. 학생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수호전학련의 심재권, 이신철과 민권쟁취청년단의 윤재걸은 서울대 법대 채만수를 매개로 접촉을 계속했다.

또한 사토 일본 수상이 7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방한하려 하자, 이를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진출로 규정한 각 대학 학생들은 교련반대운동을 잠시 접고 6월 내내 사토 수상의 방한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6월 9일 "일본의 신식민지주의와 신군국주의가 한국에 부식되는 것을 배격하기 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 민주수호전학련과 민권쟁취청년단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토 일본 수상 방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159]

1971년 6월 12일 민주수호전학련과 민권쟁취청년단은 마침내 통합을 이뤄냈다. 통합된 새 조직의 이름은 '전국학생연맹'(약칭 전학련)이

157) <윤재걸 구술>(구술일시: 2007년 7월 26일, 면담자: 이기훈).

158) <활기띄는 학생운동-민권쟁취청년단 결성 언저리> ≪연세춘추≫ 1971년 5월 24일 3면.

15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571쪽.

되었다. 전학련은 처음에 4인의 공동의장을 두었고 이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가 각각 한 자리씩 맡았다. 서울대의 경우 후사연 출신이, 연세대의 경우 한연회 출신이, 고려대의 경우 처음에는 한맥 출신이 했다가 나중에는 한사회 출신이 각각 의장을 맡았다.[160] 그러나 전학련 공동의장들이 소속 대학의 데모를 주도함으로써 경찰의 수배를 받거나 행동반경이 좁혀지자 1971년 2학기부터는 서울대 문리대 후사연의 손예철을 대표로 뽑아 비상체제로 운영했다.[161] 하지만 전학련은 내적 역량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전학련은 각 대학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 또는 각 대학 학생운동을 이끌던 이념서클들을 모두 포괄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다 전학련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불과했다.

1971년 2학기에 들어와 교련반대시위가 재개되었고, 이와 더불어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규탄시위가 이어졌다. 먼저 전학련은 1971년 9월 7일 <민주, 민족,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는 제목의 시국 백서를 발표했다. 1971년 후반기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제 과제라는 부제가 붙은 이 백서는 3개 장, 10쪽에 달하는 긴 지침서로서 그 시기 학생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전학련은 이 백서에서 학생운동은 '학원민주화'를 본연의 임무로 삼고 '정보 통치 폐기와 민주적 기본질서 회복', '부패와 특권 폐지, 민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71년 학생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함께 벌어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발족,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사법파동, 교수들의 학원자주선언, 전태일 분신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 광주대단지 빈민투쟁, 중소상인들의 조세 저항 등을 보며 4월혁명 이래 억압되었던 민주, 민권 운동이 다시 발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주장이었다.[162]

---

160)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全國學生聯盟으로 개칭> ≪자유의 종≫ 제20호 1971년 6월 21일, 1면.

161) 이태호, 2001 <71동지회, 그 정의의 발자취> ≪(71동지회 30년 기념문집)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60쪽.

1971년 9월 6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교련백서≫를 발간을 시작으로 재개된 교련반대운동은, 9월 15일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교련의 '전면 철폐'를 재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28일 연세대 학생들이 '현역 교련 교관'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본격화되었다. 2학기 교련반대운동에서는 부정부패 원흉 처단을 함께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의 이름을 거론하자 10월 5일 새벽 수도경비사 소속 군인 20여 명이 고려대에 난입하여 관련 학생들을 불법 납치,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10월 5일부터 시작된 종교계의 부정부패 규탄시위가 맞물려, 교련반대운동은 부정부패 척결 요구 및 군의 학원 난입 규탄 등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며 폭발적으로 고양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연일 성명서발표, 규탄대회, 가두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학련은 10월 14일 명동의 흥사단 강당에서 '전국학생연맹 총대회', 즉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한국외대 선경식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163] 그리고 정부를 규탄하고 전 대학인의 결전을 호소하는 총대회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특히 이 선언문에는 말미에 "민주, 민족, 통일을 위한 전국학생의 항구조직 전국학생연맹 만세!"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전학련 학생들이 이 조직을 정세에 따라 급조한 조직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학생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상시조직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10월 14일의 전학련 총대회는 집회장소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열리

1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앞 책, 588쪽.

163) 당시 전학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운동 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위원장은 기존에 조직을 주도했던 대학이 아닌 제3의 대학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고, 또 각 대학 운동세력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으며, 가급적 4학년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선경식이 위원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선경식, 2001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들> ≪(71동지회 30년 기념문집)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301쪽).

지 못했고, 다음날인 10월 15일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선포했다. 1971년을 뜨겁게 달군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위수령 선포로 군을 동원한 박정희 정권은 그동안 거세게 전개되었던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시위 진압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은 ≪자유의 종≫, ≪내나라≫, ≪한맥≫, ≪산지성≫과 같은 다수의 학생 간행물을 소위 '지하신문'으로 규정하여 발간을 금지시켰고, 동시에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각 대학 이념서클의 상당수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당시 정부의 명령에 의해 해산된 각 대학 이념서클들은 후진국사회연구회(서울대), 문우회(서울대 문리대), 한국문제연구회(연세대), 사회법학회(서울대 법대), 한사회(고려대), 한맥(고려대), 정진회(경북대) 등이었다. 정부의 해산 명령에서 빠진 이념서클 가운데 서울대 문리대 낙산연과 같은 경우는 학교측의 자체 조치를 통해 해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3개 대학에서 177명의 학생들이 제적 처리되고, 운동 주동학생들은 구속 후 강제 징집당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에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와 "제명학생의 재입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을 지시하였다. 살아남은 이념서클들도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학칙과 더욱 강화된 외부의 감시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로써 1960년대 학생운동의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이념서클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1971년 학생운동을 군대의 힘으로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학원을 넘어 전 사회를 군사적으로 장악·통제하고자 했다. 1971년 11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을 발표하였다. 위수령 이후 학생 시위와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이신범, 조영래, 장기표, 심재권, 김근태 등 서울대 학생 5명이 혁명을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다. 가상의 국가 변란 사태를 근거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막강한 권한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반면 위수령 이후 대학은 활기를 잃었다. 유신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도 대학 내 반대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대신 학칙과 교무행정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수업 출석률이 어느 해보다 높았다.[164] 외형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추구했던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학생운동은 그동안의 공개적인 이념서클을 위주로 한 활동을 접고, 보다 은밀하게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는 이미 1971년 위수령 발동과 학생 처벌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었다.[165] 그리고 이전의 이념서클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사회과학 학습으로 무장한 새로운 '언더서클'들이 등장하여 유신체제의 사찰과 탄압을 피해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생운동 조직의 연속과 단절 문제는, 앞으로 학생운동사 연구에서 보다 깊이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

164) <서울大學校 一九七二年> ≪大學新聞≫ 1973년 1월 1일, 3면.

165) <(風向計) 데모 · 衛戍令 · 大學의 沈默> ≪月刊中央≫ 1971년 12월, 58~59쪽.

결론

‘학생운동’이란 학생들이 學究생활의 범위 속에서 집단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현실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1960년 4월혁명에서 대학생들이 혁명주체로 나선 이후 1990년대까지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치열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대까지는 조직화된 시민들이나 노동자 계급은 취약했고, 그것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관변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권력에 맞서 이 빈 공간을 메운 것이 바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사회운동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은 압도적으로 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학생운동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본고가 분석했던 1960년대, 정확히는 4월혁명이 일어난 1960년부터 위수령으로 공개 이념서클 중심의 학생운동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1971년까지의 시기는, 약 30여 년에 걸친 ‘학생운동의 시대’에서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이 어떻게 1950년대까지의 오랜 침묵을 깨고 분출할 수 있었는가, 또 그 힘을 1960년대 내내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는 ‘태동기’ 학생운동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조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이승만 정권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미국 원조의 감소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과잉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4월혁명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학생들이 앞장선 것이다. 또 그 이후에는 군부독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운동도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설명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학생운동의 정의에도 나오듯이, 대학 학생운동

은 결국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가운데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여 집단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운동의 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 못지않게, 학생운동의 주체인 대학생들이 어떻게 집단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참여했는지, 또 어떻게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등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주체'의 관점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50년대 대학생들이 꾸준히 학생운동의 잠재력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도적 엘리트로 규정되어 사회를 선도할 영향력을 갖췄고, 대학의 급속한 팽창 과정에서 그 수가 급증하여 집단으로서 물리력도 함께 갖게 되었다. 엄밀한 분석의 결과는 아니지만 약 30여 년의 '학생운동의 시대'는 대체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로서의 위상과 집단의 결집된 힘이 공존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1950년대 대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통제에 시달리면서도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 집단으로서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또한 1950년대 대학생들은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했던 외부의 규정과 그들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축제와 같은 대학문화를 통해 집단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의 물리력을 결집하여 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모의국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 행사를 통해 지도적 엘리트에 걸맞는 정치적 훈련과 각성의 기회, 그리고 대학생 상호간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경험과 문화는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오히려 1950년대 그들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는 학생운동의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었다. 당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인적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규정되었던 대학은 실제로는 '병역기피자와 모리배의 소굴'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었다. 대학생들 역시 질적으로 하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학도호국단을 통한 국가의 통제는 대학생들의 자

치적인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그들을 체제 순응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대학생의 양적 급증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집단정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었고, 모의국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 행사가 학생들을 관심과 활동의 폭을 '학술'이라는 틀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을 '탈정치화'시킬 수도 있었다.

195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된 학생운동의 필요조건들이 실제 학생운동으로 분출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을 학생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즉 선진적인 이념과 조직이 필요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그 매개로서 '이념서클'이 1950년대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미소의 평화공존과 제3세계 비동맹운동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냉전체제 변화 속에서, 일부 진보적인 대학생들은 1945년 영국 노동당 집권과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민주사회주의를 대안적 이념으로 적극 수용하면서 대학 내에 신진회, 신조회, 협진회 등의 이념서클을 만들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대학 내에서 이들 이념서클의 비중과 역할은 아직 미약했고 정부의 탄압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 이념서클들은 1960년 4월혁명 때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4월혁명으로 활동의 공간이 열린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지향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을 선도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4월혁명은 한국의 대학 학생운동이 비로소 자신의 생명력을 얻어 낸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4월혁명을 처음부터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맨 처음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이었고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은 도시빈민들이었다. 대학생들은 뒤늦게 항쟁에 참여했다. 물론 대학생들도 4월 19일의 대규모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4월혁명은 그들만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학생들은 4월혁명의 주체의 자리를 독점해 버렸다.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과 도시빈민들을 배제하고 4월혁명의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들이

바로 지도자의 위상을 가진 '엘리트'였다는 데 있었다. 장차 지도자가 될, 그러면서도 기성세대와 달리 '순수'한 엘리트였던 대학생들은 4월혁명의 수습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혁명주체의 자리를 독점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4월혁명의 주체의 자리를 독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제부터 대학생들은 1950년대에 이미 형성된 학생운동의 기반을 바탕으로, 또 4월혁명으로 새롭게 획득한 혁명주체로서의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현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만약 여기서 대학생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 이후 학생운동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학생들은 '후진성 극복'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주체적 역량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4월혁명 이후 '후진성 극복' 시도가 대학 학생운동에 끼친 영향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후진성'에 대한 강조 그 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참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로 만들어 버렸다. 즉 한국이 신생국, 후진국이기 때문에 지도적 엘리트이자 순수한 대학생의 현실참여는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둘째, '후진성 극복' 시도는 학생운동을 보다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 밀착시켰다. 후진성의 기저에는 결국 '빈곤' 문제가 있었고, 이에 학생운동은 '자유'와 '민주' 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월혁명 직후 대학생들이 전개한 계몽운동과 통일운동을 민중의 요구와 괴리된 관념적인 운동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고는 오히려 당시 학생운동이 계몽 혹은 분단 극복을 통한 자립경제 수립을 지향함으로써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 지향성은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학생운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후진성 극복' 시도는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의 지향과 분명한 내용적 차이를 보였다.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를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대학생과 박정희 정권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운동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이 ‘중심-주변’의 문제틀을 가지고 분단 극복을 전제로 ‘반제’ 혹은 ‘반중심부’ 차원에서 후진성 극복을 추구한 반면, 박정희 정권은 ‘선진-후진’의 문제틀 속에서 후진성 극복의 문제를 시간적 선후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인 이른바 ‘catch-up’, 즉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추격해 따라잡는다는 전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했다. 똑같이 자립경제 수립을 통해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했더라도 대학생과 박정희 정권 사이에는 내용적인 차이가 컸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학생들이 군부독재와 스스로를 구별짓고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물론 차이 이외에 공유하는 지점들도 있었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 중에는 정권의 논리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등장한 여러 이념서클들은 대학생과 박정희 정권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며 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동시에 이념서클들은 학생운동 주도 학생들을 계속 재생산했다. 이들의 존재가 학생운동의 지속과 성장을 담보해줬다. 물론 이들 사이에도 이념이나 활동양상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1980년대처럼 ‘정파’라고 불릴 정도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학별로 학생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수시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상호 접촉과 교류, 연대와 연합을 도모했다.

4월혁명으로 분출한 대학 학생운동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1960년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 덕분이었다. 특히 축제 때 정권과 특권층을 실랄하게 비판하는 정치풍자극이나, 집회나 시위 때 운동의 열기를 높여주고 상대방을 크게 자극하는 각종 퍼포먼스,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을 동시에 고취시키는 민속 행사, 그리고 정치적 의식의 고양은 물론 운동 주도 학생들의 교류의 장이었던 각종 모의행사, 토론회, 강연회 등은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와 비판의식이 꺾기지 않고 지속 고양될 수

있었던 주요한 계기들이었다.

공동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는 학생운동에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줬다. 첫째, 공동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를 통해 대학생 일반과 운동 주도 학생 사이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1960년대 각종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현실참여의 의지는 소수의 운동 주도 학생에게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대학생 일반에서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공감대는 기본적으로는 엘리트 의식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다양한 공동 경험과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공감대는 1960년대 학생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였다.

둘째, 권력의 지배력과 억압이 강해질 때도 대학생들이 공유한 공동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는 그 지배력과 억압의 균열 지점을 따라 학생운동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 역할을 했다. 본문에서 살펴본대로 민속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학생운동과 밀착하였지만 민족문화 진흥을 부르짖는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탄압하기가 어려웠다. 운동 주도 세력들은 민속행사를 이용해 학생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문화를 통해 정치적 비판의 의미를 감췄다든지 또는 강도를 약화시켰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적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60년대 학생운동은 이후 학생운동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 가장 중요한 유산은 1970년대 정립되어 1990년대까지 한국 학생운동의 기본 이념이 되었던 三民, 즉 '민족', '민주', '민중'의 이념이었다.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기본 이념은 '민주'와 '민족'이었다. 처음에는 1950년대 이래의 민주사회주의가 학생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분단 극복을 통한 후진성 극복 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이후에는 민족주의가 학생운동의 주된 이념이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三反의 논리가 운동 주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시도가 본

격화되자 학생운동은 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학원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등 전방위적인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평등한 경제성장의 결과 고통 받는 민중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4월혁명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원래 학생들에게 '민중'은 그렇게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다. 4월혁명 직후 후진성 극복을 통해 민중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에도 민중은 단지 계몽의 대상일 뿐이었다. 심지어 강한 엘리트 의식 속에서 일반 대중이나 민중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 과정에서 불평등의 모순이 심화되자 고통 받는 민중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 커져 갔다. 전태일 분신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은 이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제 학생운동의 이념으로 기존의 민주, 민족과 더불어 민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4월혁명 직후 정립된 1960년대 '三反(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이념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권력 강화와 양적 경제성장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1970년대 '三民(민중, 민주, 민족)'의 이념으로 서서히 전환되었다. 여기에는 민속을 통한 민중의식의 각성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이 negative한 三反에서 positive한 三民으로 전환된 것은, 1960년대 학생운동이 약 10년 동안 질적으로 성장하며 남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학생운동은 독재나 경제적 모순과 같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4월혁명 직후의 '후진성 극복 시도'와 '三反' 이념의 정립, 1970년대 '三民' 이념의 정립과 같이 주어진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운동 주체의 내적 역량의 강화로 인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1년 교련반대, 선거참관, 부정선거 규탄, 사또수상 방한반대, 학원자주화, 부정부패 규탄 등 다양한 논점을 제기하며 1년 내내 학생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10년 동안 역량을 강화해 사회를 선도할 수 있게 된 학생운동 주체의 힘에서 기안한 것이었다. 비

록 1971년 위수령과 1972년 유신 선포로 학생운동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1960년대 내내 키워온 주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곧 다시 1970년대 반유신운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그동안 일지식 사건사 혹은 정치사 및 구조사적 접근에 의해 단절적, 파편적으로 파악되었던 1960년대 학생운동을, 그 주체인 대학생과 그들의 기반인 대학을 중심으로 연속적,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다. 우선 학생운동에 작용하는 다양한 외부적 영향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다. 특히 당시 학생운동과 여타 다른 사회운동의 관계, 그리고 학생운동과 관련한 주요 이념의 사상사적 지성사적 맥락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는 본고에서 한꺼번에 다루기 어려운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학생운동의 내적 요소 가운데 학생운동에 영향을 준 학생회, 그리고 이념서클 이외의 다른 학생 조직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물론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이들도 분명 학생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보다 완전한 학생운동사 서술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과 비중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학생운동에서 이들 3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학교들의 경우 학생운동과 관련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과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으로 학생운동 연구가 한 차원 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학생운동을 '68혁명'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스튜던트 파워'나,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경로를 밟은 제3세계 국가의 학생운동과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사 연구는 각 국 학생운동사의 검토 및 역사적 맥락 파악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모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1) 관찬자료

≪官報≫
公報部調査局, 1962 <(全國大學生) 農漁村啓蒙活動狀況>
內務部, 1962 <'데모' 發生原因 및 '데모' 連發時 政府로서 취할 方策 樹立案>
文敎部, 1964 <1964年度 學生奉仕活動狀況 綜合報告書>
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1~7 대한공론사

2) 대학 학교신문

≪高大新聞≫ ≪高大新聞 축쇄판 2≫ ≪高大新報≫ ≪檀大新聞≫ ≪檀大學報≫ ≪大學新聞≫ ≪東大時報≫ ≪東大新聞≫ ≪成大新聞≫ ≪延世春秋≫ ≪梨大學報≫ ≪週間成大≫ ≪中大新聞≫

3) 일반신문

≪京鄕新聞≫ ≪東亞日報≫ ≪民國日報≫ ≪民族日報≫ ≪한국일보≫

4) 잡지

≪다리≫ ≪思想界≫ ≪世界≫ ≪世代≫ ≪新東亞≫ ≪新思潮≫ ≪新

天地≫ ≪月刊朝鮮≫ ≪月刊中央≫ ≪自由世界≫ ≪政經硏究≫≪靑脈≫

5) 단행본 자료

金鵬九, 1958 ≪佛文學散考-現代의 證人들≫ 新太陽社
朴正熙, 1962 ≪우리民族의 나갈 길-社會再建의 理念≫ 東亞出版社
朴正熙, 1963 ≪國家와 革命과 나≫ 向文社
박정희, 1978 ≪민족중흥의 길≫ 광명출판사
서울大學校, 1955 ≪서울大學校 一覽≫ 서울大學校
安東壹·洪基範, 1960 ≪奇蹟과 幻想≫ 永信文化社
오병헌·고영복·이영덕, 1970 ≪학생문제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劉在奉·金康鉉·愼斗範, 1962 ≪(革命政府) 文敎法令解說≫ 法通社
이강현 편, 1960 ≪民主革命의 발자취≫ 正音社
李一九, 1960 ≪現瞬間政治問題小辭典≫ 國際新報社
중앙학도호국단, 1959 ≪학도호국단10년지≫ 중앙학도호국단

6) 설문조사 자료

金基錫·廉泰鎬·金英吉, 1968 <1966年度 在學生 實態調査> ≪學生硏究≫ 5-2
김성태, 1960 <4.19 학생봉기의 動因> ≪성대논문집≫ 5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道德觀念> ≪世代≫ 1965년 11월
田溶新,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五個大學의 調査를 中心으로> ≪新東亞≫ 1970년 4월
洪承稷, 1963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亞細亞硏究≫ 11

7) 校史

高麗大學校 六十年史 編纂委員會, 1965 ≪六十年誌≫ 高麗大學校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a)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b) ≪고려대학교 문화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서울법대 학생운동사 편찬위원회, 2008 ≪서울법대 학생운동사-정의의 함성 1964~1979≫ 블루프린트
연세대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1985 ≪연세대학교 백년사 4≫ 연세대학교
이화 100년사 편찬위원회, 1994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 구술자료

<김낙중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Ⅰ≫ 민맥출판사)
<김도현 구술>(구술일시: 2007년 6월 19일, 면담자: 오제연)
<김도현 구술>(구술일시: 2008년 11월 26일, 면담자: 김주관)
<김병길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3일, 면담자: 신동호)
<김승의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21일, 면담자: 오제연)
<김영곤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Ⅰ≫ 민맥출판사)
<김영배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26일, 면담자: 신동호)
<김영철 구술>(구술일시: 2008년 8월 7일, 면담자: 이영미; 이영미 편저, 2011(b) ≪구술로 만나는 마당극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원)

<김정강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김지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박정훈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3일, 면담자: 오제연)

<배춘실 구술>(구술일시: 2013년 8월 10일, 면담자: 신동호)

<서중석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면담자: 이기훈)

<서진영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18일, 면담자: 오제연)

<손정박 구술>(구술일시: 2013년 9월 16일, 면담자: 신동호)

<안병욱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15일, 면담자: 이기훈)

<안성혁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8일, 면담자: 오제연)

<오건환 구술>(구술일시: 2008년 12월 2일, 면담자: 오제연)

<유영래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윤식 구술>(구술일시: 1999년 4월, 면담자: 정창현·한모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윤재걸 구술>(구술일시: 2007년 7월 26일, 면담자: 이기훈)

<윤준하 구술>(구술일시: 2007년 8월 10일, 면담자: 이기훈)

<이관영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이영일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9일; 9월 5일, 면담자: 오제연)

<이원보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이원재 구술>(구술일시: 2013년 9월 7일, 면담자: 신동호)

<이현배 구술>(면담일시: 2008년 12월 1일, 면담자: 김주관)

<임종률 구술>(구술일시: 2012년 9월 4일, 면담자: 신동호)

<조동일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9일, 면담자: 오제연)

<조성준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채희완 구술>(구술일시: 2008년 7월 14일, 면담자: 이영미; 이영미 편, 2011(a) ≪구술로 만나는 마당극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천영세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최장집 구술>(구술일시: 2013년 10월 12일, 면담자: 신동호)
<함상근 구술>(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2009 ≪고대학생운동 Ⅰ≫ 민맥출판사)
<현승일 구술>(구술일시: 2007년 5월 26일, 면담자: 오제연)
<홍영유 구술>(구술일시: 2009년 12월 12일, 면담자: 오제연)
<황건 구술>(구술일시: 2003년 8월 20일, 면담자: 한찬욱)
<황용주 구술>(구술일시: 1997년 11월 30일/12월 7일, 면담자: 김수자·정창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 회고 자료

<김영곤 비망록-이기훈 교수 대담 준비> 2007년 9월 8일
김양현, 2005 <내 사랑 고대> ≪회고 50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우 수상집≫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지하, 2008 ≪흰 그늘의 길-김지하 회고록 1≫ 학고재
나석호, 1994 <보람과 긍지> ≪진리는 나의 빛-서울법대 동창 수상록 1≫ 經世院
선경식, 2001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들> ≪(71동지회 30년 기념문집)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孫柱煥, 2008 <'高大生 6.6데모'와 思潮硏友會> ≪(고대 법대 58학번 입학 50주년 기념문집) 숨겨진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 세창미디어

유근호, 2011 ≪60년대 학사주점 이야기-4.19세대의 시대증언≫ 나남
이덕희, 1994 <법대와 나와 인생>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서울법대 동창 수상록 2≫ 經世院
이태호, 2001 <71동지회, 그 정의의 발자취> ≪(71동지회 30년 기념문집)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조동일, 2009 ≪세계 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0-학문하는 보람≫ 계명대학교 출판부
한호선, 2005 <고희에 더듬어 보는 마음의 고향> ≪회고 50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우 수상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홍영유, 2010 ≪4월혁명통사 1~10≫ 천지창조
허도학, 2001 <71동지회의 오늘> ≪(71동지회 30주년 기념문집)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10) 기타 자료

≪民主守護全國靑年學生聯盟報≫ ≪議壇≫ ≪자유의 종≫ ≪前夜≫
民主共和黨, 1964 ≪理念과 政策-共和論叢 1≫ 民主共和黨
民主共和黨, 1965 ≪理念과 政策-共和論叢 2≫ 民主共和黨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 1960 <국민계몽운동 지침서>
서울대학교 향토개척단, 1965 <향토개척 지침서>
<서울대 민통련 규약>
<서울대 민통련 명단>
<서울대학교 4월혁명 제2선언문>(김삼웅 편저, 2001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민족 · 민주 · 민중 선언≫ 한국학술정보)
<서울대학교 4월혁명 제3선언문>(김삼웅 편저, 2001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민족 · 민주 · 민중 선언≫ 한국학술정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선언문> 1971년 3월 2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史學科, 社會學科, 外交學科, 政治學科, 哲學科 決議文> 1971년 3월 24일

Memorandum from Robert W. Komer to Walt Rostow, March 15, 1961, Kennedy Library, National Security Files, Countries Series, Korea, General, Box 127

고대 민주동문회, 2003 ≪민우지 · 야생화 자료집≫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학원·간첩편(Ⅵ)≫ 국가정보원

김영래·임진영·김영준 엮음, 2003 ≪(한국문제연구회 창립40주년 기념자료집)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 디컨하우스

四·一九革命負傷者會 光州·全南支部, 湖南 四·一九 三十年史 編纂委員會, 1995 ≪湖南 四·一九 三十年史≫ 四·一九革命負傷者會 光州·全南支部

2.28 40주년 기념사업회 편찬분과위원회, 2000 ≪2.28 民主運動史 Ⅱ 資料篇≫ 2.28 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6.3동지회, 2001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71동지회, 2001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2. 연구성과

1) 단행본

姜萬吉 外, 1983 ≪4월혁명론≫ 한길사

교육출판기획실 엮음, 1989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권보드래·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권일영 외, 1983 ≪4월혁명-대학생 논문집≫ 靑史
기미야 다다시, 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김인걸 외 편저, 1998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김정원, 1985 ≪分斷韓國史≫ 동녘
김호일, 2005 ≪한국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남재희, 2006 ≪아주 사적인 정치 비망록≫ 민음사
데이비드 콩드, 1988 ≪남한 그 불행한 역사(1953~1966)≫ 좋은책
민족문제연구소, 1995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출판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_____, 2007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박태순·김동춘, 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白永瑞, 1994 ≪中國現代大學文化硏究≫ 一潮閣
백현미, 2009 ≪한국연극사와 전통 담론≫ 연극과 인간
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2 한길사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새길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 (상)≫ 역사비평사
_____, 2007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신동호, 1996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_____, 2007 ≪70년대 캠퍼스 1≫ 도요새
안경환, 2013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

에드워드 파머 톰슨, 변상출 역, 2013 ≪이론의 빈곤≫ 책세상
오오타 오사무,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2008 ≪한일교섭-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우찬세·이광호 엮음, 2010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李在五, 1984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形成社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이종오 외, 1991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정근식·권형택 편, 2010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정근식·이호룡 편, 2010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선인
조희연 편,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한국사사전편찬회 편, 1990 ≪한국 근현대사 사전≫ 가람기획
韓完相·李佑宰·沈載澤 外, 1983 ≪4.19革命論 Ⅰ≫ 일월서각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2000 ≪4.19와 남북관계≫ 민연
홍석률, 2001 ≪통일문제와 정치 · 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출판부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E. P. 톰슨, 유재건 외 역 2000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Rechard Jenkins, *SOCIAL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2) 논문

강상현, 1999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고명균, 1990 <국민계몽대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

명≫ 한길사
김경일, 2009 <박정희 시기 민족주의와 미국-1960년대 전반기의 ‘민족적 민주주의’> ≪박정희시대 한미관계≫ 백산서당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김미란, 2010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間SAI≫ 9
김원, 2006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부마항쟁을 중심으로>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김인걸, 1997 <1960, 70년대 교수 민주화운동> ≪민교협 10년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김재석, 2003 <‘향토의식초혼굿’의 공연 특질과 연극사적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18
김정인, 2012 <한국 사학 형성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실천문학사
金正仁, 2012 <1960년대 근대화 정책과 대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김형찬, 2004 <트롯이 싫어 미국 음악을 받아들인 통기타 세대> ≪월간 말≫
박동철, 1991 <5.16정권과 1960년대 자본축적과정> ≪한국 자본주의 분석≫ 일빛
박범진, 2010 <증언>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 선인
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현대사 2-1950년대 한국사회와 4월민중항쟁≫ 풀빛
박태균, 2004 <1950년대와 조봉암, 그리고 미국>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박진희, 2007 <한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기억과 전망≫ 16

서중석, 1988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_____, 1991 <4월혁명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14

_____,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

성유보, 1983 <4월혁명과 통일논의> ≪韓國民族主義論 Ⅱ≫, 創作과 批評社

송철원, 2012 <YTP(청사회: 靑思會)> ≪기억과 전망≫ 26

연정은, 2004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1950년대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4

_____, 2005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史林≫ 24

柳永烈, 1995 <六·三學生運動의 展開와 역사적 意義> ≪韓國史硏究≫ 88

윤상현, 2013 <1950년대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광호, 1992 <한국고등교육의 제도적 구조재편의 특징-1945~1955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8

이영미, 1997 <노래로 본 학생운동의 역사> ≪역사비평≫ 39

이종오, 1988 <반제반일민족주의와 6.3운동>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이해찬, 1985 <한국 학생운동의 발전과 민중지향> ≪韓國民族主義論 Ⅲ≫, 創作과 批評社

이혜영, 2010 <4.19 직후 정국수습 논의와 내각책임제 개헌> ≪이화사학연구≫ 40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

임채도, 2013 <인민혁명당사건과 경북대학교 학생운동-1960~70년

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의 메커니즘>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鄭桂庭 1995 <‘4月革命期’學生運動의 背景과 展開>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정근식, 2013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정용욱, 2004 <5.16쿠데타 이후 지식인의 분화와 재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정유진, 2012 <박정희 정부기 문화재정책과 민속신앙-국사당과 밤섬 부군당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9
정이담, 1986 <문화운동시론 Ⅲ> ≪문화운동론 2≫ 공동체
주강현, 2005 <반유신과 문화예술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채희완, 1982 <70년대의 문화 운동-민속극 운동을 중심으로> ≪문화와 통치≫ 민중사
최원식·임규찬 엮음, 2002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허은, 2007 <1960년대 후반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당 지식인의 인식> ≪사학연구≫ 86
____, 2009 <1969~1971년 국내외 정세변화와 학생운동세력의 현실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49
허종, 2011 <1964~1965년 대전지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0
____, 2012 <1964~1965년 대구지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大丘史學≫ 106
____, 2013 <1969년 대구지역 3선개헌 반대운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66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산업화와 근대화론의 대두와 지식인사회의 변동>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

서당
_____, 2004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황병주, 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 Movements in Korean from 1960 to 1971

Oh Je-ye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nitial phase of university student movement suggesting and accomplishing main issues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democratization from 1960s to 1990s by focusing on existence condition, experience, culture, ideology and organization of undergraduates, the subjects of the movement.

In 1950s, undergraduates were identified as 'leading elites' in a space of university, so they came to possess potentials to guide the society and physical powers as groups because of the surging number of them in rapid expansions of universities. In addition, contemporary undergraduates learned to politically use physical powers while they were suffered from control and mobilization of the Student National Defense Corps. As undergraduates' group identities were intensified through the outer regulation which treated them as a group, or the university culture like a festival newly derived from their inner parts, the base on which there physical powers were concentrated and erupted was developed. And opportunities of political training and

awakening suitable for leading elites and interactions and exchanges among undergraduates were provided through academic events such as mock assembly and forum. In order to erupt necessary conditions of such student movements organized among undergraduates in 1950s into the real ones,'mediation' by which the conditions could be leaded into the student movements, in other word, leading ideology and organization were required. As the mediation, 'ideology circles' were gradually grown by students who were interested in democratic socialism, although they were feeble.

In 1960 when the April Revolution was occurred, undergraduates came forward belatedly but they disrupted the Rhee's government at last. Self-regarding themselves as subjects of revolution, undergraduates, leading elites in Korea, actively attempted to participate in complementing the revolution. Undergraduates' wills to participate were converted into enhancement of nationalism and eager for national identity in resolving the challenge of 'escaping from backwardness'. And students with group power began to develop student movements in earnest, in order to realize their wills to participate. The students initiated academy democracy and enlightenment movement as soon as they once returned to academy after the Apri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enlightenment movement was an attempt to overcome backwardness of Korean society through establishing economical independence. However, when the partition was indicated as a fundamental reason of backwardness, the only solution was necessarily unification. Therefore, the nationalism was sharply promoted among undergraduates after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League (Mintongnyeon)' was organized as a group initiating this movement in each university including Seoul University.

However, soon after, the 'Mintongnyeon' disappeared into history due to 5.16 coup d'etat in 1961. And the existence conditions of universities were largely changed. Parks' government exploited nationalism enhanced after the April Revolution as modernization, specifically, means of mass mobiliz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production increase. On the other hand, on the basis of spirits against feudalism, foreign power and comprador, which were popularized in unification movement after the April Revolution, students had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Pars' government by resisting against undemocratic, unfair and foreign-dependent situation, anti-unification, subordination and comprador. After the coup d'etar, active participation was not facilitated under military regime, so undergraduates primarily devoted themselves to events held by universities. In particular, each university promoted festivals in which some political satire programs significantly attracted students' attentions and naturally, their criticism on the government were increased. Moreover, although the military regime attempted to break undergraduates' wills to participate by mobilizing them into rural movement, there was another aspect of the movement, in that it also widened public foundation of the Movement against Korean-Japan Treaty, according to strong nationalism, a symbol of rural village.

A protest demanding the 'Status of Force Agreement between Koran and United States', which was initially developed by

raising an objection to crimes by American soldiers, in 1962 after the coup d'etat also served to significantly increase subjective capabilities and nationalism of students. As ideology circles standing for nationalism were often organized by the students enthusiastically leading the protest in each university, capabilities of student movements were greatly boosted. These ideology circles initiated tremendous uprisings which were occurred to object to the shameful Korean-Japanese Conference planned by Park's government since 1964. However, as the movements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were not successful, the ideology circles were dismissed or took a severe hit, and therefore, this student movement inevitably underwent temporal withdrawal.

As the Park's government intensified its power and promoted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since the mid-1960s, the structure of Korean society began to be changed. In spite of rapid economic growth, social inequity was simultaneously increased. Above all, the roles of universities were shifted to nurture highly skilled human resources, 'functional elites'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However, undergraduates' 'confidence and sense of duty as elites' were still continued, which were established after the April Revolution, although they were interested in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more than ever but much less concerned about 'national autonomy' in the late-1960s. In addition, new concerns were also appearing at those times, especially, undergraduates recognized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s serious problem, which was widen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Hence, the masses suffering from conflicts of

inequality exacerbated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increasingly attracted attentions.

The foundation on which the existing democracy and nation as well as masses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ideology of student movement began to be created now. By 1970s, the student movements were consequently developed enough to demand not only institutional democracy including abolition of drill, but also even entire social democracy such as settlement of corruption and inequity, by widely focusing on the whole social contradictions beyond the simple responses to political issues. And the ideology circles reorganized by each university in the late 1960s played the key roles in the democratization. However, the student movements suffered a catastrophic effect from 'Garrison Decree' invoked by Park's government in Oct, 15, 1971. The initial stage of student movement for approximately 10 years was thus finished. Therefore, the student movements around open ideology circle were not continued, and instead began to go into underground more secretly. While avoiding inspection and oppression by Yusin regime, the new 'under circles' equipped with social science learning leaded student movements in 1970s, which was more systematic than open ideology circle in 1960s: it was a time when a new situation of student movement was started.

Key words: student movement, university, undergraduate, university culture, nationalism, ideology circle

Student Number: 2004-30036